

남북대화 제46호

(1988. 10. ~ 1988. 12)

< 목 차 >

I. 남북화해와 국제협력의 선도	3
1. 대통령 국정연설	3
가. 배경과 의의	3
나. 관련 주요 내용의 의미	8
다. 국내외 반응	11
라. 북한 반응	22
2. 대통령 UN총회 연설	23
가. UN총회 연설의 의미	23
나. 주요내용의 배경과 특징	30
다. 국내외 반응	35
라. 북한 반응	49
II. 「7·7 특별선언」의 지속적 후속 실천조치 강구	52
1. 대북한 경제 개방 조치	52
가. 조치의 배경과 의미	52
나. 항목별 주요 내용	55
2. 남·월북 작가의 음악·미술작품 규제해제	58
III.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65
1. 제5차 준비접촉	65
2. 제6차 준비접촉	69

I. 남북화해와 국제협력의 선도

1. 대통령 국정연설

가. 배경과 의의

노태우 대통령은 10월 4일 제14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의 국정연설을 통해 올림픽이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서 「민주번영의 통일시대」를 제시했다.

아울러 노태우 대통령은 정치·사회의 민주화, <선진화합경제>의 추진, 민족통합을 위한 통일 기반조성과 적극적인 북방정책 추진, 그리고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등의 시책을 제6공화국이 추구할 국가 운영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번 국정연설 내용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혀온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경영의 기초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대통령이 정부예산안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심의, 요청하는데 따른 국정연설을 행한 것은 우리나라 40년 의정사에 있어서 1979년 11월 최규하 대통령외에는 처음있는 일로서,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책임을 함께 하는 민주주의 관행을 직선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실천해 보인 것이라 하겠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을 통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위대한 국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확고한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으며, 지난 40년동안 우리가 이룩한 각 부문의 성과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킴으로써 민족공동체가 영원히 번영·발전하는 선진된 통일 국가를 이룩하겠다는 국정비전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통일여건의 긍정적 변화와 북방정책 추진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냉전체제를 주도적으로 청산하여 동서 세계 모든 국가와 관계를 개선, 평화통일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자신감과 사명감을 강조하였다.

이번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서울올림픽을 사상 최대·최상의 대회로 치룬 국민적 자신감을 과거 1세기에 걸친 외세와 타율에 의한 민족의 시련에 종지부를 찍는 원동력화합으로써 세계의 중심국가로 뛰어오르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자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기적, 정치기적, 문화기적을 이룩한 위대한 저력은 우리 앞에 놓여진 도전과 두터운 장벽을 얼마든지 극복해 낼 수 있다는 인식과 아울러 화해와 개방이라는 세계사의 주류를 타고 우리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야 할 당위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는 냉전체제시대의 고정관념을 깨고 모든 부문에서의 욕구와 젊은 세대의 이상을 수용하고 실현하는 진향적, 진보적 정치관이 기초로 되고 있으며, 남북관계에서도 국제정세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통일환경을 자주적으로 개척함으로써 적극적이며 전진적으로 대응해 가겠다는 의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따라 동 연설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경축사에서 제의한 「남북정상회담」을 더욱 구체화함과 동시에 불가침선언을 포함한 쌍방의 모든 제의를 제한없이 논의할 수 있다고 했으며, 북한측의 통일방안중에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 통일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7.7선언」의 기본정신을 구현하는 것임과 아울러 6공화국정부의 과감한 인식전환을 토대로 통일정책추진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를 실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노태우 대통령의 국정연설 내용 중 통일정책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198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국정연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가 1989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새 공화국의 국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며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7년을 준비해 온 서울올림픽이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나라, 많은 선수들이 참가한 사상 최대의 대회로서 선진국이 개최한 역대 어느 대회보다 훌륭한 최상의 대회로 막을 내린 것을 온 겨레와 함께 축하합니다.

그저께 저녁 잠실원두 서울올림픽의 성화가 온 세계인의 축복속에 꺼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밤낮없이 헌신해 왔는지...국내외, 우리사회 구석구석에서 앞장서 주신 모든 국민들의 봉사와 애국심에 보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 자리 여야의원 모두와 저는 이 대회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 온 국민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마음 한결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뜨거운 하나가 되어 이 세계인의 거대한 축제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었으며, 국민 모두가 서울올림픽의 자랑스런 주역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의 영광은 전쟁과 가난에서 스스로 일어나 세계가 놀란 발전을 이룩한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그 피땀어린 노력의 금자탑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속에 우뚝 서 이처럼 자랑스러웠을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기에 들어와 힘없는 약소민족으로 남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동포형제가 총뿔리를 맞대고 피를 흘린 통탄의 어두운 역사에 중언을 고하고, 이제 우리는 통일과 번영을 이루어 21세기, 세계의 중심국가로 뛰어 오르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이 민족에게 준 고난과 시련을 스스로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

저는 7개월전 국민이 저에게 대통령의 대임을 맡겨주시면서 명한 바를 한시도 잊지 않으면서 이 벽찬 성취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은 나라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민족번영의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가 놀란 <경제기적><민주정치의 기적>을 이룬데 이어 올림픽을 성공시킨 <문화국민의 기적>을 이룩한 이 위대한 국민과 함께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벽을 허물고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넘어야 할 세계의 벽은 높습니다.

번영된 민주주의 나라를 만드는데 있어 우리 내부의 두터운 벽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지난 40년간 민족을 가르고 슬한 고통과 비극을 주어진 남북분단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세계와 미래로 나아가는데는 적지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불안과 불확실성의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를 번영하는 민주선진국, 통일된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민족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화합과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일에 저의 모든 것 바칠 것입니다.

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나라의 안정을 확고히 하면서 우리앞의 도전을 이겨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세계는 개방과 화해의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6천만 우리 민족의 운명은 더이상 외세와 타율에 의해 결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국제정세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통일환경을 자주적으로 개척하여 민족통일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저는 저의 임기중 40년간 얼어붙은 남북간에 화해의 봄이 오게 할 것입니다.

남북이 서로 오가며, 교통·교역하고 협력하여 민족공동체로서 서로 신뢰하는 바탕을 이룩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와 협력하여 북한이 굳게 닫은 문을 개방하여 국제사회에 동참토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민족통합의 굳건한 바탕을 마련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7월 7일 남북한이 대결과 적대관계를 과감히 청산하고, 같은 민족공동체로서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갈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저는 제43주년 광복절을 기하여 남북한간의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의 김일성주석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어디서든 직접 만나 회담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지난 9월 8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이러한 제의에 대해 반응을 보인 것을 주시하며, 저는 북한측이 좋다면 기꺼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만날 것입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에서는 불가침선언과 조국의 통일실현 문제를 비롯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현안을 아무런 제한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겨레가 갈라져서 반목과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서로 어떠한 조건을 전제하며 대화를 기피하는 것보다 우선 남북의 최고책임자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민족 화해와 통일의 출발점을 여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통일과 관련한 내외정세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하는 정세에 부응하면서 민족통일국가를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 모두의 염원을 실현할 새로운 통일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분단된 민족의 소망이 가슴 깊이 새기며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 공화국의 통일방안을 가까운 시일 안에 국민 여러분께 제시하려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민족 모두가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시에 민족공동체가 영원히 번영·발전할 통일국가를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민족통일의 방안은 편협한 냉전논리나 어느 일방에 선 주장에서 벗어나 그것을 남북양측이 받아들여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내부의 다양한 통일논의는 물론 북한측에서 제시해온 방안중에서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적이며 실현가능한 통일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우방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한 동서세계 모든 나라와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호혜평등의 원칙위에서 서로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대화를 통해 분쟁의 요인

을 해결하며,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리에 이바지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지난 몇달동안 우리나라와 사회주의국가들간에 교류와 협력의 길이 크게 열리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련, 중국과 동유럽의 주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서울올림픽에 참여한 것은 동서간의 장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바르샤바 동맹국의 하나인 헝가리와 대사급 상주대표부를 교환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새로운 외교지평을 열어가는 역사적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반세기에 걸친 단절의 벽을 넘어 교류와 협력관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을 의미깊게 생각하며,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한·소관계에 대해 전진적 자세를 보인 것을 긍정적인 일로 평가합니다.

저는 중국·소련등 동유럽 국가들과 인적·문화적 교류, 항로의 개설, 교역과 경제협력, 시베리아를 포함한 경제개발 참여등 각 분야에 걸친 협력과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미국·일본, 유럽 여러나라등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들과의 유대를 더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를 함께 지켜온 우방이며, 경제협력·통상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가까운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대외 교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공동체 국가에 대한 우리의 수출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정부는 이들 우방 국가와의 통상마찰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상호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 미국과 일본등 우방국들이 서울올림픽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를 다 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또한 우리의 이웃인 아시아·태평양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제3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과도 우리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나누면서 우호관계를 증진해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북방관계 개선과정에서 결코 북한의 고립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갖게되는 사회주의국가들이 북한과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북한의 발전을 돕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북방관계개선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하고 북한이 책임있는 일원으로 국제사회에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통일여건을 성숙시켜줄 것입니다.

그것은 나아가 동북아의 안전과 세계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합과 번영은 이루어질 것이며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아니라 세계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의 땅이 될 것입니다.

.....

현실보다 더 큰 이상을 추구하는 우리들 다음 세대의 젊은 순수한 열정은 민족통일과 민족옹비의 내일을 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남북의 젊은이들이 휴전선을 넘어 남북의 진실을 스스로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교류할 길을 터나갈 것입니다.

남북한 대학생의 국토중주, 남북청소년간의 교환 체육대회, 토론회...그 어떤 것이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교류를 실현함에 있어 당국간에 안전만 보장된다면 그 규모나 형식에는 구애받을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젊은 세대간의 남북교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며 대학의 당국자들과 학생들이 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북방정책이 진전되어 우리 젊은이들이 중국·소련·동유럽 여러나라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교류는 비단 젊은 세대간에 뿐만 아니라 사회 각분야, 각 직능에 구애 없이 실현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현실화 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거대한 세계의 축전 올림픽을 어느 선진국보다 훌륭히 치를 만큼 우리 민족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자신감 또한 충만합니다.

우리에게 타율을 요구해온 세계도 변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협력의 새 물결은 우리 겨레 앞에 새 영역을 열어 우리에게 개척의 의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민주번영의 통일시대>를 힘차게 열어 민족사의 소망을 성취할 시기입니다.

21세기 다가오는 연대를 희망의 세기로 맞기 위해 통일의 길을 여는 일, 번영이 넘치는 자랑스런 민주선진국을 만들어 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보람찬 실무입니다.

저는 꿈과 아픔을 국민과 함께 하며 성심성의, 이 역사적 사명에 모든 힘 다할 것입니다.

저는 재야의원 여러분과 사회 각 부문, 온 국민에게 아낌없는 협력을 요청합니다.

모든 국민의 슬기와 화합, 협력 없이 이 간절한 민족의 과업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겨레 모두가 손잡고 세계와 남북, 우리 내부에 가로놓인 많은 벽을 허물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과거보다는 미래, 정파보다는 나라를 위해 우리는 손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야당 지도자 여러분이 오늘과 같은 나라의 성장과 민주적 발전을 이룩하는데, 그리고 온 국민의 단합 속에 서울올림픽이 빛나는 성공을 거두는데 크게 기여해 주신 것을 높이 평가하며 그 보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억압과 저항의 소모적 정치는 이처럼 지난 시대의 것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욱 보람찬 역사와 나라의 밝은 장래를 열어 가는 <창조의 정치>, 온 겨레에게 진진을 고무하는 <희망의 정치>를 실천해 갑시다.

의원 여러분, 이 나라 지도자 여러분과 저의 협력을 디딤돌로 하여 민주·번영·통일의 영광이 남북의 온 겨레, 우리들 다음 세대 모두의 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 손잡고 우리 앞에 가로놓인 모든 벽을 허물고 넘어 더 위대한 나라, 빛나는 시대, 화합과 평화가 넘치는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관련 주요 내용의 의미

새 통일방안 제시 천명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민주화 노력과 더불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는 활발한 통일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 통일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소의 혼란도 없지 않았지만, 정부는 헌정질서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왔다.

이렇게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과 열망을 수렴한 토대 위에서 통일에의 실질적인 진전을 도모하고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은 지난 시대와는 분명히 다르다 하겠다.

정부는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지난 7월 7일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해 새 공화국의 남북관계 및 통일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적극 구현하기 위하여 후속실천조치들을 꾸준히 실행해 오고 있다.

6공화국이 기울여온 통일노력은 한마디로 북한과의 적대·경쟁관계를 지양하고 남북이 하나의 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선의의 동반자 관계라는 새로운 인식을 공유하자는데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

남북이 비록 체제를 달리하면서도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 민족의 삶의 원형인 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는 노력을 통해 사회·문화·경제공동체와 정치공동체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인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관계 인식과 통일과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할 필요성은 통일과 관련한 내외정세의 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과 함께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하겠다.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의 목표는 우리 민족 모두가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통일국가를 완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남북간의 긴장과 대결의 근원이 되어온 불신을 해소하고 우선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상부상조하고 함께 번영하는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대통령은 이번에 새 통일방안 제시의 당위성과 함께 그 수립방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포용성과 실현가능성을 제일 중요한 요건으로 확인하고 있다.

즉 우리 내부의 다양한 통일논의 뿐만 아니라 북한측에서 제시해온 방안 중에서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편협한 냉전논리나 어느 일방의 주장만에 근거한 통일방안이 된다면 북한측을 포용할 수 없고 따라서 결국 아무런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례가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새 통일방안의 제시 천명은, 정부가 통일논의의 장을 활짝 개방하여 국민 여론을 광범히 수렴·반영해 나온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남북한교류·협력시대」를 내다보고 의연한 입장에서 민족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며 실천가능성 또한 높다고 하겠다.

새 통일방안은 여야를 포함한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뒷받침됨으로써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여는 장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국정연설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학생 교류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밝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남북한간 인적 교류 추진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뜻과 함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7월 15일 「남북교육 당국간 회담」을 제의하였으며, 청년·학생의 상호 교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국정연설에서도 『당국간에 안전만 보장된다면 그 규모나 형식에는 구애받을 것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 문제를 대학의 당국자들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러한 정부의 노력을 한 걸음 더 전진시킨 적극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정부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입안함에 있어서나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을 수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엇보다 대의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성취에의 긍정적 영향여부를 척도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 있다.

남북한 정상회담의 재촉구

노태우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우선 남북한의 최고책임자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민족화해와 통일의 출발점을 여는 전기가 될 것』임을 강조,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의한 「남북한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였다.

대통령은 이미 남북의 지도자가 서로 만나 민족의 장래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데 있어 장소, 의제, 절차 그 어느 것도 장애요인이 될 수 없다며 조건 없는 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설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남북한 정상회담의 의제문제에 있어 「불가침선언」과 조국의 통일 실현문제를 비롯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한 점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불가침 협정체결」을 제의하고 정부의 기능을 토대로 이러한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왔던 점에 비추어, 이번에 북한측이 주장해 온 「불가침선언」까지 의제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우리측의 유연하고 포용성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하겠다.

사실 김일성은 그들의 정권수립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9월 8일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직접 언급하면서 구체적 의제를 제시함과 함께 몇 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웠다.

즉 「불가침선언 채택」, 「연방정부 수립 또는 그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위원회 창설」을 의제로서, 그리고 북한·미국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거, 군비 축소 등 종래 주장해 온 일련의 정치·군사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대통령은 일단 김일성이 직접 공식반응을 보여온 점에 유의하고, 남북한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간의 모든 현안을 타개할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이번에 북한측이 제시한 의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전진적 양보를 표명한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문제는 시급한 당면과제이며, 이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불가침선언」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남북정상회담의 재촉구는 남북관계사에 있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북방정책 추진의 가속화

노태우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중국과 소련, 동구 공산권 국가에 대해 관계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 취임이후 세계 모든 나라가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서 서로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으며, 이에 따라 중·소 등 공산권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관계수립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북방정책의 의지는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구체적인 성과를 낳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동서간의 장벽을 허물고 서울올림픽에 참가한 것은 물론, 문화예술단을 파견하고 소련영사단이 서울에 왔으며, 우리 비행기가 중국·소련의 영공을 통과하는 등 그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된 것이다.

더구나 사회주의 국가의 무역대표부가 서울에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헝가리와는 대사급 상주대표부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은 우리 외교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하겠다.

「고르바췌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시베리아 지역의 공동개발 참여에서 항로의 개설, 교류·교역 및 경제협력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관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같은 북방정책의 실효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증표이다.

우리의 북방정책이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이후 불과 수개월만에 이처럼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그동안 냉전체제 속에서 주로 서방세계와 관계를 맺어온 외교의 틀을 세계 모든 나라와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번영에 기여하는 적극적 방식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의 북방정책은 『북한의 고립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전폭적인 공감을 받고 있다.

사실 북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중의 하나는 민족공영의 입장에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여 남북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의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는데 있으며, 이 점은 국정연설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북한과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북한의 발전을 돕기를 희망한다는 전진적 의사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넓게 보면 북방정책은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을 전제로 한민족의 활동무대를 세계로 넓히는데 더 큰 의의가 있으며, 통일을 성취하는 노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북방정책은 보다 폭넓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나, 경제적 실익의 관점에서보다는 이같은 남북관계 개선의 맥락에서 파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도 노태우 대통령이 밝히고 있듯이 우리의 북한정책은 미국·일본·유럽 등 전통적인 우방국들과의 유대를 더 한층 강화해 나가는 노력과 병행해서 추진될 것이다.

다. 국내외 반응

국내 주요 신문들은 이번 국정연설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북방정책, 민주화 추진, 경제시책 등 향후 5년간의 통치이념과 국정진로를 제시한 것을 크게 환영하였으며, 특히 통일 문제와 북방정책에 대한 노태우 대통령의 열의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노태우 대통령이 「7·7 선언」이나 「8·15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김일성과 만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이번에 다시 한번 『북한측이 좋다면 평양을 방문하여 불가침선언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한 점과 『북측의 통일방안 중에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은 더욱 진취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민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제6공화국의 새 통일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 적극적인 태도와 진취적 포용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한 노태우 대통령의 집념은 매우 고무적이며 의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의 적극적인 추진력에 의해 조만간 남북관계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새 통일방안의 제시와 북한측 주장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의 천명은, 서울올림픽의 성공과 높아진 국민의 자긍심을 발판으로 삼아 평화통일을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노태우 대통령의 다짐』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울올림픽 대회를 계기로 소련·중국·동구권 국가들과의 상호 교류가 넓어진 것은 우리 외교사에 뜻깊은 이정표로서, 이러한 북방정책의 추진이 『북한을 남북화해의 길로 끌어내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원대한 포석이라고 공감하였다.

한편 주요 외신들도 노태우 대통령이 이번 국정연설을 통해 올림픽의 성공으로 높아진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북화해와 북방정책의 추진에 유연한 자세를 견지, 직접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측 주장도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한 것은 보다 진일보한 제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남북간의 직접 대화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 추진의 근본』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번 연설이 남북간의 정신적 장벽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논평하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측의 이에 상응한 반응을 기대했다.

또한 대부분의 외신들은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북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특히 소련측은 한국의 포용력있는 자세에 주목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의 아·태 정책연설에 대해 『진진적 대한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고르바초프」 제안을 환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내 반응

국정은 건전한가

-민주·통일시대에 대한 열망-

조선일보(1988. 10. 5)

노태우 대통령은 민주화와 남북관계 및 북방정책 등 국내외 현안들에 관해 향후 5년간의 국정의 진로를 제시했다. 올림픽이 끝난 오늘의 시점을 고비로, 사실상의 노태우 시대는 이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의 문제와 관련해 노대통령은 40년간의 권위주의 통치는 분명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권위주의 잔재는 완전히 청산되었다기보다는 잠복해 있다. 권위주의 시대의 억압의 장본인들과 각종 법제와 장치들은 일시 목소리를 죽이고 있을 뿐, 청산·혁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화의 과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착수해야 할 일이다.

구시대적인 인사는 쇠퇴해야 하고, 각종 억압적인 법규들을 개폐해야 하며,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는 제도와 기구들은 그 존재양식을 바꿔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구세력과 관료세력 및 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반발이 있을 것이므로 민주화 추진의 앞날은 여전히 순탄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사람과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파괴하려는 세력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말은 곧 좌익혁명 추구자들에 대한 엄격한 법적 대응의 의도를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 우리는 악법의 개폐를 전제로 한 엄밀한 정치주의와 인권수사 및 공정한 재판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고 본다.

세계의 어떤 나라치고 폭력행동이나 폭력혁명 또는 진복활동을 제재하지 않는 나라는 없겠지만, 그 대신 그 제재가 정당화되려면 법과 법의 집행방식 및 수사와 재판이 모두 정당하고 문명적이며 또한 공정해야 한다. 6공화국은 과연 이 요건을 명실공히 갖출 것인가의 여부를 우리는 날카롭게 주시할 것이다. 특히 권력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

대의민주주의를 존중하는 혁신세력은 당연히 그 활동이 보장된다고 말했는데, 과거에 이런 세력까지도 무차별 탄압했던 관성이 과연 지금이라 해서 일시에 불식될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한 노대통령의 집념은 매우 고무적이며 의욕적이다. 불가침선언을 포함해 모든 쌍방의 제의를 제한없이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노대통령의 적극적인 자세는 조만간 남-북간에 그 어떤 극적인 통풍구를 뚫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우리는 이 노력이 과거와 같은 국민소외 - 야당소외의 정권적 차원의 독주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자 한다. 북한이 제시하는 방안 중에서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한 대목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앞으로 밝히겠다고 한 새로운 통일방안에는 그러한 폭넓은 수용의사가 과연 어떻게 담겨질지 그 입안과정에는 각계 각층과 야권 및 재야-학생의 의견까지 고루 수렴해 들이는 민주적 자세가 보여야 할 것이다.

북방정책이란 이름의 사회주의권과의 교류와 협력의 문제에 있어 우리는 그 통로를 정부-여당이나 일부 재벌들이 독점하는 일이 없어야 함을 강조한다. 여기엔 야권의 역할, 중소기업의 몫, 기타 모든 국민의 참여가 고루 권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통일추진과 북방정책에서의 해빙과 해금은 국내시책에서의 금압과 결빙이라는 모순된 이중성을 드러내서는 안된다. 밖으로는 풀면서 안으로는 죄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5공비리 등 구악의 청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시대의 잘못이 전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는 없다』고 언급되었다. 그러나 구악의 청산 없이는 전진도 할 수 없으며, 보복은 원할 바 아니더라도 그 대신 참회와 사과 및 국민적-국가적 피해의 원상회복은 있어야 마땅하다. 절대로 무조건적인 망각이나 어물어물 통과란 있을 수 없다.

경제시책으로는 물가안정과 복지확대, 소득과 개발의 균형화정책이 제시되었다. 이 모든 과제들은 한두 해에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정부가 일관된 정책의지로 광범한 제도와 법령, 행정조직과 관행을 개혁하고 재정과 조세, 금융과 무역, 국토개발과 토지정책의 쇠퇴를 통해 꾸준히, 그리고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해야 비로소 의미 있는 결실이 맺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목표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 실천과정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같은 제도적 개혁은 곳곳에서 기득권자나 특혜의 수혜자그룹, 독점적 재벌 등의 이해와 상충되거나, 반발과 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을 것이다. 이해절충의 표본이라 할 조세개혁이 그렇고, 금융기회의 균점이나 독점과 경제력 집중의 개선 또한 그럴 것이다.

결국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내용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정책의지와 결단, 그리고 목표를 향한 일관된 정책수단의 활용이 모두 갖추어져야 가능한 것들이다. 특히 국정연설에서 밝힌 경제의 윤리성 확립, 공정성 확보, 그리고 투기와 불로소득의 봉쇄는 정부가 시범하고 해결해야 할 최대의 역점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의 국정 청사진이 보다 구체적인 실천요강으로 후속되기를 기대한다.

노대통령의 시정연설

한국일보(1988. 10. 5)

노태우대통령은 4일 제헌 국회 이래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국정연설을 국회에서 했다. 노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장기적으로는 그가 4년반 동안 이끌어 갈 통치 이념과 정국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으며, 단기적으로는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난 뒤의 정치·경제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고 하겠다.

노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우리가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전기를 가져왔다는 인식 밑에 민주번영의 통일시대를 열 것을 다짐했다. 그는 『북한이 좋다면 기꺼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과 만나 불가침선언을 비롯하여 모든 현안문제를 제한 없이 논의하겠다』고 선언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확고한 신념을 거듭 확인했다.

이는 서울올림픽의 성공이 가져다 준 국민의 자신감과 함께 높아진 성취의욕을 민족통합의 굳건한 발판으로 삼아 평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으로 평가된다. 노대통령의 평양방문용의 발언은 「7. 7 선언」에서 이미 밝혔던 것이지만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하겠다는 점과 북한의 통일방안 중에서도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은 받아들여겠다는 발언은 앞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통일정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예고라고 보는 해석도 있다.

노대통령의 의욕적인 통일정책과 과감한 북방외교가 전환기에 선 우리로서는 불가피한 점도 없지 않으나 이것들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업적주의에 치우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동구권과의 문호개방과 경제교류도 같은 맥락에서 서두르지 말고 추진돼야 하며, 보다 중요한 정책변화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은 이처럼 북방외교와 통일정책에 대해선 강한 의욕을 보여줬으나 국내 정치와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총론적인 미사여구에 그친 감이 있다.

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이미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껏 5공비리와 광주사건이 매듭지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5공비리의 척결을 부르짖는 연유는 잘못된 과거를 청산함으로써 새로운 6공화국을 창조하자는데 있다. 그래서 당면한 5공비리의 청산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은 노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명쾌한 단안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해왔다. 또한 민주화에 대한 노대통령의 청사진도 미흡했다. 정치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인사에 있다. 각 분야에서 구자에 단이 달린 사람들이 새 6공화국에서 일하고 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새로운 정치바람을 일으킬 수가 없다. 아직도 국보위에서 양산된 비민주적 악법이 존재하고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그런 악법을 만들고 운영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6공화국에서 활개치는 한 민주화가 달성됐다고 할 수 없다.

노대통령은 민주화에 대한 다짐만 할 것이 아니라 비민주적인 제도의 개선과 비민주인사에 대한 개편을 단행, 쇄신의 청사진을 보여줬어야 마땅하다 하겠다.

사실 과거에는 새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대독해 왔다. 권위주의 정치하에서의 국회경시의 자세임에 틀림없다. 노대통령이 대독제도를 없애고 직접 국회에 나가 국정연설을 한 것은 잘한 일로 평가된다. 노대통령이 선진화합경제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면서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에 1인당 GNP 6천불이라는 소득배가와 1992년까지 2백만호의 주택을 짓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올림픽이후의 우리 경제전망은 반드시 밝은 것만은 아니다.

한미통상마찰과 개방압력, 국제적인 불황기미 등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불확실 요인이 가로놓여 있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게 노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아쉽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을 기대하고자 한다.

국제화 시대의 북방외교

서울신문(1988. 10. 5)

서울올림픽의 성공이 한국의 국제적 위신을 높이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그 북방외교 신장에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국토의 분단과 동서냉전시대의 유산 때문에 늘 대결과 폐쇄의 굴레에서 헤어내기 어려웠던 한국은 이제 온 세계를 무대로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유엔회원국 수보다도 많은 1백 60개국을 서울 한마당에 불러 화합과 협조를 구가하면서 우리는 스포츠 제전을 뛰어넘어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서울대회를 계기로 소련·중국·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과의 이해가 깊어지고 상호교류의 길이 넓어진 것은 우리 외교사상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노태우 대통령은 4일 국정연설에서 이와같은 국가위신의 고양을 배경으로 북방외교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북방외교의 추진은 그것이 40년간 단절됐던 사회주의권과의 교류와 협력의 길을 넓힌다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북한을 남북화해의 길로 끌어내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즉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데 아니라 북한도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문호를 개방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모색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소련의 외교담당자가 이제 냉전외교의 시대는 지났다고 갈파했고, 중국 또한 국제협력에 있어서 정경분리를 표방하고 있으며, 냉전시대에 대립했던 국가들이 최근 새로운 화해를 모색하고 있는 사실들만 보아도 국제적인 분위기는 지금 크게 변화해 가고 있다.

오직 북한만이 냉전논리의 틀 속에 갇혀 국제사회를 외면해 왔다.

노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남북간 불가침선언을 포함하여 조국의 통일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문제라도 김일성과 만나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앞서의 제의를 확인하였다. 우리 북방정책이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데 있는게 아니라 그들을 민족공동체안의 동반자로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과 지금까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오던 사회주의국가들이 이제는 이념의 장벽을 넘어서서 교류와 협조를 모색하고 있는 사실 때문에 김일성이 지난날의 대결 내지는 적대정책을 고집하기는 점점 어렵게 돼 가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국가들은 요즘 한반도에 있어서의 대립의 논리를 뛰어넘으면서 북한의 반대를 거의 의식하지 않고 있다. 헝가리는 한국과 대사급의 상주대표부를 교환하면서 북한의 저항을 한마디로 물리쳤다. 북한의 집요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헝가리의 뒤를 따르고 있다. 또한 소련의 고르바초프는 최근 시베리아연설에서 한국과 소련의 경제협력 가능성에 언급했고,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회의에서는 시베리아 개발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가 공공연히 토의되고 있다. 세상은 벌써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며 서울 올림픽의 성공을 계기로 냉전시대에 우리를 가로막던 장애물들은 하나하나 제거돼 가고 있다.

노대통령은 그의 임기중에 남북화해의 봄이 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약속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단절됐던 국가들을 향하여 북방외교를 정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대통령의 국정연설

동아일보(1988.10. 5)

노태우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추구해 나갈 국정방향을 밝혔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예산안 제안에 즈음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정운영방향을 밝힌 것부터가 과거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주인인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다짐으로 해석하고 싶다. 노대통령 자신도 이제 권위주의통치는 사라졌으며 민주주의시대의 밝은 아침을 맞았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정치 스타일이나 민주주의 시대의 선언이 바로 실질적 민주화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6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이미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5공비리와 광주사건 등이 거의 한건도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구시대의 청산없이 신시대의 출발은 없는 것이다. 5공비리의 척결없이 민주개혁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노대통령이 올림픽이 끝난 후 이부분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지난 시대의 잘못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 없다』고 대답했다.

현정부가 이처럼 5공비리를 어물쩍 넘기려 하는 한 노대통령이 밝힌 멋진 국정방향은 하나의 미사여구로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또한 정치적 민주화는 구시대와 단을 갖고 있는 인사의 쇄신으로부터 시작해야 함에도 이 부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현 정권의 권력핵속에 비리에 동조하거나 비민주악법들을 만들어낸 정치인 관료들이 도사리고 있는 한 개혁을 향해 달려려는 대통령의 족쇄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 우리는 먼저 과감한 인사쇄신으로부터 시작하여 각종 억압적인 법령을 개폐하고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는 제도 기구들을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다 분명한 선언과 보강책을 제시했어야 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해 법의 존엄성과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백번 타당하다. 민주주의가 공권력의 무력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서구민주주의 사회도 법치주의 토대위에 성립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권력의 행사가 국민으로부터 백안시 당해온 근본적 원인은 특정인, 법적 정당성이 없는 권력기관의 앞잡이가 되어온 공권력 자체에 있다. 검찰과 경찰이 정권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공권력을 행사할 때 법의 존엄성은 스스로 높아질 것이다. 정권적 차원에서 국정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은 문제의 정곡을 찌른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사람과 민주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 자유화 민주화를 내세우면서도 실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 파괴시키려는 좌경폭력혁명세력이 확산되고 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들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의 의도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시켜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좌경세력의 발상이 바로 구정권의 과오에 있고 있는 자와 없는 자, 도시와 농촌 그리

고 지역간의 극심한 편차에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해소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관한 획기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은 아쉽기 그지 없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노대통령의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져 보인다.

7·7선언이나 8·15선언을 통해 이미 북한의 김일성주석과 만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북한이 주장해온 남북한 불가침선언을 비롯하여 그들의 다른 주장 일부도 토론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은 보다 전향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구체적 통일방안은 후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통일에 관한 의욕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이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자신감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동서대탕트전개에 상응하는 조치일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소련 및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이 탈이념 경제실리의 바탕에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주변상황은 남북문제의 통풍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김일성주석의 자세다. 북한의 부자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폐쇄적 고립주의 정책하에 경제적 낙후상태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우선 남북한의 공존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족 전체가 번영과 통합으로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생들을 선동하여 한국의 내부교란을 통해 적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시대착오적 사고는 버려야 할 것이다.

정말 북한이 체제에 자신이 있다면 남북한학생의 교류제의도 흔쾌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북방외교에 대한 포부와 기대는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 자체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지만 경제적 기적을 이룬 한국의 자신감이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방외교는 경제적 실리도 목적이지만 남북화해의 매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그러나 성급하고 급격한 북방외교는 자칫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깨뜨릴 우려가 없지 않다.

미일 등 우리의 전통적인 맹방관계를 무시하고 정권적 차원의 가시적인 성과에만 매달려 대소대중국관계를 발전시키다가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잃을 우를 범할 지 모른다.

노대통령이 선진화합경제라는 용어를 쓰면서 임기동안 1인당 GNP 6천달러의 소득을 약속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우리의 경제현실이 장미빛만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미통상마찰과 인플레이 그리고 노사문제 등 너무도 많은 불확실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노대통령은 국정방향에서 밝힌 막연하고 미흡한 대목을 보다 냉엄한 현실진단 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보완, 국민앞에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남북문제 해결의 새단서

-노대통령 제의 북한은 큰눈으로 보라-

경향신문(1988.10. 5)

노태우 대통령은 4일 새해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국정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북방정책, 민주화추진, 경제시책 등 당면한 국내외 현안들에 관해 폭넓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노대통령이 통일 및 남북문제 해결방식에서 피력한 소신은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집념의 강도를 보여준 것으로 주목된다. 노태우대통령의 통일정책비전은 7·7선언과 8·15남북최고책임자회담 제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북한측이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타협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북한이 좋다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주석」과 만날 것이며 북한측 의제인 불가침선언문제를 비롯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대목까지는 앞서도 언급된 것으로서 새로울게 없다.

그러나 『북한측이 제시한 방안중에서도 통일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한 말은 상대방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는 선에서 금후 남북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는 지도자의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대통령의 그런 화해의지는 민족통일방안은 편협한 냉전논리나 어느 일방에 선 주장에서 벗어나 남북양측이 받아들여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제6공화국의 보다 구체적인 통일방안은 가까운 시일안에 국민앞에 제시될 예정이어서 그 귀추가 자못 주목된다.

정부당국자에 의하면 자주·평화·민주·복지의 4개원칙이 천명될 새통일방안은 「상당히 적극적인 내용」이 담기게 될 것이며 늦어도 11월 초에는 공표될 수 있도록 작업중이라는 소식이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공산권과의 교류증대 등 북방외교의 성과가 가시화하기에 이르렀고, 신데탕트시대의 개막 등 전반적인 국제환경도 남북대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통일접근방식의 과감한 방향전환은 현국제정세가 요구하는 당연한 귀결이자 역사적 요청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대통령은 중국과의 교류·협력관계와 고르바초프의 한·소관계에 대한 전진적 자세 표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방정책추진과정에서 한국은 결코 북한의 고립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사회주의국가들로 하여금 국제무대로 나오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취하는 여유를 보였다.

이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북한의 행동반경을 넓혀주려는 정부의 관대한 외교포석이다.

솔직히 말해서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실현의 문제는 남북당사국만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주변강대국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동안 남북간만에 여러 경로를 통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본다면 북한은 이제 신중하고도 책임있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요 책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동서의 두 리더인 미·소가 최근 한반도문제에 관해 빈번히 발언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남북한은 함께 귀기울이는 바가 있어야겠다.

미국이 한·미 양국의 합의의 토대 위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북한정책입안을 모색중인가 하면, 소련도 북한의 국제사회에의 동참을 위해 미측이 북한측의 한반도 긴장완화방안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 대중·소접근이 초래할 북한의 고립감을 우려, 『어느 정도 미·일의 대북관계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름든 통일논의를 위한 국제환경의 호전과 조건성숙의 호기를 놓치는 일이 없이 남북정상회담 실현으로 이어지길 우리는 기대한다. 노대통령의 통일에 관한 의욕적 소신은 앞으로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단서가 되어줄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

해외반응

N.Y.T(1988.10. 4)

-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에서 노태우 한국대통령은 김일성과 만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노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북한측 제안 일부를 수렴한 새로운 남북한 관계개선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한국전쟁중 중공과 싸운이래 처음으로 공산권 국가들과 폭넓은 접촉을 갖게 한 서울올림픽이후 한국정부는 이들 각국과의 문화교류, 항로 및 해상운송로의 개설, 무역확대, 시베리아 개발에의 참여 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Washington Times(1988.10.4)

- 노태우대통령은 김일성의 9월 8일 반응은 전제조건없는 정상회담개최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나는 그와 만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 노대통령은 또한 남북한 정상회담에서는 『불가침 선언과 조국통일문제를 포함,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현안을 아무런 제한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북한간에 「화해의 봄」이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한 노대통령은 남북한간의 대결을 지양하고 김일성과 만나 모든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자신의 지난 「7·7선언」을 상기시켰음.

L.A.T(1988.10. 4)

- 전국에 TV중계된 국정연설에서 노태우대통령은 북한학생들과 회담하려는 한국학생들의 노력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교류든 이를 승인하겠으며 대학의 당국자들과 학생들로 하여금 교류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할 방안을 연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Balser Zeitung(1988.10. 4)

- 북한은 김일성이 가장 우려했던 상황에 봉착했음. 즉, 한국이 올림픽 성공과 사회주의국가의 적극 지원하에 우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노대통령은 남북한 관계에서 조건없는 남북정상회담 뿐만 아니라 통일프로그램 제시 약속을 내놓음으로써 이제 공은 북한 코트에 떨어졌음.

Neue Zurcher Zeitung(1988.10. 4)

- 한국의 북방정책은 기대를 고조시키고 있으나 남북한간의 긴장상태의 완화라는 전제조건하에 서만 성공이 보장될 것임.
- 미·소·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관심이 있으며 중·소의 올림픽 참가는 이를 반영하고 있음.

모스크바 방송(1988.10. 4)

- 노태우대통령은 김일성주석과 회담차 평양행 의사를 표명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회복을 위해 북한의 입장도 일부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노대통령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9월 16일 연설에서 제기한 아·태지역 국가와의 협조 제안을 환영했으며, 한반도문제에 대한 소련의 긍정적 태도를 지적했음.

아사히신문(1988.10. 4)

- 노대통령은 북한 김일성주석의 9월 8일 주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지만, 북한은 끝까지 자신들이 주장한 통일방식을 실현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음.
- 결국 쌍방은 예비회담을 개최, 타협점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이며, 13일 재개되는 남북국회 예비회담이 그 전초전이 될 것 같음.

산케이신문(1988.10. 4)

- 노태우대통령이 연설중에 김일성주석이라는 표현을 3번씩이나 사용하고 남북불가침선언문제를 포함시키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임.
- 올림픽성공으로 한국의 국제적인 입장이 강화됨으로써, 남북대화의 이니셔티브를 한국측이 잡는 것을 내외에 보일 것으로 보임.

NHK TV(1988.10. 4)

- 노태우대통령은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찬양하는 한편, 그 자신감을 배경으로 남북통일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또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서로가 만나는 것이 통일의 출발점이므로 북한이 동의만 한다면 가까이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 일본외무성 소식통은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은 가까운 시일안에 어려울 것으로 보며, 북한이 제의한 불가침 선언문제는 남북간의 군사적 균형이 밑받침되어야만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NBC TV(1988.10. 4)

- 올림픽의 화합정신이 한국의 정치분야에 흘러들고 있음.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콩 TVB(1988.10. 4)

- 노태우대통령은 남북통일과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전개했음.

AP.Reuter(1988.10. 5)

- 미국무성 대변인 오클리 여사는 『우리는 노대통령의 연설을 환영한다. 그것은 그가 북한에 대해 제시해 온 건설적이고 긍정적 제안을 한걸음 더 전진시킨 것이다』 라고 말했다.

The Times(1988.10. 5)

- 노태우대통령은 남북한간에 학생상호방문과 스포츠 교류를 권장하고 중·소와의 관계개선 노력에 있어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Washington Post(1988.10. 5)

- 노태우대통령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의 여세를 몰아 한국은 이제 세계속의 하나의 경제적·정치적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한국정부는 이번 올림픽 대회로 한국의 세계적 지위가 강화됨으로써 북한이 패배를 자인, 과거 수십년간의 대남 적대행위를 지양할 것을 바라고 있음.

S ddeutsche Zeitung(1988.10. 5)

- 노태우대통령이 협상을 위해 평양에 갈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는 등 새로운 화합의 정신을 표명함으로써 최근 서울에서 온 뉴스가 보다 긍정적임.

Dagens Nyheter(1988.10. 5)

- 현재 한국에서는 남북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 계획은 야당으로부터도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음.
- 정상회담이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이번 제의는 남북간의 정신적 장벽을 제거하는 첫걸음이 될 것임.

요미우리(1988.10. 5)

- 노태우대통령은 남북관계의 개선문제에 대해 『정상회담으로 불가침 선언이나 통일문제 등 모든 현안문제를 제한없이 논의할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여 김일성의 9월 8일 제안을 대체적으로 받아들일 의향을 보였음.

아사히신문(1988.10. 5)

-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올림픽 전부터 남북쌍방이 서로 제안해 왔으나 이것이 실현되기까지는 매듭지어야 할 점이 적지 않음.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결국은 남북대화를 통하는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음. 북한이 대화에 응할 도량과 슬기를 보여주어야 하며 「혁명기지도선」을 언제까지나 고집하지 않기를 바랍.

닛케이신문(1988.10. 6)

- 노태우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의욕을 보이는 동시에 북한이 주장해온 불가침 선언을 논의해도 좋다고 말하는 등 매우 유연한 자세를 보였음. 이 제안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대응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강하게 기대함.
- 한국,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가 정치면에서 급진전한다고는 예상하기 어렵겠으나 한국과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국교관계가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도 좋을 것임.
- 노대통령은 북한 적대정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남북의 지도자가 민족의 장래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수 있다면 그 성과는 매우 클 것임. 그러나 경제정세가 상당히 어려운 북한을 지금 이상으로 고립화하는 방향으로 몰아 넣어서는 안될 것임.

교황청, L'Osservatore Romano(1988.10. 6)

- 노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용의를 표명함과 관련, 남북정상회담이 조만간 평양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임으로써 남북한간에 새로운 국면의 긴장완화가 시작된 것으로 아시아 관측자들이 주목하고 있음.

라. 북한 반응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개최제외에 대해 북한측은 10월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성명을 발표, 『남한 당국자가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올 의사를 표명한 사실에 유의하면서 이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9월 8일 김일성이 북한 정권 창건기념 경축대회에서 제기한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을 되풀이 강조, 불가침선언의 채택과 연방정부수립 문제협의, 국가보안법의 폐지, 남북연석회의 소집 등을 주장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요지는 다음과 같다.

성명요지

우리의 이 획기적인 통일제안에 대한 반응의 표시로서 한국측 당국자는 지난 10월 4일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나라의 통일과 대화에 대한 태도를 표명하면서 정상회담 문제를 제기하였음. 우리는 한국측 당국자가 정상회담을 위하여 평양에 올 의사를 표명한 사실에 유의하면서 이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간주함.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누구의 구속이나 보증도 받지 않고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남과 북의 두 체도를 그대로 두는 조건에서 통일국가의 연방정부를 세우거나 그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위원회 같은 것을 창설하는 문제가 협의되고 해결되어야 함.

우리는 남북사이에 최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성숙시키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도는 남과 북의 참여한 정치적 대결상태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인정함. 남북국회연석회의를 시급히 소집하는 것도 남북최고위급회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대한 계기로 됨.

한국측 당국자들이 우선 남북대화 와 양립될 수 없는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철폐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이처럼 북한측은 노태우 대통령의 지속적이고 전향적인 「남북정상회담」 제외에 대해서는 국제 여론 등을 의식하여 일단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종래부터 주장해 오던 국가보안법의 폐지, 불가침선언의 채택 등 「통일환경 선조성론」을 고수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2. 대통령 UN총회 연설

가. UN총회 연설의 의미

노태우 대통령은 10월 18일 정부수립 40주년을 기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159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제43차 UN총회에서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였다.

이번 노태우 대통령의 UN총회 연설은 비회원국인 한국의 세계적 위상이 달라진 상황을 배경으로 한반도에서의 민족화해와 남북간의 교류·협력, 세계평화와 동북아 세력구조의 안정, 통일에의 비전 등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화해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세계에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유엔사에 길이 기록될 만한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번 노태우대통령의 연설은 동서간에 신데탕트 기류와 개방·교류·협력과 화해가 두드러지는 시기에, 남북간의 모든 대결 관계의 지양을 선언한 「7·7선언」 발표에 이어, 또 다시 동북아의 평화정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자주적인 민족통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획기적인 제안을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세계 10위권 무역국가로의 부상과 이에 따른 지속적 경제성장,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국내 민주화의 착실한 진전, 그리고 북방정책의 추진성과 등에 따른 국민적 자신감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번 연설은 민족자존의 용틀임 속에 세계의 중심국가로 뛰어오르는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케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을 세계에 새롭게 인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아울러 극단적인 이념대결로 인한 냉전체제의 희생양으로서 아직 까지 분단의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한민족이 스스로 그것을 청산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해의 새 질서를 이끌어가기 위한 새로운 좌표를 설정함으로써 민족통일과 세계평화에의 사명감과 확신을 부여해 주고 있다.

특히 6·25전쟁에 직접 참전한 대통령의 체험에서 우러난 화해와 평화에 대한 신념은 많은 공감을 받았으며, UN이라는 국제정치무대에서 냉전구조의 종식을 선언하고 이성과 양식이 지배하는 새 화해의 질서를 주장함으로써 세계인의 신뢰와 기대를 모았다.

서울올림픽을 사상 최대의 축제로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자유와 개방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평화와 공영에 대한 인류염원에서 우러나오는 세계의 새 흐름을 확인시킨 것은 그만큼 호소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번 UN연설을 통해 국제정세, 주변환경의 격심한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입장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남북화해에 관한 구상을 자신있게 밝혔다.

뿐만아니라 취임 수 개월만에 획기적 진전을 이룩한 북방정책을 세계에 공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세계평화와 통일여건과의 상관성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새로운 외교지평을 연 바탕위에 포용적이고 전진적인 입장으로 화해와 통일을 추구해 나가는 실천의지를 부각시켰다.

노태우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존경하는 각국대표 여러분,

43년 전인 1945년 바로 이때쯤 2차대전의 종전을 맞은 세계는 새로운 희망속에 국제평화질서를 담당할 유엔의 탄생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종전은 우리 민족에게 외세에 의한 식민통치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수 천년간 지켜온 나라를 되찾는 벅찬 환희와 희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잠시 한 때였을 뿐, 어느 날 아침 그것은 국토 분단의 슬픔으로 표변하였습니다.

종전의 처리과정에서 항복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강대국들의 편의에 따라 북위 38도 지도상에 한반도의 중간을 자르는 분단의 선이 그어졌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이 결정은 우리 겨레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분단은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족을 가르는 높고 험한 장벽이 되었으며 한반도를 냉전의 거센 폭풍속에 몰아 넣었습니다.

1950년 6월 어느 평온한 일요일 아침, 침략에 의한 전쟁이 발발하여 나라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3년여에 걸친 이 전쟁에서 이념을 사이에 두고 20개국의 무수한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고 300만이 넘는 생명이 살상되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학생의 제복을 입고 지원병으로 전선에 나섰던 나는 슬한 젊은이와 무고한 사람들이 전화속에 피흘리며 숨져가는 것을 보며 평화와 화해를 갈구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분단과 대결은 어떠한 노력으로라도 종식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1953년 7월 포화를 멈추었으나, 그 결과는 평화도 전쟁도 아닌 휴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남북단절과 대결의 긴장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대의 조류가 스쳐가도 한반도의 긴장은 얼어붙은 동토와 같았습니다.

한국 휴전선상의 시계는 1953년 이후 정지한 채로 서 있어온 것입니다.

한반도내의 무력분쟁은 언제라도 세계를 전화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불씨가 되어 왔습니다.

이 각박한 상황으로 인간적으로 치루어야 했던 대가 또한 형언할 수 없습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부모, 남편, 처자와 헤어져 남북으로 갈라진 수백만 국민들은 한세대가 넘도록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화도 교환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동포들간 가슴속의 한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 절실한 현실을 타개할 길은 과연 없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한반도에도 화해와 평화의 따뜻한 봄이 오게 해야 합니다.

나는 이번 유엔총회가 「한반도에서의 평화·화해·대화의 촉진」이라는 시의적절한 의제를 택한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환영합니다.

의장, 나는 귀하가 이번 총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며, 이번 총회가 알찬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오늘의 세계에는 개방과 화해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전후체제의 기조가 되어온 냉전적 갈등을 인류의 이성과 양식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결에서 공존으로, 반목에서 화해로 인류의 기대는 전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희망의 징후를 이 자리 모든 분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8년을 지속해온 이란·이라크 전쟁이 하비에르 뼈레스 데 꾸에야르 사무총장의 훌륭한 통찰력과 지도력에 힘입은 유엔의 중재노력으로 종식되고 있는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온 세계 모든 인류가 이 평화의 전당에 대해 큰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유엔 평화 유지군이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도 이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프카니스탄과 캄푸치아, 나미비아, 서부사하라에서도 평화를 위한 진일교의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간의 미소정상회담의 결과 인류를 파멸시킬지도 모를 공포의 전쟁요소를 감축해가는 실천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은 평화를 향해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장,

나는 바로 2주일전 막을 내린 서울올림픽의 <화합과 전진>의 정신을 그대로 가슴에 간직한 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24회 올림픽대회는 12년만에 동서·남북의 세계가 한자리에 모이고 160개국의 젊은이들이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교를 초월하여 한마당을 이룬 인류화합의 대축제였습니다.

올림픽사상 최대의 이 축제는 평화와 화해가 마침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낙관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고 아직도 분쟁의 위협이 있는 땅에서 가장 훌륭한 평화의 축전이 열린 것은 역사의 극적인 반전이며 우리에게 벅찬 희망을 안겨 줍니다.

그것은 평화와 공존에 대한 인류 염원에서 우리나라의 세계의 새 흐름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인류의 제전을 안전과 최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하고 지원해준 세계 모든 나라 국민에게 감사드립니다.

제24회 올림픽대회는 불과 한 세대전, 전쟁의 폐허위에서 가난과 굶주림에 떨던 한 민족이 시련을 딛고 피땀어린 노력으로 일어서 이룩한 발전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크나큰 긍지를 느끼며, 한국민의 성취가 인류화합의 물결을 고조시키는데 이바지하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세계 모든 개발도상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더해주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불과 30년전 남의 나라에 의존하던 빈곤한 농업국가가 신흥산업국가로 발돋움 한데에는 부지런한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성취의욕이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불가침한 권리와 타고난 창의, 그리고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개방사회와 자유경쟁체제의 이점은 이러한 발전을 이끄는 힘찬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국제무역을 통하여 우리의 빠른 성장이 가능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권의 무역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역의 신장은 우리나라는 물론 교역상대국의 고용과 소득을 향상시켜 상호의 번영을 촉진해 왔습니다.

세계는 우리에게 분단과 전쟁의 시련을 주었으나 동시에 우리에게 발전과 성장을 위한 도움도 주었습니다.

이렇듯 오늘의 세계에서 우리는 인류가 당면한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평화, 번영을 향

해 전진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세계에 진보를, 그리고 인류에게 희망을 약속하는 것은 개방과 교류, 협력과 화해를 촉진하는 길 이외 또 다른 묘방이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폐쇄와 대립, 적대관계와 분쟁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이 지구촌 어디에서나 재앙과 고통을 가중시켜줄 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개방과 협력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룩한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와 번영, 통일을 열어가는데 드높은 자신과 낙관속에 21세기를 맞으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억압없는 자유를 누리며 각부문이 자율을 향유케 함으로써 개개인과 사회 구석구석마다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힘은 우리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의장,

오늘날의 세계는 한 시대의 매듭을 짓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변하는 것은 변화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유엔이 대결과 분쟁을 해소하는 새로운 화해의 장이 되고 있음을 스스로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냉전체제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아온 한반도에서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쟁이 빚은 불신이 남북한간의 대결을 낳았습니다

휴전후 지난 35년간 엄청난 군사력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맞서 왔습니다.

이 대결의 구조를 종식시키는 것은 서로를 가르는 벽을 허물어 서로 개방하고 교류, 협력하여 믿음을 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지난 7월 7일 이것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나는 남북한간에 서로가 서로를 불신, 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든 대결의 관계를 지양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나는 남북한이 한 민족으로서 번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촉진시켜 나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이 선언을 통해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간의 통신조차 두절된 수백만 이산가족간의 만남은 물론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와 자유로운 왕래를 제의했습니다.

나는 남북한간에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아가 민족전체의 번영을 위해 남북한간에 끊어진 도로와 길을 연결하고, 서로가 가진 인력, 기술, 자본을 동원하여 공장을 함께 짓고 국도를 함께 개발하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나는 휴전선안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시>를 건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화시>안에서 30년 이상 헤어졌던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만나며, 민족문화관, 학술교류센터, 상품교역장등을 설치하여 폭넓은 교환, 교류, 교역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선언에서, 우리는 대외적으로도 대결의 관계를 지양할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이 책임있는 성원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그것이 북한동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은 서로의 위치를 설정하고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 가야 합니다.

나는 우리의 우방국가들이 북한과 관계를 증진하여 북한의 개방과 발전에 기여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북한과 가까운 사회주의 국가들이 우리와 우호 친선관계를 증진해 가더라도 북한과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과 더욱 협력해 나가기 바랍니다.

남북한이 서로를 존중하며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결코 우리들이 추구하는 최종목표는 아닙니다.

이것은 민족통합을 위해 신뢰를 심는 불가결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정착될 때 남북 쌍방은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

나는 지난 8월 광복절에 즈음하여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직접 만나 회담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분단 이래 남북한은 평화와 통일방안에 관하여 상이한 수많은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남북의 최고책임자가 아무 전제조건없이 직접 만나서 쌍방의 견해와 입장을 털어놓고 논의함으로써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타협의 실마리를 찾는 데 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제도화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의 토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일성 주석이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반응을 보이는데 대하여 주목하면서, 나는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평양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간의 기본적인 상호신뢰와 안전보장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난 30여년간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여 온 남북한간의 관계를 상호신뢰와 공존공영의 관계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틀이 설정되어야 하며, 또한 이는 남북 최고책임자간에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남북간의 불가침선언이 있기 전이라도 북에 대하여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남북한은 오늘날과 같은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정된 평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와 통일실현방안, 남북간의 교류협력, 군비축소 등 군사문제를 포함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구체적 방안도 이 회담에서 강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

남북한간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결구조로 인하여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화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서울과 평양이 한반도의 평화와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국들과 더욱 합리적이며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앞으로도 계속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긴밀한 협의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한국은 과거에 이념적 차이로 인하여 상호관계가 소원하였던 중국, 소련 그리고 동유럽의 여러나라들과도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상호존중과 평등의 원칙위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번영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상호 대화와 이해의 통로를 통해 분쟁의 요인을 해결하며 국민간의 우의와 협력을 넓혀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나는 지난 몇개월에 걸쳐 중국과 소련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우리와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에 전진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고무적 현상으로 평가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와 오랜 이웃인 중국이 반세기에 걸친 단절의 벽을 넘어 교류와 협력관계를 넓혀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한소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을 주목합니다.

우리는 최근 상호협력관계가 계속 확대 심화되어온 많은 제3세계의 비동맹국가들과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유대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개발도상국가와는 우리의 성장, 개발의 경험과 기술을 기꺼이 나눌 것이며 우리의 힘이 자라는데 까지 최선의 협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제3세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다면 같은 발전과정을 걷고 있는 우리의 보람일 것입니다.

의장,

이제 태평양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생동력과 발전에의 의지, 국제간의 협력강화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랜 동양문화의 요람이며 태평양지역의 한 중심인 동북아시아는 지난 1세기를 통하여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으로부터 태평양전쟁, 그리고 한국전쟁과 오늘의 긴장에 이르기까지 세계평화의 시금석이 되어 왔습니다.

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없이 세계의 평화가 없으며, 이 지역국가간의 협력없이 태평양 번영의 시대는 열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동북아에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의 공고한 바탕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 남북한으로 동북아 평화협회의를 열 것을 제의합니다.

이 회의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이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모든 문제를 폭넓게 다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이들 관계국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데에는 이념과 체제, 입장의 차이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확대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불가분의 동반자임을 직시한다면 그러한 난관은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상의 현실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유익한 국제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의장,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내다보면서 인류역사의 한 장이 종결되고 새로운 장이 열리려는 것을 느낍니다.

확실히 지구촌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념보다는 이성과 지혜가 이끄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또다시 세계적 분쟁의 암흑속으로 곤두박질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개방과 협력, 평화를 제쳐놓으면 인류에게 이것을 막을 별다른 선택이 없어집니다.

나는 평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이 인류활동의 주류를 형성하는 새 역사를 바라봅니다.

한반도에도 긴장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한민족이 형제애로 화합하는 선율이 인류의 심금을

올릴 때가 올 것입니다.

나는 5천년 역사상 남을 침략하지 않은 우리민족에게 시련이 그치고 평화와 통일의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한반도에서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드는 날, 세계에는 확실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남북의 6천만 겨레와 함께 민족적 대화합을 이룩해 나갈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세대의 엄숙한 사명이며, 새로 자라나는 세대의 꿈이자 정열인 것입니다.

합치된 노력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분쟁과 빈곤이 지배했던 땅에서 가장 훌륭한 올림픽이 열렸듯이, 한반도에 분단의 벽이 허물어지고 화해가 넘치는 날은 머지 않아 올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존경하는 대표여러분,

끝으로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서울올림픽 주제가가 노래하고 있는대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겨레의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훌륭한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인류의 복리에 기여함으로써 이에 보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주요내용의 배경과 특징

한반도의 분단상황 극복과 국제적인 화해의 주도역할 강조

조국분단은 우리 한민족의 의지에 상관없이 외세에 의해 결정되었고 아직까지도 단절과 대결의 긴장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전화의 불씨를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UN총회가 다시금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한반도에서의 평화·화해·대화의 촉진」이라는 의제를 설정한 데에서 시사하듯이 남북한 문제는 우리 민족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공통인식과 함께 이에 따른 관계국과의 환경조성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번 UN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비극이 우리 겨레의 뜻과는 달리 강대국의 분점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하게 상기시켜 오늘날 한반도문제 해결에 강대국과 세계가 왜 책임을 공유해야 하는가를 부각시키는 한편, 서울올림픽에서 극적으로 표상된 동서화해의 흐름과 그 속의 고도와 같은 한반도 냉전대결구조를 대비,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필요성을 도출해 냈다.

세계는 바야흐로 냉전구조에서 벗어나 이성과 양식이 지배하는 새로운 화해의 질서(New Detente)로 전환하고 있으며, 개방·교류·협력을 통해 대결·폐쇄·분쟁을 화해·공존공영·평화로 바꾸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소·중 등 강대국간 화해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회주의국가들도 개혁·개방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함에 따라 새로운 국제질서가 편성되고 있다.

UN의 역할에 있어도 페르시아만, 나미비아, 서부 사하라 등지에서와 같이 그 중재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평화의 전당」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함에 따라 UN의 평화유지군이 1988년도 노벨평화상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88서울올림픽은 전세계 160개국의 젊은이들이 참가한 동·서·남·북간의 「화합과 전진」의 축제가 되었으며, 한국이 이러한 세계화해의 흐름을 주도하고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10위국의 무역국가로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개최할 정도로 급성장한 나라로 세계에 인식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의 표상이 되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이 이번 UN총회 연설을 계기로 세계 속의 한국의 새 위상 정립과 평화주도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번 연설은 한국인의 긍지와 자신감 그리고 개방과 화해를 향해 달리는 역사적 조류에 대한 확신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성취하는 전기로 승화시키려는 강한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 하겠다.

한반도 평화정착 여건조성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의회담」 제의

이번 연설에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것은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포괄하는 평화통일로의 확고한 구상을 밝힌 점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한간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하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동북아지역의 대결구조로 인해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떠나 생각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모든 이해당사국들과 합리적이며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말하자면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이라는 2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족자주역량의 강화와 국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의 제도적 보장을 상호보완적으로 추구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전통적인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과거에 이념적 차이로 상호관계가 소원하였던 중국, 소련, 동구권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북방정책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상호번영과 세계평화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러한 견지에서 중국과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한국과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에 전진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한·소 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오늘날 태평양지역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노태우 대통령의 지적처럼 『동북아의 평화없이는 세계의 평화가 없으며, 이 지역국가간의 협력없이 태평양 번영의 시대는 열릴 수 없다』고 하겠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와 같이 통일여건과 동북아평화 그리고 세계정치와 주변정세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에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의 공고한 바탕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 남북한으로 동북아 평화협의회의를 열 것』을 제의한 것이다. 이 회의체는 우선 이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모든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포괄적이고 전향적인 평화협의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즉 「동북아 평화협의회의」 구상은 동북아지역의 대결구조를 안정·협력·평화구조로 전환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익한 국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노태우 구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국한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제안이라기보다는 한반도 문제를 포함하여 세계적인 화해질서를 동북아지역에 능동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다원적 포석에 비중을 둔 제안인 것이다.

한편 이번 노태우 대통령이 제의한 「동북아 평화협의회의」는 강대국의 입장이 아닌 위치에서의 주도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동북아에 넘치는 개방·협력의 기운을 현실화시키는데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 평화협의회의」 제의는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지난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아·태지역 평화안 7개항)에서 군사력의 동결과 감축을 위한 다국협상을 제의한 내용과 그 성격이 판이하다.

또한 과거 키신저 미국무장관이 주장하였던 한반도 관련 당사국간 「4자」 혹은 「6자」 회담 형식 등 강대국 협의회담으로서의 다자회담과도 본질적으로 상이하다.

「동북아 평화협의회의」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하고 주변국은 어디까지나 그 여건을 조성하는데 협력한다는 것인데 반해, 여타의 다자회담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주변국들이 직접 협상을 벌인다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동북아 평화협의회의」 구상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태평양지역의 안정·평화의 제도화, 협력·번영의 체제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21세기를 향한 태평양시대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국제회의 형식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노대통령이 이 같은 제의를 하게 된 데에는 한반도 유관국의 상황을 감안하고 이 구상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소련의 경우 「크라스노야르스크 평화안」을 제안하는 등 이 지역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고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려하고 있는가 하면 시베리아 개발을 축으로 한 대한자세의 전환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개방과 경제개혁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도 동북아 협력이라는 현실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경제력에 부응하는 국제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미국은 지리적 위치로 인한 제약때문에 이 지역 국가들과의 쌍무적 관계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 회의체가 창설될 경우에는 미국은 태평양국가로 남을 명분을 확보하게 되며, 내외로 한계점에 직면한 북한에게도 활로를 터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아직도 대결구조가 잔존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이념과 체제의 벽을 뛰어 넘는 세계 최초의 지역협의체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물론 노태우 대통령이 인정하듯이 참가대상국들이 이념과 체제, 입장의 차이때문에 이 회의체의 현실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에 대한 공동의 이해관계로 인해 관련국들이 「불가분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의 공유는 이 구상에 매우 높은 실현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 평화협의회의」가 원활히 운영된다면, 휴전협정 대체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협의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에서의 미·소 대립완화, 일·소 간의 영토분쟁, 중·소 간의 화해 및 국경분쟁, 한국의 대중·소 관계개선,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주선 등의 포괄적인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노태우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의회의」 제의는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과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정착, 태평양 번영시대를 선도하려는 원대한 구상에서 나온 것이며, 앞으로 우리 외교정책의 중요한 근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남북화해의 상징으로서의 「평화시」 건설

남북간의 긴장과 대결의 근원은 전쟁이 빚은 상호불신에 있는만큼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개방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우리 민족은 5천년 역사를 통해 하나의 경제권·문화권·생활권을 유지하면서 민족공동체를 영위해왔다.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이후 줄곧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동체의식에서 출발, 민족전체의 공동번영을 위해 서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 가운데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킴으로써 평화통일도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접근방식을 시도해오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의 통일신념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7.7 특별선언」은 이제까지의 남북간 대결관계를 지양하고 새로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것을 선언한 통일정책의 일대전환임과 동시에, 북한의 개방을 돕고 국제사회에의 참여에 협력하겠다는 포용적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하겠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번 UN총회 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시를 건설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이 평화시 안에서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만나며 민족문화관, 학술교류 센터, 상품교역장 등을 설치하여 폭넓은 교환·교류·교역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시」 건설방안은 노태우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노력의 구체적인 구상중의 하나로서 일단 인적·물적교류의 길을 트는 계기를 마련하자는데 뜻이 있다. 이를 통해 남북간 교류가 본격화되면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한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모델적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국제적인 「평화시범구역」으로서 개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평화시」는 민족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한 제반활동영역을 확대함과 동시에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 「대화와 접촉」의 장으로서 화해의 상징기능을 수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남북화해의 타개책 : 남북정상회담개최

노태우 대통령은 이번 UN총회 연설을 통해 『지난 8월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직접 만나 회담할 것을 제의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데 이어, 9월 8일 북한정권 창건기념일 등을 통해 『김일성 주석이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반응을 보이는데 대해 주목하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평양을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하였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의 최고책임자가 아무 전제조건 없이 직접 만나서 쌍방의 입장을 털어놓고 논의함으로써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한 타협의 실마리를 찾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제도화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의 토대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연설에서 주목되는 점은 남북정상회담 그 자체를 국제정치무대로 끌어올린 의미의 중요성과 아울러 지난 30여년간 군사적 대결을 지속해온 남북한 관계를 상호신뢰와 공존공영의 관계로 대체하기 위해 「기본적인 틀」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간의 기본적인 상호신뢰와 안전보장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공동선언할 것』을 제의하는 한편, 특히 남북간의 불가침선언이 있기 전이라도 북에 대하여 먼저 무력을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회에 선언하였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10월 4일 국정연설에서의 『불가침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①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능케하는 제도적 장치
- ②통일실현방안
- ③남북간의 교류협력
- ④군비축소 등 군사문제
- ⑤휴전협정을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는 구체적 방안
- ⑥기타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 등 논의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실현에 강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그동안 북한측이

계속 요구해 오던 「불가침 선언」을 협의할 용의를 국제사회에 표명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무력불사용을 선언함으로써 「군사문제 우선 해결」을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에 전진적이고 융통성있게 대처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 국내외 반응

국내 주요언론들은 노태우 대통령의 UN총회 연설이 건국 40년만에 이루어진 최초의 외교적 승리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줄기찬 민족화합 의지와 평화통일 열기, 그리고 열강들의 책임과 역할을 세계인들에게 강렬히 호소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UN총회 연설은 「7.7선언」에 이어 『동북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자주적인 민족통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남북화해를 위한 실천조치로서 <평화시>를 건설하자고 한 대목이나 『남북정상회담에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제안한 것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여건만 성숙된다면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회의의」 구상은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모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며, 그 실현가능성과 주변대상국의 반응이 고무적이라고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보여준 정치적 의지와 경륜은 신데탕트 기류 속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새로운 위상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는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을 만큼 다 내놓았으니 북한은 이제 선택적으로 변화와 대응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한편,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한 UN주재 외교관들은 대부분 노태우 대통령의 현실적인 제안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특히 「레이건」 미국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이 전세계의 환영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우노」 일본외상은 노태우 대통령이 「평화시」 건설과 「동북아 평화협회의의」 창설을 제안한 것은 획기적인 것으로서 노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외신들도 한국의 지도자가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연설한 것은 처음이었지만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화해·평화의 메시지를 통해 『분단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용감하고 창조적인 외교제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의 선도적인 제안으로 인해 군사문제 우선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측이 오히려 『한국측 제안을 무시할 경우 한반도 긴장상태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 북한측의 개방과 각성을 촉구한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특히 11월 8일부터 9일까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EC 12개국 정무총국장 회의는 노대통령의 UN총회 연설내용을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 『①남·북한간 대화재개를 환영함 ②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새로운 제안들이 유화적 분위기 속에서 진전되고 있는 것에 고무됨 ③특히 노대통령의 UN총회 연설에서의 제안들을 환영함 ④남·북한 양측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연성과 진향적 자세를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동 공동선언문 채택은 11월 4일 EC 아주국장 회의시 영국측 발의에 따른 것으로 노대통령의 UN총회 연설에 대한 최초의 EC 공동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화해와 국제협력 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실증해 주고 있다.

국내반응

노대통령의 유엔연설

동아일보(1988.10.19)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이란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총회본회의 연설은 우리 한국민들의 통일의 의지를 세계무대에 천명한 뜻깊은 메시지이다. 국가원수로서 최초의 「유엔」총회연설이란 사실 말고도 이 시점의 그는 건국 이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외적으로 한결 돋보이는 대통령이기도하다. 지금 우리는 정치 사회적으로 민주화의 장정에 막 들어선 나라이고 이런 사실을 세계가 주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개도국의 대통령이란 점이 「유엔」총회에서 그를 더욱 부각시켜 주었을 것이다.

또한 그의 연설은 인류의 공존공영을 바라는 많은 세계인들을 공감하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가 힘주어 역설한 것은 세계평화를 위한 동북아의 안정, 이를 성취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의 한반도의 화해의 통일이다.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 통일이겠지만 이를 배제한 동북아의 안정이나 세계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세계가 다 아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냉전체제에 의한 대립과 반목의 세계가 화해와 공존의 마당으로 변환되는 시기이다. 한반도의 남북대립도 주변강대국들의 개방과 교류정책으로 점진적인 해빙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 한국은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북방정책을 펴서 중소 및 동구권과의 화해와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후원자이던 이들 공산국가도 더 이상 북한의 폐쇄정책을 달가와하지 않게 됐다.

노대통령이 천명한 통일구상은 남북간의 화해 교류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과 이를 토대로 한 민족통합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안으로는 남북정상회담과 밖으로는 한반도분단 관련국들의 협력에 의한 동북아평화협의회의의 창설을 제의했다.

남북정상회담 제의에서는 그동안 우리측이 꺼려오던 군축 등 군사문제를 포함한 쌍방간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타결하고 특히 남북불가침선언 및 무력불사용 선언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북한주장도 상당량 수용하는 적극적인 포용력을 보여주었다.

이번 연설중에서 제일 눈길을 끄는 동북아평화협의회의는 남북한 및 미·일·중·소 등 6자협의체를 구성, 이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단속적으로 제기됐던 3자·4자·6자 등의 다국간 회담이 한반도 문제에 국한된 한시적 성격을 가졌던 것에 반해 이번 협의회는 한반도 문제는 물론 이 지역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상설기구란 점에서 실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향적 제의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더욱 이 협의회는 지난 6월 「알마아타」에서 열린 미소 두 나라 연구소의 학술회의에서 제시된 한반도통일 처방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당사국들간의 이해의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그 실현에 대한 기대도 큰 것이다. 다만 북한이 이에 동의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세계가 공감하는 제의라면 언젠가는 그들도 이에 동참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설에서 우리가 크게 공감하는 것은 이같은 갖가지 제의에 앞선 이성과 양식이 지배하는 미래세계에 대한 노대통령의 확신이다. 세계평화, 동북아의 안정, 나아가서 한반도의 통일은 궁극적으로 제의나 회담에 의해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전 인류의 이성과 양식에 의해 한꺼번에 풀린다는 그의 확신에 우리 모두가 공감해야 할 것 같다.

세계에 천명한 평화의지
-노대통령 유엔연설에 복은 답하라-

중앙일보(1988. 10. 19)

18일 노태우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6공화국이 앞으로 추진할 통일·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그 골격은 남북한간에 교류확대를 통해 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킴과 병행해서 남북한이 서로 상대의 우방과 교차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바탕위에서 『민족공동체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의 토대』를 찾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대한 통일에의 청사진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서 군축문제를 포함한 모든 현안문제를 다룰 정상회담의 실현과 휴전선내 「평화시」건설 및 남북한을 중심으로 미·소·중·일이 참석하는 동북아평화를 위한 6자회담을 제의하고 있다.

남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방향과 전제에 있어서 노대통령의 연설은 5공화국 이래 한국이 추구해 온 대북한 정책을 집약하고 있다.

그것은 통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상보다는 현실에 치우친 흠을 지적하는 측도 있지만 남북한간의 관계와 한반도가 처한 국제정치적 위치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길인 것 같다.

한반도 내외에서 이념의 벽을 허물어 공존체제를 우선 마련하고 거기서 움푹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한국측 생각은 분단상황을 인정하는 어떤 편의주의도 통일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배척해 온 북한의 입장과 평행선을 그으며 지금까지 남북한 관계의 순조로운 전개를 막아왔다.

그러나 금년초부터 한국이 추진해 온 북방정책과 중소 및 동구권 제국들의 개방정책이 맞아 떨어짐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현실론이 북한의 이념적 지지세력으로부터도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음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주변 상황의 큰 변화는 소련이 남북한 문제의 고착상태를 타개하는 수단으로서 교차승인 방식의 유효성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언동을 바꾸고 있는데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와같은 변화의 대세를 반영하고 있는 노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서 우리는 북한의 반응을 다음 세가지의 점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변혁과정을 체제전복의 기회로 보는 듯한 입장을 버리고 현정부를 통일문제 담합의 정통성있는 상대로 성실성 있게 받아 들이는 자세다.

둘째, 지금까지 북한측 입장을 지지해 준 공산권의 한국접근이 뜻하는 탈이념·공존쪽으로서의 방향전환을 대세로 받아들여 이에 순응할 용의가 있느냐는 문제다.

셋째, 북한이 한국을 비롯해서 미일등 이념을 달리하는 나라들과 관계개선을 하는 것이 북한의 경제적 낙후성을 탈피하는데 도움이 되고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서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문제다.

이와같은 세가지 문제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인 변신을 보일 때 모처럼 마련된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기회는 실질적 성과로 개화될 수 있을 것이며 그 바탕에서 통일의 길도 열릴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번 국회회담 예비접촉에서 남북간의 기본적 입장차이를 접근시킬만한 반응이 북한측으로부터 나오게 되기를 중심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평화통일에의 새 단서
-노대통령의 유엔연설에 담긴 뜻-

경향신문(1988.10.19)

노태우대통령의 유엔연설은 건국 40년만에 유엔총회 본회의장에 선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라는 외교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의 줄기찬 민족화해 의지와 평화통일열망 그리고 열강들의 책임과 역할을 세계인들에게 강렬히 호소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다.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을 여는 길」이란 제목의 연설을 통해 노대통령은 미국·소련·중국·일본, 그리고 남북한등 6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회의」를 개최하자고 역설, 각국 유엔대표들의 공감을 샀다. 노대통령은 장장 30분에 걸친 연설에서 세계속의 한국의 새 위상정립과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실현방안 등 21세기를 대비하고 민주번영으로 가는 한국민의 자신감을 전세계에 피력했다.

강대국들의 파워게임에 의한 분단과 그로 인한 남북대결의 와중에서 한때 유엔의 피원조국이었던 한국의 지도자가 한반도에서의 대결구조의 종결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의 감격이며 우리 국력신장의 증표가 아닐 수 없다.

동서간에 신데탕트 기류와 개방과 교류, 협력과 화해가 강조되는 시기에 남북한간의 모든 대결관계 지양을 선언한 7.7선언에 이어서 이번 유엔총회연설은 동북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자주적인 민족통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획기적인 제안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당장 문호개방에 어려움이 있다면 휴전선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시」를 건설하여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그밖의 폭 넓은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제안이나 남북한 및 주변 4강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회의」를 개최하자고 한 제안 등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여건만 성숙되면 당장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제안들로서 돋보인다.

북한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도 정세변화의 압력을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우선 「평화시」건설안에 대해 북한측의 긍정적 호응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남북접촉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판문점은 장소도 협소할 뿐 아니라 본래 그 구역설정부터가 군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대화와 교류의 장소로서는 부적절하다.

최근 북한측도 조통위 성명을 통해 처음으로 한반도 주변정세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지만 중국과 소련도 한국과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에 근래 전진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6개국 동북아 평화회의가 실현되도록 북한측은 호응해야하며 통일의 단서를 풀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남북한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노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을 상호신뢰와 공존공영관계로 대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의 설정은 결론적으로 남북최고책임자 사이에서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측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불가침공동선언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제의했으며 평화정착의 제도적 장치와 통일실현방안, 남북교류, 군비축소 등 군사문제를 포함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논의, 타결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측의 결단과 선택에 달렸다. 노대통령의 평양방문 의사를 사회단체의 「조건부환영」수준에 묶어 둘 것이 아니라 김일성 주석 자신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화해와 통일의 길
-민족의 희망을 밝힌 노대통령 연설-

조선일보(1988.10.20)

노태우대통령의 유엔연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그만큼 우리에게 감동적인 것이기도 했다. 첫째 우리나라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했다는 사실이 그렇다. 둘째로 노대통령의 연설은 어떤 의례나 국위선양의 차원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한국민의 절박하고도 절실한 의지와 희망을 세계에 호소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세계의 수많은 나라 원수들이 유엔총회라는 세계의 영광스러운 무대에 등장했지만, 노대통령처럼 스스로의 체험과 함께 평화와 공존공영을 절실하게 호소한 예는 없었다. 그는 「2차대전 종전의 처리과정에서 항복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강대국들의 편에 따라」 한반도가 분단된 사실을 상기시키고, 그 자신이 학생복을 입은채 전선에 나서 전화속에서 평화와 화해를 갈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동아시아의 한 지역에서 비극적인 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국민의 대표답게 그 자신의 체험을 적나라하게 소개함으로써 세계인의 공감을 얻었다. 그의 말대로 우리나라가 「강대국의 편에 따라」 어이없게 분단됐으며, 그 결과 그 자신도 전쟁의 참화를 겪어야 했기 때문에 이를 극복, 지양하기 위한 그의 제의들은 한층 실감있고 설득력있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먼저 당사자인 남북한을 비롯, 한반도 문제관련 4강회의를 제의한 것은 역사적, 현실적으로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했던 일본, 그 무장해제의 명분으로 이 땅을 갈라놓은 미국과 소련, 그리고 한국전 개입으로 다시 분단을 불가피하게 만든 중국 등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은 한반도내의 전쟁재발 방지이다. 그들이 전쟁만 일어나지 않게 버티어 준다면 당사자끼리의 화해의 길은 열릴 것이다. 4강의 참여는 그런뜻에서 결자해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로, 빠른 시일안에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자는 제의도 상대방이 전제조건처럼 내걸었던 불가침선언을 받아들였다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제 북한 당국은 또 무슨 조건을 달 수 있겠는가.

오히려 우리는 불가침과 무력의 불사용을 공동으로 선언하자는 노대통령의 지나치게 과감한 제안을 염려하는 입장이다. 북한은 국가보안법이나 주한미군이 화해나 통일의 저해요인이라며 절대 철폐, 절대철수를 고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쪽을 향한 북한자체의 전투태세도 어느 정도는 풀어야 말이 되지 않겠는가.

한쪽은 무장을 단단히 한채 다른 한쪽의 무장만 먼저 풀라는 요구는 무리이다. 북한이 만약 1962년 12월 노동당 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전쟁준비 강화책으로 확정한 4대군사노선정책을 철폐하고 10여만의 특수개릴라군단을 비롯한 즉응태세의 전투력을 해체한다면 이에 대비했던 남한의 여러 제도나 기구의 철폐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무장지대내의 평화시 설치와 물자교류제외는 북한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쪽은 그쪽 나름의 사정이 없지 않음을 우리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노태우정부는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을 만큼 다 내놓았다. 선택적으로라도 북한은 어떤 대응을 보일 때가 됐다. 북한은 더 이상 고립을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 고립은 전쟁에의 가장 좋은 유혹이요 구실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선언

-이젠 북한의 진지한 반응 있어야-

한국일보(1988.10.20)

노태우대통령의 19일 유엔총회 연설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자세와 입장을 천명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리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확고한 실천의지를 만방에 선언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이번 연설은 내용면에서도 한반도 통일의 경우 공존과 화해의 대원칙아래 민족의 자주 역량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각국의 공감을 얻고 있다. 노대통령은 냉전체제의 마지막 유산인 통일문제 해결에 이원적 노력과 처방을 제시하여 눈길을 모았다.

우선 7.7 특별선언 정신에 따라 북한의 김일성과의 조속한 정상회담 의사를 거듭 강조하면서 불가침선언 군비축소 등 양측이 제의하는 모든 의제를 토의할 뜻을 밝힌 것은 북한을 민족공존의 자세로 포용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불가침선언전에 대북선제 무력사용을 암했다고 선언하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용의와 휴전선에 「평화시」 설치를 제의한 것 등은 전쟁방지와 평화추구를 위한 우리측의 자세를 진지하게 밝힌 셈이 된다.

연설내용중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바탕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남북한 등 6개국 평화협의회 개최를 제의한 것을 꼽아야 할 것이다.

이 안은 동북아의 평화없이 세계평화를 확보할 수 없다는 논리아래 때마침 세계적 화해무드와 특히 한국과 공산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힘입어 이들 6개국간의 평화와 공존협력체제를 통해 남북한간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나아가 통일분위기를 유도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남북한간의 직접대화와 병행하여 주변관계국들간의 협력체제로 통일환경을 조성한다는 2원전략은 다시 말해 한국이 통일을 지역 및 세계평화차원에서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연설의 의의와 제의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신중하게 지켜야 할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6공화국 출범이후 특히 7.7선언을 기점으로 이어진 잇단 대북제의는 이번 노대통령의 연설로 일단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현단계로서 우리측이 제시할 수 있는 대북화해방안은 모두 제기한 만큼 이제는 북한의 반응과 자세변화를 기다려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이 우리측의 제의를 거의 거부, 일축해 온 상황을 감안하여 그들로 하여금 앞서 제의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다각적인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련·중국·동구 국가와의 관계증진을 내용으로 한 대북방 정책의 경우 정부와 정치인, 실업인들의 잇단 성급한 구상제기로 국민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노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북방정책의 원칙과 라인을 설정한 만큼 정부나 민간측에서는 이 라인을 기준삼아 신중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동북아 6개국 평화협의회는 종래의 4자~6자 회담안과 달리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목표로 했고 또 고르바초프서기장이 밝힌 5개국 군축안과 일부 겹치는 점이 있는 만큼 회의실현을 위해 과감한 설득작업을 펴야 할 것이다.

네째 휴전선의 평화시 설치 문제는 지난날 월남과 월맹이 북위 17도의 공동구역 운영에 실패한 경험을 거울 삼아 이곳이 한쪽의 우위와 발전을 자랑·과시하는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순수하게 만남과 대화의 광장이 되도록 북한측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측이 제시할 수 있는 평화와 통일에 관한 종합적 실천방안이 유엔에서 제시된 만큼 이제 북한은 보다 진지한 자세로서 이를 검토, 성의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더욱이 북한은 노대통령이 밝힌 평화의지와 통일방안에 주요 공산국들이 수긍·환영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

늘날과 같은 화해와 협력시대의 흐름을 북한이 끝내 외면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미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남북화해시대의 이정표
-노대통령의 유엔총회연설-

한국경제(1988.10.20)

노태우대통령의 유엔총회연설은 한마디로 말해 매우 감동적이었다. 한국의 대통령이 유엔에서 행한 최초의 연설이었다는 사실만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더욱이 연설에 담겨져 있는 평화와 화해의 의지는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민족성원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었다. 연설을 경청한 세계각국 대표들에게는 한국을 새롭게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믿는다.

지난 40여년간 세계에 투영된 우리 민족의 모습은 분열과 대결의 그것이었다. 세계정치의 냉전구조가 강요했던 긴장과 갈등의 유산은 우리민족의 진정한 염원과 자존심을 손상시켜 왔다. 그러나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추진은 세계의 인식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 또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크게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새로운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기에 노대통령이 유엔에서 직접 행한 연설은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의 문화 전통과 통일을 갈구하는 민족적 자존심을 내외에 과시해 주었다. 분명히 세계인들도 노대통령의 연설에 공감하고 우리 민족의 참모습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반응과 논평이 나오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문제의 해결을 앞당기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폭넓은 공감대의 형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날 연설을 통해 노대통령은 남북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교류를 위해 휴전선안의 비무장지대에 평화시를 건설하자고 북한에 제의했다. 또한 남북한은 오늘날과 같은 군사적 대치상황을 해결하지 않고는 안정된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우리는 이미 북한과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당장 문을 열고 개방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평화시 건설제안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근본성격은 크게 다른 것이지만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외부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심천특구등을 건설했던 사례와 소련이 극동지역에 자유무역지대의 건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평화시건설이 실현되면 남북은 다방면의 교류를 통한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 이산가족의 상봉 등 한맺힌 민족적 비극을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평화협정 불가침 선언 군비축소등 통일실현방안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타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한다.

(2)

이제 북한은 더이상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보인다. 북한이 국제적인 조류에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낙후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북한주민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민족의 통일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

어서도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보다 유연성있는 대화와 개방의 자세로 전환하여 평화와 화해의 세계 조류에 동참해야 한다.

최근 동북아지역의 정세도 평화와 화해의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구체적인 관계정상화의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더욱이 이번 노대통령이 유엔연설을 통해 제시한 동북아 6개국 평화회담구상은 남북한간의 문제는 물론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획기적인 기폭제가 되리라는 점에서 내외의 환영을 받고 있다.

본질적으로 한반도문제는 우리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민족내부의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보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무시하고는 결코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남북이 주변국가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국제적인 평화회의를 통해 이해를 조정하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동북아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으며 앞으로도 성장을 지속해갈 관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한국과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미국과 소련의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이들 나라들이 국가이익을 추구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결코 전쟁과 동란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경제성장은 이룩될 수 없으며 국가간의 자유로운 경제협력이 보장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때 노대통령의 6개국 평화회담 제안은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모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같은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국가의 적극적인 호응은 물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마도 최근의 고무적인 주변정세의 변화로 보아 구체적인 진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제까지 북한이 취해온 자세로 보아 노대통령의 제안들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북화해와 통일을 앞당기려는 우리의 진지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북한도 결국에는 같은 차를 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노대통령의 유엔평화연설은 진정한 민족자존심과 공동체의식의 표현인 동시에 통일염원을 실현해 줄 획기적인 진전이라는 점에서 내외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해외반응

<각국 주요인사 반응>

「월터즈」 주 유엔 미국대사

- 오늘 노태우 대통령이 내놓은 극히 현실성이 있으며 원대한 구상을 북한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희망함.

한국은 올림픽을 성공시킨 뒤 또 하나의 세계적인 일을 성취시켰음.

「케이아르」 유엔 사무총장

- 노대통령의 화해정신에 큰 감명을 받았음. 앞으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됨.

「카가미 히데오」 주 유엔 일본대사

- 일본은 남북한간의 대화 증진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오늘의 노대통령 연설이 대화, 긴장완화, 화해에 기여할 것으로 크게 기대함.

「리후에」 주 유엔 중국대사

- 노대통령의 연설을 극히 유념하여 경청하였음. 노대통령의 연설에는 아무런 대결적 요소가 없었음.

「알렉산드로 벨레노코프」 주 유엔 소련대사

- 모든 이해당사국들은 이와같은 구상을 관심있게 주목해야 할 것임. 동북아지역은 긴장과 군사적 적대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모색하고 경제 및 과학·문화분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과정을 개시해야 함.

「릴리」 주한 미국대사

- 노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해 북한에 이미 손을 뻗었으며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과 공산권과 전세계가 북한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 나가도록 촉구할 것을 희망함.

「레이건」 미국 대통령

- 노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미국뿐 아니라 온 세계의 환영을 받고 있음. 미국은 북한과의 화해, 세계의 평화를 이끄는 노대통령의 외교적 제안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모든 지원을 다할 입.

서울 올림픽으로 한국과 한국국민은 정치적 기적에 이어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 냈음.

- 한미양국의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것임.

「게스틴 시거」 미 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 담당 차관보

-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화해와 수용을 표시하는 환상적이고 건설적인 정책이며 남북교차승인은 건전하고 확고한 제안임을 확인했음.

「우노」 일본외상

- 노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비무장지대내의 「평화시」 건설 및 미·일·중·소를 포함한 관계국 6자회담 등의 대담한 제안을 한 것은 획기적인 것으로서 노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함.

「블라디미르 페트로프스키」 소련 외무차관

- 소련은 남북한간의 대화를 지지함. 「고르바초프」 서기장도 이미 아시아·태평양 안보에 관한 광범위한 대화를 제의한 바 있음.

「파티슨」 미 외교협회 이사장

- 노대통령의 유엔연설은 역사적인 연설이었으며, 용기있고 현명한 결정을 담고 있음.
6.29선언과 대통령 선거로 한국에 민주주의를 가져온 노대통령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정책을 세계에 제시하고 국제적 지지를 받게 된 것을 축하함.

「피터 칸」 월 스트리트 저널지 발행인

- 서울올림픽의 성공이 모스크바에서 소련국민에게까지 굉장한 찬양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마당에, 노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많은 미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충심의 찬사를 받고 있음.

「남미아르」 인도외무성 동아국장

- 노대통령이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바탕으로 북한의 주장을 더 많이 수용하는 과감하고 화해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 깊은 인상을 받음.
- 남북한 교차승인과 UN동시가입은 그 시기는 어떨지 모르나, 시대의 흐름인 것 같이 느껴짐.

<주요 외신>

Washington Post (1988.10.19)

- 한국 국가원수로는 최초가 되는 노대통령의 UN연설은 「7.7선언」, 「10.4제외」에 이은 세번째 주요한 대북 제스처어임.
- 특히 군사문제에 대한 토의의사 표명은 종래 입장을 초월한 것이며, 군사문제를 다루려는 북한의 주목적은 주한미군 철수임.
- UN총회를 무대로 노대통령이 행한 일련의 화해 제의는 북한에 대한 호응 압력과 함께 한국내의 입장도 강화되게 될 것임.

Chicago Tribune (1988.10.19)

- 노대통령의 동북아평화회의 제의는 지난달 「고르바초프」의 한반도 긴장완화 및 한국과의 경

제관계 제의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서방 외교관들은 노대통령 연설에 열렬한 지지를 표시했으나, 중·소·북한으로부터는 즉각적인 논평이 없었음.

New York Times (1988.10.19)

- 노대통령은 오늘 처음으로 UN총회에서 연설, 한반도 분단종식을 위한 국제회의를 촉구했음.

The Independent (1988.10.19)

- 노대통령은 「평화와 화해의 봄」을 촉구하였으며 북한에 올리브 나무가지를 보내는 평화 제스처를 보였음.

Reuter통신 (1988.10.19)

- 강석주는 통일문제를 논의키 위해 남한 최고당국자가 북한을 방문한다면 환영할 것이나, 남한으로부터의 모든 군사적 위협이 중지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고 밝혔음.
- 강석주는 UN에 대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 철수조치를 취해 주도록 촉구했으나, 노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음.

아사히 신문 (1988.10.19)

- 이번에 평화의 도시를 비무장지대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 것은 노대통령의 민족공동체 정신을 구체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임.

Ottawa Citizen (1988.10.19)

- 미·소·중·일 4개국을 포함하는 국제회의를 열자는 노대통령의 제안은 관련국가들의 호응을 받을 공산이 큼.
- 북한의 우방국들이 한국과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어 어려움은 많지만 북한도 어떤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함에 있어 남북한을 공히 합법화하는 회의를 반대하지는않고 있음.
- 한국이 북한의 어려운 경제를 원조해나가는 한편, 강대국들이 남북한을 인정하게 되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될 것임.

산케이 신문(1988.10.20)

- 노대통령은 올림픽에너지를 사용하여 외교직 이니셔티브를 취함으로써 남북대화·화해에의

길을 개척하려는 결의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됨.

- 이번의 6개국 협의회 구상은 한·중, 한·소 접근 등 서울올림픽 후의 한반도 환경변화를 잘 읽어서 만들어낸 「남북화해안」이며, 미·소간에 협의중인 6자회담에 상당하는 것으로 장래 미·일, 중·소가 각각 남·북한을 승인한다는 교차승인 구상을 명확히 한 것임.
- 동 구상의 배경에는 소련측이 먼저 나타낸 「2개의 한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새로운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임.

Le Monde (1988.10.20)

- 서울올림픽으로 인기상승 일로에 있는 노태우 대통령은 10월 18일 한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연설, 6개국 평화회담 제의 및 남북정상회담 재 촉구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평화제의를 했음.
- 북한은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었음. 개방주의파와 수구파간에 알력이 일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한국 측 제안을 무시할 경우 한반도 긴장상태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 한반도 통일에의 집념을 못 버리고 있는 김일성은 남북한 교차승인안을 반대한 바 있음.
- 북한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분쟁의 발생을 원치 않는 중·소의 압력을 받고 있는 데, 이들 두 국가는 한국과의 교류증진을 희망하고 있음. 중국과 헝가리에 이어 소련은 한국과 통상협정을 체결했음. 한·헝가리 공식관계 수립을 저지하려던 북한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한국의 정통성마저 부인하던 일본의 좌익정당들은 그들의 한국관을 현실화하고 있음.

Wall Street Journal (1988.10.20)

- 노태우 한국 대통령은 남북한을 통일하려는 자신의 노력이 『몇 년 안에』 결실을 보게 될 것으로 낙관을 표명했음.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에의 길을 다지기 위한 활발한 외교활동은 지난 여름 노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일성과의 정상회담을 제의함으로써 촉발되었음. 그는 18일 유엔에서의 연설에서 이 제의를 되풀이하는 한편,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및 소련의 6개국 정상회담도 제의했음.
- 북한의 두 주요 맹방인 소련과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공업국들과의 경제적 교류를 모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북한의 고립이 지속될 수는 없을 것으로 노대통령은 감지하고 있음.
- 노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대결관계를 좀더 건설적인 관계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공산주의 이념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가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쌍방간의 신뢰를 구축하며 상호 협조를 다져나갈 수 있는

이행기를 모색하는 것, 그것이 현 단계에서의 우리의 주요 목표』라고 말했다.

New York Times(1998. 10. 20)

- 18일 노태우 한국 대통령이 유엔의 연단에 섰을 때 전통적인 냉전은 또 한 조각 부서졌음. 유엔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가한 유일한 나라인 한국의 지도자가 이 국제기구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노대통령은 분단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용감하고 창조적인 외교제안을 제시하는데 이 기회를 이용했음.
-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한국을 이끌고 민주화와 인권 면에서의 의문의 여지 없는 진전을 이룩함으로써 용기를 얻은 그는 남북한간의 대화와 남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소련과 중국간의 회담을 호소하기 위해 유엔에 찾아왔음.
- 서방의 우수 경제국의 하나로 부상한 한국은 공산세계에 손을 뻗고 있음.
그는 이제 평화의 모색에 조력할 것을 친구와 적수에게 다 같이 요청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걸친 그의 이러한 노력은 전면적 지지를 받아 마땅함.

Frankfurter Allgemeine (1988.10.20)

- 북한의 등거리 외교는 수포로 돌아갈 것이며, 이제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전망이다.
- 6개국 회담의 구상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게는 비상정보가 아닐 수 없음.

Washington Post (1988.10.21)

- 2차대전의 결과로 분단된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 어느 나라도-독일도 중국도 또한 베트남도 한국만큼 큰 고통을 받은 나라는 없음.
그런 가운데서도 남쪽은 명예를 누릴만한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이룩했으며, 서울올림픽을 주최함으로써 그 업적을 과시할 기회를 가졌음.
- 수십 년 동안 통일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남북한이 그 방향으로 조금씩이나마 나아가고 있음.
남한의 경우 민주화의 진전으로 북한이 38선상에 만들어 놓은 장애를 낮추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한국 지도층이 부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한반도에 분단을 조성하고 또한 이 분단을 지속시킨 동서대립관계가 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사실도 하나의 큰 요인이 되고 있음.
소련과 중국은 북한이 자신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보이코트한 서울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했음.

- 노태우 대통령은 마음 속으로 1천3백년 동안 단일민족이었던 한민족이라 고작 수십 년 간의 인위적인 분단쯤은 쉽사리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그 과정은 더딜 수밖에 없겠으나 노대통령의 희망은 금세기 말까지 통일한국의 실현을 보고자 하는 모든 고무를 받아 마땅함.

S.C.M.P (1988.10.21)

- 제24회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한국의 국제적 위신이 치솟고 있으며, 또한 노대통령의 전례 없는 유엔연설이 있은 후 한국은 이제 통일을 추진할 힘과 자신감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지지도 향유하게 되었음.

Chicago Tribune (1988.10.21)

- 북한은 노대통령의 제안을 반박하고는 있지만 그의 제안에 대해 북한 내에 논쟁이 일고 있다고 말하는 북한 전문가들도 있음.
- 한가지 분명한 것은 노대통령이 일련의 개혁에 새로운 외교정책 이니셔티브를 추가했다는 것임.

포르투갈 Expresso (1988.10.22)

- 노대통령이 금번 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많은 양보를 한 것은 경제적 성공과 올림픽에서 얻은 자신감 때문으로 보임.
- 유엔의 외교관들은 남북한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일의 열망이 고무되기 시작하면 그 여세를 중단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이집트 Al-Akhbar (1988.10.23)

- 관측자들은 남북정상회담, 무역교류 등의 노대통령의 제안은 아주 훌륭한 의도이며 장기간에 걸친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음.

라. 북한 반응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한 다음날인 10월 19일 북한의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노태우 대통령의 제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최고위 당국자가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평양에 오겠다면 환영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강석주는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을 성숙시키기 위해 한국측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북한을 반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장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우면 『최고위급 회담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중간걸음으로서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개최』 하자고 주장하였다.

더군다나 강석주는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과 북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외국군대와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남과 북의 무력을 단계적으로 대폭 감축하며, 한반도를 비핵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종래 입장을 되풀이 강조하였다.

특히 강석주는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이 「두 개 조선의 합법화」 및 「분단의 영구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는 등 유엔권능을 부인하면서도, 유엔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을 철거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유엔의 역할을 요구하였다.

강석주의 유엔총회 연설을 토대로 북한측 주장을 살펴본다면,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한 인적 교류 추진 등 실질적인 긴장완화 방안을 외면하면서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수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석주가 이날 가진 UPI통신과의 회견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김일성과 직접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노태우 대통령이 통일의 장애요인이 되는 근본문제를 토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윤리의 이중성을 보였다. 결국 이러한 북한측의 태도는 남북정상회담을 거부했다는 국제적 비난을 희석시키려는 제스처에 불과할 뿐이며, 종래 그들이 주장해온 군사문제 우선 해결의 입장을 강조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강석주의 유엔총회 연설요지는 다음과 같다.

연설요지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정당한 결의가 채택되었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에는 긴장상태와 전쟁위험이 항시적으로 조성되어 있음.

통일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남북한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한다 하여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시도는 반대함.

교차접촉, 교차승인, 유엔동시가입 등의 방법으로 두 개 한국의 존재를 법적으로 고착시키면 평화가 정착될 듯이 말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음.

우리는 남북한이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지역 정부를 연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함.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남북대화가 진행되었으나 결실이 없었던 원인은 통일을 위한 대화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임.

또한 남과 북 사이에 뿌리깊은 오해와 불신을 낳은 심각한 정치적 대결과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음.

우리 나라에서 남과 북 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풀고 신뢰분위기를 조성하는 문제는 단순히 인도주의적 문제의 해결이나 기타 지엽적이며 부차적인 분야의 교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음.

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군사 문제를 외면하고 내왕이나 하고 교역이나 해 가지고서는 신뢰회복과 통일의 근본문제를 풀 수 없음.

남북 대화에는 당국자들 뿐 아니라 각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 각층 인민들, 해외 동포들도 광범위 참가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쌍무적 또는 다무적 접촉과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함.

우리는 올해 초에도 남북연석회의 소집을 제기하였으며, 남북최고위급회담은 원래 북한측이 먼저 제시한 것으로서 김일성은 지난 9월 북한 정권 창건기념 경축대회를 통해 남북최고위급회담에서는 누구의 구속이나 보증도 받지 않는 불가침선언의 채택과 통일국가에 연방정부를 세우는 문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통일위원회와 같은 통일기구를 창설하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밝혔음.

우리는 한국의 최고위 당국자가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며, 조국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평양에 오겠다면 환영할 것임.

문제는 남북최고위급회담이 실현되어 응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건을 성숙시키는데 있음. 한국에서 대화와 통일의 방해가 되는 법은 취소되어야 하며, 그것이 취소되지 않는 한 남북 사이에 참다운 화해와 통일대화의 실현은 어려울 것임.

한국에서는 북한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군사훈련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북을 반대하는 전쟁 연습의 폭음을 올리고 속에 칼을 품고 있는 조건에서 남북화해에 대해 말할 수 없음.

만일 한국 당국자들이 당장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어려우면 남북최고위급회담의 충분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중간 걸음으로서 한반도에 조성되어 있는 첨예한 정치적 대결상태와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할 수 있을 것임.

한반도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과 북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외국군대와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남과 북의 무력을 단계적으로 대폭 감축하며 한반도를 비핵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함.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진행할 것을 오래전에 제기했음.

남북한이 각각 유엔에 들어가게 되면 분열을 고착시키고 국제적으로 두 개 조선의 존재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남북한의 유엔가입문제는 통일국가인 연방국가가 창립된 다음 하나의 연방국호를 가지고 유엔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천명함.

우리는 유엔이 현장의 목적과 원칙에 맞게 초미의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문제 해결에 응당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며, 유엔은 무엇보다도 유엔군의 이름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할 것임.

또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10월 26일 담화를 발표하고 노태우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해 『한국측이 때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군사문제를 토의할 의사를 표명한 점을 유의한다』고 하면서도, 김일성과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이 제기하였던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 실현에 대해서는 『진혀 언급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이 담화에서 북한측은 『한국측이 교차승인이나 북방정책과 같은 방법으로 두 개 조선을 만들려 하지 말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군축을 해야 한다』며 다시금 「환경조건론」을 들고 나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담화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담화요지

최근 유엔총회에서 미-북한 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며,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설하자는 제안은 회의 참가자들과 내외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음.]

한국측 당국자의 연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우리 인민들에게 여러 가지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음. 물론 지금까지 남북 사이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자고 한 우리측의 여러 가지 평화적 발기들을 완고하게 거부해 온 한국측이 때늦은 감은 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군사문제를 토의할 의사를 표명한 점을 우리는 유의하며 이와 관련한 그들의 근무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임.

이번 한국측 당국자의 연설은 전반적으로 통일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인 방안이 없으며, 여전히 두 개 조선을 국제적으로 합법화하려는 기도가 뚜렷이 나타나 있음.

한반도의 현실은 무력불사용을 그저 말로서 선언이나 한다고 하여 불가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미군철거나 핵무기 철수와 같은 근본문제를 외면한 선언은 실상 아무런 담보도 없는 공담에 지나지 않는 것임.

더욱이 정상회담에 대하여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이미 내놓은 회담 분위기를 마련할 데 대한 문제에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

한국측이 연설의 주제로 내세운 평화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 어떤 국제적 분위기나 환경이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내부에 있는 긴장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임. 문제는 내부에 있는 긴장요인을 제거하는 것인데 평화에 대한 해답을 교차승인이나 북방정책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임.

한국측이 진실로 평화보장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교차승인이나 북방정책과 같은 방법으로 두 개 조선을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며, 미군과 그의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군축을 실현하는데로 나와야 할 것임.

II. 「7·7 특별선언」의 지속적 후속 실천조치 강구

1. 대북한 경제 개방 조치

가. 조치의 배경과 의미

10월 7일 나웅배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7·7 대통령 특별선언」에서 밝힌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제3항)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실천함과 아울러 남북간에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를 발표하였다.

나웅배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남북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공동번영해 나가는 경제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킴으로써 민족경제의 규모와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데』 참뜻이 있음을 밝히면서, 북한 당국에 대해 그동안 중단상태에 있는 남북경제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나웅배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표내용

1988. 7. 7자 대통령 특별선언 제3항은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한 교역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공동번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킴으로써 민족경제의 규모와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북한 당국에 대해 그동안 중단상태에 있는 남북경제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빠른 시일안에 협의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남북경제회담이 재개되기 이전이라도 향후 남북간 경제교류는 민족 전체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남북간에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1. 민간상사 북한물자 교역허용 : 우리측 민간상사나 국내 외국무역상사에 의해 간접교역 형태로 군사물자를 제외한 남북물자의 국내로의 반입과 북한으로의 반출 및 이의 재반출입을 허용함.
2. 민간상사 북한물자 중계허용 : 우리측 민간상사가 북한의 물자를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제3국 물자의 대북한 수출을 중계하는 행위를 허용함.
3. 북한원산지 표시·상표 부착허용 : 북한의 원산지 표시나 상표가 부착된 북한물자의 국내 반입시 원산지 표시 또는 상표를 제거하지 아니함.
4. 직·간접 교역물자 관세 비부과 : 간접교역에 의해 우리측으로 직접 인도되거나 단순히 제3국을 경유한 북한원산지 물자에 대해서는 내국간 거래로 간주하여 관세 기타 수입물자에만 부과되는 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우리측 물자의 대북반출 시에도 수출에 준하여 각종 수출관련제도를 인정함.

5. 남북경제인 상호 접촉·방문허용 : 우리측 민간상사가 제3국에서 상담을 목적으로 북측 인사를 접촉하거나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며 북한 경제인이 상담목적으로 방한을 희망할 경우 이를 환영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과 신변보장 등을 약속함.

6. 북한선적 상용선박 입항허용 : 북한선적의 선박이 남북한 또는 제3국의 교역물자를 싣고 국내 입항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함.

7. 남북경제교류 관련법제 보완 : 상기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한 경제교류에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남북한 간접교역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상의 특수지역 교역에 관한 제 규정 등에 준하여 처리할 예정임.

우리는 이상과 같은 경제분야의 우리측 조치에 대해 북한도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임해주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정부는 남북간의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임.

노태우 대통령의 「7·7 특별선언」을 경제적 측면에서 구체화한 이번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는 동서간의 화해와 공영을 모색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 공산권과의 교류 증진에 맞추어, 남북간에도 경제를 통한 실질적인 접근을 도모함으로써 긴장완화와 통일여건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주도적 노력의 표현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남북한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남북간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족공동번영을 도모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는데 기여코자 하는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아울러 아직도 고립·폐쇄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개방의 광장으로 유도, 민족이 함께 잘 사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상호 경제적 보완성과 지역적 근접성에 따른 이익의 공동수혜는 말할 것도 없으며, 단절과 대결의 남북한 관계를 해소시킴으로서 경제공동체 형성을 앞당길 수 있는 동인이 될 것이다.

그는 남북간에는 1984년 11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상호 경제교류 실현을 위한 5차례의 남북 경제회담이 개최되어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합의에 도달한 것도 있으나, 현재는 중단상태에 있어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1984년 10월 신병현 부총리의 제의를 북한측이 수락함으로써 열렸던 남북경제회담은 교역가능 품목으로 우리측이 철강재·섬유류·직물을 제의하였고 북한측도 무연탄·철광석·명태·옥수수 등을 제시했으며, 경의선 철도연결을 위한 실무자 접촉까지 논의된 바 있었다.

그러나 1986년 1월 북한측이 「팀 스피리트 86」 훈련을 구실로 삼아 그때까지 진행해 오던 각종 회담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함에 따라 남북경제회담은 현재까지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측은 북한 당국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제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으며, 특히 동 회담이 재개되기 이전이라도 어떠한 형태(특히 간접교역)이든 남북한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일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 제시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7·7 선언」의 기본 정신을 최대한 반영하여 남북간 직접교역은 물론 간접교역에 대해서도 상당부분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 관세 등을 미부과하고 교역에 관련된 각종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남북간 실질적인 경제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사실 남북한간에 직접교역의 문호가 개방되기 위해서는 교역범위, 대금결제, 교역 절차 등에 대해 남북한 당국간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이러한 제반조건을 협의할 경제회담이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남북한간에 협정이 없이도 실현 가능한 간접교역을 중심으로 남북간의 경제교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측이 취할 수 있는 일방적인 실천방안을 밝혔다고 하겠다.

향후 남북간에 이러한 간접교역이 진전되어 상호 접촉이 증대되고 상호 교류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면, 남북한 직접교역 실현을 위한 분위기와 기반을 성숙시킴으로써 남북 경제교류가 본격화되고 남북한 긴장완화와 상호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측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는 한, 이번 조치를 계기로 남북간의 경제교류가 당장 시행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경제문제는 이념이나 체제와는 상관없이 상호 이익을 위해 접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북한측으로서도 경제난 타개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우리측 진의의 전달과 더불어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나. 항목별 주요 내용

민간상사 북한물자 교역허용

현재까지 대북교역은 직·간접을 막론하고 국가보안법 등 통상관련 법규 외의 다른 법규에 의해 사실상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의거하여 앞으로는 국내 민간상사나 외국 무역상사가 제3국(일본·홍콩·마카오 등)에 있는 우리 나라 현지법인(교포법인 포함)이나 외국상사를 중계로 하는, 즉 간접무역 형태로 행하는 대북교역은 가능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물자의 국내로의 반입(수입)과 우리측 물자의 북한으로의 반출(수출), 혹은 이들 물자의 재가공 후 재반출입(재수출입)하는 경우 등이 모두 허용되게 되었다.

단지 군사물자나 북한선전 간행물 등의 국내반입과 COCOM(대공산권수출규제위원회)의 금수 품목 반출은 계속 금지된다.

그러나 법제 보완이 안된 상태에서 당분간 민간상사가 대북교역을 행하려 하는 경우에는 특수 지역 교역에 준해 정부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민간상사 북한물자 중계허용

북한물자의 중계무역 허용은 우리측 상사가 기본적으로 상업적 베이스에 의해 북한물자를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제3국 물자의 대북한 수출을 주선하는 행위를 허용함을 의미한다.

북한의 대외무역이 부진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폐쇄적·자급적 경제구조에 기인하나 국제 경제 상황이나 자본주의 시장질서에 대한 이해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중계무역이 활성화되면 북한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정에 밝은 우리측 상사들이 본격적으로 중계무역을 추진할 경우 비교우위가 있는 북한측의 광산품이나 1차산품·단순가공품의 해외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해지고 북한 경제의 개방화 촉진과 경제발전 및 주민생활 향상에 적지않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북한원산지 표시·상표 부착 허용

현재 특수지역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교역관련 제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 제거 후 통관」이 원칙이나 통상정책상 필요한 경우는 상표제거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특수지역과의 교역시 적용하는 이같은 원산지 제거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에서는 대북구입상품을 내국간 거래품목으로 보아 국내의 유통단계에서와 같이 원산지표시나 상품부착을 그대로 허용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소비자는 국내에서 북한원산지 표시나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외 여행자들도 북한 상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되었다.

직간접 교역물자의 관세 등 미부과

남북간의 직접교역은 민족내부 무역으로 간주되므로 당연히 관세 등 수입물자에 붙는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제3국을 경유한 간접교역은 국가간의 무역형태이므로 수입제세를 부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남북간의 특수사정상 간접교역 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거의 직접교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수입제세를 부과치 않게 된다. 다만 제세 미부과 대상은 수입물자에만 한정하고, 국내에서 거래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은 국내물품과 똑같이 부과된다고 하겠다.

관세 미부과대상은 북한 물자가 북한으로부터 우리측에 직접 인도되거나 또는 제3국의 보세구역에 경유하여 재선적 후 우리측에 인도되더라도 물자의 원형에 근본적인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예를 들면 재포장 또는 상표나 원산지표시의 변형 등)를 말하며 제3국의 보세구역에서 근본적인 변형(예컨대 철광석을 가공하여 철강재가 되는 경우 등)이 이루어지거나 제3국의 통관을 거친 후 재수출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대북물자의 반출은 이를 국가간의 무역처럼 수출로 볼 수는 없으나 대북교역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수출시 제공하고 있는 수출보험 등의 제반 수출관련제도가 인정된다.

남북 경제인 상호 접촉·방문 허용

남북한간에 교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이나 거래방식 등을 알고 상호 흥정(상담)할 수 있도록 접촉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입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현지방문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제반법규에 의해 북한 인사의 접촉 및 방문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특수지역 교역에 준해 승안절차를 밟을 경우, 상담목적으로 제3국에서 북한인을 접촉하거나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는 지난 7월 19일의 해외동포 남북한 자유왕래 허용보다 일보 진전된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북한 경제인이 상담목적으로 방한을 희망하는 경우, 제반 편의시설의 제공과 방한기간중 및 귀환시의 안전보장 등을 약속한 것은 북한측의 긍정적인 조치를 기대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북한 선적 상용선박의 입항허용

북한 선박이 남북한 교역물자나 제3국 물자를 싣고 우리측 항구에 하역하거나 우리측 물자를 싣기 위해 입항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며 안전출항이 보장된다.

현행법규상 북한 선적 선박이 국내에 입항을 요청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해운항만청장이 이를 허가하게 될 것이다.

북한 선박 입항시 항구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하역물자의 종류 등에 따라 융통성있게 결정될 것이다.

남북경제교류 관련 법제보완

본격적인 남북한 교역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간에 교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국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측 태도로 보아 당장은 구체화될 수 없는 실정이라 하겠다.

「7·7 특별선언」에 따라 남북한 교역은 대외경제 관련법규의 직접적인 적용이나, 일반 국내 거래와의 완전한 동일취급이 한계가 있는 바, 이번 조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경제교류에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대외무역법 및 특수지역 교역에 관한 제규정 등이 준용될 것이다.

2. 남·월북 작가의 음악·미술작품 규제해제

정한모 문공부장관은 10월 27일 노태우 대통령의 「7·7 특별선언」 구현시책의 일환으로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발표된 남·월북 작가들의 순수한 음악·미술작품에 대해 일반공개를 허용할 방침임을 발표하였다.

정한모 문공부 장관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표내용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7·7 특별선언」 구현시책의 일환으로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발표된 남·월북 작가들의 순수한 음악·미술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일반에의 공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음악작품은 현행 공연법, 음반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의거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연 및 음반제작을 허용하고 미술작품은 별도의 절차없이 전시를 허용하되, 이는 순수한 내용의 작품에 한하며 공산주의 체제를 찬양,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된 작품에 대해서 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로 김순남·이건우·안기영 등 음악인과 김주경·길진섭 등 미술인을 포함하여 남·월북 음악인과 미술인 100여명의 1948. 8. 15 정부수립 이전에 발표된 작품에 대하여 그 공연·음반제작 및 전시를 허용하게 되었다.

다만, 월북작가중 1988. 7. 19 정부의 문학작품출판 허용 조치시 제외된 조영출의 음악작품은 현행대로 본 조치에서도 제외하였다.

이번 조치는 미수교국 예술작품의 국내개방, 월북 작가 문학작품의 출판허용, 북한 자료 공개등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방 및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는 민족예술의 정통성 회복과 근·현대 예술사적 단절극복을 위한 남·월북 작가의 작품에 대한 공개를 허용하는 것이지 그들의 정치·사상적 복권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9일 남·월북 작가의 문학작품 출판허용에 이어 문화공동체 회복을 통해 통일을 앞당기려는 또 하나의 전향적인 조치로서, 이로써 「7·7 특별선언」의 기본정신은 예술분야 전반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88 서울올림픽을 통해 확인된 우리 국민의 긍지와 자신감을 토대로, 사상과 문화예술을 하나의 자로 재단하던 냉전구조 의식을 탈피,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문화예술 창조를 지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단절된 우리의 예술사를 완전하게 복원시킴으로써 민족정서와 전통에 뿌리박은 문화예술을 창달, 민족예술의 정통성을 되찾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케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 현대 예술이 대부분 해방이후 5~6년 사이에 태동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에 남·월북한 음악가와 화가들의 사조와 창작 태도는 우리 예술사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부문이라고 하겠다. 이와 함께 7월 19일의 문학작품 해금이 해방전 작품을 대상으로 한데 비해 이번 조치의 경우 정부수립까지로 시점을 내려잡은 사실은 앞으로 남북한간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민족화해를 도모해 나가는데 있어 보다 전진적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하겠다.

정부는 이와 같이 「7·7 특별선언」의 기본정신을 견지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를 각 분야에서 착실히 강구해 나가고 있다.

국내 반응

대북경제개방 조치 -물자가 흐르면 또 다른 길도 열린다-

경향신문(1988. 10. 7)

중공과 동구권과의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마당에 같은 민족인 북한과는 경제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정부가 7일 제시한 7·7 선언의 경제부문 후속 조치는 이같은 국민적 아쉬움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나웅배부총리가 발표한 대북경제조치는 7·7 선언의 기본정신을 부분적이거나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으며 그중에는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실행 가능한 내용도 있어 관심을 끈다. 특히 민간 상사들이 간접 교역형태로 북한 물자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북한측의 호응이 없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실질적인 남북경제 교류를 이끌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여러 분야에 걸친 대북제의가 북한측이 응하지 않으면 제의를 위한 제의로 그친 경우가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방안은 실질적인 것이라 평가된다. 또한 업계인사가 상담을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영주권을 가진 해외동포의 북한 자유왕래 허용보다 더 진전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남북간 경제분야 접촉은 1984년 9월 우리 정부가 북한이 수재구호를 명분으로 보내겠다는 물자를 인수한 이후 다섯차례의 남북경제회담이 열려 쌍방이 교역품목을 제시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합의서안을 각각 내놓기도 했으나 그후 북한측의 회담거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남북간 경제교류는 동·서독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남북한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높이고 상호 경제발전과 긴장완화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더구나 남북경제의 지나친 격차는 오히려 통일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북간의 직접 경제교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번 정부가 제시한 남북 경제교류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높게 평가하면서 몇 가지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는 민간상사에 대해 북한 물자의 간접교역을 허용한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유도하는 일이 긴급하다. 민간상사의 입장에서 북한 물자의 반입을 위한 간접교역은 동구 공산권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민간상사들의 호응이 없거나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번의 정부방안들도 자칫하면 공허한 대북발표에 그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대북 간접교역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실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로 중단상태에 있는 남북경제회담의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북한 방문은 호재가 될 측면이 있다.

고르바초프는 북한 방문에서 아·태지역 평화안 중 한반도 부문의 실현을 북한측에 설명하고 서울올림픽 이후의 한·소 경제 관계개선 가능성을 인식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측 입장에서 보더라도 폐쇄경제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우리의 외교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는 또 북한이 우리 정부의 이번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하며 같은 민족으로서 공동번영을 추구하고서 중국적으로는 통일에 접근하는 방안을 다 같이 실천해야 한다

는 점을 강조한다.

관세없는 민족내부 거래
-남북경제교류 실현시기 왔다-

매일경제신문(1988. 10. 7)

1

경제기획원은 대통령의 7·7 선언에 입각한 대북한 경제접근의 몇 가지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지난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한이 대결과 적대관계를 과감히 청산하고 같은 민족공동체로서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서로 모색해 나아가자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일 그의 국정연설에서도 남북이 서로 오가며 교역 교류하고 협력하여 분단의 벽을 헐고 통일의 길로 나서자고 제의했다. 이러한 선언과 제의에 대한 하나의 후속조치로서 기획원은 북한을 상대로 교역이 성립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1985년 11월 이래 남북경제회담이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의 동참없이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 정상교역에 대비한 우리측의 자세가 분명해진 점과 간접거래방식으로 북한과 교역코자 하는 민간상사들에게 정부의 공식방침을 제시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남북한 물자교역을 수출입으로 보지 않고 민족내부의 거래라고 표현하여 반입과 반출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교역의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기획원의 발표내용은 크게 나누어 네 가지이다. 첫째 간접무역 형태로 북한과의 교역을 허용하고, 둘째 북한 상표가 붙은 상품의 국내유통을 허용하며, 셋째 북한과의 반입과 반출에 따른 관세를 면제해주며 마지막으로 남북한 경제인의 상호 방문 및 북한 선박의 국내입항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앞 부문 세 가지 항목은 어디까지나 민간상사들에게 대북교역의 길을 터주기 위한 조치이고 경제인 교류와 북한 선박의 기항허가 등은 북측의 반응없이는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 상태 하에서 즉각적인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운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논함에 있어 우리가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의도가 북한과의 물자교역을 통해서 이윤을 얻고 경제성장의 효과를 보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폐쇄와 후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사회를 세계의 무대로 인도해 내고자 하는데 있다는 점이다. 닫혀진 사회가 열리고 발육부진한 경제가 체질개선을 할 때 자연히 남북의 교류는 빈번해 질 것이고 그것이 곧 통일의 길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할 방도는 중앙집권적 폐쇄경제로 하여금 우리가 내민 화해와 협력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에서 잘 유도하는 일이다. 한낱 물자교류의 허용조치만 가지고는 이러한 우리의 염원을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정부의 이번 조치에 숨겨진 뜻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통치적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또 민간기업의 차원에서도 서서히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분

위기를 조성해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동구권의 몇 나라에서 성공한 민간차원의 초기접촉 방식이 북한의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에는 김일성·김정일의 독재체제가 너무도 완강하고 배타적임을 알아야 한다. 중국의 경우 주은래·등소평으로 이어지는 실용주의노선이 맨 처음 착안했던 일이 정·경의 분리였다. 또 최근의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심지어는 소련까지도 우리에게 접근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곧 이념과 체제의 벽을 넘어서 한국의 발전한 경험과 모델을 배우고 도입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경의 분리방침 때문에 우리의 민간기업들이 그들과의 관계수립에 성공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북한에는 우리의 경제성장을 인정하고 그것을 정치와 분리시켜 배우며 도입코자 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본주의의 멸망을 줄곧 외쳐왔던 한 사람이 근 50년을 계속 집권하면서 「인민」의 눈과 귀를 가리워왔기 때문이다. 동토가 전혀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3

우리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공동체로 인정하고 포용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기획원이 의도하는 바 민간베이스의 직·간접 물자교역보다는 그 이전 단계에서 우선 인적·문화적·학문적 교류를 시도하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 국민중에 북한을 방문하여 그리운 혈육을 찾아보고 싶은 이들이 많다. 또 우리의 북방진출사와 고대국가 형성 과정 등 역사적·문화적·민족사의 재발견을 위한 학계의 방북의욕이 대단하다. 이에 비하여 북쪽과 상품교역을 못하여 애태우고 아쉬워하는 기업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대북교역이 가져다 줄 실익이 당장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적 교류가 진실로 동족간의 상부공영하는 차원까지 내다보고 할 양이면 북한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에 일조할 수 있는 경제지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북한 당국의 현실적인 자세가 문제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올림픽성공을 바탕으로 「7·7」선언의 경제적 후속조치가 나온 마당에 북한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부문의 대북조치는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인적·문화적·학문적 교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믿는다.

북한은 경제를 개방하라

서울신문(1988. 10. 8)

정부의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는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경제교류를 위한 회담이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태에 있고, 경제교류의 첫단계인 교역의 실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선택으로 여겨진다.

남북 양측은 지난 1984년 11월부터 1985년 11월까지 1년 동안 남북간 경제교류를 위한 회의를 가졌으나 북한측의 보이콧으로 회담이 중단되어 오다가 우리 정부는 7·7 선언을 통해서 남북간의 교역만이라도 실현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7·7 선언에 담긴 본 뜻은 직접교역을 하자는 것이었으나 북한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간접교역을 선택하기에 이른 것 같다.

현실적으로 직접교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제3국을 중계지로 한 간접교역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실현성도 있고 시의에도 부합되는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 및 동구권과의 간접교역을 추진한 결과 최근에는 직접교역을 비롯한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기반을 구축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한 선례에 비추어 우리가 인내와 끈기를 갖고 북한과 간접교역을 시도한다면 직접교역의 길이 열리리라고 확신한다. 북한과의 무역협력은 상호간 경제적 보완성과 지역적 근접성에 따른 이익의 공동수혜는 말할 것도 없고 민족공동체로서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전기가 된다.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공산권과의 경제거래에서 장애요인이 되었던 북한의 폐쇄성과 고립화를 교정시켜 대공산권 전체와의 협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북한측에서 볼때는 미국과 일본 등 서방측과의 경제협력이 가능케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시대적으로도 공산권의 종주국인 소련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이념과 체제가 다른 중국과 대만, 그리고 서독과 동독이 상호간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아래서 우리만이 교류의 단절시대를 살 수가 없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체제의 수호를 위해서 개방화를 늦추고 있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간접교역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측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와 같이 간접교역은 묵인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직접교역이 가능토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길 촉구한다.

이제 간접교역의 향방은 북한의 자세에 달려있다. 북한은 그들 무역의 70%를 점하고 있는 소련·중국·일본과 동구권 국가들이 한국에 그들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제3국을 통한 중계무역이라도 상품의 인도는 중계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도되도록 용인하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경제인 상호 접촉에 있어서는 북한의 무역이 국영무역인 점을 고려해서 해외공관의 무역담당자와 우리의 민간 경제인이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길 기대한다. 다음 단계로는 북한내 국제무역 촉진위원회와 우리 민간경제단체의 임직원이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간베이스에 의한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남한 무역개방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우리와 상응하는 대남한 경제개방 조치를 단행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북한의 성의있는 반응과 자세를 기다리고 싶다.

획기적인 남북교역 제의

한국일보(1988. 10. 8)

2차대전 이후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구상의 3대 분단국중 남북한만이 40년이 넘도록 인적·물적 교류를 외면한 채 긴장 속에 대치하고 있음은 매우 가슴아픈 일이다. 이같은 철벽과 단절을 대화와 교류로 잇기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정부가 군사물자를 제외한 물자의 간접교역을 내국거래로 보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를 발표한 것은 한민족이 함께 살고 번영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단안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오늘날 개인이나 국가나 혼자 고립해서는 살 수 없으며 이웃 및 외부와 교류하고 협력해야만 생존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중국 등이 1980년대 이후 그렇게 혐오하던 자본주의 경제 방식을 도입하여 개방과 개혁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이데올로기만으로는 국민을 먹여살릴 수 없을 뿐더러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는 분단 이래 북한 경제가 어떻게 흘러왔으며 특히 현재의 경제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는 것은 국내외의 권위있는 북한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충분히 알고 있다.

이단 경제개혁의 실패, 군사력증강을 위한 무리한 중공업편중, 기술낙후와 자본의 부족, 그리고

여기에 철저한 폐쇄정책과 억압통치 및 교조적인 이념적용 등으로 국민경제가 파탄에 직면한지 오래인 것이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는 파탄된 북한 경제에 숨통을 터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첫째 7·7 특별선언 제3항 정신에 따라 서로가 필요한 물자교역을 통해 공존의 길을 모색하며 민족공존의 바탕에서 이를 국내교역으로 간주한 것이다.

둘째 비록 경제회담은 아직도 중단상태에 있지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면에서 우리가 교역에 있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담고 있는 점이다. 셋째 「비정치적」인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부는 거의 후견역만 맡고 어디까지나 민간기업인들이 주축이 되도록 한 것이다.

네째 북한 물자에 대해 원산지표시와 상표를 부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래 직접교역을 촉진함은 물론 남북한 공동경제권을 겨냥한 점이다. 다섯째는 경제인들의 교류와 남북한 상선의 입·출항 허용으로 이것이 다른 분야로 발전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의 조치가 어디까지나 상호 필요한 물자의 교역을 통해 함께 번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민족공영의 정신임을 깊이 인식, 하루빨리 긍정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오늘날 국제사회가 교류와 협력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서울올림픽에 동서진영의 모든 국가가 참여했고 동서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웃중국과 대만도 최근 들어 인적·물적 교류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더욱이 올림픽을 전후해서 헝가리에 이어 소련과 유고가 한국과 무역사무소를 교환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바닥까지 떨어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루빨리 문을 열어야 한다.

이번 경제조치를 추진함에 있어 당국도 새로운 자세가 요청된다. 대북한교역을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그들에게 대소련 및 동구권과의 교역성과를 가시적으로 확인케 해야하며 또 우리경제가 우월해서 도와준다는 자세를 보이지 말아야하고 한민족전체의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민간상사들이 이득추구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끊어진 예술사의 복원
-남·월북 예술가의 작품 해금-

중앙일보(1988.10.28)

이번 남·월북 화가·음악가들의 정부수립이전 작품에 대한 전면 해금은 지난 7월 문학작품 해금에 이어 예술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해제 조치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분단극복을 위한 민족의 동질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자못 의의가 크다.

우리는 지난번 서울올림픽을 통해 이념과 언어, 종교와 문화가 다른 동과 서의 만남을 체험했다. 그러나 정작 핏줄이 같고 말이 같으며 관습과 문화가 똑같은 남과 북의 해후는 끝내 성사시키지 못한 아쉬움을 여한처럼 가슴에 남긴 것도 사실이다.

오늘과 같은 국제적 경쟁 관계에 있어 민족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도 오히려 모자라는 시대에 민족자체내의 불신과 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문화가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그 경쟁을 헤쳐나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분단된 오늘 우리의 상황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는 성급함을 갖기 쉽다. 그러나 정치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사회적 생존의 조건일 뿐, 삶 그 자체는 아니다. 문화야말로 바로 우리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문화적 접근없이 분단의 고리를 근원적으로 풀 수는 없다.

따라서 이번 예술 전분야의 해금조치는 뒤늦게나마 민족의 정서를 담은 문화예술을 통해 남북이 단일한 문화공동체임을 인식시킴으로써 통일로 가는 길을 한층 단단하게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 남·월북 예술인의 작품해금은 단절된 우리 예술사를 복원시켜 민족예술의 정통성을 되찾는 의미도 결코 적지 않다.

특히 이번에 해금된 김순남의 경우는 우리 음악사에서 현대적 기법을 본격적으로 시도, 한국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 고전과 현대를 조화시킨 역량 있는 작곡가로 알려져 있다. 이견우 역시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전통에 뿌리를 둔 작품을 만드는데 앞장 섰던 작곡가다.

이들의 작품이 차체에 재조명됨으로써 우리 음악예술은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갖고 재정리하게 되었음은 다행한 일이다.

미술분야도 마찬가지다. 우리 현대미술이 8·15이후 5, 6년 사이에 태동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작품활동이 한국 미술사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이번 예술계 전체의 해금은 광복이후 서구의 문예사조에 편향되었던 우리 예술의 골격과 흐름을 재평가하여 민족적인 요소를 새롭게 정립하는 작업을 활발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이데올로기에 오염되지 않은 북한예술의 실상을 접할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다. 이미 지난번 서울올림픽 문화축전행사에 우리는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의 많은 예술작품을 접하고 충격과 흥분을 맛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는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예술작품도 차체에 선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기를 기대한다.

Ⅲ.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1. 제5차 준비접촉

제5차 준비접촉은 4차 준비접촉이후 48일만인 1988년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 12분까지 판문점 북측지역에 있는 「통일각」에서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올림픽개최 이전에 진행된 네 차례의 준비접촉과정을 살펴보면, 회담형식과 의제문제에 있어 쌍방의 입장차이를 조금도 좁히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제4차까지의 쌍방 입장은 다음과 같다.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쌍방입장 비교

구분	한 국 측	북 한 측
명 칭	남북국회회담	남북국회합동회의
본회담 형식	대표회담 ※ 대표회담을 통해 합의된 사항을 남북국회의원 전원이 모여 만장일치로 확인하는 「남북국회합동회의」 개최가능	연석회의
회담의제	① 제24회 올림픽경기대회 문제 ② 남북적십자회담, 남북 경제회담 재개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문제 ③ 남북불가침문제 ④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① 남북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 ② 제24차 올림픽 경기대회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문제와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에 북측선수단을 초청하는 문제 ③ 남북사이에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를 실현할 데 대한 문제
의결방식	합 의 제	다 수 결
대표단 구성	○ 20명의 대표 - 수석대표는 의장이 지명하는 중진의원	○ 쌍방 국회의원 전원 ○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단체대표와 각 계인사는 일단 보류, 본 회의에서 협의
1차 회담 일시 및 장소	8월 29일 평양 (3박 4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음 (평양, 4박 5일)

제5차 준비접촉에서는 쌍방이 각기 첫 발언을 통해 본 회담의 형식문제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측은 전인류의 축제인 88서울올림픽에 북한측이 참가하지 못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자기 합리화나 상대방에 대한 책임전가와 같은 구습에서 벗어나 좀 더 대범하고 포용적인 자세로 일방의 생각과 주장만을 절대화하기 전에 민족의 공동의사와 이익을 존중하고 상호 공통점을 찾는 방향에서 접촉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회의벽두부터 우리측에 대해 『대결관념에 얽매어 있다』느니, 『긴장완화에 관심이 있는지 의혹을 갖게 한다』느니 하면서 회담이 진전되지 않는 이유가 마치 우리측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나타냈다. 먼저 첫 발언을 한 북한측은 회담형식과 관련하여 「남북국회 합동회의」로 하되, 참가인원수를 대폭 축소하여 북한측은 최고인민회의 전체 대의원 655명의 3분의 1(218명)과 한국 측은 전체 국회의원 299명의 절반(150명)이 참가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 제의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순히 대표단 규모만을 줄인 것일 뿐 다수결원칙 고수 등 본질적으로는 「연석회의」방식을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북한측은 의제문제에 있어서 『올림픽문제가 자동적으로 탈락된 조건』에서 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와 ② 남북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시할 데 대한 문제로 하자고 주장하면서,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재개문제는 이미 양측이 남북사이의 다방면적 협력과 교류를 실시할 데 대한 문제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양해한 조건에서 구태여 기존회담 재개문제를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뒤이어 첫 발언에 나선 한국측의 박준규 수석대표는 회담형식에 있어서 회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견지하면서도 북한측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는 6개항의 새로운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남북국회회담은 「개회모임」과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 「폐회모임」순으로 진행된다.

② 「개회모임」과 「폐회모임」은 남북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공동회의 형식으로 하고, 의제토의는 대표회담형식으로 진행한다.

③ 「개회모임」에서는 준비접촉에서 합의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의제토의를 위해 각기 선정한 대표를 소개하며, 쌍방 국회의장이 개회연설을 한다.

「개회모임」은 준비접촉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평양에서 개최한다.

④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에서는 상정된 의제를 토의, 쌍방 합의에 따라 남북국회회담 의제를 포함하는 공동결의문을 작성한다.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의 대표수는 쌍방이 합의하는 적정수로 하고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회의를 개최한다.

「개회모임」직후 「의제토의를 위한 제1차 대표회담」을 개최한다.

⑤ 「폐회모임」은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공동결의문을 확인·채택하며,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⑥ 개·폐회모임은 공동의장제로 진행하며 초청 측의 국회의장이 회의의 사회를 맡는다.

한편 의제문제와 관련해서는 ①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재개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문제 ② 남북불가침문제 ③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를 제의했다.

우리측이 이처럼 회담의제를 세 가지로 정리해 내놓은 것은 내외의 기대와 여망, 남북한관계의 현실, 그리고 남북국회회담의 기능을 고려한 때문이었다.

특히 한국측의 박준규 수석대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의 돌파구를 여는데 차지하는 중요성과 비중을 감안하여 특히 내외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가 여기에 쏠리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그 실현을 돕는 것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남북최고당국자들이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서까지 언급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한 박준규 수석대표는 우리측이 의제 ②항으로 제시한 「남북불가침문제」는 쌍방의 입장을 모두 포용한 타협적인 안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준비접촉에서 불가침의 내용과 성격까지 규정하는 것은 대표단의 임무를 벗어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5차 회담에서 우리측이 그 동안의 제의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양보안을 제시한 것은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국민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북국회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남북한 교류·협력의 돌파구를 마련코자 하는데 참뜻이 있었다고 하겠다.

한국측의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와는 달리 북한측은 참가인원수의 조정근거를 묻는 우리측에 대하여 『전쟁의 위협이 집요하게 감돌고 있다』느니, 『최근의 정세가 대단히 좋지 못하다』는 등 회담외적인 발언과 함께 대화의 초점을 회피하는 자세를 보였다.

북한측 전금철단장이 『올림픽이 지나갔기 때문에 차기접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고 또 차기 접촉일자를 우리측이 제시한 일자(11월 3일 또는 11월 10일)보다 늦추어 제시한 사실도 이와 관련하여 시사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측은 이번 접촉에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를 양보할 수 없는 선으로 설정하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7개항의 「불가침공동선언 초안」이 선언의 기본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북한측은 「가짜 불가침」이 있고 「진짜 불가침」이 있다면서 그들의 「불가침공동선언 초안」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불가침선언은 「가짜」불가침선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의제문제에 있어서의 비타협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처럼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된 직후에 열린 제5차 준비접촉에서도 남북쌍방은 남북국회회담의 형식문제와 의제문제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했으며, 제6차 준비접촉은 11월 17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접촉을 통해 북한측의 전금철단장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에서 부위원장으로, 노동당 소속 안병수대표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으로 각각 승진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제5차 준비접촉시 남북입장 비교

구 분	한 국 측	북 한 측
회담형식과 대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폐회모임」: 남북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합동회의」 ○ 의제토의: 쌍방 적정수가 참가하는 「대표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회의(사실상 연석회의)로 하되 참가인원수를 북측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1/3(218명), 남측은 국회의원의 절반(150명)이 참가(총368명)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재개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문제 ② 남북불가침문제 ③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 ② 남북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시할 데 대한 문제
합의서 채택방식	3개항 의제에 관한 공동결의문 채택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
의결방식	합 의 제	다 수 결
회담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접촉 합의사항 확인 - 의제토의 대표 소개 - 개회연설과 축하연설 교환 ○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 합의에 따라 공동결의문 작성 ○ 「폐회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된 공동결의문을 확인·채택 <p>※ 개·폐회모임은 공동의장제로 하고 초청측 국회의장이 사회</p>	

2. 제6차 준비접촉

제6차 준비접촉은 1988년 11월 17일 오전 10시부터 13시 10분까지 (중간정회 30분 포함)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준비접촉에서는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회담의 형식과 의제문제에 관해 집중협의를 한 결과, 회담개시 이후 최초로 일부분제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다.

남북양측은 국회회담을 개회모임, 의제토의를 위한 본 회담, 폐회모임 순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개·폐회모임은 남북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고 본회담의 대표수를 양측에서 각각 50명씩으로 한다는데 합의한 것이다.

또한 양측은 ▲개회모임은 준비접촉이 끝난 후 1개월안에 평양에서 개최 ▲의제토의를 위한 본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 ▲폐회모임은 의제토의를 위한 본회담이 끝난 후 1개월안에 서울에서 개최 및 공동합의서를 채택 ▲개회모임과 폐회모임은 남과 북의 공동의장제로 운영하는 것 등 대강의 절차문제까지도 의견을 접근시켰다.

그러나 의제토의를 위한 본회담 운영에 있어서의 대표모임의 성격 및 의사결정방법 등 본질문제에 대해 큰 시각차를 보였다.

한국측의 박준규 수석대표는 제5차 준비접촉에서 수정 제의한 회담형식에 있어서의 「6개월」제안을 다시 한번 강조한데 이어, 의제문제에 있어 그간 북한측이 주장하던 「남북불가침 공동선언 발표문제」를 수용하여 「남북불가침선언문제」로 하자고 제의하였다.

박준규 수석대표의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 국회회담의 회담형식은 「개회모임」과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 「폐회모임」순으로 진행하며, 「개회모임」과 「폐회모임」은 남북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합동회의 형식으로 하고, 의제토의는 적정 수의 대표가 참가하는 대표회담으로 진행함.

○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에 참가하는 대표의 수는 각기 20명 내외, 즉 합계 40명 내외로 하는 것이 좋겠음.

○ 이같은 우리측의 제의는 회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남북관계의 현실을 아울러 고려한 것으로서 국회회담의 참가자 수를 늘리자는 북한측의 주장도 반영한 것임.

○ 「개회모임」을 열어 준비접촉에서 합의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의제토의를 위해 각기 선정한 대표를 소개하며 쌍방이 개회연설과 축하연설을 교환하는 한편, 「폐회모임」에서는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공동결의문을 확인·채택하게 되면 온 민족의 축복 속에서 남북의 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가운데 남북국회회담의 시작과 끝을 훌륭하게 장식하게 될 것임.

○ 또한 「개회모임」은 준비접촉 종료 1개월 이내에 평양에서 개최하고, 「폐회모임」은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종료 1개월 이내에 서울에서 개최함.

○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에서 쌍방간에 공동결의문과 같은 합의사항이 생산되면 1개월 이내에 「폐회모임」을 열어 이를 만장일치로 확인·채택하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임.

○ 우리측은 회담의제를

- ①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재개 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 문제
- ② 남북불가침선언 문제
- ③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로 할 것을 제외함.

○ 남북불가침문제는 본회담에서 쌍방이 각기 제시하는 의견을 함께 놓고 합의점을 찾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측의 일관된 입장이며, 지금도 불가침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하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 우리측이 불가침문제에 관한 의제에 「선언」을 추가한 것은 상호불가침,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남북당국간에 채택할 불가침선언의 기본방향에 대한 남북정치인들의 의지를 공동으로 결의하고 남북당국간에 조속히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도록 권고하자는 것임.

이번 접촉에서 우리측이 의제 ②항을 「남북불가침선언문제」로 수정제의한 것은, 용어사용 시비로 인한 회담의 교착상태를 타개하여 하루빨리 본회담을 성사시키려는 포용적 입장에서였다고 하겠다.

또한 남북쌍방이 이미 정상회담의 의제로서 「불가침선언」을 제시해 놓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지난 10월 4일 국회본회의에서의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불가침선언과 조국의 통일실현 문제를 비롯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현안을 아무런 제한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0월 18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한편 북한측의 김일성도 남북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서 「불가침공동선언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측은 어디까지나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회복이 긴요하다는 입장에서, 본회담에서 3개항 의제를 일괄 토의하고 합의를 거쳐 이를 공동결의문으로 채택하자는 것으로서, 여기에 불가침선언과 관련한 문제도 포함된다는 것이지 북한측이 말하는 「7개항 공동선언」안을 중심으로 토의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측은 상호불가침,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남북당국간에 채택할 불가침선언의 기본방향에 대한 남북 정치인들의 의지를 공동으로 결의하고 남북당국간에 조속히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도록 권고하자는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우리측 제안에 대해 북한측 전금철 단장은 먼저 회담형식에서 「개막회의」, 「기본문제 토의를 위한 대표회의」, 「폐막회의」로 나누어 진행하자고 수정제의해 옴으로써 외견상 우리측 제안에 상당히 접근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측 전금철단장의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회의형식>

- ① 남북국회회의는 개막회의와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회의, 폐막회의로 한다.
- ② 개막회의와 폐막회의는 남북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합동회의로 한다.
- ③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회의는 쌍방에서 각기 100명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대표회의로 한다.
- ④ 개막회의는 판문점 국회의원 상봉이 끝난후 1개월안에 평양에서 소집한다.
- ⑤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제1차 대표회의는 개막회의이후 1개월안에 서울에서 하며 다음번 회의부터는 1개월을 주기로 하여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한다.
- ⑥ 폐막회의는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대표회의가 끝난후 1개월안에 소집한다.

<회의운영절차>

- ① 개막회의와 폐막회의는 남과 북의 공동의장제로 운영하며 사회는 번갈아 한다.
- ② 개막회의에서는 쌍방 국회의장이 개막연설을 하며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는 남과 북의 각 정당 대표들과 개별인사들이 축하연설을 한다.
- ③ 개막회의에서는 판문점 국회의원 상봉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확인하며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대표회의에 파견할 쌍방대표들의 명단을 발표한다.
- ④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대표회의에서는 각 정당 대표들로 집행부를 구성한다. 대표회의에서 제기되는 의견사항은 집행부에서 협의조정한다.
- ⑤ 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쌍방에서 각각 5명으로 구성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
- ⑥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대표회의에서는 합의된 문제들을 공동합의서로 작성한다.
- ⑦ 대표회의에서 기본문제에 대한 최종합의는 「일치합의」 방식으로 한다.
일치합의에서는 극소수가 반대하고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경우 합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 ⑧ 폐막회의에서는 대표회의에서 작성한 공동합의서를 박수로 확인한다.
- ⑨ 폐막회의에서는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는 남과 북의 각정당 대표들과 개별인사들이 축하 연설을 하며 쌍방 국회의장이 폐막연설을 한다.

또한 토의과정에서 북한측은 「대표회의」에 참석할 국회의원수를 쌍방 각기 100명에서 50명으로 수정하였고, 「집행부」는 남북동수로 구성하고 운영은 합의제로 할 것임을 아울러 밝혔다.

그러나 북한측은 기본문제토의를 위한 「대표회의」는 쌍무회담 형식이 아닌 연좌회의 형식이며, 「대표회의」에서의 최종합의는 다수결을 전제로 한 「일치합의」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행부」가 의제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회의」에서 의제토론을 하되 쌍방간에 의견차이가 있는 문제만 협의·조정하는 것임을 명백히 했다. 이것은 「대표회담」이나 「대표회의」나 하는 단순한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측이 기본적으로 「연석회의」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우리측이 남북관계의 현실과 특성을 감안하여 「합의제」와 「쌍무적 회담」을 주장하는 반면에, 북한측의 「대표회의」는 남과 북이 1대1로 만나 현안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의 참석자들이 각자 발언권과 표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의제가 아닌 다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라면 회의참석자들은 「남」과 「북」의 대표가 아니라 민족전체의 대표가 되며, 따라서 대표단은 인구비례로 구성되어야 대표성의 원리에도 합당하다고 하겠다.

북한측이 극소수가 반대하고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경우 합의로 인정한다는 「일치합의제」라는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합의제」를 배제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북한측은 회의형식면에서 의견상 우리측 제안을 수용한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회의」에 이중적인 논리구조를 부여함으로써 종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한측은 회담의제에 있어서 우리측이 「남북불가침선언문제」로 수정제의한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용에 있어 외군철수문제 등 기본적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상회담의 의제포함문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의제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하지 않음으로써 우선 회담형식에 합의를 이루어 놓은후 다음 접촉에서부터 「불가침선언」 등 군사문제에 대한 집중선전공세를 펴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제6차접촉 또한 남북 쌍방간 이견의 폭을 확인하는데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성과를 냄으로써 남북국회회담의 성사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었다고 하겠다. 남북쌍방은 제7차 준비접촉을 12월 15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국내반응

남북 국회 회담 성사의 길
-유연성 있는 우리측 의제 수락하라-

한국일보(1988.10.14)

13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한 국회회담을 위한 다섯 번째 예비접촉은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없었으나 남북양측이 종래의 주장을 대폭 또는 일부 수정했다는 점에서 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는 세계적인 데탕트무드와 함께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과 소련·중국등 공산권과의 관계가 긴밀해져가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기반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하루속히 국회회담이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을 남북한 정치인들에게 촉구한다.

한마디로 5차예비접촉에서 보인 양측의 입장변화는 공존과 화해로 치닫는 국제정세의 흐름과 통

일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한 모두 통일에 대한 접근방식과 자세에 있어 경직과 무조건 반대 등 많은 잘못과 시행착오가 있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전세계적으로 강대국간의 무력대결과 경쟁이 둔화되고 국가간의 대립과 적대의 벽이 점차 견혀지고 있음은 어느 나라든지 독단과 고식적인 이념만으로는 민족의 현안은 물론 주변국과의 숙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동서진영이 공존과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 남북한도 당연히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시각을 어디까지나 현실적 바탕에서 새롭게 재정립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접촉에서 우리측이 대폭 손질해서 제의한 내용은 국회회담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려는 자세로 평가할 수가 있다. 우선 회의진행형식에 있어 3단계로 구분, 의제 등을 확인하고 최종 합의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하는 개회·폐회식에 남측의 국회의원(2백99명)과 북측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6백55명) 전원을 참석시키되 본회담은 적정수의 대표회담으로 하기로 한 것은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측의 이른바 연석회의 규모를 수용한 셈이 되는 것이다. 의제도 적십자회담 등의 재개와 인적·물적 교류, 불가침문제, 정상회담 등을 내세운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측은 종래 전원참석의 합동회의 방식중 남한의 국회의원은 반으로(1백50명), 인민회의 대의원은 3분의 1(2백18명)로 축소, 외형상 제의내용을 바꾼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차례 지적했듯이 3백70여명이 모인 군중대회식 모임에서 어떻게 불가침과 교류 등 통일에 관한 중대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의제에 있어서도 북측이 적십자회담 재개문제 등은 남북교류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느닷없이 정상회담을 제외시키고 불가침문제도 선언으로 매듭지어 양측 국회가 반드시 준수·실천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협정 등 국가적 합의의 이행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임은 국제관례이며 국회간에 어떤 합의가 있을 경우 국회의 역할은 자국정부에 대한 촉구와 강력한 의사전달로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이같은 북한측의 주장은 국회회담에 대한 그들의 목표가 겉으로는 군중대회식의 선전전략, 안으로는 불가침선언 관철로 국회를 통한 주한미군철수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친 예비접촉때에 비해 5차접촉에선 외형상이나마 북측이 자세를 일부 바꾼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자세를 전환해야 한다. 북한은 무엇보다 서울올림픽에 동서양진영의 국가대표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그들의 종주국인 소련마저 한반도에서의 2개의 한국을 인정하고 또 한국과의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북도 「개방」에 옷벗을 때

동아일보(1988.10.14)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13일의 예비접촉에서 양측대표들이 마주 앉은 탁상이 서로 악수를 나눌 수 있을만큼 좁혀졌다.

지난번 접촉때까지 탁상이 너무 넓어 서로 악수하기 어려웠던 것을 북측이 개조한 것이다.

탁상뿐 아니라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회담형식과 의제에 관해 남북한 모두가 조금씩이나마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해 앞으로의 회담전망을 밝게 했다.

회담형식에 대해 북한측은 종전의 연석 또는 합동회담의 방식에서 크게 후퇴, 참석인원수를 북

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3분의1(2백18명), 한국 국회의 절반(1백50명)이 참석토록 하자고 제의했다. 북한의 이같은 제의는 다수결에 따라 주도권을 잡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면 전 6천만 민족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4천만대 2천만이라는 인구 비례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남북동수는 되어야 하는게 당연하다.

그런데도 북측의 「축소 연석회의」는 우리측이 북측보다 68명이나 적은 모순을 담고 있다. 국제적 관례로 보아도 양 당사자간의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백번 양보하여 북한측이 제시하는 비율로 회의를 연다 하더라도 그 운영방식에 있어 표결이 아닌 합의제로 할 경우는 고려해 볼 만하다.

어쨌든 북한측도 4차회담까지 국회의원 전원과 정당 사회단체까지 포함시키자고 했다가 점차 「축소회의」로까지 양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무언가 집착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된다.

우리측도 당초 북한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 개폐회식 때 남북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고 실질토의는 동수의 소규모 대표회담을 열자는 이원적 체계를 제의했는데 매우 합리적 방안이다.

의제문제에 관해서는 남북한간에 기본입장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노태우대통령이 북측의 남북한 불가침선언 주장을 수용할 뜻을 밝혔고 이번 「유엔」총회에서 연설에서 다시 제시할 것으로 보여 남북회담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이 항상 내거는 우리의 국가보안법 폐기주장과 관련, 우리 내부에서도 그 개정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김일성주체사상, 고려연방제 등에 대한 단순한 소개도 허용하는 등 내부정리를 하고 있으며 내년 봄의 「팀스피리트」훈련도 중단할 방침이라 한다.

이같은 전향적 자세는 화해와 공존으로 달리는 세계적 추세와 함께 올림픽 이후 동구권과의 관계개선에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측으로서는 중소 양국간의 화해분위기가 등거리외교에 한계를 지어주고 있고 한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도 불안의 요소일 것이다. 특히 「고르바초프」의 외교브레인중 한 사람이 사건임을 전제, 「두 개의 한국」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의 대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또 외채 때문에 「오스트리아」에 이어 「스웨덴」의 대사관 폐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제적 고립화가 가중되고 있다.

노태우정권이 내부적 통합의 필요성에서 남북관계에 적극적인 만큼 북한의 김일성주석도 무언가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당사자는 물론 주변 정세의 이같은 변화는 남북국회회담을 성사시켜주는 긍정적 요소들이다. 다음 6차회담이 노대통령의 「유엔」연설직후로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전기가 마련될지 모른다.

북한은 이제 개방화 바람에 옷을 벗고 나서야 하며 우리 정치인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회담을 성사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합의없지만 변화는 있다

-남북 의회회담-

중앙일보(1988.10.14)

올림픽후 처음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 재개된 13일의 남북의회회담 제5차 예비접촉은 「합의」는 없었지만 「변화」는 있었다. 변화의 폭은 비록 좁았다해도 양측이 일보 후퇴한 전진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의회회담 예비접촉의 논점은 회담의 형식과 의제다.

회담형식에서 과거 한국은 30~40명 정도의 양측 의회대표가 참석하는 「대표회담」을 주장했으나 북한은 남북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군중대회」를 고집했었다. 그러나 이번 접촉에선 한국이 개막식과 폐막식은 북한의 전원참석을 수용했고, 북한은 북한 최고회의 대의원의 3분의1(2백18명), 한국 국회의원의 2분의1(1백50명)로 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회담의제에서 남한은 중단된 기본 회담의 재개, 인적·물적 교류, 정상회담 개최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북한은 불가침 공동선언 발표, 다방면적 교류협력을 제의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여건만 변화되면 합의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회담 형식과 의제에서 보인 양측의 변화가 아직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해도 차기 회담일정에 합의를 보인 것은 회담 전망을 밝게 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우리는 지금 북한이 직면한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올림픽성공은 그것을 방해하고 불참한 북한으로서는 중대한 충격이다. 게다가 우리는 올림픽을 전후하여 공산권 외교에서 많은 개가를 올렸다. 헝가리·유고와의 부분적인 공식관계 수립, 소련·중국과의 거리단축이 있었다. 한국정부는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남북간의 간접무역 조치를 선언해 놓았다.

이런 급격하고도 불리한 환경변화에 직면한 북한은 자신의 입장과 노선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지금 평양집권층 내에서는 개방을 주장하는 진보파와 신중을 기하려는 보수파간의 정책토론이 다시 전개되고 있으리라는 것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북한이 이런 충격과 딜레마에서 헤어나 새로이 정리된 방침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성급한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지금 한반도 남과 북은 변하고 있다. 우리의 주변 환경도 부단히 바뀌고 있다. 더구나 남북관계를 타개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적극화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변화에 기대를 걸면서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진전시켜 나갈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북한은 우리 주변과 내부의 구조적 변화를 거역해선 안된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면서 우리가 제시한 문제들에 대해 긍정적인 대응이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정부는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의 재개, 학생의 남북한 국토순례와 친선경기, 실질적인 경제 교류, 정상회담 등을 제의해 놓고 있다. 이런 문제를 남북이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면 분단문제는 극복돼 나갈 수 있다. 11월 17일로 예정된 다음번 예비접촉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있기를 기다려 본다.

남북국회회담의 가능성
-타협정신으로 다음번엔 성사시키자-

경향신문(1988.10.14)

48일만에 재개된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제5차 준비접촉도 별다른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이번 5차 준비접촉에서 양측이 제시한 수정안들을 검토해 보면 문제의 본질보다 회담형식 등에서만 이견을 드러내 잘만하면 다음번 접촉에서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걸게 한다. 우선 우리측 박준규수석대표가 회담형식에 대한 수정제의를 통해 양측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합동회의 형식으로 남북국회회담 개·폐회식을 갖고 실질토의는 적정수로 구성되는 대표회담에서 의제를 논의하되 의제에는 불가침 문제도 포함하자고 제안한 것은 종전의 북한측 주

장을 대폭 수용한 큰 양보라 할 수 있다.

북한측도 국회회담을 국회합동회의로 하되 참가인원수를 대폭 줄인 수정안을 내놓고 있어 우리측 「적정수」 의견과의 접근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는 느낌이다.

사실 우리측이 내놓은 수정안은 박수석대표도 말했듯이 회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남북관계의 현실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국회회담의 참가자수를 많이 늘려 대연석회의로 하자는 북한측 주장을 거의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측이 이번 5차접촉에서 내놓은 참가인원수를 대폭 줄인 합동회의형식도 종래의 「연석회의」 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국회회담 본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표회담」을 쌍방이 어떤 형식으로 합의에 도달케하느냐 하는 것 뿐이다.

「불가침」문제도 국회회담에도 공동 「선언」을 발표하느냐, 또는 그런 선언을 채택하도록 「건의」하느냐에 의견이 엇갈려 있으나 일단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 이상 대표회담을 열어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우리가 「불가침」문제를 지금까지 남북국회회담의 의제로 보기보다 당국간의 조약 내지는 협정으로 매듭짓자고 주장해온 것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실현하는 방식이 정치적 선언보다는 책임 있는 당국간의 협정체결이 더 효과적이고 구속력도 있으며 그것이 하나의 국제관례라고 본 때문이다. 또 우리 국회는 성격상 불가침 문제 등 정부간에서나 행해질 협정사항까지 의결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북이 알아야 한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굳이 남북국회·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의 「불가침공동선언」만을 고집하는 북한측 태도는 납득할 수 없는 억지다.

또 지금까지 북한측이 제의한 「연석회의」란 쌍무회담방식으로 토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양측 참석자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찬반토론을 벌인 뒤 가부를 다수결로 표결하는 군중집회형식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진정한 의미의 국회회담을 성공시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보다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어 정치선전이나 늘어놓자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측이 북한의 그러한 정치적 복선에도 불구하고 북측제의를 대폭 수용하기로 한 것은 중단된 남북대화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열어 남북화해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과의 적극적인 인적·물적 교류를 실현시킴으로써 궁극목표인 통일을 앞당겨보자는 대국적인 안목에서다. 노태우대통령의 「7·7특별선언」에 이어 남북한 정상회담제의, 남북한 경제교역제의 등도 그러한 전향적 대북정책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5차 예비접촉에서 우리측이 보인 양보와 신축성이 있는 대응도 그러한 대화의지와 진지성을 입증한 것이다.

이제 우리측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형식이나 의제에도 구애받음이 없이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우리측의 진지한 자세에 북한측도 더 이상 복선을 깔지 말고 성의있게 호응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남북 국회회담 성격 분명하게

한국일보(1988.11.18)

근 한달만에 열린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6차예비접촉에서 회담을 개·폐회식과 본회담으로 나누고 양측의 대표단을 50명씩으로 합의하는 한편 본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교대로 열고 폐막회의에서 공동합의서를 채택하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양측의 의견대립으로 담보를 거듭해온 국회회담문제가 비록 부분적이거나 회담순서와 대표단 규모등에 합의한데 대해

환영하고자 한다.

그러나 회담성사의 핵심과제인 회담운영방식과 의제 등에 관해 북한측의 변함없는 완고한 주장으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날 북한측이 본회담에 나서는 각 50명(총1백명)의 대표가 각기 독자적인 발언권과 표결권을 가져야 하며 회담명칭도 반드시 「대표회담」이 아닌 「대표회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논거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간의 문제해결에 있어 한결같이 1대1의 쌍무회담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50명 각자가 독자적인 의견과 발언권, 표결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우선 남북대표의 개념보다는 의견상으로 마치 각자가 민족대표인 듯한 인상을 주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측 대표단의 분열과 교란을 통해 회담을 그들의 목적하는대로 이끌려는 의도가 감춰져 있는 것이다.

이같은 개별 대표권행사는 우리측이 일찍부터 경계, 반대해온 이른바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위장한 것으로 북한의 획일적인 통제체제를 감안할 때 그 속셈은 분명한 것이다.

의제중 불가침문제에 있어 북한이 종래와 같이 공동선언을 고집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측이 국회가 조약체결권이 없음을 들어 북한의 주장을 일부 수용, 선언문제로 하고 이를 남북당사국에 촉구하기로 한 것은 나무도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국회예비접촉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북한이 예비접촉의 일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 전날 정치·군사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배경에 주목하고자 한다. 더구나 이 제의는 지난 1986년 김일성의 남북고위급정치·군사회담 제의와 1987년 북한 정무원의 이른바 다국적 군축협상제의를 묶은 것으로 핵심은 남한으로부터 미군과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감군을 통해 사실상 한국의 무장을 해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휴전후 지금까지 북한측이 내놓은 정치회담안은 물론 대부분의 남북회담안의 궁극적 의도가 미군철수-미국과의 3자회담-남한적화에 두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한국측이 이번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북한측이 미리 계산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의 제의는 노태우 대통령의 7·7특별선언을 시발로 국회시정연설과 유엔총회연설에서 밝힌 남북 정상회담, 불가침선언 논의제, 동북아 6개국평화회의안 등 일련의 대북평화제안과 소련·중국·동구권 등과의 급속한 접근에 북한도 평화의지가 있음을 천명하려는 견제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측이 그들의 주장대로 진정 2개의 한국을 반대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 있다면 이같은 새로운 회담보다 당면한 국회회담을 비롯,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적십자회담과 고향방문단교환·경제회담이 재개되도록 사심없는 자세로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남북회담의 새 가능성
- 「합정」 있지만 적극 대화해야-

경향신문(1988.11.18)

어떤 대화든 그것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성실성, 인식의 일치라는 기본요소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분단 4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쌓인 남북간의 장벽과 불신, 상이한 가치체계도 그런 상호신뢰의 회복없이는 극복되기 어렵다. 그것은 또 서로가 이데올로기적 갈등보다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대국적 안목과 호양정신을 발휘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17일 열렸던 6차 국회회담 예비접촉에서도 우리측은 회담의 형식과 의제문제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했고 북한측 제안 중에서도 수용할 것은 과감히 받아들이는 아량을 보였다.

우선 의제토의를 위한 본회담 참석인원의 규모문제에 있어 북한측이 내놓은 절충안을 받아들여 50명씩으로 하자는데 합의를 본 것은 이번 예비접촉의 괄목할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개·폐회식에 양측 의원들이 모두 참석, 정당대표 연설과 축하연설을 듣고 의제토의를 위한 본회담은 개막식 이후 서울과 평양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폐막식에서도 공동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도 큰 진전이다.

그러나 국회회담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의제토의를 위한 회담형식과 관련, 쌍무적 성격의 「대표회담」, 즉 전원합의제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과 참석자 절대다수가 찬성할 경우 합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일치합의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북한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북한측의 주장도 외견상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 속셈은 대표회담이라는 외형을 수용하는 채하면서 회담을 「연석회의」 방식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북한의 주장에 부분적으로는 융통성을 발견할 수도 있으나 「불가침에 관한 초안」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려는 북한의 자세에서 우리는 「군사문제 우선 해결」에 집착하는 그들의 전술적 저의를 읽을 수 있다. 불가침문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의 「선언」보다 양측 정부당국이 협정으로 맺는 것이 현실적임은 말할 것도 없다.

북한측이 16일 그들의 정무원 총리 이근모의 명의로 보낸 대남서한도 겉으로는 「긴장완화」이고 「교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철수, 군축 등을 겨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국회회담의 형식과 의제조차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성급하게 정치·군사회담을 제의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상호신뢰의 전제없이 군축만 고집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군사문제 해결은 어디까지나 남북한간의 조속한 대화재개와 협력확대를 통한 상호신뢰구축, 그리고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견이다.

한가지 북한측의 제의에서 주목되는 것은 상호비방과 증상증지, 다방면적 합작교류,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측 제의를 일부 수용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도 따지고 보면 경제교류 등 일부 우리측 제의를 수용하면서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군사문제의 우선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런 정치 군사회담을 기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어떤 회담이든 만나서 해로울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북대화의 성숙과 그 실질적 관계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회유하고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대북교류의 확대
-북측은 화해노선의 실제 보이라-

우리는 최근 잇따라 나타난 북한의 대남 제스처변화를 주목한다.

그 하나는 16일 북한이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고위정치·군사회담을 제의하면서 보이고 있는 변화의 몸짓이다.

북측이 제의한 이번 정치군사회담은 1986년 12월 김일성의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와 1987년 7월 북한 정무원의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를 합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묵은 것들의 새로운 합성인 이번 제의에 포함된 남북간 비방·중상증지, 다방면적 합작실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군사고위당국자간의 직통전화 가설 등은 긍정적인 항목들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항목들은 남북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선행과제들로서 이미 우리측이 오래 전부터 제의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북측이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북측의 핵심적 과제를 검토해 보면 주한미군의 철수와 남북한군축 등 거듭해 온 그들의 주장을 보다 구체적 시한과 규모를 못박아 제시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주한미지상군은 1990년말까지 완전 철수하고 해공군도 1991년말까지 철수할 것과 남북한의 병력도 1991년말까지 각각 10만 명 이하로 감축하자는 것이다.

군사문제의 논의는 남북의 대화와 교류의 확대와 상호신뢰가 구축될 때만 진전될 수 있는 과제다. 특히 국제적 개방과 화해의 대세를 역행한 채 아직도 냉전대결의식과 테러와 선동 그리고 해방전선전략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과의 군사문제 해결은 적대행위가 재발될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었을 때에만 가능할 뿐이다.

또하나 새로운 변화는 17일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에서 나타난 북측의 제스처이다. 북측은 이날 회담형식과 관련해 개·폐회식과 본회담을 분리하자는 우리측 안을 받아들이고 본회담에는 각각 1백명씩 참가하자던 주장을 바꾸어 50명씩 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북측이 이날 제의에서 「대표회담」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대표회의」라는 용어를 되풀이 했다는 사실과 「일치합의제」라는 의사결정방식을 제시한 의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표회담은 쌍무적 협의방식으로 전원합의제인 것이며 대표회의는 참석자들이 각자 개별자적으로 주제에 대한 토의를 한다는 것이 북측의 설명이다. 게다가 일치합의제라는 것은 「극소수가 반대하고 절대다수가 찬성하는 경우 합의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북측의 제의에서 우리는 그들의 불측한 저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자유로운 개인의 의사개진이 가능한 자유사회의 특징과 4당간의 이견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리의 정치현실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완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미일 등 우방들에 대북접근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대남 견제전략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최근 대한항공의 중국영공통과협정을 취소하도록 중국에 작용했다는 사실이나 한·「헝가리」 수교진전에 대한 비외교적 노골적 협박에서 그같은 북측의 전략을 읽을 수 있다. 이밖에도 우리의 대중·소접근을 차단·억제하려는 그들의 기도를 우리는 여러 경로에서 접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북측은 보다 개방적이고 화해적인 자세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북측과의 대화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와 같은 변화를 촉구하면서 신뢰구축작업에 앞서도록 하자.

< 목 차 >

I.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1. 국정운영 기초
2. 통일·대화관련 주요내용

II. 남북간의 다양한 대화 전개

1.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 가. 성립배경
 - 나. 제1차 예비회담
 - 다. 제2차 예비회담
2. 남북체육회담
 - 가. 성립배경
 - 나. 제1차 회담
 - 다. 제2차 회담
3.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 가. 경과개요
 - 나. 제7차 준비접촉
 - 다. 북한측의 회담중단

III 남북대화 관련동향

1. 「남북대학생 교류회담」 제의
 - 가. 제의내용과 취지
 - 나. 제의 배경
 - 다. [진대협]과 북한측의 반응
 - 라.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성격
2. 북한측의 [남북정치협상회의]제의
 - 가. 제의내용 및 평가
 - 나. 문익환씨의 불법입북 문제
3. 북한측의 「범민족대회」 실무대표 접촉제의
 - 가. 제의내용 및 추진경과
 - 나. 북한측 태도 평가
4. 북한의 일방적 회담연기 선언

본 문

I.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1. 국정운영 기초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1월 17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올해의 국정운영 방향을 ▲새로운 민주 질서의 정착 ▲경제의 안정성장 지속 ▲복지정책의 본격적 추진 ▲통일자주외교의 가속화 ▲21세기의 주도적 대비 등 5개 과제로 집약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통일.대화정책과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한간에 교류와 교역의 길을 트는 등 민족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겠다고 밝히면서 「민족통합의 시대」와 「민족자존의 자주시대」를 열어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인 위대한 나라를 구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대한 집념은 지난 1월 1일 「새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신년사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남북한을 차단하는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평화통일의 전기를 이룩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동포애에 바탕한 우리의 전향적인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정책은 개방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세계적 물결 속에서 폐쇄적인 북한의 태도를 바꾸게 할 것”이라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아울러 동 신년사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동족간의 처절한 전쟁을 겪었고, 냉전체제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아온 남북한간에 화해의 돌파구가 마련되어 왕래와 교역이 시작되면 통일은 이 세기가 가기 전의 일로 성큼 우리 눈앞에 다가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노태우 대통령이 민족화해와 통일에의 자신감을 갖고 통일자주외교의 적극 추진을 강조

하고 있는 데에는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확인된 민족의 저력과 함께 제6공화국이 펼쳐온 통일.대화 정책의 성과에 대한 자부감이 그 바탕이 되고 있다 하겠다.

사실 그간 노태우 대통령은 제6공화국 출범이후 국력의 지속적 성장과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국민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북한 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의 전기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통일정책 기조에 입각하여 정부는 그동안 각계의 통일논의를 과감하게 개방하였으며, 아울러 통일정책 수립에 있어서 국민의사를 폭넓게 수렴.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화해와 개방의 새로운 국제질서 추세 속에서 편협한 냉전논리에서 벗어나 남북간의 대결구조를 화해와 협력구조로 전환함과 동시에 북한을 민족공동체 구성의 일원으로서 상호협력하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등 통일외교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밝히는 「7.7특별선언」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7.7특별선언」의 기본정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이루어진데 부응하여 정부는 그간 대북 외교시책 발표(1988.7.16), 해외 동포 남북한 자유왕래 허용(1988.7.19), 대북 비방방송 중지(1988.7.19), 북한 및 공산권자료 개방(1988.9.3),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1988.10.7) 등 여러 분야에서 과감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왔다.

이번 국정운영 기조를 밝히는 가운데 노태우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으로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통일환경을 성숙시키는 북방외교를 강화해 나갈 것을 재강조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시대」를 열어 나가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태우대통령은 앞으로 4년이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시민사회로, 냉전체제의 분단시대로부터 민족통합의 시대로 들어가야 할 결정적 시기라고 전제, 이같은 민족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국민 모두의 참여를 역설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의 기초연설 내용 중 통일.대화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정운영 기초연설(통일.대화 관련 부분)

1988년은 우리 역사에서 <영광과 진통이 교차하는 해>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에 40년 헌정사의 파란을 넘어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으며 온 세계인류의 찬탄 속에 서울올림픽의 영광을 창조하였습니다.

서울올림픽은, 대결해온 동서세계가 전쟁의 위험이 도사린 분단의 이 한반도에서 화합의 한마당을 이룬 세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구미 산업문명이 지배해온 세계에 한국의 문화역량을 깊게 심고 우리가 그 주역이 될 21세기 태평양 문화권의 부상을 예고하는 축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서울올림픽은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우리 겨레의 위대한 힘을 실증하였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잿더미로부터 불과 30여년만에 세계 10대 무역국가로 뛰어오르게 한 우리 국민의 피땀어린 노력이 거둔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평화와 자유를 갈구하며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여 자유경쟁을 통해 번영을 일구어 온 우리의 발전방식은 이제 분명히 세계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들과 교류.협력의 길을 열고 작년 저의 UN총회연설에서 본 바와 같

이 우리의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정책에 대해 세계가 호응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바침하는 것입니다.

.....

저는 오늘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감에 있어 몇가지 문제에 관해 먼저 저의 소신을 밝히고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민주질서를 사회 각 부문에 걸쳐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을 지속하여 선진국을 만들어 가는 일을 가속화해 갈 것입니다.

셋째, 온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네째, 남북을 가르는 장벽을 허물어 통일의 전기를 마련할 통일자주 외교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남북한간에 교류와 교역의 길을 트는 것은 물론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한 정상회담을 실현하여 민족문제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을 문제해결의 동반자로 보는 새로운 대북관에 입각하여 현실성있는 통일방안을 마련, 각계의 의견을 들어 확정할 것입니다.

세계에 일고 있는 새 조류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정세에 대응하여 저는 미국,일본을 비롯한 우방과의 유대를 한층 긴밀히 다지며 협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이 출범하는 미국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며, 일본방문도 연내에 실현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소련,중국,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증진하여 통일의 환경을 성숙시키는 북방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해양과 대륙을 잇는 5대양 6대주 어느 곳도 자유로이 여행하며 온 세계를 무대로 우리의 번영과 인류의 공영을 위해 힘껏 일하는 약진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진취적 기상을 키워 통일과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통일과 번영을 위한 모든 노력도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굳게 보장할 굳건한 안보 역량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는 우리가 어떠한 도발, 어떠한 전쟁도 억제하여 평화를 지킬 힘을 갖도록 방위역량과 안보태세를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안과 격변으로 막을 연 1980년대를 올해로써 슬기롭게 마무리 짓고 커다란 변혁의 21세기를 지금부터 주도적으로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

지금부터 저의 임기가 끝나는 1993년초까지 앞으로 4년의 기간은 진실로 우리 역사의 큰 분수령입니다.

이 기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시민사회로, 냉전체제의 분단시대로부터 민족통합의 시대로 확실히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남에게 의존하던 때를 지나 민족자존의 자주시대로, 개발우선정책으로부터 문화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4년은 성실한 모든 국민이 떳떳한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야만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 벽찬 역사적 과업의 성취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숭한 시련을 겪은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힘없는 나라로 남에게 국권을 빼앗긴 식민지 시대를 거쳐 분단의 고통 속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겨레는 이처럼 위대한 나라를 꿈에도 그려왔습니다.

저는 이 민족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이 벽찬 과업은 대통령이나 몇몇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너른 마음, 뜨거운 가슴으로 참여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 내부적인 다툼에 스스로의 힘을 소모할 때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새로운 세계질서와 새로운 문화를 이끌 태평양시대의 자랑스런 주역국가가 되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을 더 밝은 내일을 여는 일에 쏟아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도 당면한 모든 문제에 관해 대화하고 토론하되 우리나라, 우리 겨레가 안고 있는 큰 문제에 관해 창조적인 역량을 결집하는 큰 정치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올해는 우리 모두 손잡고 힘모아 <질서 속에 민주발전을 이룩하는 해>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2. 통일.대화관련 주요내용

노태우 대통령이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기본방향을 제시한 직후, 기자들의 분야별 질문과 대통령의 답변형식으로 회견이 진행되었다.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새 시대, 새 시각에 입각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당간의 협의와 여러 가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힘으로 매듭지을 것임을 밝혔다.

또한 통일방안의 내용은 "남북의 두 체제가 우선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공존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남북 쌍방이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단일민족국가로의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방적인 군비축소나 군비동결선언 등은 한반도의 평화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장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고려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남북대화과 교류문제에 관해서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가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화해와 협력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북한측이 진정한 대화에 호응해 나옴으로써 당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정상간에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 남북간의 모든 현안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을 거듭 천명해 온 사실을 상기시키고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정상회담을 꼭 성사시키겠다는 의지와 희망을 밝혔다.

노태우 대통령은 또한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의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문제도 어떤 분야든 남북교류성사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통일문제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세력 또는 특정정당이 절대로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며, 한단계 한단계 쌓아 올리는 식으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통일.대화문제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방안의 골격 제시

<기 자> 최근 통일문제에 관한 중구난방식 논의가 한창입니다. 우리 정부도 내달쯤 종합적인 통일방안을 정리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우리의 통일의지가 확고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군비축소나 군비동결 같은 것을 선언할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중인 통일방안의 대체적인 골격이 되어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고, 또 7월에 평양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세계 청년학생축전에 우리 학생들을 보낼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우리가 안보를 생각하고 보는 관점은 주관적이어서는 안되고 어디까지나 상대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보에는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나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또 역사가 말해주는 교훈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다행히 국방백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북의 군사력을 보면 우리보다도 월등 우세합니다. 최근에 내가 보고받은 첩보에 의하면 그것보다도 더 증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어느 나라를 막론

하고 평화는 자국이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발을 억제하는 군사력을 확실히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있는 한.미안보협력체제를 더욱 굳건히 유지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철수가 운위되고 있습니다만, 한국에 있는 미군은 최소한도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장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군축을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다, 특히 이 말은 북한측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공세.선전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새 시대, 새 시각에 입각한 새로운 통일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원이 중심이 돼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또 정당간에도 협의를 해서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통일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룩된다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며 역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밥 한 그릇을 한꺼번에 삼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위장에 병이 날 것입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어야만 밥 한 그릇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의 두 체제가 우선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공존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남이나 북이나 다 함께 줄기차게 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목표로 하는 궁극적인 단일국가로의 통일을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평양 청년학생축전 문제는 여러분들 다 분석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소위 반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전위의 역할을 하는 집회라는 성격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간에 어떤 형태든, 어떤 분야든 교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과 정책에 따라서 문교부에서 이 학생 교류방침을 지금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든 교류성사의 기회로 활용할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적극 추진

<기 자> 정상회담의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며, 정상회담이나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북한측 주요 인사와 우리 남한의 주요 인사가 서울과 평양을 서로 방문하면서 막후 접촉이 있었다는데 대한 진상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북 문제의 진전에 대해 너무 획기적인 것이 많아 국내정치에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는데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획기적으로 나온다는 점은 나도 이상해요. 나도 모르는 것 또 장관도 모르는 것이 신문에 납니다. 우리 언론이 자유를 구가하고 있으나, 장관에게 확인도 해주시고 또 관계 책임자들의 확인을 보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것인데 언제나, 어떤 의제를 가지고라도 어디서든지 만나자는 것입니다. 만남으로써 우리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거듭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북측이 어느 당 어느 당 총재와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제의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큰 만큼 북측의 주장에 대해서 실망 또한 크다는 점을 나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대를 갖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 정상회담은, 물론 정확한 시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멀지 않은 장래에 꼭 성사시키고 말겠다는 의지와 희망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지성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적대감정을, 우리 스스로가 일대 발상의 전환을 이룩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버리고 화해와 협력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열렬하게 추구하고 있는나, 여기에 대해서 세계에서, 특히 동구권 공산권에서도 탄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북쪽에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여러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내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당국자회담이나 국회회담, 또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회담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이제 민간교류도 무엇인가 실마리가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은 민간적인 차원이지만 머지않아 공식적으로 발전이 되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통일문제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세력 또는 특정정당이 절대로 정략적으로 이용할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통일문제는 민족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남북의 통일방안도 이런 차원에서 모든 국민들의 뜻을 모으고 또 정당간의 협의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공청회 등도 열고 해서 국민의 힘으로 이 통일문제를 매듭을 지을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북방정책 추진의 가속화

<기 자> 지금 활발하게 추진중인 북방정책은 평화통일을 위한 획기적 정책전환이었습니다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또 곧 국교가 수립될 헝가리 등 동구권을 연내에 방문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소련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시킬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북방정책은 흔히 잘못 생각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나오지 않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내 자신에 관한 관계되는 일만 하더라도 올림픽을 유치할 때부터 북방정책은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기업이라든가 우리 외교활동도 직간접적으로 꾸준한 노력을 오랫동안 해왔으며 이것이 갑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 올림픽을 전후해서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뿌듯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과거에 우리가 북방정책을 한다면 뭐가 어디서 억눌린 느낌을 털어 버릴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올림픽을 전후로 우리 북방외교가 즐기치게 펼쳐 나가는데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아하, 이게 강한 주권국가의 자부심, 자존심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이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특히 지난 올림픽을 끝마치고 UN에서 연설했을 때, 그때처럼, 나 자신이 민족의 자존심과 우리 나라의 강한 주권의식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와 우리 민족의 하나의 크나큰 업적이며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다시피 이런 급속한 빠른 진전에 일시적인 혼동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안심을 합니다. 이제 기업인들, 문화인, 체육인, 심지어 정치인들도 북한, 소련 등 북방의 여러 나라에 갑니다. 또 젊은 학생들도 앞으로 많이 갈 것입니다. 가게 되면 확실히 우리 체제가 우월하구나 하는 자부심을 누구나 다 한결같이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념문제 등 혼선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체제의 이념이 올바르게, 강하게 정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북방을 가장 자주 왕래하는 기업인들도 너무 성급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오랜 경험과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어서 이제 성숙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기업인들이 중동에 진출하면서 과당경쟁과 과열현상으로 도산하기도 하고 국가에 손해를 끼쳤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국제민간경제협의회라는 것을 벌써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예방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임기 중에 여러 북방 주요국과 관계를 수립하기를 희망합니다.

헝가리와는 늦어도 금년 상반기 내에는 국교가 정상화되리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고 동구권의 소련을 위시해서 폴란드, 불가리아, 이웃의 중국 같은 나라들과 하나 하나 날이 갈수록 관계 개선이 촉진되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느 나라도 방문하는데에 주저하지 아니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사회주의 국가를 즐겁게 방문할 수 있는 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II. 남북간의 다양한 대화 전개

1.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가. 성립배경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은 1988년 12월 28일 강영훈 국무총리가 북한 정무원총리 연형묵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제의한데 대해 북한측이 이를 변칙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강영훈 국무총리는 동 서한에서 남북이 각기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7명의 대표를 구성, 남북간에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 위한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열 것을 제의하고, 이와 관련한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한 쌍방 각기 5명의 대표로 예비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강총리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의 의제로 상호 비방.중상 중지 문제, 상호존중 및 불간섭문제,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문제, 군사적 신뢰구축문제,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등을 제시하였으며, 남북사이에 당면한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해 북한측이 제기하는 실효성이 있는 여타 방안들도 함께 토의될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

동 제의는 그 동안 북한측이 정치.군사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해온데 대해 교류.협력과 군사문제를 병행 토의할 수 있다는 적극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서, 남북당국간에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기하려는데 참뜻이 있다.

또한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남북한간 다각적인 교류.협력의 실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도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강영훈 국무총리의 대북 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 정무원 총리 연형묵 귀하

조국이 분단된 지 43년이 경과한 오늘까지도 우리 겨레가 분단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사상과 제도가 다른 민족들 간에도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방과 교류를 통해 상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는 같은 민족으로서 반목과 대결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산 가족들 사이에 안부 편지 한장 교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을 과감히 뛰어넘어 해묵은 대립과 갈등에 중지부를 찍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귀하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측은 남북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문호개방, 대북 비방방송 중지, 국제 무대에서의 외교적 대결 지양 등 우리 스스로가 취할 수 있는 화해와 협력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겨레의 자존과 역량을 바탕으로 민족적 화해와 번영, 통일을 앞당기려는 일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귀측이 이에 상응한 자세를 보여올 경우 우리측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 대결과 갈등의 근본 원인은 상이한 이념과 체제가 존재하는 가운데 오랜 단절을 통해 불신

이 쌓여온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귀측도 지적했듯이 불신과 오해가 남아있는 한 아무리 대화를 하여도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길에서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남북간에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상대방의 이념과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존중,불간섭의 기초 위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남과 북은 인도,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군사 등 제분야에서 상호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당면 실천조치들을 취해 나감으로써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다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나는 귀측의 지난 11월 16일자와 12월 20일자 편지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귀측도 지적한 바와 같이 평화와 화해의 질서로 급속히 재편되는 주변정세 속에서 우리 민족이 자존을 확보하고 평화통일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에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평화와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의 문제이며 그 주체도 당연히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측은 남북 당사자간의 해결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은 평화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의 기대와 여망에도 부응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번 귀측의 제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민족통일의 새 지평을 내다보면서 남북간에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 위해 남북고위당국자간에 회담을 열 것을 제의합니다.

남북고위당국자 회담은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각기 7명의 대표로 구성하며 상호비방,중상 중지문제, 상호존중 및 불간섭 문제,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등을 의제로 하여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면서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북간 고위당국자회담이 개최되면 남북 사이에 당면한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해 귀측이 제기하는 실효성 있는 여타 방안들도 함께 토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 개최와 관련한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되는 예비회담을 내년 2월 초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가질 것을 아울러 제의하는 바입니다. 예비회담의 수석대표는 차관급(부부장급)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는 남북고위당국자 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과 함께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경제회담이 곧바로 재개되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늦어도 제6차 남북경제회담을 내년 2월 하순에,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을 내년 3월 하순에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간에 신뢰회복과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이산가족을 비롯한 각계 인사가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고 경제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더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민족적 여망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합니다.

나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이 열리고 각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가 실현되면 남북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것이며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귀하의 긍정적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1988년 12월 28일

대한민국
국무총리 강영훈

북한 측은 이같은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의에 대해 1989년 1월 16일 정무원 총리 연형묵 명의의 서한을 통해 남북한과 미국간의 『3자회담』 개최를 촉구함과 동시에 쌍방 총리를 단장으로 하고 군 실권자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는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쌍방 각기 차관급을 단장으로 한 5명의 대표로 구성되는 예비회담을 1989년 2월 8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갖자고 함으로써 결국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우리측의 예비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해 나왔다.

그러나 동 서한에서 북한 측은 예비회담 개최를 변칙 수용하면서도 『3자회담』의 논리를 견지하고 있는가 하면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를 회담 분위기에 조성할 필요로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측이 동 회담을 통해 한국내의 일부 반미감정 대두현상에 편승하여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반대 여론을 유발함과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의 분위기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 하겠다.

북한 측의 이같은 의도는 1988년 11월 16일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와 1988년 12월 20일 남북한·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 개최 제의의 배경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지난 1988년 6월 3일 이현재 국무총리는 88 서울올림픽에 남북이 함께 참가하는 문제와 남북간의 다각적인 인적교류 실현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고위당국자 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북한 측은 이에 대해서 서한 접수 자체를 거절하며 부정적 반응을 보여 오다가 1988년 11월 16일 당시 정무원 총리 이근모 명의의 서한을 통해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제의해 왔으며, 아울러 북한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1988. 11. 7)가 채택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동봉해 왔다.

동 제의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대표단 구성: 부총리급을 단장, 군총참모장급을 부단장으로 하는 7~9명 정도의 실권 있는 고위급 정치군사대표
- 1차회담 시기 및 장소: 1988년 12월 중순, 판문점 『통일각』
- 의제: 「포괄적 평화방안」에서 내놓은 「남북간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완화방안」
- ※ 북한 측이 제기한 남북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완화방안

(1) 정치적 대결 상태 완화

① 상호 비방·중상중지

.상대방 지명 공격
.사상과 제도 비방.중상
.빠라 살포 및 휴전선 방송 등

② 상대방을 비난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정치행사 중지 및 상대방 체제를 부정하는 법규철폐

③ 다방면적 합작.교류 실현

.정당.단체 및 개별 인사들의 쌍무적.다무적 접촉과 자유로운 인사왕래
.자원의 공동개발.이용 및 상품교류
.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 .보건.체육의 협력.교류
.국제 무대에서의 대결.경쟁 지양과 공동협력

(2) 군사적 대결상태 완화

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중감위 성원국 군사인원으로 조직된 중립국 감시군 배치

② 대규모 군사연습 중지

.연합부대 이상 군사훈련 및 외국군과의 합동 군사연습 중지

③ 군사분계선 일대 육.해.공에서의 일체의 군사행동 중지

④ 우발적 충돌 사건의 확대방지를 위한 고위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가설

이러한 북한측의 제의는 1986년 12월 30일 김일성의 『남북고위정치.군사회담』 제의와 1987년 7월 23일 북한정무원의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 내용을 한데 묶은 것으로 한반도 평화문제 해결의 본질이 주한미군 철수, 남북한간 군축실현 등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한 시기적으로 대통령의 「7.7선언」, 「국정연설」(10. 4), 「유엔총회연설」(10. 18)등 평화통일에 대한 우리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역반응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바라는 주변국가들의 압력을 완화하고 공산권의 대한 접근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해 보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해결 과제로 「남북간 비방.중상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군사고위당국자간의 직통전화가설」 등 우리측이 이미 제시한 내용을 몇 가지 포함시킨데서 그들의 대내외 정책적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측면도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측은 이어 최고인민회의 제8기 4차회의(1988. 12. 12)를 통해 교체된 정무원 총리 연형묵의 서한을 통해 1988년 12월 20일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과는 별도로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3자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 이를 위해 각기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3자 실무대표 접촉을 12월 중 제네바나 그 밖의 제3국에서 갖자고 제안했다.

북한 측은 1988년 12월 6일에도 외교부장 김영남 명의로 이른바 『포괄적 평화방안』을 미국 측에 별도로 보내고 주한미군 철수와 남북군축을 위한 3자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측이 1984년 1월에 제의해 놓은 3자회담 문제를 다시 집중 거론한 것은 긴장완화를 바라는 주변국가들의 여망을 군사문제 논의로 귀착시키려는 것과 함께 「평화협정」을 구실로 본격적인 대미 접촉을 시도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 측의 제의에 대해 우리측은 「7.7특별선언」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자세를 견지해 왔으며, 특히 노태우 대통령이 지난 1988년 10월 18일의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남북간의 군비축소 등 군사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사실에 비추어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하에 북한측의 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록 회담의 명칭과 의제 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1989년 1월 23일 강영훈 국무총리의 대북서한을 통해 예비회담 개최를 수락함으로써 1980년의 남북한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후 9년만에 남북한 당국간에 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제1차 예비회담에 앞서 남북 쌍방은 1989년 2월 4일 대표단 명단을 상호 교환하였다.

예비 회담 대표

구 분	우 리 측	북 측
수석대표	송한호(국토통일원 차관)	백남준(정무원 참사)
대 표	김삼훈(외무부 정보문화국장)	유성철(정무원 실장)
대 표	용영일(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장)	최우진(외교부 국장)
대 표	강근택(대통령 정책보좌관실비서관)	최성익(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부장)
대 표	김보현(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심의관)	김영철(인민무력부 부국장)

나. 제1차 예비회담

제1차 예비회담은 1989년 2월 8일 오전 10시부터 12시 12분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공개리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예비회담에서는 쌍방총리들이 만나는데 필요한 제반 절차문제를 협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계속 「팀스피리트 1989군사훈련중지」와 「우리 내부의 북한출판물 단속중지」라는 회담 외적 사항을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옴으로써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특히 남북 쌍방은 각기 첫 발언을 통해 회담의 명칭, 대표단의 구성, 의제, 회담 운영절차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을 제시함으로써 쌍방의 의견을 접근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중지문제만을 집중 거론함으로써 절차문제는 논의조차 못하였다.

우리측은 상대방 내부분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남북간의 화합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본회담성사를 위한 절차문제 토의를 유도했으나 북한측은 예비회담장을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반대의 선전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나타내 보였다.

또한 우리측이 본회담 성사의 전제조건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반박하고 본회담 절차문제 토의에 들어갈 것을 거듭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은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중지」, 「규모축소」, 「명칭변경」 등을 주장하면서 절차문제 토의를 기피하는 것으로 일관하였다.

쌍방의 첫 발언에서도 우리측은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의 성사를 위해 명칭을 『남북총리회담』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밝히는 등 신축적 입장을 보였으나, 북한측은 발언시간의 2/3를 「팀스피리트」 훈련문제거론과 우리 내부분제 간섭에 할애하였다.

우리측 송한호 수석대표의 첫 발언문 내용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측 첫 발언문 요지>

우리측 대표단 일동은 그동안 쌍방 총리들 사이에 오고 간 편지들을 기초로 하여 원만한 타협을 이룩함으로써 하루 빨리 온 겨레가 기대하고 있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임.

노태우대통령은 작년 「7.7선언」에서 『남북이 서로 불신.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든 대결관계를 지양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남북이 한 민족으로서 번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음.

또한 작년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대한민국은 남북간에 불가침선언이 있기 전이라도 북에 대하여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와 통일의 실현방안, 남북간의 교류.협력, 군비축소 등 군사문제를 포함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제의했음.

최근에는 미국 등지의 해외교포를 비롯하여 우리측의 기업가와 기자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개별적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있으며 귀족의 물자와 상품들이 우리측 지역에 반입되고 있음.

이와 같은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움직임들이 남북관계를 대결의 구조에서 화해와 협력의 구조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함.

40여년 지속되어 온 대결구조를 청산하고 민족발전의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접촉과 교류와 함께 책임있는 남북당국간의 합의와 지원을 통해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남북쌍방의 정부당국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민족의 화합과 발

전을 위해 신뢰를 심는 뼈놓을 수 없는 과정임.

본회담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고 간 편지를 통해서 귀측이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으로 하자고 한 바 있으나, 우리측으로서는 본회담이 쌍방 총리를 비롯한 고위당국자들이 마주앉아 회담하는 자리인 만큼 단순히 정치.군사문제만으로 국한해서 토의할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교류.협력 및 신뢰구축 등 다양한 현안 문제들이 토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명칭을 『남북고위당국자회담』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명칭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쌍방 입장을 다 함께 고려하여 『남북총리회담』으로 결정하는 것도 무방함.

본회담 대표단은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군참모총장급을 포함하는 7명의 대표로 구성하고 40명의 수행원과 50명의 보도진을 대동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본회담은 예비회담 종결이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함.

우리는 소모적 대결을 하루 빨리 지양하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비방하고 중상하면서 민족자존을 훼손시켜온 일부더 중지해야 하며 서로 간섭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해야 함.

남북간에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하는 것은 고질적인 대결관계를 협력구조로 전환하는데에 뼈놓을 수 없는 조치임.

우리는 교류.협력의 실시와 함께 군사분야에서도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야 하며 이점은 귀측도 부인하지 않고 있음.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 민족의 장래문제인 통일실현문제와 불가침선언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 및 군비축소 등의 군사문제를 포함한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타결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본회담 의제를 다음과 같이 6개항으로 함.

- ① 상호비방.중상중지 문제
- ② 상호존중 및 불간섭 문제
- ③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실시 문제
- ④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 .남북고위당국자간의 직통전화가설
-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
- .군인사의 상호교류
- .대규모 훈련의 사전통보 및 참관초청

- ⑤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

⑥ 기타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

본회담의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이 함.

- ① 본회담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쌍방합의에 따라 공개로도 할 수 있음.
- ② 의전문제는 쌍방 실무대표간의 별도접촉을 통해 협의.해결함.
- ③ 기타 회의기록, 왕래절차, 편의제공 등 회담운영 절차문제는 과거 남북대화의 선례를 준용함.

나는 본회담의 명칭, 의제에 있어 쌍방간에 다소 의견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회담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하는 대국적 관점에 서서 문제해결에 임한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함.

이어 우리측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회담과 연관시키는 부당성을 공박하고 「팀스피리트」 훈련이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서 북한측에 참관 초청까지 해 놓고 있으며, 과거 「팀스피리트」 훈련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회담을 진행한 사례를 상기시켰다.

또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이 실시되지 않는 기간에도 대화재개에 호응해 오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였다.

결국 제1차 예비회담은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문제를 둘러싸고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나기는 하였으나, 남북교류 및 협력의 분위기가 높아진 시점에서 개최된데다 정치.군사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장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계기로 내외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첫 발언문을 중심으로 쌍방의 제의를 정리해 보면 이견보다는 사실상 합의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데서도 북한측의 태도여하에 따라서는 진전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남북쌍방은 다음회담을 3월 2일 관문점 북측지역에 있는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제의 비교

구분	우리 측	북 측
명칭	남북고위당국자회담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절충안으로 『남북총리회담』 무방	
대표단 구성	○ 대표: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군참모총장급을 포함하는 7명 ○ 수행원: 40명 ○ 기자단: 50명	○ 대표: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군실권자 2명 정도를 포함하는 7명 ○ 수행원: 20명 ○ 기자단: 50명
본 회담의 일시 및 장소	○ 예비회담 종료 후 1개월 이내 ○ 서울.평양 윤번 개최 *1차 회담: 서울	○ 예비회담 종료 후 1개월 이내 ○ 평양.서울 윤번 개최 *1차 회담: 평양
의제	○ 6개항 제시 ① 상호비방.중상 중지 문제 ② 상호존중 및 불간섭 문제 ③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실시문제 ④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남북고위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개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및 평화적 이용 ·군인사의 상호교류 ·대규모 훈련의 사전 통보 및 참관 초청 ⑤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⑥ 기타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	○ 단일의제 제시 「남북간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완화방안 7개항 기제시(1988.11.7) ① 상호비방.중상중지 ② 상대방을 비난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정치행사 중지 및 상대방 체제를 부정하는 법.제도 철폐 ③ 다방면적 합작과 교류 실현 ④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및 중립국 감시군 배치 ⑤ 대규모 군사연습 중지 ⑥ 군사분계선일대 육.해.공에서의 일체 군사행동 중지 ⑦ 쌍방 고위군사당국자간에 직통전화 개설

다. 제2차 예비회담

제2차 예비회담은 1989년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12시 40분까지 관문점 북측지역에 있는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2차 회담을 통해 우리측이 회담외적인 문제를 구실로 1차 예비회담을 공전시킨 북한측의 책임을 지적하고 본 회담 성사를 위한 절차문제토의를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은 「팀스피리트」 훈련중지문제를 또다시 예비회담 진행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바람에 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채 끝나고 말았다.

특히 북한측은 「팀스피리트」 훈련문제와 관련한 「3개항의 긴급제안」을 내고 이의 선결을 주장했으며, 「전민련」과의 「범민족대회」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이 성사되지 못한데 대해서도 이를 「반대화.반통일선언」으로 규정하는 등 예비회담장을 우리 내부의 무분별한 통일논의를 고무.선동하기 위한 선전무대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우리측 송한호 수석대표는 첫 발언을 통해 북한측의 성실한 자세를 촉구하면서, 남북 쌍방의 제안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상호존중과 호양의 정신으로 협의해 나간다면 제2차 예비회담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첫째, 본 회담의 명칭문제에 있어서 북한측도 남북간의 교류.협력과 이산가족 해결 등을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본 회담에서는 남북간의 다양한 현안문제들이 폭넓게 토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측이 제의한대로 『남북고위당국자회담』 또는 『남북총리회담』으로 하자고 촉구하였다.

둘째, 본 회담 대표단의 구성문제는 쌍방이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7명의 대표로 구성하며 50명의 보도진을 대동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다만 쌍방간에 견해차가 있는 군대표 문제와 관련 「군실권자」라는 막연한 표현을 쓸 것이 아니라 「군참모총장급」이라고 명시하고 우리측으로서는 1명이면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셋째, 본 회담의 개최일시는 『예비회담 종결이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는데 대해 쌍방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고 또 장소문제에 있어서도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한다』는데 서로가 동의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다만 제1차 본 회담은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넷째, 본 회담 의제문제에 대해서 우리측이 6개항을 제안하고 북한측이 단일의제로 제안했는데, 본 회담에서 다시 의제문제를 토의.합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회담을 운영하기 위해 의제를 가능한 한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성을 밝히면서 우리측에서 내놓은 6개항의 구체적인 의제에 동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섯째, 본 회담 운영절차문제에 속하는 사항들인 ① 회담형식, ② 합의서 채택, ③ 회담기록, ④ 회담보도, ⑤ 회담장 표지, ⑥ 신변안전 보장, ⑦ 관문점 통과절차, ⑧ 체류일정, ⑨ 편의보장, ⑩ 직통전화, ⑪ 의견 등의 문제는 쌍방간에 별로 큰 의견차이가 없고 또 과거 남북대화의 선례를 준용하면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측의 백남준 단장은 우리측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를 집중 거론하는 한편,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팀스피리트」 훈련중지를 적극 요청하고

있는 양 정치선전을 전개하였다.

특히 북한측은 예비회담의 성과적 진전을 위해서 한국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에 관한 긴급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3개항의 긴급 제안을 내놓았다.

<북측의 3개항 긴급제안>

① 「팀스피리트 1989합동군사연습」의 즉각 중지 및 중지입장 공식 발표

② 「팀스피리트 1989합동군사연습」에 동원된 모든 전투병력과 무장장비의 즉시 복귀

.해외로부터 투입된 전투병력과 무장장비들을 한반도 경외로 철수

.해외에서 기동·출동 태세에 있는 미 육해공군 부대들과 무장장비들의 한반도 경내에 로의 투입 즉각 중지

.남한내에서 동원된 전투병력과 무장장비를 군사연습 이전상태로 복귀

③ 군사훈련(외군제외)의 규모축소 및 「팀스피리트」 훈련의 명칭변경

또한 절차문제에 있어서도 제1차 회담시의 주장만을 되풀이함으로써 회담의 성사보다는 정치선전에만 열을 올리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본 회담 명칭에서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제시, 마치 우리측의 총리회담을 수용하는 듯 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정치군사회담을 고수하였다.

회담의제에 있어서도 그들이 제기한 『남과 북 사이의 당면한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로 하자고 주장하였으며, 기타 관련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측은 「팀스피리트」 훈련문제에 대해 1976년부터 연례적으로 그 규모·일시·작전지역 등을 모두 공개하면서 실시해 왔고, 특히 북한측에 훈련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참관초청까지 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유사시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명백히 하였다.

아울러 북한측이 지금까지도 모든 군사훈련을 비밀리에 실시하고 있으며, 중무장부대를 전방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등 무력을 계속 증강해 온 점 등이 우리측으로 하여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방어적 군사훈련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북한측이 진정으로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훈련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팀스피리트」 훈련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남북대화를 진행해온 사례를 들면서 북한측이 어떤 대화는 하고 어떤 대화는 할 수 없다는 식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경제회담이나 적십자회담 등은 회피하면서 대표성도 없고 권한도 없는 우리측의 일부 재야세력과 대화에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이 북한측의 저의와 대화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의심과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공박하였다.

팀스피리트 훈련기간중의 남북대화 개최 사례

훈련시기	회 담 사 례
1979. 3. 1 -3.27	○ 남북탁구회담 -제2차 회담(1979. 3. 5) -제3차 회담(1979. 3. 9) -제4차 회담(1979. 3.12) ○ 남북조절위 서울측 대표와 북한측 「조국전선」 대표간의 접촉 -제2차 접촉(1979. 3. 7) -제3차 접촉(1979. 3.14)
1980. 3. 1-4.20	○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 -제3차 접촉(1980. 3. 4) -제4차 접촉(1980. 3.18) -제5차 접촉(1980. 4. 1) -제6차 접촉(1980. 4.18)
1984. 2. 1-4월 중순	○ 제1차 남북체육회담 (1984.4.9)

한편 북한측은 이른바 「3개항의 긴급제안」을 통해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문제를 사실상 예비 회담의 전제조건화하였으면서도 막상 우리측이 “전제조건인가?” 라고 묻는데 대해서는 “회담진전을 위해 필요한 것” 이라고 하면서 명백한 대답을 기피하였는 바, 이는 대화교착의 책임을 모면키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팀스피리트」 훈련과 관련한 공방에도 불구하고 남북쌍방은 다음 회담을 1989년 4월 12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날 우리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동안 「통일각」의 정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회담이 중단된 바 있었다.

2. 남북체육회담

가. 성립배경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는 화합과 평화의 장엄한 미래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온 인류에게 전해주었으며 우리 민족의 슬기와 역량을 마음껏 과시한 기념비적 축전이였다.

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지구촌의 장엄한 대화합의 장을 연 것은 온 국민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이룩한 성과이며,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인 쾌거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 민족 한 핏줄로 살아온 북한동포들이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 우리는 제24회 올림픽대회의 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된 직후부터 북한측의 참가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과거에도 친선교환경기개최, 체육인사의 상호왕래 등과 함께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게 되기를 적극 희망해 왔다.

남북한은 지금까지 각종 국제경기대회를 앞두고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남북한 단일팀 구성관련 회담사례

구분	일시 및 장소
1. 1964년 동경올림픽대회 참가 남북한 단일팀 구성관련 남북체육회담	○1차 (로잔느, 1962. 1. 24) ○2차 (홍콩, 1963. 5. 17~6. 1) ○3차 (홍콩, 1963. 7. 26)
2. 제35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평양개최) 단일팀 구성관련 남북탁구협회 회의	○1차 (판문점, 1979. 2. 27) ○2차 (판문점, 1979. 3. 5) ○3차 (판문점, 1979. 3. 9) ○4차 (판문점, 1979. 3. 12)
3. 국제경기단일팀 구성 및 남북체육 교류를 위한 남북체육 회담 - 84 LA올림픽, 86 아시 안게임, 88 서울올림픽 참가 관련	○1차 (판문점, 1984. 4. 9) ○2차 (판문점, 1984. 4. 30) ○3차 (판문점, 1984. 5. 25) ※1984. 6. 2, 북한측이 LA올림픽 불참선언
4. 88서울올림픽 대회 개최관련 IOC 주제 로잔느 체육회담	○1차 (로잔느, 1985. 10. 8~9) ○2차 (로잔느, 1986. 1. 8~9) ○3차 (로잔느, 1986. 6. 10~11) ○4차 (로잔느, 1987. 7. 14~15) ※1988. 9. 2, 북한측이 서울올림픽 불참선언

그러나 그간의 남북체육회담을 되돌아볼 때 북한측이 순수한 체육회담마저 정치적 선전에 이용해 왔고, 회담진행 중에도 의도적으로 난관을 조성하는 등 사실상 회담진전을 기피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79년 2월의 남북한 탁구협회 회의나 1984년의 남북체육회담의 경우를 보더라도 북한측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시점에서 회담을 제기하거나 (남북한 탁구협회회의 :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대진표 추첨일 1개월전, 남북체육회담 : LA올림픽 엔트리마감일 2개월전) 대회 불참의 명분 확보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임시적 방편으로 남북체육회담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만약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남북간의 단일팀으로 참가하게 될 경우 우리 민족의 훌륭한 기량과 단합된 모습을 온 세계에 과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간의 광범위한 교류·협력의 길을 틔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화합을 도모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단일팀 구성은 선수선발 및 훈련 등 필연적으로 남북 체육인간의 교류가 수반되는 만큼, 회담성과와는 별도로 남북간의 체육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를 1년반 정도 앞두고 북한측이 남북체육회담 개최를 제의해 온 것은 내외정세의 추세와 거래의 흥망에 비추어 긍정적인 일이라 하겠다.

북한올림픽위원회 김유순 위원장은 1988년 12월 21일 김종하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1990년 9월 북경에서 열리는 제11회 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하자면서, 이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간에 1989년 2월 하순,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해 왔다.

이에 대해 김종하 KOC위원장은 1988년 12월 30일 대북서한을 통해 “남북한 단일팀 구성은 온 거래의 한결같은 염원이며, 우리측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입장” 이라고 지적하고, 남북체육회담을 갖자는 북측의 제의에 동의하는 한편, 쌍방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5명의 대표가 참가하는 회담을 3월 9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쌍방은 3월 7일 각각의 대표단 명단을 교환함으로써 「로잔느」 체육회담이후 2년 만에 다시 남북체육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남북체육회담 대표단 명단

구 분	우리측	북측
수석대표	장중식 (대한올림픽위원회부위원장)	김형진 (북한올림픽위원회부위원장)
대 표	이학래 (대한올림픽위원회상임위원)	장웅 (북한올림픽위원회서기장)
	임대순 (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	김세진 (북한올림픽위원회위원)
	장병조 (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	허혁필 (북한올림픽위원회위원)
	박수창 (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	김상부 (북한올림픽위원회위원)

나. 제1차 회담

제11회 북경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 위해 열린 제1차 남북체육회담은 3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시 10분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사실 우리측은 그간의 남북회담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측 태도에 한 가닥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남북단일팀 구성을 통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최대한의 신축성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였다.

또한 남과 북의 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사실 자체가 「남북한 화해와 협력시대」를 앞당기는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제11회 북경아시아 경기대회에의 남북단일팀 참가는 앞으로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 큰 의의를 두었다.

제1차 회담에서 쌍방은 각기 첫 발언문을 통해 단일팀 구성.참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바로 이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으며, 단일팀의 호칭, 단기, 단가, 선수선발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단일팀의 단가는 우리 민족의 민요인 1920년대의 「아리랑」으로 하고, 단기문제에 있어서도 흰색바탕에 우리 나라 지도를 그려 넣는다는데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쌍방은 선수선발에 있어 가장 우수한 선수를 뽑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선수단 호칭에 있어서는 우리측이 로마자 「KOREA」로 표기하고 우리말로는 북한측의 입장을 고려, 객관적 용어인 「남북단일팀」으로 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북한측은 우리말로 「고려」, 영문자로 「KORYO」로 할 것을 고수해 합의를 찾지 못했다.

북한측은 세계 각국과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정해 온 우리 민족의 영문표기인 「KOREA」를 한국측의 고유명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또한 단기에 들어가는 지도의 색깔도 우리측이 녹색을 제시한데 대해 북한측은 황토색을 주장해 완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남북간의 주요쟁점으로 될 선수선발.훈련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우수선수 선발원칙」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북한측은 「민족 화해와 단합」, 「남북간의 균형유지」를 내세워 남북간의 경기를 통한 선수선발전을 가능한 회피하고 선수단 구성에 있어 남북 동수선발의 입장을 견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1차 회담에서 쌍방 수석대표가 각기 첫 발언을 통해 제의한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일팀 구성에 대한 쌍방제안 비교

주요항목	우리측	북측
호칭	KOREA(남북단일팀)	KORYO(고려)
단기	흰색바탕에 「녹색」 한반도 지도와 그 아래 KOREA 표기	흰색바탕에 「황토색」 한반도 지도와 그 아래에 「청색 또는 적색」으로 KORYO 표기
단가	아리랑	아리랑(1920년대)
선수단 임원구성	선수선발 비율에 따라 결정	공동단장제
선수단 단복	전문가 자문을 얻어 결정	공동사무국에서 결정
선수선발	「先 선수선발, 後 공동훈련」 방식	「先 공동훈련, 後 선수선발」 방식
선수훈련	남북왕래	남북왕래
신변안전 보장	신변안전보장 각서 교환	신변안전보장 각서 교환
경비	참가는 선수비율, 훈련은 초청측에서 부담	참가는 공동부담, 훈련은 초청측에서 부담
추진기구 구성	공동위원회 구성 (산하에 공동사무국 설치)	공동사무국 설치

이번 회담에서 주목되는 점은 북한측이 최근 남북대화 때마다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온 「팀스피리트」 훈련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북한측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7차까지 진행된 남북국회회담준비접촉을 중단시킨 바 있으며,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공전시키고 우리측의 남북적십자.경제회담 재개 요구를 외면해 왔다.

북한측이 이처럼 「팀스피리트」 훈련문제를 거론치 않고 선수선발.훈련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이번 회담에 일견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낸 것은 남북대화를 정치선전 장으로 이용한다는 내외의 비난을 모면함과 아울러 북경아시아 경기대회에서의 한국의 부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내적 수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1차 회담을 통해 쌍방은 선수단의 단기, 단가, 그리고 신변안전보장, 경비, 공동기구 설치. 운영 등의 제반문제에 의견의 접근을 보였으며, 가장 어려운 문제로 예상된 선수선발 문제도 북한측이 기록 경기.체점경기에서 선발전을 명시하고 「우수선수 선발원칙」에 일단 동의해 나오는 등 상호 타협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성사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고 하겠다.

쌍방은 2차 회담을 3월 28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갖기로 합의하였다.

다. 제2차 회담

제2차 남북체육회담은 1989년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에 걸쳐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선수선발 및 훈련문제와 관련하여 1차 회담시 쌍방이 가장 우수한 선수를 선발하는데 의견이 일치되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측의 「공동훈련」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합동훈련→선발전→강화훈련방식의 절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단일팀 선수단 구성에 있어서도 북한의 입장을 고려 남북간에 균형을 현저하게 잃지 않도록 하자고 하였으며, 선수단 구성 시기를 1990년 6월 22일(예비 엔트리마감일)전까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전향적으로 대처하였다.

이날 장충식 수석대표가 첫 발언을 통해 새로이 제시한 선수선발 및 훈련,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절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수선발.훈련 및 선수단 구성문제와 관련한 우리측 절충안>

1. 선수선발

가. 전 종목에 대해 가장 우수한 선수를 선발한다.

나. 선수선발을 위해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선발전을 통해 대회에 참가할 선수를 선발한다.

다. 선발전은 각 종목별로 서울.평양 등 쌍방이 동의하는 남북의 지역에서 번갈아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어느 일방에 특정종목의 선수가 없거나 적합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측에서 선발한다.

마. 선수선발의 구체적 방법, 선발전 시기, 경기용 기구, 경기규칙, 심판선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남북단일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다.

2. 합동훈련

가. 합동훈련에 참가할 선수선발은 남북 각기 결정토록 하며 그 인원수는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정하게 될 경기참가 정원수 정도로 하되 종목별 특성에 따라 협의.조정할 수 있다.

나. 합동훈련 기간 중 참가선수는 교체할 수 있다.

다. 합동훈련은 1989년 10월부터 종목별로 시작한다.

라. 합동훈련은 남북의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상호 왕래하면서 실시하되 필요할 때에는 제3의 장

소.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마. 합동훈련 실시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남북단일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다.

3. 선수단 구성

가. 대회에 참가할 선수.임원 등 선수단의 구성은 예비신청 마감일인 1990년 6월 22일 전까지 완료한다.

나. 선수 및 임원구성은 OCA 현장 및 해당 국제경기연맹 규칙에 따른다.

다. 단장은 선발된 선수의 수가 많은 측에서 맡고 부단장은 선발된 선수의 수가 적은 측에서 맡는다.

라. 경기임원은 종목별로 선발된 선수의 수가 많은 측이 감독을, 적은 측이 코치를 맡도록 하며, 본부임원은 쌍방의 선수비율에 따라 구성하되 구체적 임원수는 쌍방 합의에 의해 정한다.

마. 대회에 참가할 선수단은 가능한 한 남북간에 균형을 현저하게 잃지 않도록 구성한다.

4. 강화훈련

가. 선수단이 구성된 때로부터 대회출전 시까지 강화훈련을 실시한다.

나. 강화훈련은 남북을 왕래하면서 실시한다.

다. 강화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북단일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다.

북한측 김형진 단장은 단일팀 구성방안에 관한 토의순서를 남북쌍방이 일치시키는 것이 좋겠다면서 1차 회담에서의 북한측 제안을 ① 단일팀 호칭 ② 단기 ③ 단가 ④ 선수선발방법 ⑤ 훈련 ⑥ 선수단구성 ⑦ 비용 ⑧ 신변안전보장 ⑨공동상설기구 설치 ⑩ 기타사항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이 회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쌍방의 의견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호칭, 단기문제 등은 일단 뒤로 미루고 선수선발과 선수단구성 등 해결이 용이한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 토의를 해나가자고 한데 대해 북한측은 처음부터 하나씩 합의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북한측은 단기문제와 관련, 우리 나라 지도색깔을 「하늘색」으로 하고 지도아래에 아무런 외래어 표기를 하지 말자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단일팀 명칭에 있어서 우리말로는 「고려」를 고수하면서도 영문표기는 1차 회담시 「KORYO」 대신 「KOREA」로 할 것에 동의해 나왔다.

그러나 북한측은 「고려」와 「KOREA」는 별도로 떼어서 합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그 같은 제의가 우선 「고려」라는 명칭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에서임을 드러냈다.

선수선발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전 종목에 걸쳐 선발전을 갖자고 하였으나 북한측은 그들이

상대적으로 우세할 것으로 예상한 기록종목.체점종목만 선발전을 갖고 구기종목.투기종목은 남북 간 협의의 방법으로 균형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선발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남북쌍방은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정원수 정도를 추천하여 합동훈련 후에 선발전을 갖는다는데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제2차 회담을 통해 쌍방이 제기한 단일팀 구성방안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쌍방의 절충안 비교

구분	우리측	북측
호칭	○우리말 : 남북단일팀 ○영문 : KOREA * 1차 회담시와 동일	○우리말 : 고려 ○영문 : KOREA
단기	○흰색바탕에 「황토색」 한반도 지도로 하되, 주변을 「녹색」	○흰색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
선수선발 방법	○합동훈련→선수선발전→강화훈련 * 1차 회담시 북측이 제시한 「공동훈련」을 「합동훈련」으로 수용	○공동훈련→선수선발전 ○기록종목, 체점종목, 맞붙어 승부를 가리는 종목으로 구분 * 1차 회담시와 동일
합동훈련 시기	○1989. 10	○1989. 9 * 1차 회담시와 동일
선수단 구성시기	○1990. 6. 22전까지 완료	○팀종목 : 1990. 5까지 ○개인종목 : 1990. 7까지 * 1차 회담시와 동일

2차 회담에서도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훈련 등 회담외적 문제를 언급치 않음으로써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었으며, 쌍방은 ① 단기에 명칭을 표기하지 않고 ② 합동훈련을 통해 선수를 선발하며 ③ 합동훈련에 참가할 선수 수는 남북 각기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정하게 될 경기참가 정원수 정도로 하되, 종목별 특성에 따라 협의.조정하고 ④ 1차 회담에서 북한측이 제기한 선수선발원칙은 구두로 합의하는 조건에서 삭제기로 한다는데 합의를 보았다.

제3차 회담은 4월 18일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갖기로 했다. 한편 회담이 끝난 후 장충식 수석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체육회담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측의 「고려」라는 호칭은 남북단일팀에 적용되는데 그치지 않고 남북간의 체육외적인 여타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3.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가. 경과개요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은 1988년 8월 19일 제1차 준비접촉이 시작된 이래 모두 6차례의 접촉이 진행되었으며, 그 동안의 접촉결과를 토대로 쌍방간의 합의사항과 주요쟁점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합의사항>

구분	합 의 내 용
회담형태	① 개회모임, 의제토의를 위한 모임, 폐회모임으로 진행 ② 개.폐회모임은 남북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합동회의로 함 ③ 의제토의모임 안에 집행부와 공동운영위원회 설치
회담장소 및 시기	① 개회모임은 준비접촉 종료 후 1개월내에 평양에서, 폐회모임은 의제토의모임 종료 후 1개월내에 서울에서 개최
회담운영	① 개.폐회모임은 공동의장제로 하되 주최측 의장이 사회를 함 ② 집행부의 의결방식은 합의제로 함
대 표 수	① 의제토의 모임은 쌍방 각기 50명으로 구성 ② 공동운영위원회는 각 5명으로 구성

<쟁점사항>

구분	남	북
회담형식	○ 의제토의를 위한 모임은 쌍무회담 형식인 「대표회담」으로 함.	○ 기본문제 토의를 위한 회의는 연좌형식인 「대표회의」로 함.
의결방식	○ 「대표회담」의 결정은 「만장일치제」로 함.	○ 「대표회의」의 의결은 「일치합의제」로 함. ※극소수가 반대하고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경우 합의로 인정
회담의제	① 남북적십자회담, 경제회담 재개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인적.물적교류와 협력문제 ② 남북불가침선언 문제 ③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 ② 남북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 ※남북적십자 회담, 경제회담 명시 거부

이렇게 볼 때 남북쌍방이 상호현실 인정과 존중 그리고 불간섭의 정신아래 타협하고 양보한다면 남북국회회담이 성사될 단계에 와 있었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제7차 준비접촉에 거는 내외의 기대는 매우 컸다고 하겠다.

제7차 준비접촉은 제6차 접촉시 합의에 따라 1988년 12월 15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우리측의 박준규 수석대표와 이한동 대표의 신상변동에 따라 일자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8년 12월 13일 김재순 국회의장은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양형섭 의장에게 보내는 대북전통문을 통해 우리측 대표단의 사정으로 제7차 접촉을 연기하게 되었음을 통보하면서, 12월 29일 또는 그 이후 북한측이 지정하는 날짜에 회담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이 12월 29일에 개최기로 하는데 동의해 나왔으며, 우리측은 12월 26일 우리측 대표단 교체내용을 북한측에 통보했다.

새로이 구성된 우리측 대표단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석대표>

채문식 (민주정의당)

<대 표>

김현욱 (민주정의당)

김봉호 (평화민주당)

박관용 (통일민주당)

김용환 (신민주공화당)

나. 제7차 준비접촉

제7차 준비접촉은 1988년 1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에 걸쳐 판문점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되었다.

첫 발언에 나선 북측 전금철 단장은 6차 접촉시까지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한 것은 성과가 크다고 전제하면서도, 돌연 발언시간의 2/3를 할애하면서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문제를 비난하는 한편 이 문제를 제1의제로 토의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회담의 성사를 바라는 내외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전 단장은 또 의제토의를 위한 회담형식을 연석회의 방식인 「대표회의」로 해야 하며 의제문제에 있어서도 군축과 외국군대의 단계적 철수문제를 더 포함시켜서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발표문제」로 하자고 해 종래의 주장에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북한측이 첫 발언에서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문제」를 남북국회회담의 첫 의제로 하자고 새롭게 제의한 것은 “팀스피리트 훈련문제가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대화를 가로막는 당면한 최대요인”이라고 강변.선전함으로써 우리 내부의 통일논의 개방화 추세에 편승하여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여론을 확산시켜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결국 주한미군철수와 반미.반핵 분위기 조장을 노린 것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 우리측 채문식 수석대표는 지난 6차접촉에 이르기까지 남북 쌍방간에 합의하였거나 의견접근을 본 사항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 준비접촉을 조속히 매듭짓자고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채문식 수석대표는 첫 발언을 통해 의제문제에 있어 6차회담시 우리측이 「불가침문제」를 「불가침선언문제」로 수정 제의한데 이어 또다시 북한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다각적인」이라는 용어를 원용, 우리측이 제의한 의제 ①항을 「남북적십자회담.남북경제회담의 재개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문제」로 하자고 수정 제의하였다.

쌍방간의 논쟁점으로 남아 있는 「의제토의를 위한 모임」의 성격에 대하여 채문식 수석대표는 남북국회회담에서 쌍방이 토의하고자 하는 의제들이 사실상 남과 북사이에 협의.해결해야 하는 쌍무적 내용이며, 의제토의 모임에 참가하는 각 50명씩의 대표들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회와 북한최고인민회의의 위임에 의한 대표들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대표권을 갖는 연석회의 방식인 「대표회의」보다는 쌍무회담 형식인 「대표회담」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현실적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또 100명이 모이는 「의제토의를 위한 모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회담」의 위임에 의해 쌍방 각 5명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집행부」에서 의견차이를 협의.조정하며 쌍방합의에 따라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면 이를 「대표회담」에서 확인.통과시키자고 하였다.

한편 채 수석대표는 회담운영과 관련하여 상호 현실인정과 존중, 상호불간섭 및 의사진행상의 상호 형평성 적용 등 「상호주의」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회담의 원만한 진행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측이 제시한 남북국회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안은 다음과 같다.

남북국회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안)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은 1988년 8월 19일부터 1988년 12월 29일 사이에 판문점의 평화의 집과 통일각에서 도합 일곱 차례에 걸쳐 남북국회회담

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접촉을 갖고 남북국회회담의 개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의제 및 회담형식

가. 남북국회회담의 의제는 다음의 3개항으로 한다.

- ① 남북적십자회담.남북경제회담의 재개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 문제
- ② 남북불가침선언 문제
- ③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

나. 남북국회회담은 「개회모임」,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이하 「대표회담」이라 함), 「폐회모임」순으로 진행한다.

다. 「개회모임」과 「폐회모임」은 남북의 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합동회의 형식으로 한다.

라. 「대표회담」은 쌍방에서 각기 50명의 대표가 참가하는 쌍무회담 형식으로 하며, 쌍방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되는 「집행부」와 쌍방 각기 5명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운영위원회」를 둔다.

2. 회담운영 절차

가. 남북국회회담은 상호 존중과 불간섭, 상호 형평의 원칙 등에 따라 상호주의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개회모임」은 판문점 준비접촉 종료 후 1개월 내에 평양에서 개최한다.

다. 「개회모임」에서는 준비접촉에서 쌍방이 합의한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의제토의를 위해 각기 선정한 대표를 소개하며 쌍방 국회의장의 개회연설과 각 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축하연설을 교환한다.

라. 「대표회담」은 「개회모임」이후 1개월 내에 서울에서 제1차 회담을 개최하고 그 후 1개월 내에 평양에서 제2차 회담을 개최하며 제3차 회담부터는 1개월을 주기로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한다.

마. 「대표회담」은 쌍방 합의제로 운영하며 표결은 하지 않는다.

바. 「집행부」는 「대표회담」의 위임에 의해 「대표회담」에서 제기되는 의견차이를 협의.조정하고 쌍방 합의에 따라 「공동합의문」초안을 작성한다.

사. 「집행부」에서 작성한 「공동합의문」은 「대표회담」에서 확인.채택한다.

아. 「공동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 작성 등 회담운영과 관련된 실무문제를 다룬다.

자. 「폐회모임」은 「대표회담」종료 후 1개월 내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차. 「폐회모임」에서는 「대표회담」에서 합의.채택된 「공동합의문」을 확인.공표하며 쌍방 국회의장의 폐회연설과 각 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축하연설을 교환한다.

3. 기타 진행절차

가. 「개회모임」과 「폐회모임」은 공동의장제로 하고 사회는 번갈아 한다.

나. 「대표회담」과 「집행부」는 쌍방 수석대표가 회담을 공동주재하고 「공동운영위원회」는 쌍방 수석대표가 지명하는 대표가 공동주재한다.

다. 「개.폐회모임」과 「대표회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집행부」와 「공동운영위원회」의 회담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라.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남북왕래에 있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보장한다.

마. 「개회모임」, 「대표회담」, 「폐회모임」의 상대측 체류기간은 4박5일로 한다.

바. 「개회모임」, 「대표회담」, 「폐회모임」에 참가하기 위해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대표단은 150명 내외의 지원인원과 200명 내외의 기자를 동행토록 한다.

사. 남북왕래절차, 신변안전보장, 판문점 통과절차, 체류 및 회담일정, 표지, 장비 및 소지품, 교통, 통신 및 연락, 회담장외 활동, 각종 편의제공 및 기타 제반 실무절차문제 등에 대해서는 과거 남북왕래의 선례를 준용하되 이에 따른 구체적 문제는 쌍방에서 실무대표 1명씩을 선정하여 협의.결정토록 한다.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군사훈련문제를 남북국회회담의 첫 번째 의제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측은 남북국회회담의 성사를 위한 노력이 열매를 거두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회담과 전혀 무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회담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팀스피리트」 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서 북한측에 대해 참관 초청까지 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현재 남북당국간에 군사적 신뢰구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개최 준비중에 있는 만큼 회담형식과 의제문제 등 본질문제를 토의함으로써 준비접촉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자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측의 이같은 요구를 끝내 외면한 채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문제만을 되풀이 주장함으로써 회담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쌍방은 제8차 준비접촉을 1989년 2월 10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갖기로 합의하였다.

다. 북한측의 회담중단

북한은 2월 8일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2월 10일 개최기로 합의한 제8차 준비접촉을 「팀스피리트」 훈련이 끝난 이후로 연기할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북한측은 이날 개최된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에서도 회담성사의 전제조건으로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들고 나왔는데 또다시 예비회담이 끝난지 3시간만에 발표한 이 성명에서 우리측이 “말로는 대화와 완화를 떠들어 대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대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8차 준비접촉이 예정대로 열리지 못하게 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였다.

이같이 북한측이 합의된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부당한 태도는 과거에도 여러 번 되풀이해 온 사실로서, 남북국회회담의 조속한 성사에 뜻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측의 일방적인 회담연기.중단 사례

사 례 별	비 고
○ 제2차 남북경제회담(1984.11.28 예정)	판문점 총격사건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면서 연기
○ 제2차 남북경제회담(1985.1.17 예정)및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1985. 1.23 예정)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연기
○ 제6차 남북경제회담(1986. 1.22 예정), 제3차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1986.2.18 예정)및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1986. 2.25-28 예정)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일방적으로 중단(현재까지 미재개)

여섯 차례에 걸친 준비접촉에서 남북쌍방이 회담의 형태,시기,장소 및 대표수에서 일부 합의를 보았고 단지 회담형식과 의제에 있어서만 이견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제7차 접촉시 북한측은 돌연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문제」를 제1의제로 토의하자고 주장하여 회담의 진전에 난관을 조성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측은 「팀스피리트」 훈련이 이미 예견된 상태에서 북한측이 8차 준비접촉의 개최일자에 합의해 온 것으로 미루어 쌍방 합의와 양보를 통해 본회담을 성사시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북한측의 성실한 대화자세를 기대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삼아 쌍방간의 초보적인 합의사항마저 무시한 처사는 대화부진과 한반도 긴장조성의 책임을 한.미측에 떠넘기면서 우리 내부의 분열을 기도하려는 불순한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이같은 북한측의 부당한 태도에 대해 우리측 대표단의 채문식 수석대표는 2월 9일 성명을 발표, 북한측의 일방적 연기선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측이 진정으로 남북국회회담의 실현과 민

죽의 화합과 통일을 원한다면 「팀스피리트」 훈련문제를 앞세워 이미 쌍방간에 합의된 준비접촉을 연기함으로써 거래를 실패시키려하지 말고 하루속히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우리측 수석대표 성명

그동안 일곱 차례의 준비접촉 과정에서 본회담의 형식과 의제문제 등에 관해 북측의 주장까지도 고려한 절충안을 여러 차례 제시하는 등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 왔다.

그런데 북한측은 어제 성명을 통해 팀스피리트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되는 조건에서는 국회 회담 준비접촉을 가질 수 없다면서 오는 10일로 예정된 제8차 준비접촉을 팀스피리트 훈련이 끝난 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는 남북국회회담을 비롯한 제반 남북대화의 진전과 결실을 바라는 온 거래와 더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회회담 준비접촉은 그 동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던 본회담 형식과 의제문제를 조금만 더 토의하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측이 지금까지 의제토의에서 전혀 거론치 않았던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와 의제 제1항으로 넣자고 주장하면서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았으며 마침내는 예정된 준비접촉마저 연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북한측이 지난 1986년 1월,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1985년 7월부터 진행되어오던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의 연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올바른 대화자세라고 볼 수 없다.

사실 우리측은 팀스피리트 훈련 때마다 북한에 이를 사전 통보하고 참관토록 초청함으로써 동 훈련이 공개적이며 방어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연례적인 훈련임을 명백히 해 오고 있다.

이는 북한측이 외국군과의 합동훈련 등 비공개리에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더우기 북한이 우리측의 군사훈련 중지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상호주의의 입장에서 어긋나는 일이다.

또한 과거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훈련과 북한측의 군사훈련이 실시된 기간에도 대화가 계속 되었다는 사실은 군사훈련과 남북대화가 직접 관련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쌍방간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북한측이 진정으로 남북국회회담의 실현과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원한다면 팀스피리트 훈련문제를 앞세워 이미 쌍방간에 합의된 준비접촉을 연기함으로써 거래를 실패시키려 하지 말고 하루속히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

채문식 수석대표도 강조한 바와 같이 「팀스피리트」 훈련은 1976년부터 연례적으로 방어를 목적으로 진행되어온 평화유지 훈련이며, 그 규모와 일시,지역 등이 모두 공개되어 실시되는 방어적, 공개적인 훈련이다.

남북한간에 과거 「팀스피리트」 훈련과 관계없이 여러 차례 회담을 진행시켜온 사례가 있으며, 우리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시마다 북한측에 대해 정식으로 이를 통보하고 참관 초청까지 해 왔던 사실에서 이 훈련의 성격은 입증될 수 있다.

또한 「팀스피리트」 훈련은 북한측의 위협에 대처하여 공동으로 군사 훈련을 하는 우리 내부의 자위권 문제이며 한.미간의 문제로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면 세계 어느 나라이건 훈련

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한반도 긴장고조의 근원이 마치 우리측의 군사훈련에 있는 듯이 선전하는 북한측은 그들이 실시하고 있는 군사연습의 성격과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북한측의 병력규모는 1976년의 43만명 수준에서 최근에는 100만명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휴전선 일대에 병력을 집중 전진 배치해 놓는가 하면 10만명의 특수부대를 양성하는 등 우리측에 대한 군사위협을 가중시켜 왔다.

또한 연대급·사단급의 군사훈련 및 육·해·공 합동군사훈련, 그리고 소련과 동해상에서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측에 통보해온 사실이 없으며 공개적으로 발표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북한측의 공격적 자세가 바로 우리의 방어적 군사훈련을 불가피하게 하는 이유이며,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를 주장하는 것은 상호주의 정신에 비추어 봐도 어긋나는 일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남북간의 긴장상태는 북한측의 주장처럼 우리측의 군사훈련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40여년간 누적된 상호 불신과 적대관계의 결과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남북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에 신의를 지키고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며, 그것은 쌍방간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본다. 이미 「팀스피리트」 훈련을 예견한 가운데 8차 준비접촉일자에 합의해 놓고도 회담목전에서 일방적으로 이를 연기하는 북한측의 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Ⅲ 남북대화 관련동향

1. 「남북대학생 교류회담」 제의

가. 제의내용과 취지

「남북대학생 교류추진위원회」의 정용석 위원장은 1989년 3월 13일 북한측의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 최룡해 위원장 및 「조선학생위원회」 김창룡 위원장에게 보내는 대북서한을 통해 북한측이 초청의사를 밝힌 우리 대학생들의 평양 세계 청년학생축전 참가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대학생교류회담』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정용석 위원장의 제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 의 요 지>

본 위원회는 남북대학생의 상호교류를 통해 통일세대의 주역이 될 남북의 젊은대학생들에게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과 신뢰감을 회복시켜 주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겨레의 염원인 통일의 날을 앞당겨 나가려는 목적으로 발족한 순수 민간기구임.

본 위원회는 귀측이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우리측 대학생들의 참가를 초청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에 따른 제반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를 비롯한 남북대학생 교류문제와 관련하여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전국민족운동대학생총연합] 등 우리측 대학생단체들의 서신과 성명서가 접수되어 있음.

본 위원회는 우리측 대학생들의 요청을 심의하고 남북대학생 교류회담을 제의하는 바임.

.회담일자 : 3월말-4월초 사이에 북한측이 희망하는 일자

.회담장소 :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

.대표단구성 : 쌍방 각기 7명으로 구성(학생대표 3명, 위원회대표 4명)

.회담의제 :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문제를 포함하여 쌍방이 주최하는 주요 학생행사 참가문제, 남북대학생 조국순례대행진 추진문제, 남북대학생 친선체육경기대회 교환개최문제 등 남북대학생 교류문제

남북한간에 쌓인 불신과 오해의 장벽을 헐고 상호이해를 통해 민족화해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활발한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떠한 남북대화도 교류도 남북관계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한 바탕 위에 남북간 신뢰증진과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더구나 신변보장과 편의제공문제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남북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남북간의 대화와 접촉은 사전 정부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필요로 한다.

[전대협]은 1988년 12월 북한측이 평양에서 개최예정인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선별 초청해 오자 이를 환영한데 이어 정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남북학생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북한측에 공개 제

의하고 이의 추진을 강행해 왔다.

사실 [세계청년학생축전]은 공산권 및 사회주의 청년.학생단체가 참가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전위역할을 다짐하는 정치성 짙은 행사이다.

특히 [전대협]은 순수한 학생신분을 벗어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등 정치.군사문제까지도 논의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와 같이 북한을 상대로 중구난방식으로 대화와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7.7선언]의 진정한 뜻에 부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정부는 어떻게든 남북대학생간의 교류를 실현함으로써 통일세대의 주역들에게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과 신뢰감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남북대학생 교류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우리 대학생의 [세계청년학생축전]참가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왔다.

[교류추진위]의 이번 제의는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성격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남북대학생 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화해와 교류시대를 앞당기겠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이번 제의가 [전대협]의 주장까지도 수용하고 그 실현을 보장하는데 뜻이 있는 만큼, [전대협]은 [세계청년학생축전]참가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교류추진위]와 협의,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제의 배경

정원식 문교부장관은 1989년 1월 12일 남북학생 교류문제를 전향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대 학생스포츠위원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관련 단체와 학생단체들이 포함되는 민간차원의 협의기구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같이 남북학생교류의 추진을 민간단체로 전환시킨 것은 남북학생교류에 대한 학생과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을 교류에 참여시키고 관련 당사자인 교육단체와 학생 단체를 직접 대화에 임하게 함으로써 남북간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월 27일 [남북교수.학생교류추진협의회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남북대학생 교류추진위원회]가 발족하였으며, [남북학생 조국순례대행진]과 [남북학생 친선체육경기대회 교환개최]는 물론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포함하여 남북한 쌍방이 주최하는 주요학생 행사에 참가하는 문제]와 기타 정기적인 남북학생교류문제 등을 전담 추진케 되었다.

아울러 동[교류추진위]에서는 남북대학생 교류문제를 전향적으로 추진키 위해 우선 금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우리 대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문제를 비롯하여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전대협)]와 [전국민족운동대학생 총연합]등 대학생 단체의 여러 가지 제안을 가급적 실현시키는 방향에서 검토해 왔다.

한편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의 참가문제는 1988년 12월 26일 북한의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가 공동 명의로 우리측의 [전대협]앞으로 초청 서한을 보낸데 이어 [전대협]이 이 초청을 수락하는 내용의 답신을 1989년 1월 20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 요청함으로써 시발되었다.

북한측은 초청편지에서 "최근 [전대협]이 평양축전에 참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를 열렬히 지지.환영"한다면서 "1989.7 평양에서 열리게 되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반제 연대성, 평화와 친선]을 지향하며 외세의 간섭없이 나라의 통일을 갈망하는 남녘의 애국적 청년학생들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측은 초청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각 9-11명으로 구성되는 [남북학생회담]을 1989년 3월 초순경에 관문점에서 갖자고 제의하였다.

북한은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의식하여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 주민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등 무리한 행사준비를 해 왔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내 통일전선을 구축할 목적으로 정치선전을 가열화하고 있다.

북한이 [전대협]을 초청 대상으로 삼은 것도 그들 스스로 "이번 축전은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을 크게 고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전대협]을 대남비방의 선전장에 끌어들여 우리 내부의 갈등과 국론분열을 심화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고 하겠다.

아울러 1988년의 남북학생회담(6.10, 8.15)의 상황을 재연시킴으로써 정국혼란을 조장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대협]측의 답신은 1989년 2월 24일 [남북대학생 교류추진위원회]에 의해 북한측에 전달되었다.

정용석 위원장은 "순수 민간기구인 [남북대학생 교류추진위원회]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문제를 첫 번째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남북대학생들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추진하려는 뜻에서 [전대협]의 서신을 전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고, 이번 서신 전달이 "남북의 청년학생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교류추진위]의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대협]은 [교류추진위]와의 협의를 거부하였으며, 2월 13일 임시의장 임종석의 발표를 통해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와 관련한 내용.추진 방법 등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을 선언하였다.

또한 2월 23일 [전대협]은 독자적인 준비위원회를 구성,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기로 하는 한편, 쌍방 각기 11명으로 구성되는 [남북학생실무회담]을 3월 16일 판문점에서 개최, ▲남북한 청년학생 공동의 학술.문화.예술행사 개최문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한 청년학생의 [공동선언문]채택 문제 ▲남북청년학생 체육대회 교환개최 문제 ▲[전대협]의 축전 참가방식 및 기타 필요안건 등을 협의하자고 북한측에 공개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대변인은 2월 28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측과 접촉하고자 하는 어떠한 활동도 불용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다. [전대협]과 북한측의 반응

우리측 순수민간단체인 [남북대학생 교류추진위원회]가 2월 24일 보낸 서한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던 북한측은 [남북대학생 교류회담] 제의에 대하여 3월 15일 사실상 이를 거부하는 전화 통지문을 보내왔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 조선준비위원회]의 최룡해 위원장과 [조선학생위원회]의 김창룡 위원장 공동명의로 [교류추진위]의 정용석위원장에게 보내온 전화통지문에서 북한측은 3월 16일 [전대협]과의 [남북학생 실무회담]을 예정대로 하는 조건에서 [남북대학생 교류회담]을 3월말이나 4월초에 갖자고 제의하였다.

동 전통문에서 북한측은 "[교류추진위]가 [전대협]의 의사를 대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전대협]과의 회담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남북대학생 교류회담]도 할 수 없다고 고집하였다.

이는 북한측이 실질적으로 우리측 [교류추진위]의 권능을 부정하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서, "축전 참가문제는 [축전준비위]로부터 초청받은 당사자인 [전대협]이 결정할 문제"(2.15노동신문논평)라고 주장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전대협]앞으로 보내온 또 다른 전통문에서는 [남북학생 실무회담]에 동의하며 북한측 학생대표단 11명의 명단을 통보해줌으로써 [전대협]만 대화의 상대로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였다.

한편 [전대협]측은 자체내 투쟁방향의 전환에 따라 3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학생실무회담을 4월 중순 이후로 연기하며 일정은 추후 북측에 서신으로 통보하겠다"고 밝혀 3월 16일 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전대협]은 4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또 다시 4월 28일 [남북학생실무회담]을 갖자고 북한측에 공개 제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측은 4월 22일 조선학생위원회 명의로 전화통지문을 보내와 회담개최에 동의함과 아울러 북측대표 11명을 보내겠다고 통보해 왔으며, 또 [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가 4월 25일 우리측 인사들에게 보낼 편지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동 서한은 대한적십자사가 남북간에 불필요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정치적 논쟁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 편지는 접수치 않기로 한 방침 (1989.4.24)에 따라 접수되지 않았다.

북한측이 진정으로 남북대학생 교류에 관심이 있고 그들의 청년학생축전에 우리 대학생들을 초청할 의사가 있다면 [남북대학생 교류회담]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일부 특정단체만을 상대로 대화와 접촉을 하겠다는 것은 [전민련], [전노협], [민족작가회의] 등의 경우에서와 같이 우리 학생들을 정치공작차원에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성격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소련 공산당의 전위조직인 [세계민주청년연맹]과 [국제학생연맹]이 공동 주관하는 국제적인 [반제투쟁행사]로서, 북한도 이의 개최목적은 "사회주의나라 청년학생들과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 진보적 청년학생들의 단결된 역량을 시위하며 친선을 도모"(북한발행 백과전서, 1983년판, P.102)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동[축전]은 1947년 체코의 프라하에서 시작된 이래 2-7년을 주기로 부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는데, 공산권과 제3세계 및 서방권 일부 좌경학생단체가 참가, 정치토론회.예술공연.체육경기.전람회 등을 진행하며, 1973년 제10차 [축전]부터는 정치행사에 치중하고 있다.

참가자는 학생은 물론 노동자, 농민에서부터 군인, 예술인, 체육인 등 다양하게 구성되며, 각 부문별로 금.은.동메달을 수여하기는 하지만 경기나 경쟁을 통한 스포츠.문화행사보다는 사회주의 단체들의 친선을 도모하고 사회주의적 혁명의 연대성을 고취시키려는 정치성이 짙은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19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우리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견제하고 주한미군철수, 군비축소, [팀스피리트]훈련중지 등 한반도문제와 관련한 최대의 정치선전장을 마련하기 위해 출혈을 감수하며 [평양축전]의 유치 및 행사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축전을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온 세계에 널리 시위하게 된다"면서 세계진보적 청년학생들의 [대정치회합]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올림픽이 북한의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중.소를 비롯 동구 공산권국가들마저 대거 참가하여 사상 최다국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치뤄진데 자극 받아 [아시아에서 최초] [조선인민의 최대경사] [올림픽에 버금가는 행사]등으로 강변하면서 총동원 체제로 돌입, 인적.물적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평양축전]이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의 경제적 위력을 보여주는 계기로서 "두개의 한국 조작 책동을 짓부수고 통일을 위한 지름길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반미.반정부 투쟁을 적극 고무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예비행사격인 [민족대축전]행사(1988.11.5-1989.4.30)를 통해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대학생 집회"등을 공공연히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남모략.비방의 정치선전을 전개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평양축전]의 의의에 대한 중앙방송(1988.9.23)의 해설을 통해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연공, 연복의 구호를 높이 들고 남북접촉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는 등 "남조선의 반미 자주적 통일기운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 "축전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공화국 북반부에 마련된 경제적 위력과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더욱 똑똑히 알려줄 수 있으며 조국통일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해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의 [전대협]초청이 우리 사회 일부의 극좌경화 움직임과 반미운동을 더욱 부채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라 하겠다.

2. 북한측의 [남북정치협상회의]제의

가. 제의내용 및 평가

북한의 김일성은 1989년도 신년사(1.1)를 통해 최근 우리 사회내에 연방제에 대한 지지가 팽배하고 있다면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기 위해 남북정치협상회의를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김일성의 신년사 중 관련 부분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의요지>

오늘 남한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집체적 운동으로 전환되고, 대중적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연방제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음.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우리 나라의 현실적 조건에서 조국통일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임.

연방제 통일방식을 협의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평양에서 남과 북의 각당, 각과, 각계각층의 지도급인사들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가질 것을 제의하며, 이를 위하여 민정당, 평민당, 민주당, 공화당 총재들과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백기완 선생을 초청함.

정치협상회의의 테두리 안에서 남과 북의 지도급 인사들은 다무적인 회담 뿐 아니라 쌍무적인 대화도 나눌 수 있을 것임. 남한의 지도급 인사들이 건설적인 통일방안을 가지고 평양을 방문한다면 환영할 것임.

이와 같이 김일성이 우리측의 4당총재 및 개별인사 3명을 지명.초청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등 실질적 대화진전에 대한 대내외 압력을 완화하면서도 그들의 기존 대화입장인 연석회의방식과 군사문제 토의만을 고수하겠다는 의도에서라고 하겠다.

김일성의 [남북정치협상회의]제의는 1948년 4월 [전 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개최를 제기한 이래 형태와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장해 온 남북연석회의의 또 다른 변형에 불과할 뿐이다.

북한측의 남북연석회의 주장사례

년도별	주장내용	비고
1950.6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자 협의회	6.25은폐 4.19이후 혼란이용
1960년초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협의회	
1973.1	전민족대회	
1973.6	대민족회의	
1982.2	남북정치인 100인 연합회의	
1983.1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1988.1	남북연석회의	

남북연석회의는 본질적으로 비당국이 회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른바 연좌식 협상을 통해 문제의 해결보다는 우리의 국론 분열을 조장시키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남북지도급인사 정치협상회의 제의도 노태우 대통령의 정상자격을 외면하고 4당총재의 한사람으로서만 포함시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비당국 주도회의를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남

북연석회의 논리를 되풀이 한 것이라 하겠다.

단지 협상대상면에서 종래 정당·단체·개별인사 등 다수인사를 지명(50-100명)한데 비해 7명의 [지도급인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협상내용면에서 연방제 통일방안 협의로 국한시켜 국내 일부계층의 연방제 통일논의를 충돌하려는 기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협상방식에 있어서 쌍무적·다무적 대화를 동시 진행할 것임을 밝혀, 김일성과 우리측 초청인사의 개별접촉을 뜻하는 [쌍무적]대화를 통해 우리 정치권의 분열 유도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음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번 제의는 한마디로 통일문제에 대한 4당간 이견 및 마찰을 유발하고 재야세력의 적극 개입을 유도하는 등 통일문제를 둘러싼 우리 정국의 혼란을 획책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의 대통령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협상대상중 한사람으로 격을 낮춤으로써 우리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려 하는 한편, 재야인사를 4당총재와 동격으로 지명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재야세력의 영향력을 제고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김일성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을 최선의 통일방도라고 주장하는 한편, 연방제 통일방식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주장한 것은 상대방을 무시한 일방적 제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평화통일의 방안은 민족의 생존과 장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남북한 쌍방이 다같이 받아들여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쌍방이 각기 구상하는 통일방안을 제시, 상호협의를 절충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제도화 및 통일을 위한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합의를 구축한 후에 민족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바탕으로 통일추진기구 구성과 구체적 절차 등을 마련해 나가야 하며 몇몇 개별적 인사들이 모여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제의한 통일방안을 놓고 논의·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김일성이 제의한 남북정치협상회의는 우리 내부에서 그들의 통일전선구축 전략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한 동시다발적 대화공세의 일환일 뿐이다.

이러한 김일성의 제의에 대해 우리측 여야는 일치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정치협상회의 제의에 대한 각당의 반응>

- 민정 : "정부 주도의 일관된 정책추진을 좌절시키고 국론분열을 유도하는 책략임"
- 평민 :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음. 대상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등 국제관례를 무시"
- 민주 : "정상회담 저지 및 4당 정국의 균열과 혼란을 유도"
- 공화 :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지나친 환상을 가지면 안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 구태의연한 제의"

그러나 김일성의 제의에 대해 4당총재가 즉각 거부하고 김수환 추기경이 묵살한 것과는 달리 문익환.백기완씨가 동의하게 됨에 따라 북한측은 1989년 1월 30일 「남북지도급인사 정치협상회의」 준비위원장 허담 명의로 4당총재 및 개별인사에 대해 각기 조금씩 내용을 달리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허담의 대남편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당 총재 앞 편지 >

김일성이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음.

오래전부터 평양방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음.

남한에서 연방제가 큰 공감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으며, 정치협상 제의를 다시 한번 심중히 연구하고 긍정적 호응을 보일 것을 기대함.

<김수환 추기경 앞 편지 >

김일성이 귀하를 평양에 초청하였음.

여러 인사들이 정치협상회의 소집 제안에 환영의 뜻을 표해 그 전도를 낙관함.

정치협상회의가 하루빨리 소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함.

여러 지도급 인사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한다면 귀중한 대표로서 열렬히 환영할 것임.

<문익환.백기완 앞 편지>

※김수환 추기경앞 편지내용과 대동소이하며, 다음 사항 추가

우리의 새로운 협상제의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준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귀하의 용단에 경의를 표함.

이러한 허담의 대남서한은 특별히 김일성이 제의한 남한정치협상회의를 지지하고 나선 문익환.백기완 2인을 주요대상으로 하면서 이들의 입지를 부상시키고 국론분열을 피하는 한편 우리 내부의 반미.반정부투쟁을 가열화시키려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겠다.

나. 문익환씨의 불법입북 문제

김일성이 「남북정치협상회의」의 제의를 통해 정부 당국자를 배제하고 정당 대표 및 개별인사와의 일방적 회담을 강변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내부의 반체제.반정부 세력과의 통일전선을 구축해 나가려는 대남선전.선동의 일환이다.

이는 김일성이 이번 제의에서 고려연방제 방식의 통일방안 논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다가 우리측의 협상대상자들을 김일성 자신이 일방적으로 지명 초청했다는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북한측의 숨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소위 정치협상회의의 초청 대상자중 한사람인 문익환씨가 3월 25일 은밀히 입북하여 정부의 통일정책과 배치되는 통일방안을 북한당국과 협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국가행위를 자행하였다.

어느 국가나 대외정책에 관한한 정부가 수행하도록 독점적으로 그 권능과 권한이 부여되고 있어 우리 헌법에도 대통령이 통일문제에 관한 책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통일정책의 추진주체는 당연히 정부인 것이다.

따라서 민간단체나 개별인사가 정부를 제쳐놓고 임의대로 북한과 접촉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북한의 대남공작을 도움으로써 그만큼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게 된다.

한편 문익환씨의 입북은 개별적 민간교류가 아니라 북한측의 정치공작과 주선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그것은 북한측이 문씨에 대해 특별기를 제공하고 체류기간중 김일성이 직접 만나는 등 온갖 환대를 했는가하면 북경에서의 기자회견을 주선해 주었고, 또 소위 「공동성명」의 북측 당사자가 노동당의 대남공작 핵심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북회담에서 북측 전략전술을 사실상 이끌어가는 집행기관이며 소속 간부들이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남북체육회담』, 『범민족대회 실무대표접촉』 등 각종회담에서 북측대표단으로 활약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문익환씨의 입북과 때를 맞추어 「조선노동당」 등 24개 정당.사회단체들이 3월 27일 「남북대화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연합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 성명에서 남북대화는 쌍방 당국과 민간급간에 동시에 진행하되 민간급의 자율적인 대화제의를 장려하고 받아들이며 "남한과 해외의 개별적 인사들이 민족공동의 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해 아무때나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당국간 대화 및 우리측의 「대화창구일원화」 방침을 무실화 시키고 이에 따라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한편, 문익환씨의 불법입북을 정당화하고 우리측 반체제인사들의 「개별적 평양방문」을 유인함으로써 제2, 제3의 문익환을 만들어 보겠다는 통일전선식 술책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이같이 「통일」이란 구호를 앞세워 정치공작을 펴고 있는데 대해 이흥구 국토통일원장관은 3월 29일 대북성명을 발표, "최근 북한이 정치협상회의라는 이름하에 우리 재야인사를 북한에 불러들여 그들과 통일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 정부의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통일논의 개방의 참뜻을 왜곡하여 우리 사회의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특히 이흥구 장관은 이 성명에서 "북한의 고위당국자가 공공연하게 우리의 재야인사들을 접촉하여 당국간의 교섭을 우회하려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고 평화통일의 전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우리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과 성의를 오히려 대남정치공작적 차원에서 계속 대응해 온다면 이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더욱 악의에 찬 비방과 함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불법 입북자인 문익환씨를 사법처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을 해오는 등 우리 내부문제를 간섭하기까지 했다.

4월 2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허담이 문익환씨와 「공동성명」을 발표, 그들이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방안, 「팀스피리트」 훈련중지, 대화창구 일원화 배격 등이 앞으로 남북간 공식대화에서 협의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면서 남북당국과 제정당, 단체에게 그 실천대책을 촉구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자행했다.

우리 정부는 4월 3일 「공동성명」 내용은 북한의 일관된 통일전선전술 노선을 되풀이 한 것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명백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재야인사를 대남정치공작에 이용한 또 하나의 무례한 망동”이라고 논평하고, “북한측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공동성명」을 빌어 남북한간 현안 해결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우리 정부당국을 배제하고 우리 사회내 일부 동조세력을 부추겨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기도하고 있는데 대해 온 국민과 더불어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당국이 불순한 대남책략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족적 양심으로 돌아와 평화와 통일의 길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북한이 이같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계속 자행한다면 남북관계 전반에 중대한 국면이 초래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해 둔다”고 경고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은 '7.7특별선언'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성의를 대남정치공작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었으며, 이는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가 통일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 체제내의 자중지란을 노린 선전용임을 스스로 실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3. 북한측의 「범민족대회」 실무대표 접촉제의

가. 제의내용 및 추진경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988년 12월 9일 「범민족대회 추진본부」앞으로 공개서한을 내고 「범민족대회」의 소집 제안을 적극 지지환영하며, 이의 준비를 위해 남과 북, 해외교포 실무대표들의 예비접촉을 시급히 가지자고 제의해 왔다.

북한측은 동 서한에서 "범민족대회가 소집되어 반전.반핵.평화운동에 온 겨레가 마음을 합치게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실현에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 놓게 될 것"이라며, "범민족대회 소집 구상은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포괄적 평화방안 제의 등 북한측의 노력과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범민족대회」는 남북사회단체들과 해외교포단체들의 대표 및 개별적 인사들이 광범하게 참가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1989년 1월도 무방) 판문점이나 제3국에서 개최하자고 했다.

「범민족대회」문제는 사실 1988년 8월 3일 「민통련」등 재야단체들이 당시 올림픽의 성공적 분위기를 희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범민족대회추진본부」를 결성한데서 비롯되었으며, 1988년 8월 28일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가 「범민족대회」의 개최를 정식으로 발표하고 9월 22일에는 「민총련」등 21개 재야단체가 「범민족대회」의 준비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1988년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올림픽기간을 이용하여 서울과 판문점 등에서 개최하려던 「남북공동예술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스스로의 의견상충과 대학운동권의 소극적 태도로 무산되었다.

이렇듯 「범민족대회」가 우리 국민들의 외면과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새삼스러이 이 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이를 통해 남북간의 정상적인 대화를 회피하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 추진과 통일논의 개방화 조치에 편승, 국론분열을 기도해 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또한 북한측이 공개서한에서 「범민족대회」의 성격을 규정했듯이 우리 사회의 반체제 운동을 고무하여 정치.군사문제의 선전장을 확보하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 등 반미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북한측의 「범민족대회」 실무대표 접촉 제의에 대해 1989년 1월 21일 「반미자주화.반파쇼 민주화투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창립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은 산하기구인 조국통일위원회 명의로 이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실무회담의 구체적 내용을 제안했다.

○개최일시 및 장소 : 1989. 3. 1. 12:00, 판문점 「평화의 집」

○대표단 : 각계각층 10인 이내로 구성

○실무회담 의제

.분회담 대표구성

.분회담 의제선정

. 「범민족대회」 개최와 관련한 준비

.남북간 민간차원 교류준비

따라서 「전민련」 측의 이같은 제안은 형식상으로는 북한측의 1988년 12월 9일자 공개서한에 대한 응답인 셈이다.

한편 북한측은 1989년 2월 1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병수 명의로 「전민련」 공동의장 이부영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전민련」의 1월 21일자 실무대표접촉 제의를 수락하는 한편, 실무대표수는 쌍방 각기 5명으로 하자고 수정 제의하였다.

이어 「전민련」 측과 북한 「조평통」 측에서는 각기 실무대표접촉의 대표단까지 구성·발표하였다.

「범민족대회」 실무대표접촉 쌍방 대표단 명단

전민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단장: 오충일(전민련 공동의장)	.단장: 윤기복 (조국평화통일위원회부위원장)
.지도위원: 계훈제(전민련 고문) 박형규(전민련 고문)	.대표: 여연구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의장)
.대변인: 이재오 (전민련 조국통일위원회위원장)	김영남(직업총동맹부위원장)
.노동계대표: 이소선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고문)	현석(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부위원장)
.농민대표: 정성현(가톨릭 농민회 사무국장)	이종원(농업근로자 동맹부위원장)
.학계대표: 박순경(목원대 교수)	고기준(기독교도연맹 서기장)
.문화·예술계 대표: 김규동(시인)	최진혁(김일성 종합대학학부장)
.불교대표: 범성스님	황용준(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참사)
.지역대표: 한상열(전북민족민주운동 연합 공동의장)	차인덕(교육문화일군직업동맹 부장)
	김광식(통일문제연구소실장)

나. 북한측 태도 평가

「범민족대회」 추진과 관련한 사태추이를 정리해 보면, 북한측은 당국간의 대화에 의해 남북한간 현안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전민련」, 「전대협」 등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일부 재야단체만을 일방적으로 선별하여 접촉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측은 2월 8일에 열린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을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비난으로 공전시켰으며, 같은날 합의서 교환단계에까지 이른 남북국회회담 제8차 준비접촉마저 기 합의된 회담일(2.10)을 불과 이틀 앞두고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구실로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제11차 적십자 본회담의 재개를 촉구한 김상협 한적총재의 대북서한(1.24)에 대해서도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이유로 거부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더우기 북한적십자회 손성필위원장이 2월 15일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낸 서한이 대화를 거부한 것인데 반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전민련」 앞으로 같은날 동시에 보내온 편지는 「전민련」과 접촉하겠다는 내용이어서 북한의 이중적 태도를 극명하게 대비해 볼 수 있다.

<북적서한요지>

우리가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대대적인 전쟁연습이 강행되고 그것이 어느 시각에 실전으로 번져질지 모르는 첨예한 정황하에서 적십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은 아무런 의의도 없음.

적십자회담의 재개도 긴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할 가장 시급한 인도주의 문제는 우리 겨레를 전쟁, 핵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하는 것임.

특히 귀측이 이번 편지와 함께 그 무슨 「소식조사명단」이라는 것을 보낸 것은 우리에게 그 진의를 의심할 충분한 근거를 주고 있음.

쌍방의 합의사항과 초보적인 예의에도 어긋나는 이러한 분별없는 일은 우리의 공동위업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임.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는 당면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중지여하에 달려있음.

이같은 북한측의 노골적인 정치공작적 태도에 대해 2월 16일 문공부 대변인은 논평을 발표하고 북한측에 대해 "인도적 회담은 터무니없는 구실로 거부하면서 「전민련」의 제의는 수용하는 이중성을 버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다.

문공부 대변인의 논평요지는 다음과 같다.

<논평요지>

북측은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을 3월 28일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지난 1월 24일자 대한적십자사의 제의를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삼아 거부하면서도 「전민련」이 지난 1월 21일 창립대회시에 "범민족대회 실무회담을 3월 1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갖자"고 한 제의에 대해서는 이를 수락한다고 통보해 왔음.

북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를 회담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이미 진행중이던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데 이어 이번에 다시 적십자회담 재개마저 거부하면서도 「전민련」을 상대로 한 회담만은 추진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인도적 회담은 터무니 없는 구실로 거부하면서 「전민련」의 제의는 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북한의 이중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북측은 이제라도 그릇된 자세를 버리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진정으로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는 바임.

또한 대한적십자사도 2월 17일 논평을 발표, 북측의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거부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측은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이래 우리측의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주의 회담의 개최를 사실상 기피"해 왔음을 지적한데 이어, 북한측이 이번에도 적십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팀스피리트」 훈련은 우리측의 공개적인 방어목적의 훈련으로 남북대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한적측은 "북한적십자사회측이 대한적십자사가 이산가족들로부터 접수하여 1월 24일자 편지에 동봉해 보낸 「이산가족찾기 의뢰인 명단」을 두고 「진의를 의심케 한다」느니 「분별없는 일」이라느니 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는 같은 적십자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북한측이 진정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동포애와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무조건 회담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며 회담재개 이전이라도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와 관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측이 이같이 남북간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도주의 회담은 외면하면서도 우리 사회내 여러 단체중의 하나일 뿐인 「전민련」과는 대화하겠다는 것은 남북간의 대화를 연공통일전선구축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저의로 보아진다.

우리 내부에는 「범민족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진 바 없으며, 또 「전민련」은 그러한 행사를 주최할 아무런 국민적 대표성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전민련」을 굳이 대화의 상대로 선택한 것은 당국간의 대화를 회피하고 우리 사회내 반체제 세력의 입지를 강화시키려는 정치적 이유에서라고 평가되어진다.

「범민족대회」 추진 움직임과 관련 정부대변인은 2월 28일 성명을 통해 "북한측이 남북국회회담을 중단시켜 놓은 상황에서 「전민련」이 통일문제와 같은 중대사를 북한측과 독단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대남교란 전략을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민련」을 비롯한 어떤 단체도 정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측과 접촉하고자 하는 어떠한 활동도 불용할 방침"임을 밝히면서, "「전민련」이 끝내 실무대표접촉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부득이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일 북한측이 대표단을 내보내고 「전민련」이 판문점행을 강행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봉쇄함으로써 「범민족대회」를 위한 실무대표접촉은 무산되었다.

4. 북한의 일방적 회담연기 선언

북한은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국회회담 준비접촉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데 이어 우리 사회의 일부 반체제단체나 인사만을 상대로 대화하려는 자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북한은 정상적 회담을 회피하는 구실로 내건 「팀스피리트」 훈련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민련」(범민족대회 실무대표접촉), 「전대협」(평양청년학생축전), 「민예총」(남북작가회담), 「전노협」(남북노동자실무대표접촉)등과의 접촉은 적극 추진하는 양면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여기에다 문익환씨 불법입북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전복을 선동하는 도발적 언동까지도 서슴치 않음으로써 많은 국민들 속에 분노와 개탄의 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7.7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에 일관성을 견지하고 어떻게든 남북간의 대화를 살려나가기 위해 의연한 입장에서 예정된 회담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문익환씨가 귀국후 우리 정부당국에 의해 수사를 받기에 이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남북대화 채널을 일방적으로 장기간 연기시키고 말았다.

남북고위당국회담을 위한 제3차 예비회담(4.12예정)을 불과 하루 앞두고 4월 11일 북측대표단의 백남준 단장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4월 26일로 연기하자고 일방적으로 우리측에게 통보한데 이어, 4월 17일 전화통지문을 보내와 문익환씨의 구속 등 우리 내부분쟁을 이유로 동 3차예비회담을 또다시 7월 12일로 재연기할 것을 통보해 왔다.

아울러 4월 17일 남북체육회담 북측대표단의 김형진 단장은 4월 18일에 가지기로 되어 있던 제3차 남북체육회담조차 순수한 체육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익환씨 구속을 이유로 7월 18일로 연기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이로써 2월 8일의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중단과 함께 남북간에는 당분간 모든 대화가 끊어진채 냉각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는 쌍방이 현실인정의 바탕 위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 실질적 진전이 보장되며, 「7.7선언」의 참뜻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북한이 문익환씨 문제를 구실로 대화를 연기한 것은 우선 그러한 상호존중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또한 쌍방간 합의사항은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상호신의와 신뢰를 쌓는 관건이며, 합의된 회담 날짜를 임의로 파기하는 것은 대화의 상대방을 무시하는 무례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이같이 대화를 일방적으로 연기해온 것은, 문익환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법처리 부당하다고 해온 그들의 왜곡선전을 부각시킴으로써 문익환씨 석방투쟁을 고무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혼란시켜 보려는 의도에서이다.

이와 함께 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경우 그들의 정치공작행위가 날날이 폭로되고 책임추궁을 당하는 불리한 국면을 예정, 우선 이를 모면해보자는 속셈도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북한은 노사분규, 학생소요 등 우리 정국의 사태추이를 일단 관망하면서 7월 개최예정인 평양청년학생축전에 전념할 시간을 벌어보자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4월 17일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의 송한호 수석대표와 남북체육회담의 장충식 수석대표가 각기 논평을 통해 북한측의 불성실한 대화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북한측이 남북대화를 정치공작의 대상으로 이용하지 말고 하루속히 성실한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측 수석대표의 논평요지는 각각 다음과 같다.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의 논평요지

정부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남북당국간에 대화를 통해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제의하였음.

그러나 그동안 회담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중지 등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워 난관을 조성해 오던 북한측이 지난 4월 12일로 예정되었던 제3차 예비회담 날짜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4월 26일로 일방적으로 연기를 통보해온 데 이어 오늘, 문익환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구실로 회담을 7월 12일로 또다시 연기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음.

우리는 이와 같이 자의적이고 불성실한 북한측의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함.

북한측은 문익환씨를 평양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우리 정부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행위를 취하였으며,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획책하고 법제도 철폐와 구속자 석방을 주장하는 등 공공연한 내정간섭행동을 자행하여 왔으며, 심지어는 정부 전복을 선동하는 언동까지 서슴치 않고 있음.

문익환씨 문제에 대해 우리측에 사과를 해야할 입장에 있는 북한측이 통지문에서 우리 정부를 중상.비방하고 있는 것은 실로 적반하장의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음.

남북고위당국자회담에 성의가 있는 것처럼 주장해온 북한측이 두 번에 걸쳐 회담연기를 선언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외면하고 대화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과연 그들이 당국간 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는 이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 남북대화에 있으며 통일정책추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쌍방 당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의 실현을 위해 계속 성실하고 일관성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

우리는 북한측이 이른바 남조선 혁명노선에 따라 남북대화를 정치공작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등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반대화.반통일적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당국간 대화에 성실한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바임.

남북체육회담 수석대표의 논평요지

남북체육인들은 내년 9월에 개최되는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단일팀을 구성.참가하기로 합의하고 그동안 두차례의 회담을 통해 비교적 순조로운 토의를 진행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남북의 체육인은 물론 온 겨레의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체육회담을 하루전에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알려왔을 뿐 아니라 엉뚱하게도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음.

이번 문익환씨 사건에 대해 말한다면 북한 당국자야말로 문씨 사건을 조직적으로 꾸며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파괴하고 우리측에 대해 고의적인 도발을 자행한 것임이 명백해졌음.

북한 당국은 문익환씨를 특별기까지 동원하여 평양으로 유인, 우리측에 대한 적대적 정치선전에 이용했을 뿐 아니라 남북대화에 역행하는 도발을 자행했음.

나는 이번 뜻하지 않은 북한측의 회담연기 통보를 놓고 볼 때 앞으로의 회담 전망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회담이 열린다고 해도 그들의 자세와 성실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우리는 체육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를 내세워 온 민족이 염원하는 체육교류와 단일팀 구성문제를 지연시키려는 북측의 태도는 체육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북한측이 하루속히 그들의 자세를 올바르게 갖추고 회담에 임하게 되기를 기대함.

한편 남북간의 정상적인 회담은 일방적으로 연기해 놓고 있는 북한이 또다시 4월 22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조선학생위원회」 명의로 「전대협」 측에 4월 28일의 남북학생회담 개최에 동의하는 한편,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가 우리측 인사에게 서한을 보내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이 전화통지문이나 서한을 우리측의 반체제인사나 단체에 보내는 행위가 적십자정신에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4월 24일 북한측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의 김상협총재는 전화통지문을 통해 최근 북한측이 남북적십자간의 직통전화를 회담과 전혀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사실에 유감을 표시하고, "남북직통전화는 적십자인 본래의 사명을 벗어나 남북간에 불필요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정치적 논쟁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 편지나 전화통지문의 전달에 이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남북직통전화는 그간 남북직통전화의 실시·운영에 관한 쌍방 적십자간 합의(1972.8.11)에 따라 남북적십자회담 및 남북어선문제·수재물자 인수 등 적십자정신과 인도주의 원칙에 합당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밖에 남북간의 정상적 회담에 대한 연락업무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측이 직통전화를 우리측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연락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 짐으로써 적십자사가 본의 아니게 정치문제에 개입, 본래의 위상정립이 어려운 형편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앞으로 적십자원칙에 합당하지 않은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일체의 대남전통문은 수신대상자에 전달치 않기로 한 것이다.

북한측은 1988년 3월 남북연석회의 예비회의를 제의한 이래 1989년 4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남북직통전화를 정치공작 차원에서 이용해 온 바 있다.

남북대화 제48호

(1989. 5. ~ 1989. 12)

< 목 차 >

I.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
1. 통일접근의 새 구상 ; 제44주년 광복절 경축사	3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천명	8
가.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	8
나. 통일방안의 내용	9
다. 주요특징	17
라. 통일방안에 대한 반응	19
II. 남북대화의 재개	30
1. 배경	30
2.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32
가. 성립배경	32
나. 제1차 실무대표 접촉	35
다. 제2차 실무대표 접촉	40
라. 제3차 실무대표 접촉	41
마. 제4차 실무대표 접촉	42
3. 남북고위 당국자회담 예비회담	43
가. 경과개요	43
나. 제3차 예비회담	45
4. 남북체육회담	47
가. 경과개요	47
나. 제3차 회담	49
5.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53
가. 경과개요	53
나. 제8차 준비접촉	55
III. 남북관계 주요동향	57
1.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설치·운영	57
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성격과 기능	57
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성과	58
2. 임수경·문규현 불법입북 문제	64
가. 경과	64
나. 입북후 행적과 판문점을 통한 귀환	66
다. 남북쌍방의 주요동향	68
3. 북한측의 「민족통일협상회의」 제의	70
가. 제의내용	70
나. 북한측의 태도 평가	72

I.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 통일접근의 새 구상 ; 제44주년 광복절 경축사

가. 배경

제6공화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 그동안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7·7대통령 특별선언」과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1988.10.18)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을 통일로 향한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해 나가려는 차원에서 정부는 전진적인 통일정책을 펴온 것이다. 이러한 정책기조의 전환은 전반적인 통일환경의 변화에 기인하는 바 크다.

대내적으로는 사회각계의 통일논의가 활성화되고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분출되는 가운데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의 성과 등으로 국민 스스로가 통일추진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동서화해와 공산권국가들의 개혁·개방화 추세 등 세계질서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고, 한반도 주변정세 또한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의 새로운 물결이 밀려들고 있다.

남북관계면에서도 북한이 아직은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의 전개 가능성을 예상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1988년 10월 4일 노태우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각계각층의 통일논의를 적극 수렴하여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8월 15일 제4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그간의 여론수렴과정에서 확인된 통일원칙과 통일과정에서의 중간단계 설정, 그리고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 새 통일방안의 기본구상을 밝히게 된 것이다.

한편 민족공동체적 시각에서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려는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성의를 북한이 통일전선전략차원에서 악용하고 있음에 따라 노태우대통령은 이에 대한 경고와 함께 북한의 노선전환을 촉구하게 되었다.

북한이 1989년 봄이래 대한민국내의 특정인사들을 선택적으로 불러들여 대한민국 정부를 약화시키고 사회분열을 꾀하려는 전략에 매달려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노태우대통령은 북한의 이러한 자세와 행동이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데 근원적 장애물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통일과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객관적 조건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동 경축사 중 관련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포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분단을 막지 못했지만,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통일은 전쟁이나 어느 일방에 의한 상대방의 전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일된 조국은 6천만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합니다.

민족의 운명이 걸린 통일에 이르는 길도 분명히 민주적인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

적으로, 그리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과 북이 깊은 불신과 오랜 대결, 적대의 장벽을 그대로 두고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남과 북은 통일을 이루는 중간단계로 우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공존공영하면서 개방과 교류, 협력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하나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면서 정치적 통합의 여건을 성숙시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통일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발표한 「7·7선언」은 이러한 저의 통일구상에 따라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전진적 조치였습니다.

북한은 아직 그들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으나 우리는 「7·7선언」의 정신을 일관성있게 밀어나가 그들의 변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한반도에 화해와 통일을 열기 위한 새 공화국의 전진적인 정책은 작년 가을 저의 유엔총회연설이 말하듯 온세계의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힘입어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적극적인 관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세계 속에 개방과 개혁의 물결이 저처럼 넘쳐가고 세계에 새로운 화해의 흐름이 고조되어 간다면 북한의 변화 또한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가들과의 협조관계를 강화하고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 북한이 개방으로 나오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40년을 하루같이 대결, 적대해온 남북한관계가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더욱 뭉쳐진 우리의 민족적 역량과 더 큰 인내,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세계와 한반도 주변정세의 큰 변화 속에서도 무엇이 남북관계의 진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은 북한이 이른바 「남조선 적화통일」에 변함없이 매달려 있기 때문이며,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일부 세력이 저들에게 그릇된 환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고 통일의 길이 열리려면 북한이 「남조선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고 일체의 대남도발테러행위와 우리에게 대한 전복기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은 북한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 어떠한 정치체제 아래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북한동포에게 보장해야 우리와 한 민족공동체로서 동질성을 회복해가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통일의 과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북한이 이와 같은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남북관계에는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남과 북은 평화와 화해의 햇불을 들고 새 역사를 개척하는데 이제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북한이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외면하고 저버린다면 그들은 민족공동체의 분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북한측이 그동안의 그릇된 대화자세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지금 중단되어 있는 각종 남북대화를 당장이라도 전면 정상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대화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려는 진지한 의사와 자세를 가질 때만 그 진전이 가능합니다.

북한은 우리사회 내부의 극렬세력을 선동하고 그들 중 몇몇을 몰래 평양에 불러 대남교란을 부추긴다 해도 그들이 얻을 것은 우리 국민의 혐오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책임있는 남북당국간의 정상적인 통로를 통한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각 분야에 걸친 폭넓은 교류와 관계를 개선하는 다각적인 조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주요내용 및 의의

통일방안의 기본구상 제시

제4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노태우 대통령은 우선 통일실현의 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민주 의 3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 의 원칙은 민족대단결을 도모한다는 전제를 설정함으로써 1972년 7월 4일에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의 합의를 재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7·4남북공동성명」에서의 「민족대단결」이 어떠한 이념과 체제라도 통일만 이룩되면 좋다는 식으로 해석될 위험성을 불식, 민주 의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통일이 반드시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경축사에서는 또한 남북통일의 중간단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분단 40여년간 이어져온 남북간의 대결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각기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상호공존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야만 한다.

따라서 이같은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을 위한 중간과정의 설정은 긴요할 뿐만 아니라, 이념과 체제가 서로 다른 남북한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바른 길이다.

북한이 일괄통일방식인 「고려연방제」를 내걸고 있으나 이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중간과정을 통일국가의 최종형태로 함으로써 민족분단을 영구화할 우려마저 있다.

이와 함께 노태우 대통령은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해 「6천만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통일을 명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희생시킬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가 실현되고 민족성원 개개인의 삶이 보다 풍요롭게 됨으로써 민족의 자존과 존엄이 지켜지는 조국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임은 두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볼 때 노태우 대통령의 통일구상은 총체적으로 보아 「7·4남북공동성명」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수용하면서 「7·7선언」의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서, 이는 9월11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집약되어 완성된 모습을 갖추게 된다.

북한의 노선전환 촉구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이 「남조선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할 것과 북한동포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늘날 남북한관계의 개선을 가로막고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요인이 북한의 「남조선해방」이라는 그릇된 환상에 있음은 물론이다.

남과 북이 명실공히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체제를 파괴하고 전복하려는 대결적 자세를 버려야만 한다.

또한 통일의 주체인 민족구성원에 대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나가는 데 중대한 장애가 조성될 뿐 아니라 민족구성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오늘날 자유와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공산권 국가들까지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 당국에 대해 억압과 인권유린의 현실을 개선토록 촉구하는 것은 동포애에

근거한 응당한 권리이자 책무이며, 우리가 이룩해야 할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비추어서도 당연하다 하겠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대북노선전환촉구는 결코 「7·7선언」의 후퇴가 아니며 오히려 그 기본정신을 적극 구현해 나가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뜻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대화자세 시정 촉구

노태우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한의 그릇된 대화자세를 시정하도록 촉구하였다. 북한은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정상적인 남북대화를 외면한 채 우리측 종교인·정치인·대학생을 몰래 평양에 불러들여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정치공작을 자행해 왔다.

더구나 평화와 통일의 관문이 되어야 할 판문점을 정치선전과 농성의 장으로 만들었으며, 우리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 임의로 임수경·문규현씨로 하여금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통과케 함으로써 명백히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행위까지 저질렀다.

남북대화는 어디까지나 책임있는 당국간에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쌍방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려는 진지한 의사와 자세를 가질 때만 그 진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하루속히 남북대화를 전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7·7특별선언」의 지속적 추진

「7·7선언」은 평화통일을 앞당겨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해와 협력관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인식에서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고 통일의 여건을 성숙시키려는 새로운 노력의 출발을 알린데 그 의의가 있다.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나타난 특정인사의 밀입북사건등 일부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들은 「7·7선언」과는 전혀 무관하며, 따라서 그로 인해 「7·7선언」이 수정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겠다. 북한이 지금은 「7·7선언」을 거부하고 악용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개방과 화해라는 세계사적 조류를 더이상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은 틀림없다.

노태우 대통령은 동 경축사를 통해 「7·7선언」에 입각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강조하였다.

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천명

가.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노력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9월 11일 제147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였다.

제6공화국 헌법은 제4조에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제66조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성실한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제6공화국 정부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국정지표로 내걸고 「7·7선언」을 비롯한 제반 대북화해조치들을 취하는 등 평화통일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과 내외정세의 변화에 부합하는 통일방안을 정립키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통일의 주체는 민족구성원 전체이며 통일국가의 형태 또한 어디까지나 민족전체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통일방안은 어느 개인이나 또는 어느 집단의 배타적 사항일 수 없으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야만 한다.

또한 남북한 관계의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없는 통일방안은 그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통일방안을 입안함에 있어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그리고 국민적 합의라는 3가지 원칙을 고려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를 가장 중요시한 것은 이와같은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사회각계의 민주발전에 부응하여 통일논의를 자유화하고 공산권 및 북한자료를 개방하는 등의 폭넓은 여론수렴 기반을 조성해 왔다.

새통일방안의 입안을 위해 정부는 그동안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 10대도시의 각계 여론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총250회에 걸쳐 세미나 혹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는 학계, 언론계, 종교계, 문화계, 경제계, 교육계, 법조계, 여성계 인사와 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또한 국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한 공청회를 통해 국회에 의석을 확보한 정당들의 의견들은 물론 반정부 단체를 포함한 7개 사회단체와 언론인의 의견까지도 수렴하였다.

이와 함께 다단계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서울시민 여론조사를 비롯해 해외교민들을 포함한 각계각층 총16,801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각 정당의 정강과 대표연설, 각계각층의 개별인사와 단체 등이 제시한 통일관련 주장과 대북제외, 그리고 주요일간지에 게재된 관련사설, 기획·해설기사 등 총426건을 취합 정리하고 이를 분석하는 등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집념을 결집키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렇게 볼 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성숙한 국민역량과 내외환경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통일민족사의 새 장을 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제6공화국의 새로운 통일방안일 뿐 만 아니라 폭넓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를 둔 명실공히 「국민의 통일방안」이라고 하겠다.

나. 통일방안의 내용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한마디로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을 통한 통일에로의 접근을 기초로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하에 「남북연합」의 중간단계를 거쳐 단일민족국가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다시 말해 남과 북이 40여년간 적대와 대결속에 분단상태를 지속해왔으며 이제 민족공동체 그 자체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먼저 남과 북이 공존공영의 바탕 위에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단일민족사회를 형성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국가통일을 완성하자는 것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천명된 대통령특별연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특별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147회 정기국회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이번 국회는 파란과 성취가 교차한 1980년대를 마무리 짓고 희망의 1990년대를 여는 뜻깊은 정기국회라고 생각하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많은 결실이 이번 국회에서 거두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이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민족사의 소망이며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실현할 방안을 밝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긴 시련으로 시작된 20세기를 영광으로 마무리 지어야 할 이 세기의 마지막 년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세기에 들어서면서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힘이 모자라 끝내 나라를 잃고만 우리 민족은 해방의 날을 맞았음에도 그 불운의 연장선상에서 국토분단과 동족상잔의 엄청난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와 힘을 모아 민족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양단한 이 분단의 아픔은 우리들 다음 세대, 다음 세기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겨레의 뜻과 열망을 한데 모아 통일의 횃불을 높이 들고 민족통일의 길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이야말로 우리의 넘치는 민족적 역량으로,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는 역사적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정치·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당당한 힘을 쌓았고 그것을 실천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북한의 전면남침으로 불바다가 되었던 잿더미 위에서 일어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세계 10대 무역국가에 들어선 신흥산업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민주주의의 새로운 활력 속에 서울올림픽을 사상 가장 훌륭한 대회로 치렀습니다.

동서남북 세계 160개국의 젊은이들이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교의 벽을 넘어 서울의 한마당에 모인 이 인류화합의 대축제는 국제질서 속에서 피동적인 존재로 비켜서있던 우리 민족이 세계에 화해의 물결을 주도한 위업이었습니다.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같은 성취에 힘입어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협력하

는 적극적인 관계를 이룩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 동구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일고있는 개방과 개혁의 물결은 그들 내부 체제와 정책의 변화는 물론, 국제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단을 안겨주었고 그것을 40여년 고착시켰던 세계의 질서와 힘의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같은 거대한 안팎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작년 7월 남북한이 더 이상 적대·대결하는 상대가 아니라 공동의 번영을 향해 협력해 가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상을 전세계에 밝혔습니다.

북한을 폐쇄와 고립으로부터 개방으로 이끌어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고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정책은 동서세계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40여년의 세월동안 우리 스스로와 세계를 바꾸어 놓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장애가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한반도를 가르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으며 긴장과 대결은 늦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천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네번을 거듭하여도 북한을 지배해온 경직한 체제는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거대한 물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공산화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기본전략이나, 모든 것이 통제된 북한사회 내부도 아직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열정은 뜨겁지만 우리가 맞고 있는 분단현실은 이처럼 냉엄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북한은 도도한 세계적 변화의 물결이 도달하는 마지막 해안이 될지는 모르나, 결코 이 물결을 끝내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폐쇄노선에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북한은 변화의 물결에 순응하여 끝내는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앞당겨 지도록 돕고 이끌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땀과 인내, 거래의 슬기와 뭉친 힘이 들어가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쏟아 그들이 통일의 길로 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작년 10월4일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거래의 뜻을 모아 새로운 정세변화에 부응하여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방안을 밝히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국민들의 광범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국회공청회를 거쳐 거래의 소망을 실현할 새로운 통일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과하고 있는 엄숙한 의무에 따라 저는 남북이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밝히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통일된 우리의 조국은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

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합니다.

민족성원 모두의 참여와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다양한 주의·주장이 자유로이 표현되고 대변되는 민주공화체제는 온겨레의 오랜 소망이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통일된 나라의 유일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된 조국에서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집단, 어느 계급도 특권이나 주도적인 지위를 누리거나 독재로 전횡하는 일은 용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된 조국은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며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을 보장하면서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를 이루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리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통일된 우리 나라는 단일국가여야 하며, 이것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개의 나라를 영속시키는 형태는 온전한 통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통일은 하루빨리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과 북이 분단 40여년간 누적된 깊은 불신과 오랜 대결·적대의 관계를 그대로 두고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단이 있기까지 5천년의 긴 역사를 통해 한 핏줄, 같은 언어, 같은 문화전통, 그리고 같은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왔습니다.

이 민족공동체야말로 현재도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바탕이며 우리 민족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이자 이를 보장하는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국토분단은 좌우익간의 유혈투쟁과 6.25남침으로 인한 동족간의 처절한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의 분열로 심화되었습니다.

적대하는 두 체제로 나뉘어 반세기 가까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북의 겨레는 생활양식과 가치관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민족공동체를 올바로 회복·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간에 개방과 교류·협력을 넓혀 신뢰를 심어 민족국가로 통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남북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간다면 정치적 통합의 여건은 성숙될 것입니다.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헌장에 따라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합체제 아래에서 남과 북은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토록하여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과정의 과도적 통일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남북연합은 최고 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쌍방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와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북은 각료회의와 평의회 업무 지원하고 합의사항 이행 등 실무를 위해 공동사무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비무장지대안에 평화구역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구역은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인도,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분야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간의 모든 현안과 민족문제를 협의 조정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되 구체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으로는 1천만 이산가족의 재결합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외교분야에서는 남북간에 정치적 대결상황을 완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역량의 쓸모 없는 낭비를 막으며 해외동포의 권익은 물론 민족적 이익을 함께 신장시킬 것입니다.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우선 남북사회의 개방과 다각적인 교류·교역·협력을 추진하고 민족문화를 함께 창달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번영의 경제권을 형성하면 남북 모두의 발전을 이루고 민족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분야에서는 과도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평의회」는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하되, 통일헌법의 기초와 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각료회의」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평의회」는 통일헌법의 기초과정에서 통일국가의 정치이념·국호·국가형태 등을 논의하고, 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정부형태는 물론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시기·절차 등을 토의하여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은 각기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남북평의회」에 내놓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헌법안이 마련되면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통일조국의 국회는 지역대표성에 입각한 상원과 국민대표성에 입각한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우리 겨레의 이상과 의사에 맞고, 남북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새 공화국 출범이후 저는 남북간에 화해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남북의 정상이 서로 만나는 것임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한 빨리 열려 본격적인 남북협력과 통일의 시대를 열 헌장에 합의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헌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 방안,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담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속히 이같은 민족공동체헌장이 마련되어 온 겨레앞에 공포되기를 기대합니다.

분단 45년이 되는 내년 8월 15일까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열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사에 통일을 이룩하는 새로운 장을 펼쳐 우리 세대에게 부여된 역사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두차례 세계대전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유럽의 여러 민족과 국가들은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함께 번영을 일구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프랑스·서독·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공동체 국가들은 지난 날의 적대와 대결을 동반자의 관계로 바꾸어 1992년 완전한 경제통합체를 이루며 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지배 아래서도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지켜왔던 우리가 분단의 벽을 넘어 수천년 이어온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들도 자유와 인권의 폭을 넓히며 다양한 의사를 대표하는 복수정당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이념과 체제를 떠난 보편적 가치입니다.

나는 민족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이 우리의 북한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들이 이같은 조처를 취하지 않고는 개방의 길로 나설 수도 없고, 우리와 교류·협력·연합하여 민족공동체에 합류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은 말로만 평화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적화통일노선을 실질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없이 자주·평화·민주적 통일의 길은 열릴 수 없습니다.

나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할 이같은 일을 실천할 경우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기원을 여는 조처를 취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동포 여러분,

분단의 장벽이 높고 두터운 만큼 통일의 길은 험난합니다.

분단의 고통과 비극이 큰 만큼, 그것을 가시게 하는데는 우리의 더 큰 역량과 지혜, 무한한 참성과 피땀을 쏟아야 합니다.

이 모든 준엄한 현실을 외면한 안일한 환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은 조국의 통일이 아니라 겨레의 더 긴 시련일 뿐입니다.

민족문제를 해결할 통일에 관한 한, 우리의 내부적인 이견과 갈등, 반목과 분열은 민주주의의 거대한 용광로 속에 녹여 무쇠와 같은 민족의 통일의를 창조해내어야 합니다.

민주번영으로 우리의 통일역량이 더한층 커질 때 분단의 벽은 무너질 것이며, 겨레의 단합된 힘이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이겨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겨레의 보람 위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가장 훌륭한 올림픽이 이 땅에서 열렸듯이, 온 민족의 지성이 응집되어 통일의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다.

오늘 온 겨레의 염원을 담은 통일방안을 밝히면서 통일의 빛나는 그 날을 여러분과 함께, 7천만 동포 모두와 함께 힘차게 열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대통령 특별연설에서 제시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통일의 원칙

<자주> :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평화> :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민주> :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2) 통일의 과정

---○ 공존공영의 토대 위에서 남과 북이 연합(「남북연합」)하여 단일민족사회 지향→단일 민족국가(통일민주공화국) 건설

(3) 과도적 통일체제

<명칭> : 남북연합 (The Korean Commonwealth)

<성격> : 통일국가 실현의 중간과정

<역할> : 공존공영, 민족사회의 동질화, 민족공동생활권 형성

<구성>

---○ 남북정상회의 : 최고결정기구

---○ 남북각료회의

----- 공동의장(남북쌍방 총리)과 남북 각기 10명 내외의 각료급으로 구성

----- 남북간의 모든 현안문제와 민족문제에 대한 협의·조정 및 그 실행을 보장

----- 5개 상임위원회 (인도,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분야) 설치

----- · 이산가족 재결합 문제

- · 정치적 대결상황 완화 문제
- · 국제사회에서의 민족역량 낭비 방지 및 해외동포의 권익신장 문제
- · 남북사회 개방과 다각적인 교류·교역·협력 추진 문제
- · 민족문화의 창달 문제
- · 공동번영의 경제권 형성 문제
- ·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문제
- · 현 휴전협정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대체 문제 등
- 남북평의회
 -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
 - 남북각료회의에 대한 자문, 통일헌법 기초 및 통일실현 방법과 절차 마련
- 공동사무처
 -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 업무지원, 합의사항 이행을 비롯한 실무적 문제 관장
- 상주연락대표 : 남북 각기 서울·평양에 파견
- < 「평화구역」 >
 - 비무장지대 내에 설정
 - 「남북연합」 기구·시설 등 설치
 - 「통일평화시」(Unification-Peace City)로 발전
- (4) 통일국가 수립절차
 - 남북평의회에서 마련한 통일헌법안을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
 -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와 통일정부 구성

(5) 통일국가의 미래상

---○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인권·행복이 보

-----장되는 민주국가

<국가형태> : 단일국가

<국회구성> : 양원제 (상원: 지역대표성, 하원: 국민대표성)

<정책기조>

----· 민주공화체제 (민족성원 전체의 참여와 기회균등 보장, 자유로운 주의·주장 표현)

----·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 증진

----·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보장, 세계평화 기여

----· 모든 나라와 선린우호관계 유지

(6) 민족공동체현장 채택

---○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남북연합」기구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한 남북간의 포괄적인 합의를 규정

---○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현장 마련 및 공포

---※ 1990년 8월 15일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희망

다. 주요특징

민족공동체적 시각에 입각한 통일접근

우리 민족사의 큰 흐름을 본다면 분단 이전에는 사실상 민족이 한 핏줄,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전통을 갖고 하나의 생활단위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왔다.

그러나 국토분단에 이어 동족간의 상잔으로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면서 민족의 이질화는 심화되어 왔으며, 앞으로 분단이 장기화될 경우 민족사회 그 자체가 분열될 위험마저 있다.

민족은 공동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며, 이익을 넓히고 자존을 세울 수 있다. 따라서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단순한 정치통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 즉, 하나의 사회없이 하나의 나라는 없는 것이다.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은 민족의 공동이익과 화해를 도모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념과 정치를 앞세운 일괄타결 방식의 공간적 접근은 분단 40여년간의 경험으로 보아 유효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로 인해 통일지연의 가능성마저 초래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에서 남과 북이 상호 공존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단일민족사회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합의 여건을 성숙시켜 단일민족국가를 건설한다는 새 통일방안의 기초는 실천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과도적 통일체제의 설정

우리가 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분단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문제는 분단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간에는 아직도 정치·군사적 대결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상호 불신이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에 이르는 중간과정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공존공영하면서 개방과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 저해요인을 완화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 중간과정으로 「남북연합」을 발족시켜 남과 북이 민족공동체라는 하나의 지붕 밑에 잠정적으로 서로의 특수한 여건을 이해하고, 또한 통일을 지향해 나가면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중간과정을 거치지 않고 남북의 정치제도부터 포괄적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민족통일의 실질적 내용을 결여한 비현실적 명분논리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남북연합」안에서 남과 북은 잠정적으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의 특수한 관계를 갖게 되며, 안으로는 상호간의 관계를 협의·조절하고 밖으로는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는 가운데 민족의 이익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연합」은 국가연합이나 연방국가의 교과서적 개념이 아니며,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나라들이 하나의 생활공간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지향해 나가고 있는 「유럽공동체」나 「노르딕연합체」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측 주장에 대한 신축적 자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주장과 입장만을 내세워 북한측에 이를 받아

들이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기본 정신아래 북한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실현가능성에 역점을 두었다.

먼저 북한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며 위험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민의 성숙된 역량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치·군사문제의 적극 해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첫째로 과도체제를 발족시키기 위한 민족공동체현장에서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둘째로 과도체제인 「남북연합」에서 군사분야를 다룰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문제」, 「현 휴전협정체제의 평화체제로의 대책문제」 등을 협의·조정토록 하였다.

한편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등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준비회의의 역할을 하게 될 「남북평의회」를 남북이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토록 한 것도 북한측 입장을 적극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민주공화국의 구체적 미래상 제시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이지만 자유와 민주를 희생하는 통일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은 국민의 일치된 합의이다.

통일이 갖는 의미를 외면하고 무조건 통일을 하고 보자는 식의 통일지상주의로 흐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논리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된 조국은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민족성원 전체의 참여와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다양한 주의·주장이 자유로이 표현되는 민주공화체제여야 한다.

민주주의의 추구는 세계사의 일관된 흐름이며 인류보편의 가치이다. 오늘날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변혁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고,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인위적 압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또한 민족전통과 남북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통일국가는 북한의 연방제와 같이 1민족 2정부식의 미완성형 통일에 머물 수 없다. 중간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수립되는 통일국가는 어디까지나 단일민족국가여야만 하며 그 길만이 민족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통해 우리 겨레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밖에도 통일국가의 국회를 지역대표성에 입각한 상원과 국민대표성에 입각한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제안함으로써 전체 지역간의 균형과 모든 민족구성원의 참여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평화구역」 설정에 관한 구상 제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과시하고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공동사업들을 추진키 위해 비무장지대내 적정지역을 「평화구역」으로 설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 「평화구역」에는 공동사무처 등 「남북연합」내 기구의 건물과 각종 회의장소를 설치하는 한편, 남북간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통로를 제공하고 쌍방이 공동으로 이용할 제반 시설들을 건설해 나감으로써 민족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시범지역으로 기능케 될 것이다. 예컨대 이 「평화구역」에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는 통일역사, 남북이산가족들의 「만남의 광장」, 민족문화관, 상품교역장, 운동경기장 등을 건설해 나가게 될 것이며, 남북의 합의에 따라서는 점차로 「통일평화시」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 통일방안에 대한 반응

(1) 국내외 반응

국내 주요 언론들은 오랜 준비과정을 거쳐 성안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통일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한 노고의 결정이며 통일을 위한 객관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구상이라는 등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미비점으로 지적되어 온 통일실현의 중간과정으로 「남북연합」이라는 과도적 통일체제를 설정한데 대해 강한 현실감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세계사의 흐름에 따라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족국가」로 분명히 제시함과 아울러 의회민주주의의 가치체계를 기본으로 한 통일국가 수립의 절차와 방법을 중시한데 대해서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연합」내의 모든 기구를 남북동수로 구성토록 하고교류·협력문제와 함께 정치·군사문제도 협의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북한측과의 합의의 영역을 넓힌 것은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통일방안이 마련되었다고 당장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통일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만큼 북한을 폐쇄와 고립으로부터 개방으로 유도하는데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했다.

한편 미국이 국무부성명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원대한 방안"이라고 높이 평가한데 이어 일본, 핀란드 등 우방국 정부도 환영일색의 반응을 나타냈다.

해외언론들도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으로서 "한국역대정권의 통일전략을 집대성한 것으로 국내 통합력 회복에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구성을 남북 동수로 제시하여 한국 인구의 1/2밖에 안 되는 북한에 양보하는 동시에 북한이 주장해왔던 군사문제의 해결 등을 구상에 포함시킨 것은 진보적 내용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대응을 주목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측의 고려연방제와 상반되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한국의 현행제도를 북한에 강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소련은 "합리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평양의 발의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등 이해의 자세를 나타냈다.

소련은 특히 10월 10일 모스크바 방송을 통해 "평양의 입장을 고려하는 요구들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건설적이다", "군사완화문제를 포함하여 다방면적인 대화를 북한과 가질 용의가 있음을 약속한 것이다"는 등 주목할 만한 반응을 보였다.

국내반응

「통일민주공화국」 방안

동아일보(1989.9.11)

우리 사회의 다양한 통일논의를 수렴해 온 정부는 통일원칙으로서 「7·4남북공동성명」의 남북한 합의사항을 기조로 하는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족통일과 관련한 대통령의 국회특별연설형식을 통해 밝힌 정부의 통일방안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개의 체제를 영속시키는 「연방」 형태가 아니라 단일국가인 「통일민주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일은 분단상황을 제거하여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가 다시 건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국가의 최종형태가 어떠한 이유로든 분단의 찌꺼기를 안고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세계사의 흐름이 증명하고 있듯이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 점을 분명히 한 정부의 새 통일방안은 그래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민주국가의 이상이 참여와 기회균등,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과 대변이 보장될 수 있는 공화제를 통해서 최대로 실천될 수 있음을 인식할때 「통일민주공화국」이 적어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본방향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이같은 원칙을 담고 있는 정부의 「통일민주공화국」 건설 통일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총선거 실시」를 제의하고 있는 정부의 통일방안은 이 원칙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의 지적처럼 분단의 장벽은 두껍고 통일의 길은 험난하다. 우리의 통일방안 확정엔 남북한 통일협상 출발을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 그래서 남북한의 통일협상개시를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성립돼야 한다. 그것은 남북한 존재에 관한 상호인정이며 남북한 두 존재의 잠정적인 협상체제수립이다. 잠정적인 협상체제가 연방체제든 연합체제든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것은 통일국가로 가는 준비기간적인 통일체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에 관해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각료회의와 남북평의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통일논의는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공청회같은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이 있었고 이같은 민주적 절차의 반영에 노력했다는 정부의 통일방안이 드디어 2년만에 햇빛을 보았다. 다양한 의견의 존재를 존중하고 있는 우리의 체제 아래서 100%의 완전합의는 있을 수 없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통일방안이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국회는 적어도 「통일민주공화국」같은 대원칙을 결의안 통과 형식으로 뒷받침하는 과정을 고려해보았으면 한다. 그것은 자칫 낭비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통일논의가 이제는 정치권안에서라도 소화됐으면 하는 국민적인 여망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내부의 이견과 갈등을 하나의 통일의지로 용해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 용광로」 역할과 북한사회의 선민주화와 개방화를 요구한 노대통령의 연설내용에 주목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야말로 남북한의 진정한 통일노력을 실증시킬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기 때문이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명암

국민일보(1989.9.11)

남과 북이 갈라져 살아서는 안된다. 하루빨리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 민족공동체 구성의 기초를 다지고 겨레가 분단으로 받는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가 되어 민족이 공존공영의 단일국가를 건설하고, 한민족 모두가 고르게 자유와 복지 민주참여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

11일 노태우대통령이 국회특별연설에서 밝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러한 민족의 동질성회복과 통일의지를 새삼 확인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본다.

노대통령이 제시한 새 통일방안은 무엇보다도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중시하여 「중간과정」을 명시한데 특징이 있다.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 먼저 남북대화와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연합」을 구성한다는 것이 9·11선언의 골간으로 되어있다. 남북연합은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를 두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통일헌법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국가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통일국가의 미래상 못지않게 의회민주주의의 가치체계를 기본으로 한 통일국가 수립의 절차와 방법을 중시한 점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통일방안은 7·4공동성명의 정신을 수용하고 노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밝힌 자주 평화 민주의 통일 3원칙을 재확인하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기에 따라서는 7·7선언의 수준에서 한 단계 후퇴한 면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이 통일방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통일의 주체, 실천의지의 가시화 그리고 실현가능성면에서 종래의 통일방안보다 크게 돋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이러한 통일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당장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방안을 북한이 겸허하게 받아들일때 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폐쇄와 고립으로부터 개방으로 유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느냐에 새 통일방안의 성패가 걸려 있음은 자명한 상식이다. 적대감을 해소하는데 성의를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 그동안의 통일논의에서 최종 국가의 형태 하나만 놓고 보아도 북한의 고려연방제나 남한의 국가연합 주장이 모두 1민족 2체제 원칙에서 크게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남북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이념이나 제도의 차이보다는 분단이래 누적되어온 적대감을 해소하지 못한데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 물론 새통일방안은 국회공청회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정부의 대북제의 및 통일방안과는 다르다. 그러나 공청회과정에서 여러 쟁점들을 둘러싸고 각계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통일의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통일의 이상은 하나인데도 그 방법은 이념과 사상에 따라 천태만상이다. 우리의 통일방안을 남반부 해방통일론과 혁명론에 매달려 있는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이번 통일방안의 성패는 먼저 우리 내부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이루느냐에 달려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한다.

통일에 이르는 단계들

한국일보(1989.9.12)

통일이라는 민족의 과업을 놓고, 우리는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소진했고 형언못할 정력을 쏟아 부었다. 남과 북은 하나이어야 한다는 민족적 일체감은 치열하게 불꽃이 솟아 오름에도 불구하고

고, 분단의 현실은 여전히 가시밭길 처럼 험난하기만 하다.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은 이념과 체제의 차이라는 양극성이다. 이로 인해 불신의 벽은 높아만 가고 이해의 숨통은 좁게 열리지 않는다. 문은 두드리면 열린다고 한다.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세차게 닫힌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새로 마련, 노태우 대통령이 정기국회 개회연설을 통해 발표했다.

새로운 통일방안은 구성과정과 내용에서 종래와는 크게 다름이 평가받을 만하다. 통일논의에 불길이 댕겨지고 격화되면서 우리는 심한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다. 개방사회라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새통일방안은 이 과정에서 드러난 갖가지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합의 바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할만 하다.

실질 내용에서 주목할 것은 통일헌법제정 이전의 구체적인 과도기적 중간과정을 설정한 것이다. 즉 남북정상회담에서 민족공동체헌장을 채택하고 남북연합 형식으로 각료회의와 평의회를 두어 최종적인 통일로 향해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제의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과 신뢰구축-남북연합-단일국가의 3단계의 제시는 지금까지 환상적으로 생각되던 통일이란 문제에 보다 강한 현실감을 부여했다는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민족공동체 통일안으로 7·7선언이후의 통일논의와 감상적 행동화의 혼란은 일단 정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물론 이 방안이 최선의 완결편이라는 성급한 규정은 피하는게 옳을 줄 안다. 왜냐하면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는 군사문제에 언급이 없다거나 하는 미흡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여론을 오랫동안 여과했다고 하나 아직은 국회결의등의 뒷받침이 없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국회가 이 정부안에 대해 결집된 의견을 표현한다면 그간의 혼란된 우리 사회의 통일논의의 정돈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통일방안이나 원칙이 만들어졌다고 하여도, 주요한 것은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통일논의는 상대가 있다.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주장하면서 남에 대해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우리측은 그런 조건의 제시는 없으나 북의 민주화와 개방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노대통령이 그의 연설에서 이점을 되풀이 강조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통일은 기적처럼 하루 아침에 성취되지 않는다. 꾸준한 대화를 통해 접근하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통일의 중간과정은 그래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래야 통일논의가 현실감을 갖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과도기의 창출을 위해 끈질긴 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여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유도하는 적극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도 이제 공작차원의 통일논의는 철폐함이 마땅하다는 말이 된다. 결과 속이 다른 접근 자세는 통일 달성에 방해가 되지, 도움은 못준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민주화 통일임을 확실하게 밝혔다. 그렇다면 통일의 기반을 빠른 민주화로 구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야 국민이 따르고 믿어준다. 그 의지가 확고하게 보일때, 통일세력이니 반통일 세력이니 하는 부질없고 낭비적인 논쟁도 멈출 것이다. 통일의 그날까지 온 겨레가 머리를 더 짜내고 땀흘리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통일로 가는 한민족공동체
-새 통일방안의 구도와 의미-

서울신문(1989.9.12)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6천만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기에 이에 관한 학자나 전문가가 따로 없다. 모

든 국민이 일가견을 갖고 한마디씩 할 수 있다. 통일문제는 이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측면과 동시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것이 우리들 통일논의의 어려움이다.

통일의 주역은 민족구성원 전체이다. 따라서 통일국가는 결국 민족전체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통일방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 실현을 위한 추진력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오랜 논의와 국민적 참여를 거쳐 이번에 발표된 새통일방안은 국민 모두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집념을 한데 모은 현실적인 방안이며 백화제방의 논의 단계를 거친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자주·민주·평화통일의 논리

지난 8월 15일 노태우대통령은 통일로 가는 원칙을 확실하게 제시한 바 있다. 자주·민주·평화 그리고 민족대단결의 원칙이다. 그것은 1972년의 7·4공동성명과 같은 것이지만 몇가지 중요한 현실적 접근을 하고 있다. 새통일방안은 이를 토대로 한 정책의 실천방안이다. 특히 분단현실에 대한 인정과 과도적 통일체제로서의 남북연합제이는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남북연합은 그 자체가 통일된 국가의 최종형태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남과 북이 상호협력과 공존공영의 관계를 도모하면서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단계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이다.

사실 남북한 관계의 역사나 현실을 볼 때 즉각적인 또는 몇년 이내의 통일실현은 기대할 수 없다.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오늘날에도 남북한 관계는 서로간의 불신과 증오의 반목으로 가득차 있다. 게다가 전쟁이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마저 도사리고 있다. 오늘날 강대국들이 군축과 공존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긴장완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한반도의 상황여건은 그 물결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통일은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에 입각한 이 점진주의를 두고 북한은 통일열망이 부족한 자세라느니 통일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느니하고 비난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진주의만이 체제와 이념이 서로 다른 남북한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원칙이라고 확신한다.

통일과 반통일의 요소

남북의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의 통일을 달성하려는 민족적 과제, 이 염원과 과제는 남북한의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부정될 수 없다.

그러나 북측은 다르다. 그 쪽의 김일성주의자들은 아직도 남북을 베트남방식으로 통일시킬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건 그렇고 남쪽의 일부 현상은 어떠한가. 무조건 즉각 통일을 부르짖고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김일성주석」을 만나야겠다는 환상에 젖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두 가지 중대한 오판이 바로 오늘날 반통일의 요소이다.

오랜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 통일문제는 그런 망상이나 환상은 물론이거니와 뜨거운 열정만을 갖고 논의하고 주장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 그 뜨거운 염원이나 열정에 비해 아직도 통일의 전망은 밝지 않다. 통일염원은 감정이요 이상이지만 현실적 통일은 냉엄한 이성이요 엄격한 논리전개의 과정이다. 우리들의 통일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해야 한다. 뜨거운 염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차가운 이성만을 내세워서도 안된다. 아울러 우리들의 통일접근에 있어 상대가 없는 통일논의는 무의미하고 반대편으로부터의 상응한 노력이나 반향이 없는 통일방안은 실현성이 없다. 새통일방안은 이 두 가지 측면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측이 주장해 온 여러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그 일부를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합의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이 방안 토대로 대화할 때다

전쟁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남북한을 통틀어 우리들의 평화통일논의의 첫 단계는 두말할 것 없이 대화이다. 어떤 형태의 통일논의나 방안도 이 대화의 전개를 근간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오늘의 남북관계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과거의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북한은 진정한 의미에서 남북대화를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쪽의 진지하고 성실한 대북한자세와 노력이 지금까지 그다지 돋보이지 못한 것도 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자세에 진실성과 성의가 담겨있지 않았던 탓이다. 지금 남북한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큰 장벽은 신뢰감의 상실이다. 상호간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어떤 접촉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쪽의 몇몇 사람들의 밀입북 사건 이전 몇 갈래로 추진되던 남북회담이 문제해결이나 접근은 커녕 서로 깊은 불신만 노출시킨 것도 어느 한쪽의 성실성과 진실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새 통일방안에 담겨 있는 민족공동체헌장 제정이나 평화구역 또는 통일평화시 건설등은 남북간 상호존중과 신뢰회복을 위한 실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세계는 체제와 이념을 넘어 개방과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 북한은 안팎으로 변하는 세상을 똑바로 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방과 변화를 꾀해야 한다. 남한은 「식민지」이기 때문에 꼭 「해방」시켜야겠다는 논리에 집착하는 한 우리의 평화나 통일문제는 절대로 풀릴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진심으로 대화와 공존 그리고 교류와 통일접근을 바란다. 이제 우리들의 이 통일방안으로 다시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이다.

해외 반응

<각국 정부·인사 반응>

미국 국무부 성명(1989.9.11)

- 한반도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원대한 방안이며 북한 지도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을 희망함.

「사르바스」 네덜란드 외무부 아주국장

- 한국측 제안이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며 북한이 이를 수락하기 바람.

「살로바라」 핀란드 외무부 정무 총국장대리

- 북한측에 의하여 수락되기를 희망함.

「오쿠」 케냐 외상

- 자유와 민주원칙에 입각한 이번 제안 내용을 지지함.

「보에르」 인도네시아 외무부 아태국장

- 북한측은 이번 제안으로 통일문제에 있어 수세에 몰리게 될 것으로 보임.

「한스 브문」 덴마크 외무성 정무차관보

- 노대통령의 제안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임.

「젤러」 서독외무성 아주국장

- 침체된 남북대화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함

「시버그」 노르웨이 외무성 아주국장

- 한국의 평화통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함.

<주요외신>

Reuter 통신

- 가장 섬세한 방안이며 지금까지 북한측 주장에 대해 과거 한국이 보인 입장에서 「의미 있는 탈피」를 한 것임.

AP 통신

- 한국정부관리들은 노대통령의 제의는 「정치·군사적 문제해결에 대한 북한측의 일관된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했으며, 과거 한국 제안들의 토대를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음.

Washington Times(1989.9.12)

- 새로운 제안은 북한에 대한 두 개의 중요한 양보를 포함하고 있음. 서울은 정치군사적 문제의 논의 이전에 이산가족재회와 교역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철회했음.
- 서울은 또한 남한의 인구가 북한에 비해 2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남북간의 회의 구성도 동수의 남북대표로 구성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했음.

Le Monde(1989.9.12)

- 노대통령이 한국판 commonwealth(공동체) 구상을 제안했으나 관측통들은 북한의 수락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음.

Die Welt(1989.9.14)

- 노대통령이 제의한 통일방안은 지금까지 주장해오던 방향과는 큰 차이가 있음. 종래에는 정치문제해결에 앞서 남북자유왕래, 이산가족재회와 같은 사소한 문제부터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남북연합을 제의한 것임.
- 서울의 정치관측통들은 북한이 그들의 고려연방제와 판이한 노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1989.9.15)

- 한국의 노태우대통령은 남북연합이라는 점진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했음. 이는 남북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중간단계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임.
- 작년에 발표된 북방정책은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와 경제·외교분야의 현실적 조치를 통해 통일을 이룩하려 했으나 북한은 계속 호전적인 자세로 북방정책을 역이용하고 나왔음.
- 그러나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노대통령의 통일방안은 분단상황을 고착시킬 뿐이라고 반대했음.

Neue Az(1989.9.15)

- 노대통령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안했음. 이러한 통일방안이 궁극적으로는 공산체제를 붕괴시킬지도 모른다는 북한의 우려가 북한이 이 제안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이며, 북한은 최근 동구권의 개방화가 가져온 결과를 보고 더욱 경색된 태도를 견지할 것임.

조일신문(1989.9.12)

- 새 통일안은 북한과의 화해를 추구하는 「7·7선언」을 토대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노대통령의 통일안은 국회의 청문회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취합했다는 점에서 「한국국민의 합의」를 담은 구상으로 볼 수 있음.

매일신문(1989.9.12)

- 노대통령이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특징은 통일후의 비전보다도 통일에 이르는 과

정을 중시했다는 점에 있음. 이제까지는 통일의 대원칙 및 통일된 국가의 비전만이 쌍방으로 부터 제안되어 왔기 때문임.

- 이번 제안은 제5공화국 시대인 1982년에 발표했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북한이 주장해왔던 군사문제의 해결등을 구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북한의 대응이 주목됨.

산경신문(1989.9.12)

- 이번 제안은 남북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에 대응한 것으로 통일에 앞서 중간단계에서의 공동기구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됨.

동경신문(1989.9.18)

- 「선 연방, 후 통일」이라는 북한의 연방제안에 비해 통일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구한다고 하는 분단 극복면에서 앞서고 있으며, 한국이 목표로 하는 통일에 대한 구상을 남북한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제시했다고 하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임.

NHK 방송

- 각료회의와 평의회 구성을 남북동수로 제시하여, 한국인구의 1/2밖에 안되는 북한에 양보하는 등 진보적 내용임.

모스크바 방송(1989.9.12)

- 합리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평양의 발의와 유사한 점이 있음.

신화사 통신(1989.9.11)

- 노대통령은 남북연합체제 수립을 촉구하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발표했으며, 전체 한반도에 남조선의 사회체제를 부과하려 하고 있음이 분명함.

북경방송(1989.9.12)

- 북측의 고려연방제안과 상반되는 것으로 관측통들은 이번 제의가 남조선 체도를 북에 강요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인도네시아 Merdeka(1989.9.13)

- 노태우대통령이 제안한 3단계 통일방안은 한민족 통일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며 남북한의 재

통일을 실행하기 위한 노대통령의 현실적인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 것임.

- 이번 노대통령의 새 통일방안은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면서 통일환경을 조성, 궁극적으로 통일을 성취하는 합리적인 방안임.

아르헨티나 La Prensa (1989.9.19)

- 노태우 대통령의 새 통일방안은 북한에 접근하는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이러한 경우 통일의 이상과 합치되지 않은 정치적 고려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임. 문제의 해결은 한국정부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하겠음.

El Sol De Mexico (1989.9.14)

- 노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40여년 이상의 분단이후 한국은 경제발전, 북한은 후진한 남북 상이현상을 중화 및 조화시키며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며, 6천만 한민족이 단결, 통일되어 일한다면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임.

(2) 북한반응

북한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제의 당일인 9월 11일 노동신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확실성있는 통일방안」이라는 제하의 장문의 논설을 게재,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타당성을 주장한데 이어 9월 12일 「민민전 방송」을 통해 "분열주의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으며, 중간단계론은 현 분단상태를 고착시켜 두개 한국을 조작하려는 수작"이라는 첫 반응을 보여왔다.

또한 9월14일에는 노동신문을 통해 "두 개 조선에로의 분열을 고착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한정 없이 끌려는 제2의 분열방안"이며, "정치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자의 공론"이라고 공식적으로 거부 입장을 명백히 했다.

이후 북한은 방송·신문논평등을 통해 연일 유사논조를 전개하면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매도하고 대내외 지지확산을 견제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북한은 이와 관련하여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이야말로 최선의 방도가 된다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중간단계로서의 남북연합은 두개 국가를 합법화하는 동서독 방식을 모방한 것"으로서 "단일제도에 기초한 통일은 어느 일방이 타방을 먹지 않는 한 실현불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9월28일 이른바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제의하면서 동회의가 소집되면 한국내 여러 통일방안중의 하나로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토의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식의 의견상 태도변화의 입장을 보이는 듯 했으나, 이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격하시키려는 책략에서 비롯되었을 뿐이다. <본서 III장 관련자료 참조>

II. 남북대화의 재개

1. 배경

북한측이 지난해 7차례 개최되었던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을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중단시키는 한편 금년 2월과 3월에 걸쳐 각각 2차례씩 열렸던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과 남북체육회담 마저 문익환 목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이유로 중단시킨 이후,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해 성실한 회담자세를 가져줄 것을 여러번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기존의 남북간의 정상적인 대화통로는 외면한채 「민간급 접촉과 대화」를 명분으로 우리사회의 일부 특정인사나 단체들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등 통일전선전술을 획책하는데만 열중하였다.

북한측의 이같은 정치공작 행위는 1989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전후로 극에 달하여 우리측 각계인사 55명에 대한 초청서한 발송, 동 대회 참가문제와 관련한 남북학생회담, 그리고 남북노동자대표 실무접촉·남북역사학자회담·남북종교인회담·전민족대회 제의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측이 기존대화의 중단이유로 「팀스피리트」 군사훈련과 문익환 목사의 사법처리 등을 내세워 놓고도 특정인사와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는 다발적인 대화공세를 펴온 것은 자가당착으로서 이와같은 이중적 태도는 그들이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에는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동 기간중에 북한측이 우리사회 내부의 혼란을 노려 이른바 「민간급 대화」 공세를 펴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 자	제 의 내 용
89.2.17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남북작가회의 개최 동의 ○ 장소는 일본 또는 판문점
3.15	남북학생회담 북측대표단, 남북학생실무회담 수락 ○ 대표단 명단 통보
3.16	천도교청우당 위원장, 한국천도교 교령 초청 ○ 남북천도교간 통일문제 협의 및 오익제교령 초청
4.10	직업총동맹, 「전노협」에 남북노동자대표 실무접촉 제의 ○ 「전노협」이 접촉시일·장소 등을 제의하면 수락 용의
5.24	조선역사학회, 남북역사학자회담 제의 ○ 미국의 한국사 왜곡에 대한 공동항의문제 등 협의 ○ 대표: 쌍방 각기 3~5명 ○ 일시 및 장소: 1989.6.15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이나 「통일각」 또는 「평화의 집」
6.2	조선종교인협의회, 한국종교인협의회에 남북종교인회담제의 ○ 대표: 쌍방 각기 7명 ○ 일시 및 장소: 1989.6월 하순 판문점 또는 서울·평양
7.9	「조평통」위원장 허담, 전민족대회 개최 제의 ○ 1990.8.15 판문점에서 남북·해외동포들로 전민족대회 소집

또한 북한측은 서경원 의원을 밀입북시켜 그들의 대남정치공작에 이용해 왔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구나 북한측은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참석을 위해 불법입북한 임수경양을 8월 15일 판문점

을 통해 귀환시킴으로써 고의적으로 휴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북한측의 태도는 그들이 남북간의 정상적인 교류·협력에 호응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민주화·개방화를 이룩한 우리측 내부상황의 변화를 북한식의 대남전략 논리에서 그릇되게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측은 책임과 권능을 가진 쌍방 당국 및 기관간의 대화를 통해 남북간의 제반 현안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일관된 방침에 따라 북한측에 대해 자세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중단된 대화의 재개를 꾸준히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남북간에는 회담자세 문제를 둘러싸고 한동안 편지와 전화통지문이 오고가는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근 6개월간의 냉각기를 거쳐 1989년 9월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로 남북적십자간에는 실무대표접촉이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중단상태에 있던 남북고위당국자 회담 예비회담·체육회담·국회회담 준비접촉 등이 차례로 열리게 되었다.

2.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가. 성립배경

북한측은 1985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본회담 이후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쌍방간에 합의한 제11차 본회담을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구실로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이래 우리측의 거듭된 회담재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를 외면해왔다.

최근에 들어와서도 우리측은 1988년 7월 13일 적십자회담의 재개 및 제2차 「이산가족고향방문단」 교환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회의 개최를 제의했으며, 1989년 1월 24일에는 11차 적십자 본회담의 개최를 촉구하고 4,346건의 심인의뢰서까지 동봉하기도 했다.

북한측은 이러한 우리측 제의에 대해 거부입장만 표시하다가 1989년 5월 31일 갑자기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문제 협의를 위해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갖자고 제의해 왔다.

그러나 북한측은 동 제의가 적십자회담의 연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익환 목사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간에 합의한 공동성명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김상협 총재는 6월 12일 대북서한을 통해 이미 쌍방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평양에서 제11차 본회담을 개최(7.12)하여 동 회담에서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문제도 함께 협의·해결 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6월 22일자 편지를 통해 또 다시 실무대표 접촉을 주장하면서도 여기에서 본회담의 재개문제도 함께 토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측은 북한측이 여전히 문목사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간의 합의를 앞세우는 등 온당치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산가족의 고통해소를 위해 주어진 모든 가능성과 기회를 최대한 살리려는 뜻에서 일단 쌍방 적십자간의 접촉을 갖기로하고 동 실무대표접촉을 8월 2일 개최할 것을 제의(1989.7.12)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밀입북하였던 임수경양의 귀환문제를 둘러 싸고 판문점을 선진장화 하는가 하면 적십자사의 개입을 요청하는 등 인도주의 회담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노골화 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7월 29일 실무대표접촉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한 대한적십자사 김상협 총재의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적십자사 총재 성명>

1천만 남북이산가족들 사이에 재회의 길을 트는 일은 우리 적십자인들의 사명의 하나이며 이산가족을 비롯한 우리 겨레 전체의 비원으로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우리 대한적십자사는 남북이산가족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8년 동안 가능한 모든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으며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타결이 이산가족 재회 사업을 실천하는 첩경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지난 1985년 제10차 남북적십자사회담에서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상호방문 및 상봉, 서신거래, 재결합,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등 5개항의 회담의제를 타결짓기 위한 종합적인 합의서 안을 제시하였다.

그 후 우리는 북한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제11차 남북적십자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왔다.

이와함께 우리는 남과 북으로 흩어져 있는 가족과 친척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풀어주기 위해 제2차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교환을 실시할 것도 북한측에 제의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같은 우리측 제의와 노력에 대해 북한측은 팀스피리트훈련 중지와 남북정치·군사회담 개최 등 비적십자적인 전제조건들을 앞세워 거부반응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다가 북한측은 지난 5월 31일 갑자기 자기들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불법입북한 문익환 목사 사이에 약속한 이른바 「합의」란 것을 내세우면서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을 위한 쌍방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갖자는 제의를 해왔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한측이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정단체나 개인을 관련시키지 말 것과 중단된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면서 제11차 회담개최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8월 2일 판문점에서 쌍방 실무대표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적십자회는 우리측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이산가족문제 추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기울여 온 노력을 스스로 외면하면서 우리 범질서를 위반한 특정개인과 북측 비적십자단체와의 「합의」를 계속 부각시키려하고 있다.

또한 북한적십자회는 불법입북한 임수경양의 판문점 통과문제와 관련, 우리 대한적십자사가 자기들의 요구대로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적십자사의 존엄을 해치는 온갖 비난과 욕설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이것은 같은 적십자단체로서 상대방에 대해 갖추어야 할 기본예의에 어긋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금번 임수경양과 문규현신부 등을 앞세운 판문점농성과 이를 정치선전에 이용하고 있는 북한당국의 일련의 행위는 쌍방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의 분위기를 더욱 흐리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상황하에서는 쌍방 적십자간의 실무대표접촉이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접촉을 갖는다 하더라도 생산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오는 8월 2일 가지려고 했던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부득이 연기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북한적십자회가 적십자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 오으로써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간의 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남북이산가족의 재회를 기필코 실현시키기 위해 인내성 있고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다.

한편 우리측은 8월11일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18주년에 즈음한 한적총재 담화를 통해 북한측이 회담자세를 시정하고 조속히 회담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늦어도 9월중에는 접촉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우리측은 9월5일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9월27일에 가질 것을 다시금 제의하였으며 북한측이 이를 수락해옴으로써 남북적십자간에는 근 4년만에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한적	북적
수석대표	송영대 (대한적십자사 재해구호 협의위원회 위원)	박영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대표	이준희 (대한적십자사 사회사업자문위원) 이병웅 (대한적십자사 기획관리부장)	김광수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정덕기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책임지도원)

나. 제1차 실무대표 접촉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문제와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은 1989년 9월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16분까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공개로 진행되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우리측 송영대 수석대표는 기초발언을 통해,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순수한 적십자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해야 하며, 따라서 북한측이 지금까지 쌍방적십자 단체들이 기울여온 노력을 외면한채 우리 범질서를 위반한 특정개인과 북한의 비적십자단체와의 합의를 내세워 이산가족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1천만 이산가족 전체의 불행과 고통을 근본적으로 폭넓게 풀어주기 위해서는 생사·주소 확인, 방문·상봉 실현, 서신거래 실시, 재결합, 기타 인도적 문제등 본회담 의제 5개항 사업을 실천에 옮겨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단된 11차회담을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985년에 실시되었던 제1차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이 제8차 회담에서의 원칙합의를 바탕으로 실무대표접촉을 가진 결과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이 합의사항을 제9차 회담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성사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제11차 회담을 열어 의제 5개항 사업토의와 함께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순리지만 「주어진 모든 가능성과 기회를 최대한 살리려는」 뜻에서 2가지 문제를 함께 토의할 생각임을 밝혔다.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문제와 제2차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문제>

- (1)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989년 11월1일 평양에서 개최한다.
- (2) 본회담 의제를 비롯하여 대표단 구성, 회담운영절차, 대표단의 왕래방법 등 본회담 진행에 따른 기타 문제는 종전의 관례에 따라 추진한다.
- (3)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제2차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에 관한 쌍방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의 합의사항을 확인한다.

<제2차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문제>

(1) 방문단 규모

- 단 장 : 각 적십자사 책임자 1명
- 고향방문단 : 각 300명
- 예술공연단 : 각 50명
- 취재기자 : 각 100명

○ 지원인원 : 각 50명

※각기 총 501명

(2) 방문지 및 공연장소

○ 이산가족 고향방문인원은 자기 고향을 직접 방문, 가족과 친척을 상봉하고 성묘를 하도록 한다.

○ 예술공연단은 서울과 평양에서 공연한다.

(3) 방문시기 및 기간

○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은 1989년 12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실시한다.

(4) 고향방문단 구성

○ 고향방문단은 남과 북에 고향을 둔 이산가족들로 구성하되, 상봉대상자가 확인된 이산가족을 우선적으로 이에 포함시킨다.

(5) 그밖에 방문단 명칭을 비롯해 방문방식, 상봉범위, 예술공연단의 공연회수, 공연내용, 공연시간, 공연에 따른 사전조치, 신변안전보장, 수송, 통신, 취재, 통과방법, 체류일정협의, 신분증명 등 제반사항에 관해서는 선례에 따라 추진한다.

북한측 박영수단장은 기조발언에서 중단된 남북적십자 본회담 재개 문제를 동시에 토의·해결하자고 하면서도 특히 「고향방문단」 문제는이미 성사시킨 바 있는 좋은 선례와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얼마든지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해 「선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 교환추진, 후 남북적십자 본 회담 개최」 입장을 명백히 했다.

북한측의 제안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

(1) 구성과 방문지, 방문시기

-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의 구성은 쌍방 적십자단체 부책임자를 단장으로 하고 예술단 300명, 고향방문단 300명, 수원 40명, 기자단 30명 총 671명으로 한다.
-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의 방문지는 평양과 서울로 한다.
- 방문단의 방문시기와 상대측지역 체류기간은 1989년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로 한다.

(2) 예술단의 교환공연

- 예술단의 상대측지역에서의 공연회수는 4회로 하며 매회당 공연시간은 2~3시간으로 한다.
- 예술단공연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초청측은 공연시설이 완비된 장소를 상대측에 제공한다.
- 공연장소를 사전답사하기 위해 2명의 적십자 일군과 3명의 전문일군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상대측 지역에 파견한다.
- 선발대의 파견시기는 1989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2박 3일로 한다.
- 공연내용과 공연종목소개는 공연자측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되 상대측을 비방자극하지 않는 원칙에서 한다.
- 공연안내장은 공연자측에서 준비하여 가지고 가서 관람자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 초청측은 상대측 예술단의 공연을 텔레비전방송과 라디오방송으로 실황 중계한다.

(3) 고향방문단의 교환

- 고향방문대상은 평양과 서울에 고향을 둔 당사자들을 위주로 한다.
- 고향방문단성원들의 상봉대상에는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 친척의 경우는 방계 8촌, 처·외척은 4촌으로 하며 그 밖에 본인이 요구하는 친척도 포함시킨다.
- 고향방문단성원들에 대한 자료는 출발하기 20일전에 관문점연락대표부를 통하여 초청측에 넘겨준다.

(4) 안전 및 편의보장

-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과 그 가족, 친척들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각기 관계당국이 안전 담보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며 그 문본을 방문단이 상대측 지역으로 넘어가기 7일전에 판문점 연락대표부를 통하여 교환한다.
-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이 판문점군사분계선을 넘어선 순간부터 그들의 숙식과 교통, 의료봉사 등 일체 편의는 초청측이 책임지고 무료로 보장한다.
-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의 상대측지역 체류기간 통신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남북사이에 가설되어 있는 적십자직통전화를 이용한다.
- 초청측은 상대측 기자들이 고향방문단과 예술단성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보장한다.

<남북 적십자회담문제와 관련한 제안>

(1) 본회담 장소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평양에서 하고 제12차 회담은 서울에서 한다.

(2) 대표단 구성

본 회담 대표단은 종진과 같이 쌍방 적십자단체 부책임자를 단장으로 하고 단장을 포함한 7명의 대표와 자문위원 7명, 수원 20명, 기자 50명으로 구성한다.

(3) 본 회담 시일

제11차 본 회담 시일은 1989년 12월 15일로 하며 제12차 본 회담의 시일은 1990년 1월 18일로 한다.

(4) 기타 절차

본 회담절차는 이미 합의된 대로 한다.

쌍방이 내놓은 제안에서 나타난 주요특징으로는 우선 우리측이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먼저 개최하여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단교환에 관한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에서의 합의사항을 확인한 후 「방문단」을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먼저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부터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우리측이 방문단 구성은 1천만 남북이산가족들의 염원을 고려하여 당연히 고향방문단 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북한측은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을 동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측은 고향방문단 인원이 고향까지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북한측은 방문지를 서울과 평양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데 있으며 따라서 예술공연단은 어디까지나 이 사업을 축하하고 화해분위기를 전달하는 규모로 총

분한 것이다.

본격적인 예술공연단의 교류는 적십자 고유의 업무가 아니며 남북간의 문화예술교류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을 동수로 하여 같은 비중을 두는 것은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하겠다.

쌍방 제안 중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쌍방 제안 비교>

구분	우리측	북측
제11차 본 회담 개최일자 및 장소	○1989. 11.1(평양)	○1989. 12. 15(평양) ※12차 본회담은 1990. 1. 18(서울)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기간)	○1989.12.8~12.13 (5박 6일)	○1989.11.8~11.11 (3박 4일)
(규모)	○남북 각 총501명 -적십자 책임자 1명 -고향방문단 각300명 -예술공연단 각50명 -취재기자 각100명 -지원인원 각 50명	○남북 각 총 671명 -적십자 부책임자 1명 -고향방문단 각 300명 -예술공연단 각 300명 -취재기자 각 30명 -수행원 각 40명
(방문지 및 공연장소)	○방문단:직접 고향 방문 · 친척상봉 · 성묘 ○예술단:서울 · 평양	○서울 · 평양
(기타)	○1989.1.24 의뢰한 4,346명에 대한 회신촉구 ○1차 고향단 교환시 상봉가족 서신교환촉구	○예술단 공연의 TV,라디오 실황 중계 ○비방 · 중상하지 않는 조건에서 자유취재

한편 북한측은 우리측이 회담외적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익환 · 임수경 등의 문제를 집중거론하고 이들의 문제가 회담 앞에 난관을 조성하는 장애요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실질문제 토의를 어렵게 했으며 결국 별다른 합의없이 접촉을 끝내고 말았다.

그러나 북한측이 이 문제를 전제조건화 하지는 않았으며, 쌍방이 각기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11차 본회담 개최와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을 연내에 실시할 것에 의견을 같이함으로써 내외의 기대에 밝은 전망을 던져 주었다고 하겠다.

다. 제2차 실무대표 접촉

남북적십자 제2차 실무대표접촉은 1989년 10월 6일 10시부터 12시 23분까지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쌍방은 제1차 접촉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제2차 접촉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접촉에서 우리측은 세부내용을 정리, 합의서 형식으로 제안하면서 중단된 본 회담을 재개하고 의제 5개항을 일괄타결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접점을 강조하고 제11차 본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였다.

또 우리측은 이산가족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사업의 근본취지가 보다 많은 이산가족에게 상봉의 기쁨을 안겨주는 데 있으므로 방문단의 규모나 방문지는 고향방문단을 위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예술공연단은 남북 문화교류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우리측은 방문단의 규모면에서 고향방문단을 300명, 예술공연단을 50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향방문단은 명칭 그대로 자기 고향에까지 직접 가서 가족과 친척을 만나고 성묘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지난 1차 접촉에 이어 첫 발언의 모두에서부터 문익환·임수경·문규현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대한적십자사가 이들의 석방을 위해 응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계속 요구함으로써 실무대표접촉에 대한 그들의 진의를 의심케 하였다.

그러나 우리측은 본 회담 재개와 고향방문단 교환을 성사시키려는 일념에서 북측 주장에 대한 논쟁을 자제하고 실질토의에 들어가도록 유도하여 본 회담 개최 및 방문단 교환시기문제와 방문단구성 문제를 토의했으나 쌍방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북한측은 현 상황이 본 회담을 열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방문단을 먼저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규모면에서도 예술인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수를 300명씩 동수로 해야 한다고 고집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른바 「민족통일협상회의」와 관련, 그들이 직통전화를 통해 전달 의뢰한 우리측 당국·정당·단체들에 보내는 서한을 대한적십자사가 접수 거부한 사실을 들어 우리측을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적십자회담용 직통전화를 인도적 목적이나 남북관계개선 이외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그같은 서한을 보내려면 남북간에 「통신·통행협정」을 체결하도록 당국에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 제3차 실무대표 접촉

남북적십자 제3차 실무대표접촉은 1989년 10월 16일 10시부터 12시 22분까지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접촉시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열렸다.

제3차 접촉에서는 북한측이 임수경·문익환 문제 등 회담과는 무관한 우리측 내부분제를 간단히 언급하는데 그침으로써 사실상 처음으로 본격의제토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쌍방은 본회담 개최 및 방문단 교환시기, 방문지, 방문단 규모 등 3가지 문제에 대해 토의를 벌였다.

우리측은 우선 시기 문제에 대해 「선본회담 개최, 후방문단 교환」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실무대표접촉을 조속히 타결지음으로써 온 민족의 기대에 부응하고 이산가족들의 고통해소에 기여하려는 입장에서, 본회담개최와 방문단 교환의 순서를 바꾸어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을 12월 8일로 하고 제11차 본 회담 개최를 12월 19일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이 본회담개최일자만 12월 15일로 수정한데 이어 우리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시기문제는 합의를 보게 되었다.

방문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측은 고향방문단 인원이 자기 고향까지 가서 성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나, 북한측은 고향까지 가는 것은 본회담에서 협의·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대표접촉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서울·평양 방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

방문단 규모에 있어서는 우리측이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사업의 취지에 맞게 방문단 규모는 고향방문단이 위주가 되고 예술공연단은 부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북한측은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규모를 동수로 하자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특히 예술공연단 규모에 대해 북측은 300명으로 하고 남측은 50명으로 각기 편리한대로 하자는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의를 함으로써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남북적십자 쌍방이 본 회담 개최일자와 2차 방문단 교환시기에 일단 합의한 것은 제3차 접촉의 커다란 수확이기는 하지만, 고향방문단의 규모, 방문지, 방문기간 그리고 예술공연단의 공연내용, 실황중계 문제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은 여전히 미결인 채로 남겨놓았다고 하겠다.

마. 제4차 실무대표 접촉

제4차 실무대표접촉은 1989년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12시 16분까지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이날 접촉에서 우리측은 쌍방의 입장과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무대표접촉을 원만히 타결 짓기 위해 북한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새로운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방문단 규모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을 300명으로 하되 예술공연단은 종전의 50명에서 두 배로 늘려 100명으로 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기자단 및 지원인원의 경우에도 북한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각각 30명과 40명으로 구성하자고 했다.

또 방문지 및 방문기간을 포함하여 방문단 단장의 격, 상봉방법, 예술공연단의 공연내용 및 세부 추진절차 등 방문단 규모 이외의 사항은 제1차 방문단 교환사업의 선례에 따라 일괄타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그간 쌍방간의 논쟁점이 되어온 방문지 문제는 서울과 평양으로 국한한다는데 사실상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예술공연단의 규모를 50~300명 범위에서 상호 편의주의로 정하되 자기측은 250명으로 할 것을 밝힘으로써 예술공연단 규모문제를 실질적으로 조정하려는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우리측은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사업은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당연히 고향방문단이 중심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남북간 교류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일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예술공연단이 「주」가 되어야 하고 고향방문단은 「종」이라고 강변하는가 하면 예술공연 실태중계를 계속 고집함으로써 방문단교환의 연내 실현의지를 의심케 하였다.

우리측이 제4차 접촉에서 예술공연단 규모를 종전의 두 배로 늘린 것이나 방문지를 서울과 평양으로 양보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실무대표접촉의 교착국면을 타개하여 제2차 방문단사업을 기필코 성사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반면에 북한측은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 규모를 동수로 한다는 방침을 다소 완화하여 예술공연단을 50명 줄인 것이 제4차 접촉에 이르기까지의 유일한 태도변화로써 실무접촉의 타결을 위한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우리측은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의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제11차 적십자 본회담은 제3차 접촉에서 합의된 12월 15일에 개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반하여, 북한측은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문제와 적십자 본 회담 개최문제가 일괄 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방은 제5차 실무대표접촉을 11월 13일에 갖기로 합의하였다.

3. 남북고위 당국자회담 예비회담

가. 경과개요

1989년 2월 8일과 3월 2일 두 차례 열린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은 북한측이 본 회담의 성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절차문제 토의는 도외시한 채 「팀스피리트 훈련중지」와 「북한출판물 단속 중지」문제 등을 들고 나옴으로써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결국 북한측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중단되고 말았다.

북한측은 문익환 목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구실로 4월 12일로 예정된 제3차 예비회담을 두 차례에 걸쳐 4월 26일과 7월 12일로 일방적으로 연기한 가운데 특정단체와 개인을 정치공작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내부의 혼란과 국론분열을 획책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측 송한호 수석대표는 7월 10일 대북전통문을 통해 북한측이 정상적인 당국간의 대화를 기피하고 이중적 태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한 우리측 송한호 수석대표의 성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수석대표 성명>

남북간의 적대와 대결관계를 화해와 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책임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쌍방 당국간에 현실인정과 상호존중의 정신에 기초하여 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을 진행시켜 왔으며 하루속히 본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예비회담에 맡겨져 있는 기본사명은 본 회담 대표단 구성, 본 회담 개최일시 및 장소, 본 회담 의제 및 운영절차와 같은 실무절차문제들을 토의·해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실현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측은 두 차례에 걸친 예비회담에서 이와 같은 실무절차 토의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팀스피리트」 훈련, 출판물 단속과 같은 회담외적인 문제들을 잇달아 들고나와 회담진전을 가로막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북한측은 4월 12일로 합의된 제3차 예비회담을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연기함으로써 지금까지 회담개최를 회피해 왔다.

북한당국은 남북당국간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 중에 문익환 목사를 평양에 불러들여 정치공작을 자행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문목사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를 회담연기의 구실로 내세우는 것과 같은 적반하장의 태도까지 보였다.

더욱이 최근에는 북한당국이 우리 국회의원을 불순한 목적으로 비밀리에 평양으로 불러들인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고 또 우리 여자대학생을 평양에 끌어들여 우리 정부를 반대하는 선전에 이용하는 등 적대행위를 서슴지 않음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화해를 바라는 우리 국민에게 경악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남북당국간의 대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쌍방간에 합의사항이 존중되고 상대방 체제를 파괴·전복시키려는 정치공작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상대방 내부혼란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을

일삼지 말아야 한다.

그간 북한당국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연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측 특정 단체나 개인을 정치공작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내부의 혼란과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획책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행위를 취해 온 것은 정상적인 당국간의 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측이 이 같은 대결자세와 적대태도를 계속 견지하는 한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북한측이 시대착오적인 정치공작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생산적인 대화에 보다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측이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에 진실된 자세를 보임으로써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3차 예비회담이 조속히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북한측은 7월 20일에 이어 9월 1일에도 제3차 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구해왔으며, 우리측이 9월 16일 전화통지문을 보내 더 이상 대결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고 건설적인 자세로 회담을 진전시키는데 협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제3차 예비회담을 10월 12일에 가질 것을 제의하자 이를 수락함으로써 중단 7개월여만에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이 재개되게 되었다.

나. 제3차 예비회담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3차 예비회담은 1989년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7분까지 관문점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3차회담부터 용영일, 강근택 대표를 박종권(국방부 합동참모본부국장), 염홍철(대통령비서실 정부비서관)대표로 각각 교체하여 대표단을 새로이 구성하였다.

먼저 발언에 나선 북한측 백남준 단장은 기조발언에서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문익환·임수경·문규현 석방, 「민족통일협상회의」 소집 등을 거론하였으며, 특히 문익환·임수경 문제는 본회담의 성사와 직접 관련되는 문제라고 강변했다.

우리측 송한호 수석대표는 첫발언을 통해 남북고위당국자 회담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조속히 실질문제 토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회의종료시까지 문익환·임수경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측은 북측에 대해 대남 정치공작행위의 즉각 중단과 「남조선 혁명전략」의 포기를 촉구하고 노동당 당규약에 명시된 공산화 통일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에도 동구권 수준의 자유민주주의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리측 송한호 수석대표는 지난 1, 2차 예비회담에서 팀스피리트훈련문제를 들고 나와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고 회담을 일방적으로 장기간 공전시킨 데 대해 북한측의 책임을 묻고 온당치 못한 대화자세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우리측 특정인사를 밀입북시켜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등 일련의 정치공작을 벌이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간섭하고 반정부투쟁을 충동하는 등 무례한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이를 신랄히 비판하였다.

결국 이날의 남북당국자간 대좌는 북한측이 초반부터 회담과는 무관한 문제들을 들고 나와 실질 토의에는 들어가지도 못한 채 설전으로 끝나고 말았다.

한편 본회담 개최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의 명칭·의제·대표단구성 등에 대한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남북간 인적왕래에 대비한 통행 안전보장을 위해 「남북 통행·통신에 관한 일반 합의서」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우리측이 제의한 의제 제3항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실시문제」 토의시 이 문제를 우선과제로 토의·해결할 것을 제의했다. 북한측은 1차 본회담 장소를 서울로 하고 대표단 수행원 수를 당초의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릴 용의가 있다고 한 것 말고는 의제·명칭·대표단구성 등에 있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본회담 개최문제와 관련, 제3차 예비회담까지 나타난 쌍방 제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쌍방제안 비교>

구분	우리측	북측
본 회 담 명 칭 의 제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절충안으로 「남북총리회담」 제시 ①상호 비방·중상 중지 문제 ②상호 존중 및 불간섭문제 ③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실시 문제 ④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⑤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 ⑥기타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	「쌍방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남북고위급 정치군 사회담」 「북과 남 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할데 대하여」
시 기	예비회담 종료후 1개월이내	좌 동
장 소	서울·평양 운번개최 ※1차회담: 서울	좌 동
대 표 단 구 성	○대표: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군참모총장급을 포함 하는 7명 ○수행원: 40명 ○기자단: 50명	○대표: 총리를 수석대표 로 하여 군실권자 2명을 포함하는 7명 ○수행원: 30명 ○기자단: 50명
회 의 형 식	○비공개 원칙 ※쌍방 합의에 따라 공개	○공개 또는 비공개

이상의 비교표에서 알 수 있듯이 쌍방은 본회담 명칭·의제에서 다소의 의견차를 보이고 있으나 상호주의정신에 기초하여 성실한 대화를 진행한다면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하겠다.

사실 회담의 근본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북한측이 실질토의를 외면한 채 문익환 석방요구 등 대남선전·선동과 이른바 「민족통일협상회의」에 대한 선전의 장으로 당국간의 회담을 이용하려는 입장을 보인다는데 있다.

따라서 예비회담의 진전과 본회담의 성사여부는 북한측이 회담자세를 바꾸느냐 여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쌍방은 제4차 예비회담을 1989년 11월 15일 관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4. 남북체육회담

가. 경과개요

1990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쌍방은 1989년 3월 9일과 3월 28일 두 차례의 회담을 갖고 단일팀의 호칭·단기·단가·선수단 구성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양측은 단가를 1920년대의 「아리랑」으로 하고 단일팀의 호칭을 영문으로는 「KOREA」로 하며 단기는 흰색바탕에 단색의 한반도지도(로마자 표기삭제)로 할 것과 선수선발은 합동훈련을 통해서 하되 참가선수 수는 북경대회 정원수 정도로 한다는 데 각각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문익환목사의 사법처리를 빌미로 4월 18일로 예정된 제3차 회담을 7월 18일로 일방적으로 연기함으로써 회담장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자제해온 듯한 체육회담 마저 정치문제에 종속시키는 입장을 드러냈다.

우리측은 북한측이 임의로 정한 제3차 회담일자인 7월 18일을 앞두고 7월 15일 장충식 수석대표의 대북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한측 회담대표단이 당국의 불순한 대남책동을 비호하고 회담의 성사에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부당한 자세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3차 회담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7월 23일 북측대표단 성명과 8월 8일 김형진단장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회담중단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제3차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하였으며, 우리측은 8월 9일 다시 한번 북측에 회담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측 장충식 수석대표의 관련성명은 다음과 같다.

〈남북체육회담 수석대표 성명〉

남과 북은 내년 9월 북경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대회에 단일 선수단을 구성하여 참가함으로써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민족의 단합된 모습과 훌륭한 기량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간 두 차례에 걸쳐 남북체육회담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남북간에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 중에 우리측 특정인물들을 몰래 평양에 불러들여 정치공작에 이용하는 등 화해와 단합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남북체육회담 북측대표단마저 이 같은 불순한 책동을 두둔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 북측 체육회담 대표단은 정치공작 행위를 자행하는 북한당국의 최근 책동을 정당화하면서 우리측을 비난한 이른바 「남북회담 북측대표단 연합성명」에 합류하고 나섰다.

또한 북측체육회담 대표단은 4월 18일로 쌍방간에 합의한 제3차회담 일자를 「대화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워 3개월씩이나 일방적으로 연기시킴으로써 사실상 회담을 교착시켰다.

이에 대해 남북체육회담 우리측 대표단은 지난 7월 15일 대북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한측에게 응분의 반성이 있기를 촉구하면서 북한측의 부당한 자세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3차 남북체육회담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측은 그들의 자세를 시정하기는 커녕 7월 24일 또다시 남북체육회담 대표단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당국에 의한 일련의 부당한 책동을 「통일을 촉진하려는 애국적 열망」으로 미화하는가 하면 우리측 대표단을 중상·비방하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았다.

북한측은 8월 8일 우리측에 보내온 전화통지문에서도 7월 24일자 북측 대표단 성명에서의 주장을 되풀이했을 뿐 아무런 반성이나 자세시정의 표시도 없었다.

이같은 북한측의 태도는 그들이 남북체육회담에 나온 근본의도가 과연 남북단일팀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려는 것인지 의심케 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측이 진정 회담의 성사에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회담재개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정치공작을 정당화하고 비호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남북단일팀 구성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9월에 접어들어 북한측은 9월 1일 또다시 3차회담을 9월 13일에 갖자고 제의하였으며, 북한측이 단일팀 문제 토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데 유의하여 9월 12일 우리측이 3차회담의 개최일자로 10월 20일을 제시, 북한측이 이에 동의해옴으로써 제3차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나. 제3차 회담

제3차 남북체육회담은 중단된지 7개월만인 1989년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판문점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공개로 진행되었다.

우리측 대표단은 제3차 회담부터 장병조 대표를 조영승 대표(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로 교체하여 참가했다.

이날 회담은 다른 회담과는 달리 북한측이 문익환·임수경 등 회담 외적 문제를 거론치 않음으로써 대체로 실질문제 토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

우리측 장충식 수석대표는 기초발언을 통해 제3차회담이 장기간 연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단일팀 구성·참가가 시기적으로 촉박한 점을 들어 실질문제 토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 2차 회담에서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측 입장을 새로이 조정한 10개항의 「제11회 북경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제11회 북경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방안〉

1. 선수단 호칭

우리말로는 「한나라」로 하고, 영문으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남북간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 「KOREA」로 한다.

2. 선수단 단기

흰색바탕에 단색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넣는 것으로 하며 지도의 색깔은 하늘색으로 한다.

3. 선수단 단가

우리 민족의 민요인 1920년대의 「아리랑」으로 한다.

4. 선수선발

가. 선수선발을 위해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선발전을 통해 대회에 참가할 선수를 선발한다.

나. 선발전은 각 종목별로 서울·평양 등 쌍방이 동의하는 남북의 지역에서 번갈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 어느 일방에 특정종목의 선수가 없거나 적합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측에서 선발한다.

라. 선수선발의 구체적 방법, 선발전 시기, 경기용 기구, 경기 규칙, 심판선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남북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5. 선수훈련

가. 선수훈련은 선수선발을 위한 합동훈련과 대회에 출전할 선수단의 강화 훈련으로 구분하여 각각 실시한다.

나. 합동훈련에 참가할 선수는 남북 각기 결정하며 그 인원수는 제11회 북경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정하게 될 경기참가 정원수 정도로 하되 종목별 특성에 따라 협의·조정할 수 있다.

다. 합동훈련 기간 중 참가선수는 교체할 수 있다.

라. 합동훈련은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실시한다.

마. 합동훈련은 남북의 기존시설을 이용하여 상호 왕래하면서 실시하되 필요할 때에는 제3의 장소·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바. 합동훈련 실시에 따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남북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사. 강화훈련은 선수단이 구성된 때로부터 대회출전시까지 남북을 왕래하면서 실시한다.

아. 강화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북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6. 선수단 구성

가. 대회에 참가할 선수·임원 등 선수단의 구성은 예비신청 마감일인 1990년 6월 22일 전까지 완료한다.

나. 선수 및 임원구성은 OCA현장 및 해당 국제경기연맹규칙에 따른다.

다. 단장은 선발된 선수의 수가 많은 측에서 맡고 부단장은 선발된 선수의 수가 적은 측에서 맡는다.

라. 경기임원은 종목별로 선발된 선수의 수가 많은 측이 감독을, 적은 측이 코치를 맡도록하며, 본부임원은 쌍방의 선수비율에 따라 구성하되 구체적 임원수는 쌍방 합의에 따라 정한다.

마. 대회에 참가할 선수단은 가능한 한 남북간에 균형을 현저하게 잃지 않도록 구성한다.

7. 선수단 경비

가. 선수단 구성 및 출전에 따른 경비는 선수 및 임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남북이 공동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선발전 및 훈련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측 지역에서 필요한 경비와 편의를 제공한다.

8. 선수단 신변안전보장

쌍방은 선수선발전 및 훈련을 위해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선수단의 신변안전과 귀환을 보장하는 「선수단 신변안전보장각서」를 교환한다.

9. 남북단일팀 공동추진기구

가. 쌍방은 단일팀 구성 및 참가문제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단일팀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한다.

나. 「공동위원회」는 단일팀구성·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1개월 이내에 구성한다.

다. 「공동위원회」는 쌍방 올림픽위원회 및 경기단체 대표로서 각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라. 「공동위원회」는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면서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1)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대회개최 기간 중 열리는 각종 회의참가 및 대회심판 선정에 관한 사항
- (4) 각종 문화행사 참가에 관한 사항
- (5) 기타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따른 제반사항

마. 「공동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서울·평양에 공동사무국을 각기 설치한다.

쌍방은 적정수의 연락인원을 공동사무국에 각각 파견·상주시키고 직통전화를 가설·운용한다.

10. 기타 문제

선수단단복 및 기타 단일팀 구성·참가에 필요한 사항은 쌍방간에 협의·결정하며, 세부사항은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 위임한다.

우리측이 선수단 호칭에 있어 그간 쟁점이 되어온 우리말 표기를 「한나라」로 수정·제의한 것은 「한글학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한」은 하나, 통일, 큼, 위대함 등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또 단기문제에 있어서도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넣자는 북한측 제안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완전한 합의를 보았다.

이에 반해 북한측의 김형진단장은 기초발언을 통해 1,2차 회담에서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였으며 단일팀의 우리말 표기도 「고려」로 하자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토의과정에서

「KOREA」의 우리말 발음인 「코리아」로 하자고 수정 제의했다.

양측이 단일팀의 호칭과 관련, 영문표기로서는 「KOREA」에 사실상 합의했으면서도 우리말로 는 「한나라」와 「코리아」로 팽팽히 맞서자 남북쌍방은 이 문제는 차기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어 선수선발방법 등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선수선발 방법에 있어 우리측은 서울·평양에서 번갈아가며 남북간에 평가전 형식의 선발전을 갖도록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남북선수 구분없이 뒤섞어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남북이 균등하게 선수를 선발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북측은 종목별 선수선발 방법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으나 우리측은 이미 쌍방간에 의견일치를 본 바에 따라 기본문제에 관한 토의를 마치고 단일팀 공동추진기구를 구성해서 실무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남북 쌍방은 단기·단가 등에 합의하였으며, 단일팀 공동추진기구를 구성할 것과 신변 안전보장각서 교환·경비 등 세부절차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단일팀 구성의 관건이 될 선수단 호칭 및 선수선발방법 등에 있어서는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쌍방은 제4차 회담을 1989년 11월 16일 「통일각」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5.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가. 경과개요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남북국회간의 준비접촉은 1988년 8월 19일 제1차 접촉을 가진 이래 그해 12월 29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판문점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과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번갈아 가며 진행되었다.

준비접촉 과정에서 쌍방은 남북국회회담을 「개회모임」, 「의제토의를 위한 모임」, 「폐회모임」 순서로 진행할 것과 대표단구성, 회담시기 등에서는 의견이 접근되었으나 「의제토의 모임」의 형식을 대표회담(쌍무적 성격)으로 할 것인지 대표회의(연석회의 성격)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와 의제문제에 있어서는 상호 입장이 대립되었다.

그러던 중 북측은 제7차 준비접촉에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중지문제」를 본회담의 제1의제로 상정할 것을 제기함으로써 접촉을 공전시켰으며, 뒤이어 1989년 2월 8일에는 2월 10일 갖기로 쌍방이 합의한 제8차 준비접촉을 팀스피리트 훈련이 끝나는 이후로 연기한다는 성명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회담을 중단상태에 빠뜨렸다.

우리측은 2월 9일 수석대표의 성명을 통해 하루속히 준비접촉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으며, 5월 26일에도 대북서한을 보내 제8차 준비접촉을 6월 중순에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 채문식 수석대표가 보낸 동 서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지난해 12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국회회담 제7차 준비접촉을 가진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제8차 접촉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귀측은 지난 2월 8일 돌연 성명을 발표하고 제7차 접촉에서의 쌍방 합의에 따라 2월 10일 「평화의 집」에서 갖기로 하였던 제8차 접촉을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훈련이 끝난 후로 연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2월 10일 성명을 통해 「팀스피리트」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연례적으로 공개리에 실시되는 방어훈련으로서 남북국회간의 회담진행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제8차 접촉을 가질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남북국회회담은 대한민국 국회와 최고인민회의간의 대화라는 점을 상기할 때 귀측이 1986년 초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준비접촉 자체를 중단시키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귀측의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쌍방은 그동안 일곱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에서 본회담의 형식과 의제문제 등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았으며, 조금만 더 토의를 진전시켰더라면 지금쯤은 벌써 남북을 왕래하는 남북국회 본회담이 열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쌍방이 그동안의 준비접촉에서 남북국회회담의 의제로서 토의해온 남북간 교류·협력문제, 남북 불가침선언문제,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등은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서 쌍방이 다같이 그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민족의 현재와 미래에 막중한 영향을 미칠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대화와 협의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곧 온 겨레 앞에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저버리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간의 회담은 외면하면서 우리측의 특정단체와의 회담만을 개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곧 귀측이 대의기구의 권위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겨레의 통일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정세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입장에 있는 남북국회의원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한 민족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남북국회회담을 개최하여 중요한 현안문제들을 협의·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측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을 대표하여 제8차 준비접촉을 오는 6월 중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정중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6월 20일의 뒤늦은 답신에서 제8차 준비접촉을 6월 28일에 갖자는 반응을 보여왔으나 우리측은 북한측이 「대화장애」운운하면서 준비접촉 중단에 책임을 오히려 우리측에 전가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일단 7월 11일에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6.26)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1988년 8월 19일 남북국회회담 제1차 준비접촉이 열리던 바로 그날 서경원 의원을 평양으로 불러들인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우리측은 7월 6일 전화통지문을 보내 회담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신뢰를 뒤엎은 북한측의 행위에 유감을 표하고 북한측이 응분의 반성과 진실성을 표시, 회담재개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기대하면서 제8차 준비접촉 개최일자를 연기할 것을 통보하였다.

북한측은 7월 18일 대표단 성명과 8월 25일 전금철 단장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8차 준비접촉의 조속한 개최를 주장해 왔으며, 우리측이 9월 18일 제8차 준비접촉을 10월 25일에 갖자고 제의하고 북한측이 이를 수락(10.21)함으로써 근 10개월만에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이 재개되게 되었다.

나. 제8차 준비접촉

남북국회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제8차 접촉은 1989년 10월 25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 대표단은 김용환 대표를 이희일 대표(신민주공화당)로 교체하여 참가하였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8분까지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접촉은 북측이 「팀스피리트」 문제, 문익환·임수경·서경원 문제와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함에 따라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일관됐으며 실질문제 토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우리측 채문식 수석대표는 기초발언을 통해 본회담 형식과 회담의제 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다시한번 밝히고 지난 7차접촉시에 제시했던 「남북국회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안)」의 내용을 일부수정하여 내놓았다.

우리측은 이 합의서안에서 지난 7차접촉시에 제시했던 본회담 의제중 「남북적십자회담·남북경제회담 재개 문제를 비롯한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 문제」를 적십자 본회담 개최에 쌍방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 문제」로 수정한 것을 비롯, 「남북불가침선언 문제」,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등 3개항을 남북국회회담의 의제로 하자고 제의했다.

회담형식에 대해서 우리측은 「개회모임」,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회담」, 「폐회모임」순으로 진행하되 「개회모임」과 「폐회모임」은 남북의 국회의원 전원이 참가하는 합동회의 형식으로 하고 「대표회담」은 쌍방에서 각각 50명의 대표가 참가하는 쌍무회담 형식으로 하되, 쌍방 각각 5명씩의 대표로 구성되는 「집행부」와 「공동운영위원회」를 두자고 제의했다.

특히 「의제토의를 위한 모임」의 성격문제에 대해서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자체가 쌍방의 동등한 입장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제6차 접촉에서 「의제토의를 위한 모임」에 참가할 대표수를 이미 50대 50으로 합의해 놓고 있으며, 또한 쌍방이 토의하고자 하는 의제의 성격이 쌍무적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이 남북관계의 현실에 대한 상호인정을 전제로한 쌍무적 회담관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석회의가 아닌 쌍무회담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기초발언에서 임수경·문익환 문제와 이른바 「민족통일협상회의」개최 등 회담외적 문제를 중점 거론한 후 뒤이어 본회담 의제문제와 관련, 「남북불가침선언 문제」와 「다각적인 교류·협력문제」에 대해 의견이 접근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는 「민족통일협상회의」가 소집되면 그 테두리 안에서 이 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또 북한측은 7차 접촉에서 제1의제로 제기하였던 「팀스피리트」훈련중지 문제는 일단 보류하되, 훈련을 계속할 경우 다시 상정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본회담 형식에 대해서도 북한측은 「모든 대표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석하는 연석회의」로 하자는 종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북한측이 기초발언에 이어 준비접촉의 중단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문익환·임수경·서경원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측 국회가 응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음으로써 이들 문제를 둘러싸고 쌍방간에 강도 높은 설전이 전개되었다.

우리측은 준비접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체제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북한측의 부당한 대화 자세를 강력히 공박하는 한편 북한사회의 개방,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보장, 대남혁명전략 포기 등을 촉구하고 북한체제의 독재적 성격을 규탄하였다.

우리측은 「팀스피리트」 훈련 문제에 대해 그 시기·규모·내용을 사전통보하고 심지어 참관초청까지 하고 있는 공개적 훈련이며, 남북간의 긴장의 원인은 오히려 북측에서 비밀리에 실시하고 있는 군사훈련과 공격적인 군사력 증강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문익환·임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법당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북측이 정치공작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민족통일협상회의」에 대해서도 그것이 통일전선책략의 일환으로 북측이 40여년간 되풀이 해 온 연석회의 주장을 포장만 바꾸어 내놓은 것임을 밝히고 우리측의 내부혼란을 조장해 보려는 태도를 즉각 시정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북한이 「우리식 대로 살자」는 구호아래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폐쇄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북한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남조선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고 일체의 정치공작과 테러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이 북한사회의 개방·인권 등을 주장한 것은 그들에 대한 「큰 도발행위」라고 항의하였으며, 「독재적 사회」라고 한데 대해서도 사죄해야 한다고 반발하였다.

북한측이 모처럼 열린 제7차 준비접촉에서 우리측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실질토의를 외면한 채 우리측의 내부문제와 「민족통일협상회의」제의 등 회담외적인 문제들을 집중거론한 것은 국회회담 준비접촉을 우리사회의 내부교란 조장을 위한 선전·선동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여 본회담 성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쌍방은 제9차 준비접촉을 1989년 11월 29일 「통일각」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III. 남북관계 주요동향

1. 남북 교류협력추진협회의 설치·운영

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회의 성격과 기능

정부는 1989년 3월 31일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이것은 「7·7선언」에서 남북간에 쌓인 불신을 씻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간 상호이해와 민족적 유대감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할 것을 밝힌데 따른 후속 실천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대해 정부는 다각적으로 실시하되 분야별로 그 특성과 신분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당국간의 교섭과 보장의 토대위에서 합의하기 쉽고 실천용이한 분야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교류의 분야, 내용 및 규모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분산되어 있던 기능과 역할을 한데 모아 남북교류를 비롯한 통일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법안의 국회통과 이전이라도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 우선 대통령령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발족케 된 것이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및 기본원칙의 수립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관계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기타 남북교류·협력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공존공영을 지향하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회복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7·7선언」의 정신이며, 남북교류협력은 이와 같은 「7·7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민족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은 정부당국의 주선과 허용하에 상호주의 원칙이 존중되는 바탕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북한과 접촉·교류하는 행위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성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국회에 상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이 확정되고 관계 법령이 정비되기 전까지 남북간의 교류협력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였으며,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7월 21일 「남북교류협력 세부시행지침」을 제정, 시행해 오고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이 관문점이나 제3국에서 북한주민 또는 그 대리인과 북한방문, 문화·체육·경제분야 등에서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되, 체육행사 등에서 우연히 만나거나 물자교역을 위한 상담의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 신고로 접촉이 가능하게 되었다.

남북한 주민간 상호방문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협력사업의 경우에도 주무부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되, 물자교역은 1988년 10월 18일 상공부가 발표한 「남북물자교류 운영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교류협력에 관하여 남북한 당국간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침에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구나 단체에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중 분야별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남북한주민간 접촉

(가) 남북한주민간 접촉의 승인

- 인적왕래 또는 기타 목적(물자교역, 협력사업 제외)을 위해 북한주민 또는 그 대리인과 북한이외의 지역에서 접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함.
- 협력사업을 목적으로 북한주민 또는 그 대리인과 북한이외의 지역에서 접촉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의 승인 또는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함.
- 승인부처의 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남북한주민간 접촉의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함.
- 남북물자교역을 위해 북한주민과 북한이외의 지역에서 접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재외공관장 또는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인적왕래

(가) 북한방문 승인신청

-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예정일 4주전까지 방문목적에 따라 해당 주무부처를 경유하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북한방문 승인을 신청함.

- 북한방문 승인신청 절차 및 구비사항은 국토통일원장관이 정함.

(나) 북한방문 승인신청 처리

- 국토통일원장관은 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하고, 동 협의회의심의결과에 따라 북한방문 승인여부를 결정함.
- 국토통일원장관은 북한방문을 승인한 자에게 방문증명서를 발급함.

(다) 북한주민의 초청

- 북한주민을 초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초청승인을 신청함.
- 물자교역 또는 협력사업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무부처를 경유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신청함.
- 국토통일원장관은 위의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하고, 동 협의회의심의결과에 따라 초청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함.
- 북한주민 초청승인 신청절차 및 구비사항은 국토통일원장관이 정함.

(라)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승인신청

- 남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국토통일원장관에게 방문 승인을 신청함.
- 국토통일원장관은 위 신청사항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하고, 동 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방문승인 여부를 결정함.
- 국토통일원장관은 남한방문을 승인한 자에게 방문증명서를 발급함.
-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승인신청은 남한의 초청자가 대행할 수 있음.
-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승인신청 절차 및 구비사항은 국토통일원장관이 정함.

(3) 물자교역

(가) 물자교역의 승인신청

- 대외무역법에 의해 무역업허가를 받은 자 중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 또는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물자를 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승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함.

(나) 승인신청의 처리

- 승인기관의 장은 상공부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함.
- 승인기관의 장은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승인서상에 「남북한교역 대상물품」임을 표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함.

(다) 교역물품의 관세 및 방위세 비과세

- 남북한간 직교역(제3국 단순경유 포함) 물품에 대해서는 내국 물품이동으로 간주하여 관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지 않음.
- 제3국으로 수출된 후 남한에 반입되는 북한물품이 관세법 제34조 규정의 재수입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원용함.

(4) 협력사업

(가) 협력사업의 사전승인

-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그 사업의 승인 또는 허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주무부처의 장은 국토통일원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협력사업의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함.

(나) 협력사업의 승인신청

- 남북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함.
 - 협력사업의 내용 및 방법
 - 사업예정기간
 - 협력사업에 필요한 인원
 - 자금계획
 - 북한측 사업상대자와의 협의서(의향서)

- 북한측 사업상대자에 대한 사항
- 북한당국의 확인서
- 기타 주무부처의 장이 협력사업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다) 승인신청의 처리

○ 주무부처의 장은 남북협력사업 승인신청에 대해 의견서를 첨부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하고, 동 협의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함.

-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 협력사업과 관련된 신청인의 사업실적 또는 활동내용
- 기타 협의회의 결정으로 정한 기준

○ 주무부처의 장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함.

- 1989년 11월 13일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 신청과 관련하여 동 지침에 의한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적왕래 및 접촉(건수)

	승 인	불 허
방 북	1	7
초 청	2	
접 촉	11	3
계	14	10

※ 해외동포 방북신고 : 300명 (시민권자 34명 포함)

○ 물자교역

	품목(종)	금액(천\$)
반 입	39	19,220
반 출	1	69
계	40	19,289

○ 협력사업

- 사전승인 1건(대한올림픽위원회, 북경아시안게임 단일팀구성)

인적 왕래의 경우, 우선 우리측 인사의 방북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전대협」등 대학생과 기타 언론인의 방북신청에 대해 6월 21일 불허방침을 결정했으나, 7월 20일에는 제일교포 이대경목사의 방북신청을 승인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에 의한 최초의 허가조치를 했다.

또한 ▲경희대 사학과 고구려 유적답사를 위한 접촉 ▲경희대 원병오 교수의 북한조류 실태조사를 위한 접촉 등도 승인했다.

이것은 남북간에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어느 일방의 정치선전 또는 공작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는 보장하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승인한 대표적인 초청사례로는 제44차 세계성체대회(10.4~8)와 한민족화합기원 한강연등대법회(10.14)가 있다.

이밖에도 동 협의회는 ▲원광대 국제학술회의 북한학자 초청을 위한 실무접촉 ▲생물공학회 국제학술회의 북한학자 초청을 위한 접촉 ▲동아일보와 미 버클리대 공동주최 학술회의에 북한학자3명을 초청하기 위한 접촉 등을 승인했다.

(1) 제44차 세계성체대회 관련 동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1989년 9월 25일 제44차 세계성체대회에 북한신자들의 초청을 승인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제정된 뒤 북한주민 초청에 대한 첫 번째 승인 사례가 되었다.

이 승인조치는 세계성체대회준비위원장인 김수환 추기경이 박경수 평양장총성당회장등 20명 내외의 북한신자들을 제44차 세계성체대회 참가 및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초청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이 승인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과시하고 앞으로의 민간차원의 남북교류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남북교류에 있어서 대표성과 목적의 순수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시킨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정부는 민간차원의 남북교류가 「7.7선언」과 새 통일방안의 정신에 부합되며 비 정치적인 순수교류목적으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추진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우리 천주교측은 전세계인의 화합의 대안치였던 작년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불참하여 아쉬웠던 만큼, 세계성체대회에 남북한이 같이 참가함으로써 민족화해의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주게 되리라는 기대를 갖고, 평양장총성당 신자를 중심으로한 북한신자들이 서울을 방문하게 된다면 대회장인 여의도 광장과 함께 절두산 등 국내의 천주교성지순례도 가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세계성체대회준비위원회가 로마교황청을 통해 전달한 초청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제44차 세계성체대회에 불참함으로써 휴전 이후 최초의 북한주민의 우리측 지역 방문은 무산되었다.

(2) 한강연등대법회 관련 동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1989년 9월 29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며 남북불교교류협

의회 총재인 서의현 조계종 총무원장이 신청한 북한 불교신도를 초청하는 문제를 심의하고 이를 승인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북한 천주교신자의 초청승인에 이어 「대표성과 목적의 순수성 및 소정의 절차를 밟은」 불교계의 북한신도 초청도 승인함으로써 남북한 종교교류의 승인원칙을 관례로 확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0월 5일 조선불교도연맹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동 연맹 박태호 위원장 등 30명 내외의 북한불교도들을 10월 14일 열리는 한강연등대법회에 초청코자 10월 7일 오전10시 판문점을 통해 초청장을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전달장소인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으며 이날 정오 대남방송을 통해 북한불교도연맹 위원장이 아닌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간접적인 거부 입장을 보여왔다.

북한은 이 담화에서 우리의 초청에 대한 확답을 회피한 채, 남북불교도대표회담을 제의하면서 이 회의에 「정견과 주의·주장에 관계없이 남북의 불교계를 총망라한 각종 단체」들을 참가시키고 협의내용에 「통일문제」등을 추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순수 종교문제 토의를 위한 회담을 제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쌍방 불교도들간의 정치협상회의를 갖자는 의도에서였다고 보여진다.

비록 북한측이 회담의 의제 속에 「한강연등대법회에 초청문제를 포함하여」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통일문제 협상이 아닌 한강연등대법회 참가만을 위한 남북접촉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감추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하겠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방송이 나온 직후 이 사실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측에 통보하고, 비록 북한의 반응이 부정적이지만 그들이 참가의사를 보여올 경우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정부와 불교측의 연락원을 함께 판문점으로 보내서 통과절차 등에 관한 협의를 북한측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13일 오전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미 10월 5일에 제의한 북한불교도들의 한강연등대법회 초청문제와 관련, 북한측 인원의 판문점통과 및 신변안전 등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불교도간의 실무접촉을 이날 오후 4시에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홍파 협의회 사무총장과 박완일 신도회장을 파견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이날 우리측 지역에 들어올 북측 불교도 대표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내무부장관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측의 참가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북한측은 판문점에 대표를 파견하지 않음으로써 남북불교도 실무접촉을 유산시켰으며, 그들이 제의한 불교도대표회담만을 되풀이 주장하면서 이 회담에 우리측의 재야 민중불교단체 등도 참가시켜야 한다고 동문서답을 해왔다.

비록 천주교와 불교의 민간급 남북교류 시도가 북한측의 기피로 인해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우리측은 앞으로도 남북 종교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2. 이수경·문규현 불법입북 문제

가. 경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1989년 6월 2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이수경양이 7월 1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전대협」대표 자격으로 출국, 동베를린에 체류 중이며 6월 30일 중으로 평양에 도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 국민으로 하여금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게 한 이 사건의 충격과는 임양의 평양체류 중의 행적으로 더욱 확산되었으며 특히 문규현신부와 함께 판문점을 통해 귀환함에 이르러 그 절정을 이루었다.

당초 정부는 우리측 대학생들의 「평양집회」 참가문제와 관련하여 부정적 입장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남북간의 다각적인 인적교류의 일환으로 이를 적극 검토해 왔다.

그 동안 정부는 「평양집회」가 비록 반미·반한의 정치적 집회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7.7선언」의 기본정신을 적극 구현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남북대학생 조국순례대행진」, 「남북대학생 친선체육경기 교환개최」 등 전반적인 남북학생 교류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순수한 민간기구인 「남북대학생 교류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다.

1988년 7월 15일 남북학생교류추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교육당국회담」 개최를 북한측에 제의하고 1989년 3월 13일에는 남북대학생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평양집회」 참가 문제를 포함한 대학생교류 문제를 가지고 「남북대학생교류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같은 남북대학생간의 전반적인 상호교류 제의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전대협」을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평양집회」에 초청하는 등 「평양집회」 그 자체를 우리 학생들의 반정부 투쟁의 명분으로 제공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연공통일전선구축을 획책하는 일련의 공작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또한 「전대협」은 남북대학생간의 교류를 성사시켜 보려는 정부의 충정에는 아랑곳없이 당국과의 협의마저 거부하였으며, 「평양집회」를 반정부 투쟁의 명분으로 삼아 북한의 전위조직적인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정부는 4월 26일 문교부장관의 담화를 통해 "남북한의 교류와 접촉은 정부의 승인하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과의 자의적 접촉을 즉각 중지하고 이제라도 「교류추진위」에 동참하여 남북대학생 교류에 따른 합리적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평양집회」 참가문제를 적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이러한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대협」은 4월 28일 판문점행을 강행해 나갔다. 「전대협」은 5월 11일에도 제3기 출범식을 가지면서 「평양집회」 참가투쟁을 계속 벌여 나가기로 결의하였으나, 「평양집회」 개최를 불과 10여일 앞둔 6월 17일 「정치집회불참」, 「남북당국간의 절차협의 동의」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일견 변화된 듯한 「전대협」의 자세는 기존태도의 본질적 변화가 아니며 「평양집회」참가가 불가능하게 된 책임을 정부측에 전가시켜 보려는 전술적 변화일 뿐이었다.

한편 북한은 4월 28일 이른바 명예손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우리측 인사 55명에게 「평양집회」에 초청하는 편지를 보낸다면서 그 편지내용과 명단을 함께 공개 발표한 데 이어, 5월 4일에는 「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 「조선학생위원회」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등 그들 단체와 우리측 「전대협」, 「전국청년단체 대표자협의회」 「교류추진위」가 참가하는 6개단체회담을 열어 「평양집회」 참가문제를 협의·해결하자고 공개 제의해 왔다.

북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6월 18일에는 이른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조선준비위원회」 성명을 통해 6월 23일부터 관문점 북측지역을 일방적으로 개방할 것을 선언하면서 「전대협」을 비롯한 500명 정도의 우리측 청년학생들을 「평양집회」에 초청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대협」이 「남북대학생 교류추진위원회」에의 참여의사를 표명한데 때맞추어 북한측이 이같이 관문점 개방 등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평양집회」문제가 시간적으로 사실상 어렵게 된 시점에서 우리 정부에 이의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평양집회」문제를 최종적으로 우리 국내 정치쟁점으로 증폭시킴으로써 「전대협」 등 운동권 학생들의 대정부투쟁을 가열화시켜 보려는 대남심리전 차원의 책략이라고 할 수 있다.

「평양집회」 개최가 임박해지면서 북한측과 「전대협」의 불순한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1989년 6월 21일 회의를 갖고 「평양집회」가 정부의 기본 통일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초하여 「평양집회」와 관련한 참가신청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의결하였다.

동 협의회는 이같은 결정이 「7.7선언」의 정신과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협의회」의 입장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남북간의 학생교류를 비롯한 제분야의 교류·협력을 정부가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보장토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어떠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도 정부당국과의 사전 협의하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상호주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또 「평양집회」 참가문제는 당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치 못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평양집회」 참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대협」은 장기간의 치밀한 계획아래 임수경양을 불법입북시킴으로써 전체국민들에게 놀라움과 함께 배신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나. 입북후 행적과 판문점을 통한 귀환

임수경양은 동베를린을 경유하여 6월 30일 평양에 도착한 후 7월 1일 「평양집회」 개막식에 참가하였으며, 동집회 기간중인 7월 8일까지 환영군중집회, 기자회견, 김일성주최 연회 등을 통해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북한의 통일노선에 동조하였다.

또한 7월 7일에는 북한의 대남선전논리를 그대로 담은 「남북학생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국제평화대행진」(7. 20~27) 행사에 참가하였는 가하면 7월 27일부터는 판문점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임수경양 불법입북사건은 임양이 재미동포인 문규현 신부와 함께 7월 27일 판문점을 통한 귀환을 시도하고 북한측이 이들의 신변안전을 요구해옴으로써 남북간에 새로운 불씨로 등장하게 되었다.

7월 27일의 판문점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7월 28일 국토통일원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규탄하였다.

국토통일원 대변인 성명

북한은 어제 임수경·문규현을 비롯하여 이른바 「국제평화대행진」의 참가자들을 판문점에 보내 그들의 정치공작행위를 정당화하는 각본에 이용하는 등 또다시 도발적 행위를 자행하고 나섰습니다.

판문점은 어디까지나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관문이 되어야 하며 결코 상대방 체제를 파괴하는 길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 국민 모두가 우려했던 대로 회담의 장이어야 할 판문점을 도발적인 정치선전장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단식농성의 장으로까지 만드는 철면피한 행위를 감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남북대화를 하는 배후에서 우리 국회의원과 종교인, 문화인 등을 비밀리에 평양에 불러들여 정치공작을 펴는가 하면, 가당치도 않은 금전공세를 통해 우리측 인사를 회유·유인하려는 음모가 밝혀지는 등 남북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긴장과 대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이중적 작태는 대화상대방에 대한 노골적인 기만행위로서, 그들이 정상적인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인정과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책임있는 당국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잘 진행되던 대화마저도 의도적으로 난관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측이 이에 대해 응분의 반성과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한데 대해서도 오히려 적대와 대결로 응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화」의 이름 하에 평화를 유린하고, 「민간급 대화」를 내걸면서 우리 체제를 파괴하려는 양두구육의 비열한 행동을 눈가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북한이 진심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판문점을 추악한 선전장으로 만든 데 대해 민족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며, 대화상대방을 비방하고 전복시키겠다는 그릇된 환상을 버려야만 할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을 정치공작 차원에서 계속 악용한다면 이는 스스로의 파멸을 재촉

하는 길임을 깨달아, 우리 학생을 정치적 제물로 삼는 비인도적 작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의 한이 어린 판문점은 이제 더 이상 비극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되며, 민족의 자존과 통일을 지향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두고자 합니다.

임수경양과 문규현 신부 등은 8월 1일에 일단 단식을 끝내고 철수하였다가 8월 15일 북한측의 방조아래 판문점을 통하여 우리측 지역으로 넘어왔다.

한편 북한측은 임양의 판문점통과 귀환 문제와 관련, 군정위를 통해 신변안전·편의보장을 유엔 사측에 요구(8. 13)하였으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및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장의 지지대화발표(8. 13), 「사료청」·「조선학생위원회」 공동주최 환송연회 개최(8. 13), 임수경 환송 평양시 군중집회를 진행(8. 14)하였다.

또한 임수경양은 단식 중에 세계각국 국회·정부·정당 및 대한적십자사 총재 그리고 국제적십자사연맹 총재 앞으로 편지를 보내 판문점통과 귀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임양과 문신부는 8월 15일 귀환 당일 각기 출발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정부 당국을 반통일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맹렬히 비난하였다.

북한측이 우리측의 일부 인사들을 불법입북시켜 정치공작행위를 감행해 오다가 급기야 임수경·문규현 두 사람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임의로 통과시킨 것은 한반도의 휴전체제마저 위태롭게 하는 도발행위였다.

정전협정 제1조 7항은 “군정위의 특정한 허가없이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군정위의 특별한 허가없는 판문점 통과가 정전협정에 위반되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

그간 판문점 통과는 남북 당국간의 합의가 선행된 후 군정위에 협조요청을 하고 군정위가 허가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이 같은 절차는 그간 남북회담 대표단의 왕래와 고향방문단 교환 등에 적용되어 왔다. 따라서 남북당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남북한의 민간인사에 대한 판문점 통과는 군정위가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 관례였다.

판문점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길로 이용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반대하기 위해서나 상대방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판문점을 악용하는 것은 남과 북 어느 쪽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다. 남북쌍방의 주요동향

임수경양과 문규현신부의 밀입북 행위는 우리의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의법조치되는 것이 당연하며 귀환 후의 처벌문제에 대한 북한측이 간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북한측은 7월 20일 북한적십자사회위원장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김상협 한적총재와 이흥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각각 전화통지문을 보내 임수경양의 판문점통과와 귀환 후의 신변안전에 대하여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상협 한적총재는 7월 26일 이것이 「적십자사가 간여할 문제가 아님」을 통보했으나, 북한측은 7월 2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과 7월 27일 북적대변인 성명을 통해 임수경 귀환문제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북한측은 7월 30일에도 또다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임수경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임양의 판문점 농성이 끝난 후 8월 8일 북적위원장 손성필은 임수경 판문점 통과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간 실무대표접촉을 제의했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병수는 이흥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국토통일원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간의 실무자접촉을 제의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8월 10일 김상협 한적총재는 이 문제는 적십자사가 간여할 문제가 아님을 거듭 밝히고 북적이 북한당국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동조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적십자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 오기를 촉구했다.

국토통일원은 8월 1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8월 8일자 「조평통」의 실무자접촉 제의가 “임수경을 정치선전에 이용해온 반인륜적 행위를 호도하고 정당화하려는 술책”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측이 “일개 단체의 국장을 내세워 우리 정부의 장관에게 직접 전화통지문을 보내온 것은 상식에도 벗어난 지극히 무례한 처사로서 북측의 대화자세가 얼마나 불성실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박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8월 1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임수경의 귀환과 신변안전에 대한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임수경양과 문규현신부가 판문점을 통하여 귀환한 후인 8월 16일 이흥구 국토통일원장관은 성명을 통해 두 사람의 판문점 군사분계선 임의 통과에 대하여 “이는 그간 북한측이 자행해 온 정치공작 행위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서 한반도의 휴전체제마저 위태롭게 하는 실로 놀라운 도발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그간 북한측이 우리측 인사를 정치공작 차원에서 이용하고 판문점을 정치선전장화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남북간의 정상적인 대화를 기피하고 외면한 것으로서 더 이상 이 같은 정치공작적 행위가 되풀이 될 경우 북한측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모든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장관은 “우리의 법질서를 위반한 자들에 대한 처리는 어디까지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결코 북한측이 이를 시비하거나 간섭할 일”이 아닌 만큼 “북한당국은 적화혁명의 그릇된 환상을 버리고 민족적 양심으로 돌아와 남북대화 재개를 비롯한 우리측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하루빨리 호응해와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조선천주교인협회 중앙위원회 성명,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회장 담화 등을 통해 계속 자기들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가 하면, 남북적십자제1·2차 실무대표접촉과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3차 예비회담, 남북국회회담 제8차 준비접촉에서도 실질토의는 뒷전으로 미룬 채 계속 임수경·문규현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북한측의 남북대화에 임하는 자세의 순수성을 의심케 했다.

북한이 그들의 정치공작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 당국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인도주의적 업

무를 담당하는 적십자사에 대해서까지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은 상호존중의 원칙을 노골적으로 유린하는 행위이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려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북한이 진심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특정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한 정치공작 행위를 더 이상 자행해서는 안되며, 휴전체제를 훼손하고 상대방 체제 내부분제를 간섭하는 도발적 행위를 중지해야만 할 것이다.

3. 북한측의 「민족통일협상회의」 제의

가. 제의내용

북한측은 지난 9월 28일 이른바 당국·정당·단체 연석회의라는 것을 열어 「민족통일협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이 제의를 담은 대남편지를 채택하였다.

이 제의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가대상>

-남과 북의 당국·주요정당·단체 대표 및 국내외 개별적 인사

<회의규모>

-남과 북 동수로 모두 60명 정도

<회의형식>

-남과 북 구별없이 모든 대표들이 동등자격으로 참가하는 다무적 원탁회의 방식

<의제>

-남과 북의 당국·정당·단체들이 내놓은 통일방안

-민족공동선언 발표문제

-그밖에 평화통일 촉진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 제안

<회의시기 및 장소>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하되, 첫 회의는 1990년 2월 20일 평양에서 개최

-이를 위해 1989. 11~1990. 1 기간중 남과 북의 당국·정당·단체들의 쌍무적 또는 다무적 접촉(예비회의)

북한측은 9월 29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 편지를 연석회의 집행부 명의로 우리측 당국·정당·단체들에 10월 3일 전달하겠다고 통보해 왔으며, 이에 대해 우리측은 당국 앞으로 오는 편지에 한하여 10월 4일 이를 접수하겠다고 뜻을 북한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10월 3일 방송을 통해 「대남서신을 남측에 전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강변하면서 일방적으로 편지내용을 공개하고, 이 편지들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겠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측이 밝힌 수신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단 체 명	단 체 명
1. 국무총리	11. 「전대협」
2. 민정당	12. 한국여성단체협의회
3. 평민당	13. 한국여성단체연합
4. 민주당	14.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5. 공화당	15.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6. 진보정치연합	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7. 「전민련」	17.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8. 전국노동단체협의회	18.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
9.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 천도교 중앙총국
10. 전국농민운동연합	

나. 북한측의 태도 평가

북한의 「민족통일협상회의」 제의는 우리측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내년 8월 15일까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현장을 채택하자고 제의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측이 이 제의를 통해 남북의 당국과 정당·단체들이 내놓은 통일방안을 광범히 협의하자는 것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이 아닌 우리 사회내 여러 가지 통일방안중의 하나로 격하시키자는 의도이다.

또한 북한측이 민족통일협상회의의 테두리내에서 「최고위당국자」들이 아무때나 만날 수 있다고 한 것도 남북정상회담에 호응할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민족통일협상회의」에는 대표들이 남북 구별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여 다무적 원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했는데, 이는 기존의 대민족회의나 남북연석회의의 연장선상에서 그 명칭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국토통일원은 9월 29일 다음과 같이 논평을 발표하였다.

국토통일원 대변인 논평

금번 북측의 제의는 금년도 신년사에서 김일성이 강변한 「남북정치협상회의」의 재판으로서 전혀 새로운 것이 없음. 다만 북측이 우리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한 후 다시 「민족통일협상회의」를 제의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음.

북측은 저들의 통일방안은 고려연방제 하나일 수밖에 없고 우리측에는 각이한 통일방안이 난립하고 있는 양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과 병렬시키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태도임.

통일문제 협상은 대화의 주체가 분명히 당국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이번에도 각계 각층 대표를 망라한 정치협상회의를 제의한 것은 사실상 생산성있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음.

이와 같은 저의는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이 전혀 없는 남북연석회의 방식이 이루어져야 각종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명백히 입증됨.

남북간에 적십자회담 실무대표접촉과 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북측이 구태의연한 통일전선책략을 구사하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실임.

북측이 진실로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모처럼 조성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분위기를 깨트리는 무분별한 행위를 지양하고, 현실적이고 정당한 자세로 전환할 것이 절실히 요구됨.

한편 북한측은 우리측 대표명단을 일방적으로 선정·발표하였을 뿐 아니라 편지 수신대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총 19개 수신대상 중 국무총리 및 4당을 제외하고 총 14개 단체가 재야단체인바 북한측이 노동당의 외곽단체를 내세워 사실상 우리측 재야단체들과의 회의를 하자면서 「민족통일협상회의」란 명칭을 이용한 것은 우리 사회내 통일논의 활성화에 편승하여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한편 이른바 연공통일전선 구축을 획책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북한측은 마치 우리측이 편지접수를 거부한 듯이 선전하고 있으나 그들이 전달하겠다고 한 날짜인 10월 3일은 공휴일로서 쌍방이 휴무일에는 직통전화·편지교환을 해온 전례가 없음을 고려하여 10월 4일로 일자를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남북간의 직통전화와 편지교환은 회담진행과 관련한 연락업무 및 그밖에 남북간의 관계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남북간의 현안과 통일문제 해결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정부당국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였던 것이다.

남북간에 상호불신과 대결의식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측이 기존대화의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중집회식 회의의 제의나 대남 편지공세를 그만두고 성실한 자세로 정상적인 대화에 임해 나와야 할 것이다.

북한측이 1980년 이후 이 제의와 유사한 정치협상회의 또는 연석회의를 제의한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정치협상회의」·「연석회의」제의 관련 주요사례>

제의명칭	내용	비고
「정치협상회의」 및 「당국자 회담」 제의 (1980.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무원총리 이종옥 명의 및 「조평통」 위원장 김일 명의의 별도 편지를 통해 각기 제의 ○ 남북간 정치협상회의, 당국자 회담, 고위당국자회담 등의 개최문제와 평화통일과 관련한 제반문제 협의를 제의 ○ 시기 및 장소: 빠를수록 좋으며 판문점 또는 서울·평양이나 제3국 ○ 수신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옥 편지: 신현확 총리 - 김일 편지: 김종필, 김영삼, 정일권, 양일동, 김철, 윤보선, 김대중, 안필수, 함석헌, 김수환, 이회성 ※ 우리측이 총리앞 편지만을 당국간 대화 의사표명으로 수용,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역제의하여 1980. 2.6~8.20 실무대표 접촉 10차례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6이후의 우리측의 정국불안을 노린 정치적 선전공세 의도
「남북정치인 100인 연합회의」 제의 (1982.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구국에 뜻을 둔」 남북 각 50명의 개별적 정치인들이 참가하는 100인 연합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 ※ 당국 및 정당단체인사 배제 ○ 의제: 「고려연방제」를 포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모든 통일방안, 남북간의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선정·발표한 남측대표 50명 중에는 반한친북 교포, 범법 구속자, 유령단체인사 포함 최홍희, 배동호(한민통대표), 이정상(통혁당대표)
「남북연석회의」 제의 (1988.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쌍방 당국자를 포함하여 제 정당·사회단체대표들과 각계인사가 참가하는 남북연석회의 소집 제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이 우리측 인사 50명을 일방적으로 선정

<p>「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 (1989.1.1)</p>	<p>○의제 :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문제, 다국적군축 회담 문제, 제24차 올림픽 공동주최 문제, 상호비방·중상 중지문제</p> <p>○장소 : 서울·평양 윤번제 개최</p> <p>○연방제통일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p> <p>○남북정치협상회의 소집을 위해 4당총재 및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백기완씨를 평양에 초청</p>	<p>—국무총리, 민정당 등 총재 8명 종교·사회단체대표(35명), 개별인사(6명)</p> <p>○우리의 평화적 정부 이양과 총선거 실시 등 정국 과도기에 편승하여 무분별한 통일대화·논의를 유발·조장함으로써 국론분열 획책 및 사회 혼란 조성</p> <p>—올림픽 불참명분 확보</p> <p>—KAL기 폭과책임의 비난 모면·회석</p> <p>○우리의 새통일방안을 건제하고 국내일부계층의 연방제 통일논의를 충동하려는 기도</p>
---------------------------------	--	---

남북대화 제49호

(1989. 12. ~ 1990. 4)

< 목 차 >

I.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3
II. 남북대화의 진행	10
1. 남북고위당국자 회담 예비회담	10
가. 제4차 예비회담	10
나. 제5차 예비회담	12
다. 제6차 예비회담	13
2. 남북 국회회담 준비접촉	18
가. 제9차 준비접촉	18
나. 제10차 준비접촉	20
3. 남북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21
가. 제5차 실무대표 접촉	21
나. 제6차 실무대표접촉	23
다. 제7차 실무대표접촉	29
라. 쌍방 수석대표 개별접촉	30
마. 수석대표 개별접촉 이후 동향	31
4. 남북체육회담	33
가. 제4차 회담	33
나. 제5차 회담	38
다. 제1차 실무대표 접촉	40
라. 제2차 실무대표 접촉	42
마. 제3차 실무대표 접촉	43
바. 제6차 회담	44
사. 제4차 실무대표 접촉	46
아. 제5차 실무대표 접촉	48
자. 제7차 회담	50
차. 제6차 실무대표접촉	64
카. 제8차 회담	65
타. 제9차 회담	66
파. 남북체육회담 결렬이후 관련 동향	68
III. 남북관계 주요동향	70
1. 남북대화의 중단	70
가. 북한측의 일방적 회담연기	70
나. 우리측의 남북대화 재개추구	73
2. 『남북 당국·정당 협상회의』 관련동향	75
가. 김일성 신년사 발표	75
나. 북한의 『남북 당국·정당 협상회의』 제의	77
다. 북한의 「콘크리트 장벽 참관단」 초청 제의	84
3. 북한 「IPU 총회 남북단일 대표단」 참가 제의	86
4. 북한의 제4남침용 땅굴발견 관련 동향	88
<부록> 남북대화 관련 주요동향일지(1989.1.1-1990.4.7)	90

I.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1. 국정운영 기초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1월 10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1990년대를 「희망의 연대」, 「결실의 연대」로 규정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비전과 거시적 방향을 국정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보통사람들이 성실히 일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의 사회」를 건설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치안, 교육개혁, 과학기술진흥, 환경보전, 도시교통난 개선 등 5대 당면과제에 대해 본격적인 해결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통일·대화정책과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안에 통일의 결정적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함께 실현성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인 남북화해정책의 추진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이것은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의 개혁·개방화라는 급격한 변화로 비롯된 국제질서의 재편성 과정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세계의 화해를 주도하고 남북화해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야 한다는 집념을 구현한 것이라 하겠다.

노태우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취임사를 비롯해 「7·7선언」, 유엔총회연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 일련의 대북제의를 통해 남북이 냉전시대의 산물인 대결과 대립의 관계를 벗어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화해와 통일의 시대를 함께 열어 갈 것을 촉구해 왔다.

이와 함께 북한이 폐쇄와 고립의 문을 열고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하여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노태우 대통령은 이번 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에의 호응을 재촉하는 한편 남북 통행·통신협정 체결의 추진, 금강산을 포함한 관광자원 공동개발 등 경제공동체 형성, 팀스피리트 90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규모축소 등을 제시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의 이러한 진취적 새 제안은 남북관계의 낙관적 전망을 토대로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북한을 가능한 자극하지 않겠다는 포용적인 자세의 표명으로서, 북한측의 호응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현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북한을 경쟁상대로 하는 시기는 지났으며, 우리 민족의 소망인 민주·번영·통일을 실현하여 이 세기가 가기 전에 통일민주복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2천년대를 향한 화합의 대행진을 시작할 것을 역설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초연설 내용중 통일·대화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정운영 기초연설(통일·대화 관련 부분)

여러분,

동서화합의 큰 축제가 된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북방정책의 추진을 통해 우리는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한국은 냉전체제 속의 대결이 아니라 세계의 화해를 이끄는 나라로서 국제사회에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과 유럽의 전통적인 우방과 더 없이 공고한 관계를

이런 바탕 위에서 이제 본궤도에 오른 북방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헝가리·폴란드·유고슬라비아와 새로이 열린 외교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며 다른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한해 2만명 이상이 중국과 왕래하고 우리 항공기가 소련상공을 날아 유럽을 오가는 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중국과 최근 영사관계를 수립한 소련, 그리고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과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관계발전을 추구할 것입니다.

자유와 번영을 향해 혁명적인 변혁을 몰아온 동유럽의 물결은 머지 않아 북한에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변화가 북한에서 질서있고 평화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다함께 번영을 누려야 할 같은 민족공동체로서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하여 개방으로 나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경쟁대상인 때는 지났습니다.

분단 반세기를 앞둔 이제 남북한은 상호신뢰의 바탕 위에서 대화·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나는 대통령 취임사와 1988년 10월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우리가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남북동포간의 자유왕래를 실현하며 남북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를 전면 개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나의 「7·7선언」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남북이 개방과 교류를 바탕으로 모든 분야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북한의 최고당국자가 새해 들어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나는 이를 환영합니다.

민족통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이 문제는 남북당국, 특히 그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하며 북한당국이 이에 응해오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지금 남북한간에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편지 한통, 전화 한통화 주고 받지 못하며 이산가족의 고향방문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자유왕래 전면개방의 합의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서신교환과 전화통화, 남북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왕래부터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산가족 모두가 어렵다면 60세 이상 나이든 분이라도 당장 고향을 찾아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측이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며 통행·통신협정의 체결을 추진할 것입니다.

남북한이 상부상조의 입장에서 서로에 이익이 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금강산을 포함한 관광자원 등을 공동개발하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한간의 물자교역도 계속 추진하여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체육회담을 통해 오는 9월 북경 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한 단일팀을 내보내는 문제

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노력이 단지 단일팀 구성에 그치지 않고 남북체육교류를 통한 상호개방과 협력에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남북대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 올해 팀스피리트 훈련을 축소하여 실시하기로 한·미간에 합의하였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조금도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를 기대하면서 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방어목적의 이 훈련을 직접 참관하도록 북한과 중국 및 중립국감시단 4개국을 초청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북한이 실시하고 있는 군사훈련을 우리도 참관할 수 있도록 조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평화와 화해를 위한 우리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현실은 냉엄합니다.

불행히도 북한은 아직 변화하지 않고 그들의 경직된 노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바깥으로부터 변화의 압력을 받을수록 한반도의 상황은 불안이 가중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출 것이며 한·미 안보협력체제를 굳건히 견지할 것입니다.

2. 관련 주요내용

가. 남북정상회담 재촉구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측이 금년도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일성 신년사’에 대해서는 본책자 Ⅲ부 참조)

그러나 북한측이 자유왕래·개방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군사분계선 우리측 지역의 콘크리트 장벽을 제거하라는 허구적 선전 논리를 내건데 대해서 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못박았으며, 또한 그러한 문제가 결코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협상회의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문제는 어디까지나 쌍방 당국, 특히 남북간의 모든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과 권능을 가진 쌍방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이후 수차 남북한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해 왔으며,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논의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까지 한 바 있다.

이번 회견에서 북한측의 정치선전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측 제의에 일단 적극적 입장을 보인 것은 국력우위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을 어떻게 하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보려는 충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3월 1일 제71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정치군사 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모든 현안을 제한없이 논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안에 남북한 정상회담을 열 것을 다시한번 북한측에 촉구하였다.

나. 통행·통신협정 체결 제의

노태우 대통령은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의 합의에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서신교환과 전화통화 그리고 남북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왕래부터라도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산가족 모두가 어렵다면 60세 이상 나이든 분이라도 당장 고향을 찾아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행·통신협정 체결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남북간에 40여년간 지속되어온 적대와 대결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평화통일의 여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이 필수적 선결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북한측에 대해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실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7·7선언」 이후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협력과 자유왕래를 위한 제반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그들 사회내부의 자유왕래마저 통제를 강화하면서 남북간의 자유왕래에 필요한 신뢰회복에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는 등 한결같이 우리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

이에 따라 남북간에는 아직까지도 같은 민족끼리 편지 한장, 전화 한통화조차 주고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1천만 이산가족의 고통과 불행은 더욱 가중되어 가고 있다.

남북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만남과 연락 등 상호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간 통행·통신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쌍방당국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 순서이다.

노태우 대통령이 이번에 통행·통신협정 체결의 추진의지를 밝히고 고령의 이산가족만이라도 생전에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가장 절실하고 실현가능한 최소한의 제의로서, 분단 반세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한다는 인도적·동포애적 견지에서나 세계적인 개방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 하겠다.

다.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한이 상부상조의 입장에서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물자교역 등 실질적인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남북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금강산을 포함한 관광자원공동개발문제를 제시하였다.

금강산 공동개발 문제는 1989년 1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간에 일차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 있어 북한의 호응에 따라서는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미 「7·7선언」을 통해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남북간 경제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남과 북은 서로의 이념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통일을 완성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상사의 북한물자 교역허용, 직·간접 교역물자 관세 비과세를 비롯한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를 취하는 등 그동안 남북한 상호이익에 입각한 물자교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는 북한의 경제난 타개라는 수요 및 남북간 경제의 상호보완성 제고라는 실질적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의 개방을 통해 민족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는데 주도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 경제협력의 착실한 발전은 정치·군사문제와는 달리 무엇보다도 북한측을 자극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는 우리측의 기존입장 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이 제71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서로가 필요로 하는 물자의 교역이나 공여, 관광 및 국토개발과 공장의 건설 등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한 관계자간의 협의를 당장이라도 개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힌 것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우리의 이같은 추진노력을 가속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라. 팀스피리트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규모축소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 올해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축소 실시하는 한편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북한과 중국 등 휴전협정 당사자와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체코 등 중립국감시단 4개국이 이 훈련에 참관하도록 초청하고 아울러 북한도 그들이 실시하고 있는 군사훈련을 우리가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이 직접 군사훈련 규모축소 등을 제안한 것은 그동안 남북간의 정치·군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우리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은 1976년부터 연례적으로 진행되어온 공개적인 훈련으로서 그 동안 북한측에 동 훈련계획을 사전 통보하고 참관 초청까지 해왔다.

특히 동 군사훈련은 북한측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여 체제안보를 위해 실시하는 방어목적의 훈련으로서, 어떤 국가든 유사시에 대비해 쌍무적, 집단적 자위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측이 간섭·시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남북 대화와 연관시켜 왜곡·비난하고 각종 회담의 정상적인 진전을 가로막는 명분으로 악용해 왔다.

이번에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할 것을 밝힌 것은 긴장완화와 평화를 지향해 나가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경주하고 있는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의 일환이다.

북한이 대규모 군사력을 전방에 집중배치하고 모든 군사훈련을 비밀리에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측 또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II. 남북대화의 진행

1. 남북고위당국자 회담 예비회담

가. 제4차 예비회담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4차 예비회담은 1989년 1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7분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우리측 송한호 수석대표는 첫발언을 통해 지난 세차례의 접촉이 회담외적 문제로 인해 공전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는 북한측이 예비회담의 기본사명에 따라 본회담 개최를 위한 절차문제 토의에 성의있는 태도로 임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그동안 계속 단일의제안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측 입장을 고려하여 우리측의 기존 6개항 의제를 포괄하는 절충안으로 단일의제를 제시하고 대표단 구성에서도 수행원수를 '30명 내외'로 수정제의 하는 등 본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대폭적인 양보입장을 보였다.

본회담 의제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이미 지난 1차 예비회담에서 제시한 ①상호비방·중상 중지 문제 ②상호존중 및 불간섭 문제 ③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실시문제 ④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⑤정상회담 개최 문제 ⑥기타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 등 6개항의 의제가 남북쌍방의 주장을 다같이 반영한 합리적인 제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의제문제로 인해 본회담의 개최가 지연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적극적 자세에서 북한측의 포괄적 단일의제 주장을 수용하여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과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를 수정의제로 제의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측의 수정제의는 어떻게 해서든지 본회담을 조속히 성사시키고자 하는 우리측의 성의있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서, 「교류·협력」문제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군사」문제를 포괄하여 병행 토의함으로써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함께 교류·협력과정에서 제기되는 통행·통신·통상 등 제반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정착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울러 우리측은 남북당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만나는 만큼 본회담 명칭, 대표단 구성에 있어서도 남북간에 다양한 현안문제를 폭넓게 협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회담형식, 합의서 채택, 회의기록 및 보도, 신변안전보장, 의전 등 16개항의 「본회담 세부운영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날 회담에서 북한측은 지난 여러 차례의 접촉에서와는 달리 팀스피리트 훈련문제나 문익환·임수경 사법처리 문제 등 회담외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시비를 피하는 등 일견 본회담 개최를 위한 절차문제 토의에 호응하는 것처럼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실질문제 토의에 들어가는 우리측이 수정제의한 단일의제안에 대해 그들의 의제안인 「남북간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에 접근해 온 것이라며 대체적인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교류·협력」문제가 이미 「정치·군사적 대결상태해소」문제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구실을 내걸어 의제에 「교류·협력」을 포기하는데 반대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긴장완화와 불신해소를 위해서는 정치적 대결과 참여한 군사적 대치문제라는 중심고리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선후차 논쟁을 야기하면서 「정치·군사문제가 해소되면 교류·협력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억지 논리를 통해 이른바 정치·군사문제의 우선적 해결 주장을 들고 나왔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은 본회담 명칭도 의제문제와 관련이 있다면서 반드시 「북남 고위급 정

치·군사회담」으로 해야 하며 대표단에는 군실권자 2명이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측의 생산적 대화진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실질적 진전을 회피한 채 「교류·협력」과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쌍방간의 원칙논쟁만을 유발함으로써 결국 4차 회담도 사실상 공전되고 말았다.

우리측이 본회담 개최의 최대관건인 의제문제에서 북한측의 주장을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실질문제 토의에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또다시 4차회담을 의도적으로 공전시킨 것은 아직까지 본회담 성사에 대한 그들의 적극적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쌍방은 다음 5차 예비회담을 1989년 12월 20일에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나. 제5차 예비회담

제5차 예비회담은 1989년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5분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제5차 예비회담에서 북한측은 선발언을 통해 지난 회담에서 여러 차례 제기해온 회담외적 문제를 거론치 않고 회담절차 문제에 관련한 합의서 초안을 제시하는 등 회담의 실질적 토의에 호응하는 자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쌍방은 동 예비회담의 개최 이래 처음으로 회담절차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상호 이견을 보여 온 본회담 명칭, 의제, 대표단 구성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절충함으로써 회담외적 문제로 공전되어 온 지난 회담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이룩하였다.

5차 회담에서 쌍방이 상호 합의를 보았거나 의견의 접근을 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회담 명칭문제에 있어서 우리측이 남북의 총리가 만나 남북관계 개선을 이룩하는 문제들을 폭넓게 토의하기 위해서 「남북총리회담」 또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으로 해야한다고 한 데 대해 북한측은 종전의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고수하다가 「남북고위급회담」으로 수정제의 해왔으며 이에 우리측이 동의함으로써 회담명칭을 「남북고위급회담」으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둘째, 본회담 의제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측은 4차 예비회담에서 단일의제로 수정제의한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 문제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문제」가 북한측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의제이며 북한측이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굳이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북한측이 수락할 것을 재촉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문제」안에 교류·협력 문제가 포함되었다는 주장만을 계속하였으나 그 후 토의과정에서 「북과 남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하여」라는 의제로 절충하여 왔다.

우리측은 북한측의 수정제의에 대해 「교류·협력」과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가 병행토의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편의주의에 따라 의제를 각기 편리한대로 표기하자고까지 양보하였으나 북한측은 계속 자기측 의제표현 방식을 고집함으로써 타결을 보지 못하였다.

셋째, 대표단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군 대표로 참모총장급 1명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북한측이 원한다면 북한측은 2명의 군사대표를 포함시켜도 좋다는 입장을 주장했으며, 북한측이 이에 대해 군 총참모장급을 포함시키는 조건하에 2명의 범위내에서 각기 편리한대로 하자는 수정제의를 함으로써 군 대표의 수에 합의를 보는 한편 대표단을 지원할 수행원 수는 각기 33명으로 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쌍방은 본회담의 명칭, 시기 및 장소, 대표단 구성 등에 합의하였으며 의제도 비록 표기순서에 이견을 나타내고 있으나 다각적인 교류·협력문제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를 병행토의한다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봄으로써 「남북고위급회담」의 개최에 대한 내외의 기대를 높여주었다.

한편 쌍방은 제6차 예비회담을 1990년 1월 31일에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5차 예비회담에서 북한측이 실질문제 토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우리측의 입장에 대부분 동의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본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위한 성의에서라기 보다는 동구권의 개혁·개방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폐쇄체제에 대한 내외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켜 보려는 의도에서라고 할 수 있다.

다. 제6차 예비회담

제6차 예비회담은 1990년 1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관문점 북측지역에 있는 「통일각」에서 공개리에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남북고위급회담을 하루빨리 성사시킴으로써 통일로 나아가는 획기적 국면을 열어놓기 위해 지난 1년동안 진행되어온 동 예비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회담에 임하였으며, 이에 따른 북한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하였다.

우리측 송환호 수석대표는 첫 발언을 통해 그 동안 진행된 5차례의 회담 결과에 대해 「난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간에는 많은 부분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거나 합의에 도달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하면서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의제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내용상에 의견차이가 없다면 상호 편의주의로 표기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의제를 우리측은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과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문제」로 하고 북한측은 「북남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문제와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실시 문제」로 표기하여 의제문제를 타결토록 촉구하였다.

이어 우리측은 그 동안 회담에서 제기되었던 쌍방의 입장과 합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정리한 「남북고위급회담개최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고 쌍방간 의제표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별도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합의서의 문안정리를 끝낸 후 7차 예비회담에서 서명 교환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5차회담시 보여주었던 적극적 대화자세와는 달리 회담벽두부터 금년초 김일성 신년사에서 제기된 이른바 「콘크리트 장벽」철거와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의 개최, 그리고 한미 합동군사훈련 문제를 들고 나와 실질토의를 거부하고 끝내 회담을 공전시키고 말았다.

북한측은 우리측의 탱크저지용 군사시설물을 베를린 장벽과 같은 남북간 자유왕래와 개방을 막고 있는 장애물인 것처럼 왜곡 비방하는 허구적인 정치선전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우리측이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팀스피리트 훈련이 남북대화 및 양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회담 앞에 조성된 당면적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①팀스피리트 90훈련의 즉각 중지 ②팀스피리트 90훈련에 동원된 미군 및 군사작전장비 철수 ③최소한 남한 군대만으로 군사훈련 실시 등 이른바 3개항의 긴급대책안을 우선적으로 토의해야 한다고 강변했을 뿐 아니라, 우리측의 정계개편을 1당 팻쇼독재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고 매도하였다.

우리측은 또다시 회담외적 문제를 가지고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는 북한측의 부당한 태도와 허구적 정치선전 공세에 유감을 표시하고 실질문제 토의에 들어갈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측이 이른바 「콘크리트 장벽」철거와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의 중지를 회담 진전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데 대해 이는 진행 중에 있는 남북대화에 고의적인 난관을 조성하여 고위급 회담의 성사와 남북교류를 회피하고 남북의 자유왕래와 개방이 안되는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려는 기만적 술책임을 역설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이 주장하는 「콘크리트 장벽」에 대해 이미 우리측이 내외신기자를 통해 자유왕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전차장애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켰음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군사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것은 북한측이 탱크 자유왕래의 길을 열어 놓아 또다시 남침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냐고 공박하였다.

또한 팀스피리트 훈련은 북한측이 비밀리에 공격훈련을 실시하고 휴전선일대에 대규모 군사력을 전진배치하는 등 우리에게 불신을 심화시킨데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남북간의 자유왕래

와 개방에 관심이 있다면 당국간의 대화에 성실히 임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3당통합 등 우리측 내부분제와 관련한 비난성 발언에 대해 우리측이 40여 년간 1인 독재를 해온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역공을 하자 「중대한 도발」이라며 동 발언의 취소를 요구하는 등 회담 분위기를 악화시키기도 했다.

쌍방은 제7차 예비회담을 1990년 3월 7일 개최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우리측이 팀 스피리트 훈련 중지를 통보해 준다는 조건에서 회담일자에 동의한다고 함으로써 동 예비회담을 중단시키겠다는 의도를 시사했다.

이날 회담에서 제시한 우리측의 합의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안)

대한민국 정부당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당국은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 위하여 1989년 2월 8일 제1차 예비회담을 가진 이래 ()차례의 예비회담과 ()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가졌다.

쌍방은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1. 회담명칭

회담명칭은 「남북고위급회담」(이하 「회담」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2. 회담일시

제1차 회담은 예비회담이 종료된 후 1개월 안에 개최하되 제1차 회담 날짜를 정할 때 제2차 회담 날짜도 함께 정하고 그 다음 회담부터는 매차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3. 회담장소

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되 제1차 회담은 서울에서, 제2차 회담은 평양에서 한다.

4. 회담의제

회담의제는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과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문제」로 한다.

5. 회담대표단 구성

회담대표단은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여 7명으로 하되 대표는 장·차관급으로 구성한다.

회담대표단의 군 대표는 참모 총장급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하며 그 수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6. 수행원 및 기자

회담수행원은 33명으로 하며 기자는 50명으로 한다.

7. 회담형식

회담은 쌍방회담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총리단독회담과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 회담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한다.

8. 합의서 채택

합의내용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하여 대표단 수석대표가 서명한 다음 1통씩 교환한다.

9. 회담기록

회담기록은 속기·녹음·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10. 회담보도

회담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쌍방 합의에 따라 합의내용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11. 회담장 표지 및 시설

- ① 회담장에는 어떠한 표지도 하지 않는다.
- ② 초청측은 회담장에서 상대측 대표단과 기자단이 자기측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한다.

12. 신변안전보장

- ① 쌍방은 회담을 위하여 상대측을 왕래하는 인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총리명의로 된 각서를 회담 7일전에 판문점에서 교환한다.
- ② 초청측은 상대측 인원들의 문서, 통신, 사무용기재, 사진필름, 녹음 및 녹화테이프, 취재수첩, 보도자료 및 기타 회담에 필요한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13. 대표단 표지 및 증명서

- ① 쌍방 대표단은 자기측 총리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한다.
-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14. 판문점 통과절차

- ①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들어가는 인원들의 명단을 회담 3일전에 넘겨준다.
- ② 명단에는 성격, 성별, 대표단 직위를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 ③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사항은 직통전화로 통지하고 판문점을 통하여 이를 문서로 전달한다.
- ④ 대표단과 기자단의 판문점 통과지점은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건물로 한다.
- ⑤ 초청측은 상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에 따라 신분을 대조확인하고 상대측 인원들을 접수하며 돌아갈 때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다.

15. 기자의 취재활동

쌍방은 체류기간 중 상대측 기자들의 취재활동을 보장하며 남북간의 신뢰와 이해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한다.

16. 체류일정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일정은 3박4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초청측은 체류 일정을 회담 7일전에 상대측에 통지한다.

17. 편의제공

① 초청측은 체류기간 상대측 인원들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보도 및 기타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② 쌍방은 상대측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초청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③ 초청측은 상대측 대표단의 자기측 지역 체류기간 중 1일 2회 행낭 운반을 보장한다.

18. 의전

체류기간 의전문제는 쌍방 실무자들 사이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19. 직통전화

쌍방은 이미 가설된 서울과 평양사이의 직통전화선을 이용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협의하여 증설할 수 있다.

20. 합의서 발효

합의서는 교환된 때로부터 유효하다.

2. 남북 국회회담 준비접촉

가. 제9차 준비접촉

남북 국회회담을 위한 제9차 준비접촉은 1989년 1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되었다.

북한측은 첫 발언을 통해 우리측의 팀 스피리트 훈련 및 문익환·임수경·서경원 등 불법 입북 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비난하면서 남북대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리측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으나, 이를 가볍게 짚고 넘어감으로써 회담외적 문제가 쌍방간에 쟁점화 되는 것은 피하는 인상을 보이는 가운데 일단 절차문제 토의에 호응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의제토의를 위한 대표모임의 형식에 대해서는 지난 6차 회담시 우리측이 집행부와 공동운영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실이 곧 북한측이 주장하고 있는 연석회의 성격의 대표회의 형식에 동의한 것과 다름없다고 억지 주장을 하였다.

또한 의제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지난 8차 준비접촉에서 수정 제의한 의제3개항중 항 남북 불가침선언 문제에 동의하였을 뿐 항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 문제는 교류보다 협력을 앞에 표기할 것과 항 남북정상회담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우리측 채문식 수석대표는 첫 발언을 통해 8차 접촉시 북한측이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거나 회담외적인 문제들을 들고 나와 끝내 회담을 공전시킨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 회담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절차문제를 집중적으로 토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남북의 국회의원들은 희망찬 통일의 새 장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래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하여 응분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고 본 회담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협의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회담형식에 대해 북한측이 1985년 남북 국회회담 예비접촉시 대표회담 형식에 합의해 온 선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남북 국회회담은 남과 북 두 체제를 대표하는 대의기구 사이의 회담으로서 이 준비접촉 자체가 쌍무적 회담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쌍방이 토의하기로 한 의제가 이미 쌍무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의제 토의를 위한 모임을 쌍무적 성격을 갖는 대표회담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제문제와 관련하여 쌍방 최고당국자들이 정상회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미 여러 차례 인정하고 있는 현실로 보나 국민대의기구인 국회의 기능으로 보나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의제로 설정하는데 북한측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측은 공산권의 개혁·개방화 추세와 본질을 오도시키는 북한측의 회담외적 발언에 대해 먼저 소련·동구의 개혁·개방과 같이 북한측이 화해와 협력의 세계사적 조류에 발을 맞추어 나와야 하며 이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북한측의 다당제·자유로운 선거 실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에서의 개방을 촉구하였다.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기한 「사회개방문제」에 대해 처음에는 「남측의 개방은 외세에 대한 개방」이며 「콘크리트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나 쌍방 체제문제가 쟁점화 되는 기미를 보이자 서둘러 이 문제에 대한 토의를 마무리 지었다.

우리측이 지난 8차 준비접촉에서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 포기, 북한사회의 개방, 북한동포의 인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북한측 전금철 단장이 이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하는 태도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종래와 같은 격렬한 역공세를 펴지 않은 것은 이 문

제가 회담에서 집중 거론되는 것이 결코 그들에게 유리하지 못하다는 판단과 함께 개혁·개방의 물결이 북한내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측 전금철 단장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팀 스피리트 훈련이 실시되면 회담이 중단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차기 회담에서 또다시 회담 외적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다.

쌍방은 제10차 준비접촉을 1990년 1월 24일에 갖기로 합의하였다.

제9차 접촉까지의 쌍방의 입장을 요약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차이점>

구분	우리 측	북한 측
형식	○ 의제토의는 쌍무적 성격의 대표회담 (쌍방합의제) ※ 집행부도 쌍방합의제	○ 기본문제 토의는 연좌 형태의 대표회의 (일치합의제) ※ 집행부는 완전합의제
의제	○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 「정상회담 개최문제」의 의제포함 반대 ※ 팀스피리트 중지문제는 우리측이 훈련을 실시할 경우 재상정

<의견 일치사항>

회담형식 : 개회모임, 의제토의모임, 폐회모임 순으로 진행

- 개·폐회모임: 합동회의(전원참석), 공동의장제
- 의제토의모임: 쌍방 각기 50명(각기 5명씩으로 집행부, 공동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회담의제 : 남북간의 다각적인 교류·협력문제
남북 불가침선언 문제

※ 제1항 교류·협력의 표기순서 및 의제 전체의 표기순서는 미합의

회담장소 : 개회모임(평양), 폐회모임(서울), 의제토의모임(서울·평양 윤번개최; 1차 모임은 서울에서 개최)

나. 제10차 준비접촉

남북 국회회담 제10차 준비접촉은 1990년 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2시 10분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 새로 지은 「평화의 집」에서 공개리에 개최되었다.

약1년 4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1989년 12월 19일 준공식을 가진 새 「평화의 집」은 남북관계와 북방정책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집념을 구현하는 상징적 건물로서 1990년대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측 채문식 수석대표는 이번 접촉이 새 건물에서 처음 개최되는 만큼 남북 국회회담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상호존중과 호양의 정신으로 남은 문제들을 원만하게 타결짓자고 강조하였다.

남북간에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의제토의를 위한 모임」의 형식에 대해 우리측은 같은 정치제도와 법체제 아래에서 운영되는 기관사이에서나 가능한 연석회의 방식을 고집하는 북한측 태도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그동안 남북간의 모든 회담이 쌍무회담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쌍방이 토의해야 할 의제도 쌍무적 내용임을 들어 대표회담 형식에 동의해 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의제문제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문제를 토의하는 것은 남북 정치인들의 당연한 책무로서 북한측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굳이 회피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공박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첫 발언에서 본 회담 실무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이른바 「콘크리트 장벽」철거,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개최주장으로 일관하였으며 팀 스피리트 군사훈련 중지문제를 실질토의에 앞서서 긴급의제로 상정하여 토의할 것을 강변하고 나섬으로써 처음부터 10차 준비접촉을 정치선전장화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북한측은 우리측의 공개적이고 방어적인 팀 스피리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반민족적인 핵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우리측 대표들이 이를 취소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영퐁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남북 국회회담 준비접촉에 임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대화의 상대방을 비난하기에 급급한 이같은 북한측의 무례하고 도발적인 태도에 대해 우리측은 회담장을 정치선전장화하려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실무절차문제 토의에 들어갈 것을 북한측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적십자회담을 파탄시켜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길까지 가로막은 북한측은 자유왕래와 개방에 대해 운위할 자격도 없으며 남북간의 여러 갈래의 대화를 하루빨리 성사시킴으로써 그 실천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개방을 막고 있는 것은 북한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탱크 저지용 군사시설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측의 전 한반도 공산화라는 목표에서 비롯된 상호불신과 대결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리측이 회담대표단에 부여된 임무에 맞게 미해결 문제에 대한 토의를 계속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끝내 이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제10차 준비접촉은 아무런 진전없이 공전되고 말았다.

북한측은 다음 제11차 회담일자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측이 제의한 1990년 2월 22일에 동의해 오면서도 팀 스피리트 훈련의 중지를 전제로 하는 등 남북 국회회담의 성사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냈다.

3. 남북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

가. 제5차 실무대표 접촉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문제와 제2차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5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은 1989년 1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 11분까지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측은 회의 벽두부터 제2차 실무대표접촉시 비공개로 진행키로 한 합의에 대해 새삼스럽게 시비를 걸고 공개진행을 주장했는 바, 처음부터 회담의 진전에 비중을 두지 않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대해 시일의 촉박성과 효율적 협의진행을 고려 우리측이 비공개회담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결국 비공개로 진행케 되었다.

쌍방 기초연설 없이 진행된 접촉에서 우리측 송영대 수석대표는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상호 교환사업은 어디까지나 이산가족의 고통과 불행을 해소해 준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예술공연은 부수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고향방문단 300명, 예술공연단 100명의 규모가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예술공연단 규모를 100명으로 하는 것은 국제적 상례에도 맞으며 우리측 예술계,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일치한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우리측은 이미 쌍방간에 합의된 12월 8일 고향방문단의 상호교환을 실현하기 위해 5차 접촉에서 일괄 타결한다는 의지를 갖고 그간 최대의 쟁점이 되어왔던 방문단 규모와 예술단공연 실황중계 문제에 대해 북한측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양보안을 제시하였다.

즉 예술공연단의 규모는 북한측과의 절충여건을 고려하여 120명으로 할 수 있다는 조정안을 내었으며, 예술공연의 TV 및 라디오 실황중계 문제도 북한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측은 예술공연 내용이 민족전통가무를 중심으로 하고 상대방을 자극·비방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연내용 프로그램을 교환한다는 선례에 따라야 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이와 같이 우리측이 북한측의 절충여건을 조성키 위해 가능한 모든 양보안을 다내는 등 합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아무런 절충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북한측은 처음에는 예술단 규모를 2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수정안이라는 이름을 붙여 방문단 총규모를 지원인원 40명, 수행기자 30명, 인솔자 1명을 포함하여 571명으로 하고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 규모는 각기 편리한대로(즉 고향방문단은 남측이 400명, 북측이 300명, 예술단은 남측이 100명, 북측이 200명) 구성하자고 제의해 왔다. 이는 사실상 남북간에 관례로 적용되어 온 상호주의를 파기한 것으로서 예술공연단 규모를 200명으로 하자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북한측은 예술단 규모를 두고 국민투표에 부치면 어떻겠느냐는 등 진지하지 못한 태도까지 보였다.

한편 우리측은 12월 8일 방문단 교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1월 18일 이전에 쌍방 방문단의 명단을 교환하고 숙소예약을 서둘러야 하는 등 준비과정의 절박성을 들어 이날 오후에도 회담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사정이 있다면 6차 접촉을 다음날이라도 가질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은 지방대의원 선거를 핑계로 차기접촉을 늦추어 잡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연내 고향방문단 교환의 성사 전망을 어렵게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측이 처음부터 문익환·임수경 문제 등 일련의 정치공작 행위를 정당화시켜보려는 의도에서 실무대표접촉에 응해 나왔을 뿐, 적십자 본회담 개최와 고향방문단 교환의 성사에는 아무런 뜻이 없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였다.

쌍방은 제6차 실무대표접촉을 1989년 11월 21일에 갖기로 합의하였다.

나. 제6차 실무대표접촉

제6차 실무대표접촉은 1989년 11월 21일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쌍방 기초발언과 환담을 생략한 가운데 오전회의(오전 10시-오후 1시)에 이어 오후회의(오후 3시-5시 10분)까지 속개하여 5시간 10분 동안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제6차 실무대표접촉을 매듭지음으로써 12월중에 제2차 방문단 교환사업과 제11차 적십자 본회담 개최를 기필코 실현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방문단의 규모를 총571명으로 구성하고 그 범위 안에서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인원수를 상호 편리한대로 정하자는 북한의 주장을 전폭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최대 관건이 되어왔던 방문단 규모문제는 우리측이 고향방문단 350명, 예술공연단 150명, 기자 30명, 수행원 40명, 인솔책임자 1명으로 하고 북한은 고향방문단 300명, 예술공연단 200명, 기자 30명, 수행원 40명, 인솔책임자 1명으로 한다는데 쌍방 합의를 보았다.

또한 우리측은 방문지문제·실황중계문제·방문단 규모문제에서 북한측 제의를 모두 수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실무절차사항은 선례에 따라 하면 완전타결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남북적십자회담 재개와 제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 초안을 내놓고 문안조정에 들어가자고 촉구하였다.

우리측이 6차 접촉에서 방문단 교환과 관련하여 내놓은 합의서 초안은 다음과 같다.

남북적십자회담 재개와 제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안)

1989년 11월 21일 개최된 제6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에서 쌍방은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문제와 제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문제

1.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989년 12월 15일 평양에서 개최한다.
2. 제12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990년 1월 18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3. 회담의제를 비롯하여 대표단구성·회담운영절차·대표단의 왕래방법 등 본회담 진행에 따른 기타 문제는 선례대로 한다.

둘째, 제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문제

1. 방문단의 명칭

방문단의 명칭은 각기 편리한대로 부르되, 대한적십자사측은 「제2차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으로 한다.

2. 방문단의 구성 및 규모

가. 방문단은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예술공연단·취재기자 그리고 지원인원으로 구성한다.

나. 방문단의 단장은 쌍방 적십자사 중앙기관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로 한다.

다. 방문단의 규모는 각기 총 571명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상호 편리한대로 구성한다.

(1)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은 남측은 350명으로 하며, 북측은 300명으로 한다.

(2) 예술공연단(제작진과 출연진)은 남측은 150명으로 하며, 북측은 200명으로 한다.

(3) 취재기자는 각기 30명으로 한다.

(4) 지원인원은 각기 40명으로 한다.

3. 방문단 교환방법

방문은 동시 교환방문 방식으로 한다.

4. 방문시기

교환방문 시기는 1989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3박 4일)로 한다.

5. 방문지

서울과 평양으로 한다.

6. 상봉의 주선과 범위

가. 쌍방은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인원들에 대해 적십자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그들의 가족과 친척을 찾아서 상봉을 시켜주는 편의를 제공한다.

나. 상봉의 범위에 있어 직계 존·비속은 헤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 이후에 출생한 가족을 포함하고, 친척의 경우 방계는 8촌, 처·외가는 4촌으로 하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생사·소재가 확인된 친척도 포함한다.

7. 예술공연단의 공연장소 및 공연회수

가. 공연장소는 초청측이 성의를 가지고 제공하는 시설이 완비된 극장으로 한다.

나. 공연회수는 선례에 따라 2회로 한다.

8. 공연내용

가. 공연내용은 민족전통가무를 중심으로 하며, 상대방을 비방·중상·자극하지 않는 내용으로

한다.

나. 공연시 사회자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상대측을 비방·자극하지 않는 원칙하에 공연종목만을 소개한다.

9. 공연프로그램 교환 및 공연장 사전답사

가. 공연프로그램은 방문 3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나. 연출상의 구성문제, 장치전환문제, 음향·조명·효과문제 등 공연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적십자인원 2명과 공연기술인원 3명이 1989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2박 3일) 공연장을 사전답사한다.

10. 공연시간

120분 정도로 한다.

11. 공연내용 실황중계

초청측은 상대측의 예술단공연을 TV 방송과 라디오 방송으로 실황중계한다.

12. 신변안전보장

방문 7일전에 관계당국의 신변안전보장 성명을 발표하고 그 문본을 상대측에 수교한다.

13. 수송 및 통신

가. 판문점을 넘어 자기측에 들어오는 방문단의 인원, 장비 및 기타 필요한 물품의 수송에 대해서는 초청측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한다.

나. 방문기간중 서울·평양간 행낭을 1일 2회 운용한다.

다. 방문기간중 업무연락 및 취재기자 송고용으로 현재 가설되어 있는 남북직통전화를 이용하며, 필요할 경우 쌍방 합의에 따라 증설한다.

14. 기자의 취재활동

초청측은 방문측 기자들의 이산가족 상봉현장에 대한 취재활동을 보장하고 취재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15. 통과장소와 통과절차

통과지점은 판문점으로 하고 통과절차는 제1차 방문단 교환시의 선례에 따른다.

16. 방문자명단 통보시기

가. 고향방문단의 명단은 방문 10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나. 예술공연단·취재기자 및 지원인원의 명단은 방문 3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17. 고향방문자명단 작성양식

가. 고향방문단 명단의 방문자란에는 방문자의 성명·성별·연령·고향·방문대상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나. 고향방문자 명단의 방문대상자란에는 방문대상자의 성명·성별·연령·고향·헤어진 때를 기재하고 기타 가족찾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첨부한다.

18. 예술공연단·취재기자단·지원인원 명단작성

고향방문자 이외의 방문단 구성인원 명단에는 성명·성별·직위·참가구분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19. 방문자의 표지 및 증명서 소지

가. 고향방문단·예술공연단·지원인원은 적십자 휘장에 자기측을 표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한다.

나. 기자는 방문단 표지 외에 기자완장을 착용하며, 기타사항은 제1차 방문단 교환시의 선례를 준용한다.

다. 방문자는 자기측 적십자사 총재(위원장)가 발행하는 신분확인 증명서를 소지한다.

20. 체류일정

방문 7일전에 체류일정표를 상대측에 수교하고 일정을 협의·결정한다.

21. 기타

가. 방문단이 상대측 지역을 방문중에는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도록 한다.

나. 숙식·통신 등 방문단 인원들에 대한 편의는 초청측에서 제공한다.

다. 초청측은 공연개막전 방문측이 공연무대에서 사전연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라. 공연무대장치의 보조인원 및 일반 조명기구 제공 등 기타 공연에 관련되는 문제는 초청측에서 편의를 제공한다.

마. 공연프로그램은 공연하는 측이 제작·휴대하여 배포하도록 한다.

북한측은 이상과 같은 우리측 합의서 초안에 대해 그들의 의견과 일치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예술공연의 회수 및 시간, 방문단 구성대상, 인솔책임자, 공연내용 등을 둘러싸고 의도적인 난관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먼저 공연내용에서 북한측은 첫째 민족적인 것, 둘째 건전한 내용인 것, 셋째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는 것이라는 원칙을 새삼스럽게 들고나왔으며, 여기에다 공연형식을 노래·춤·가극 등으로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우리측은 제1차 고향방문단 교환시 남북이 「민족전통 가무를 중심으로 하며 상대방을 비방·중상·자극하지 않는다」로 합의했음을 상기시키고 북한측 제의에 이러한 뜻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조건에서 이를 수락하였다.

또한 인솔책임자 문제에서 북한측은 쌍방 적십자의 부책임자급으로 해야한다고 완강히 주장, 쌍방 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중 편리한대로 하자는 우리측의 절충안까지 거부하였다.

방문단 구성문제에서도 우리측은 많은 이산가족들이 고향방문을 갈구하고 있는 형편에서 서울과 평양에 고향을 둔 사람으로 제한을 한다면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잃는다는 측면에서 이산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을 주장한데 대해서 북한측은 굳이 서울과 평양에 고향을 둔 사람을 위주로 해야한다고 고집했다.

예술공연의 회수 및 시간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방문기간 등을 감안 3회 각 150분 공연까지 양보한데 비해 북한측은 4회 각 3시간 공연입장에서 아무런 절충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그것은 「꽃파는 처녀」나 「피바다」 등 그들의 혁명가극을 공연하기 위한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그들이 이번 실무접촉에 응해온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북한의 이른바 혁명가극은 혁명투쟁과 계급투쟁을 고취하는 정치적 선전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의 공연주장은 상호 이해를 도모한다는 예술공연단 교환의 근본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적십자 인도주의사업의 기본정신을 무시한 처사인 것이다.

또한 이 혁명가극들은 특정인의 부각과 상대방 체제의 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의 공연은 남북간에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은 자명하다 하겠다.

이와 함께 북한측은 공연 프로그램을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는가 하면 이산가족이 만나는 장소도 가정적 분위기라는 구실아래 밀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번 제6차 접촉에서 우리측이 방문단규모 문제와 기타 몇가지 실무절차 사항을 북한측의 주장대로 전면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합의서 채택을 회피하면서 그들의 공연내용이 「꽃파는 처녀」 또는 「피바다」와 같은 혁명가극이라고 미리 제시한 것은 우리측으로 하여금 이를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담의 타결을 지연시키고 고향방문단 교환의 실패시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려는 의도에서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측은 그동안 여섯 차례의 접촉을 통해 방문시기, 방문지, 방문기간, 예술공연의 실황중계, 기자 및 수행원수, 방문단 규모, 공연내용의 원칙 등에서 북한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신축적 자세를 계속 보여온데 비해 북한측은 그들 주장을 고수하는 입장만으로 일관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타협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측 태도는 돌연한 혁명가극의 공연주장에서 보듯이 그들이 연내에 고향방문단을 교환하겠다는 실현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쌍방은 차기 제7차 접촉을 11월 27일에 갖기로 합의했다.

다. 제7차 실무대표접촉

남북적십자 제7차 실무대표접촉은 1989년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6차 접촉시에 북한측이 예술단 공연물로 「꽃파는 처녀」, 「피바다」 등 혁명가극을 들고 나와 회담의 타결을 지연시키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어 우리측은 혁명가극 공연이 「적십자는 어떤 정치적·사상적 논쟁에 개입해서도 안된다」는 적십자 중립성의 원칙과 방문단 교환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쌍방이 합의한 「공연내용은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는다」는 공연내용 원칙에도 저촉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혁명가극 공연 주장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회담의 타결이 지연되어 제2차 방문단 교환사업의 연내 실현이 어렵다 하더라도 쌍방간에 이미 합의한 대로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 만큼은 12월 15일 예정대로 평양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혁명가극의 공연문제에 대해 공연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등 그들의 기존입장만을 반복했으며 심지어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의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회담공전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려는데 주력하였다.

북한측은 제11차 본회담의 12월 15일 개최문제에 대해서도 방문단 사업이 진행되는 조건에서 본회담 개최에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함으로써 본회담 개최의 성사여부마저 불투명하게 되었다.

차기 접촉문제와 관련 북한측은 쌍방 수석대표의 비공개 개별접촉을 제의하였으나 우리측은 이에 대해 북한측이 공연내용을 바꿀 의사를 가지고 직통전화로 연락해오면 어떤 형식의 접촉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함으로써 차기 접촉방법 및 일자는 추후 직통전화를 통해 서로 연락하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측이 제7차 접촉에서 우리측의 합의서문안 최종정리 촉구에 대해 전혀 언급없이 혁명가극에 대한 선전만으로 일관하여 회담을 공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쌍방 수석대표의 비공개 개별접촉을 제의한 것은 12월 8일로 예정된 방문단 교환시일까지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방문단 사업결렬에 대해 일고 있는 내외의 비난여론을 의식하여 그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라고 할 수 있다.

라. 쌍방 수석대표 개별접촉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북한측 박영수 단장은 1989년 12월 2일 우리측 송영대 수석대표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와 회담교착상태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도 공연내용과 관련한 태도 변화라도 있는 듯이 12월 4일 쌍방 수석대표간의 개별접촉을 갖자고 제의해 왔다.

이에 따라 1989년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쌍방 수석대표간의 개별접촉이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방문단 사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측의 혁명가극 공연 주장 때문임을 지적하고 방문단 사업의 연내실현이 어렵게 되었다 하더라도 제11차 적십자본회담은 쌍방이 합의한대로 12월 15일 평양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여전히 혁명가극의 공연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제11차 적십자 본회담 문제와 관련해서도 「선 방문단 교환, 후 본회담 개최」 주장만을 되풀이 하였다.

또한 방문단 교환사업이 성사되지 않은데 대한 책임문제는 더이상 거론하지 말고 남북적십자 제8차 실무대표접촉을 내년 1월 22일에 개최하여 방문단 교환문제를 계속 협의하자고 제의함으로써 방문단 교환의 연내 실현불가능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한측이 혁명가극 공연입장에 변화가 없는한 실무대표접촉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차기 회담일자에 대해 직통전화로 연락하자고 하였으며 북한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쌍방 수석대표 비공개 개별접촉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마. 수석대표 개별접촉 이후 동향

대한적십자사는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수석대표 개별접촉 이후 북한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12월 7일자 김상협총재 담화와 송영대 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수석대표의 대북전통문을 통해 쌍방이 합의한 12월 8일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사업이 실현되지 못한데 유감을 표시하고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12월 15일 개최될 수 있도록 북한측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가 있기를 촉구하였다.

대한적십자사 총재 담화 및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수석대표 대북전통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한적총재 담화요지

지난 9월부터 일곱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적십자간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우리측은 남북 쌍방이 합의한 12월 8일 제2차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사업과 12월 15일 제11차 적십자 본회담 개최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음.

우리측은 방문단 교환의 시기와 방문지, 예술공연의 실황중계문제, 그리고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규모에 있어서도 북한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으나, 북한측은 예술공연에만 치중한 채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과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최종합의 단계에서 이른바 혁명가극을 공연해야겠다고 주장했음.

예술공연단 교환이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도움을 주고 상호 이해증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남북쌍방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공연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것이 없음.

이산가족들이 고향을 찾아 혈육의 정을 나누고 성묘도 하고 싶은 열망은 결코 예술공연단 교환문제로 인해 가로막혀질 수 없음.

비록 이번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의 연내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들의 여망이 내년에는 기필코 실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함.

아울러 제11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의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북한측이 이에 성의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는 바임.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수석대표 전통문 요지

이산가족을 비롯한 온 겨레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제2차 방문단 교환사업이 쌍방이 합의한 날짜에 실현되지 못하게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남북 적십자단체들이 온겨레 앞에 약속한 사업만큼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금번 실무대표접촉의 타결을 어렵게 만든 귀측 공연내용에 대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며, 쌍방 공연내용은 적십자의 원칙·예술단 교환취지 등 어떠한 견지에서 보아도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함.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귀측이 공연내용에 대한 조정의사를 갖는다면 언제라도 실무대표접촉을 다시 갖고 제2차 방문단 교환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나갈 것임.

제11차 남북적십자 회담은 쌍방이 합의한대로 오는 12월 15일 평양에서 마땅히 개최되어야 하며, 이를 제2차 방문단 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쌍방간 합의사항과도 어긋나므로 귀측은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의 초청측으로서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

본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고 제2차 방문단 교환사업이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짐으로써 이산가족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기를 바라면서 귀하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함.

한편 북한측은 12월 14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발표를 통해 「남한측은 낡은 대결의 관념에서 벗어나 1990년 1월 22일 실무대표접촉에 지체없이 나와야 한다」고 하면서 방문단 사업이 무산된 모든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는 모략선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측은 12월 15일 실무대표접촉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다시 발송하여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마저 거부한 북한측의 부당한 자세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산가족들의 불행과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주려는 입장에 서서 더이상 예술단의 공연내용 문제로 이산가족들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것을 강조하면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공연내용으로의 태도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4. 남북체육회담

가. 제4차 회담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4차 남북체육회담은 1989년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45분까지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우리측 장충식 수석대표는 첫 발언을 통해 쌍방은 지난 세차례의 회담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출전과 관련한 10개항의 방안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했거나 의견의 접근을 보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쌍방간 견해차이가 있으면서도 아직 구체적 토의에 들어가지 못한 선수단 구성·공동추진기구 구성 등 중요한 본질문제에 대해 토의를 진행하자고 촉구하였다.

또한 남은 문제는 순수스포츠 영역인 만큼 상호 호의와 타협의 자세로 합의의 토대를 조속히 마련하여 민족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자고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단일팀 참가에 필요한 준비일정 등을 고려하고 회담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제3차 회담시 제의한 10개항 중 선수단 호칭, 선수선발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우리측은 수정제의에서 선수선발문제와 관련 경기종목을 기록종목·채점종목·투기종목·구기종목 등 4개종목으로 대별하고 종목별 특성에 따른 선발전 실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선발전의 구체적 방법·시기, 경기용 기구, 경기규칙, 심판선정 등의 세부사항은 남북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하자고 주장하였다.

선수선발 문제와 관련한 우리측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가. 선수선발을 위해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선발전을 통해 대회에 참가할 선수를 선발한다.

나. 선발전은 각 종목별로 서울·평양 등 쌍방이 동의하는 남북의 지역에서 번갈아 1회이상 실시한다.

다. 선발전은 각 종목별로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기록종목

(가) 기록종목은 육상, 경영, 역도, 양궁, 사격, 사이클, 조정, 카누, 요트, 골프로 한다.

(나) 기록종목은 선발전의 기록을 위주로하여 선발하되 합동훈련 기간중의 평가기록도 고려한다.

(다) 사이클, 조정, 카누, 요트의 단체경기에 있어서는 팀웍이 크게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남북선수간의 선발전에서 승리한 팀을 선발한다.

(2) 채점종목

(가) 채점종목은 체조, 다이빙, 우슈로 한다.

(나) 채점종목은 선발전의 점수를 위주로 하여 선발하되 합동훈련 기간중의 평가점수도 고려한다.

(다) 세부종목별 출전선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남과 북에서 각기 적어도 1명씩은 포함되도록 한다.

(3) 투기종목

(가) 투기종목은 복싱, 유도, 레슬링, 펜싱, 카바도로 한다.

(나) 복싱, 유도, 레슬링의 경우에는 남북선수간의 선발전을 실시하여 우승을 거둔 선수를 위주로 하여 선발하되, 합동훈련 기간중의 평가내용과 국제대회 전적도 고려한다.

(다) 펜싱의 경우에는 김별로 리그전 형식의 선발전을 실시하여 승률순으로 선발한다.

(라) 카바디의 경우에는 구기종목중 축구, 농구 등의 예에 따른다.

(4) 구기종목

(가) 구기종목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수구, 핸드볼, 소프트볼, 하키, 세팍타크로, 테니스, 배드민턴, 연식정구, 야구로 한다.

(나) 축구, 농구, 배구, 수구, 핸드볼, 소프트볼, 하키, 세팍타크로, 야구의 경우에는 팀웍이 크게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남북 선수간의 선발전에서 먼저 2승을 거둔 팀을 위주로 하여 선발하되, 진팀의 우수선수도 일부 포함되도록 한다.

(다)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연식정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리그전 형식의 선발전을 실시하여 승률순으로 선발한다.

라. 어느 일방에 특정종목의 선수가 없거나 적합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측에서 선발한다.

마. 선수선발의 구체적 방법, 선발전 시기, 경기용 기구, 경기 규칙, 심판 선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남북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한편 선수단 호칭문제는 영어로는 「KOREA」로 하고 우리말로는 영어발음대로 「코리아」로 하며, 중국말로도 영어발음대로 표기하도록 한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측이 우리말 표기를 「코레아」로 하자는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다.

북한측은 다른 분야의 남북회담과는 달리 남북체육회담에서 회담외적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 않

으면서 외형적으로는 실질문제 토의에 호응해 나옴으로써 그들의 남북단일팀 실현의지를 과시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측은 이미 쌍방이 합의한 선수단기, 단가문제 등을 포함하여 상호 구체적 협의가 필요한 선수단 호칭의 우리말 표기, 선수선발, 선수단 구성, 공동추진기구 문제 등 10개항에 달하는 「남북단일팀 구성에 관한 합의서」 초안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북한측의 남북단일팀 구성에 관한 합의서안 요지

1. 선수단 호칭 : 우리말 「코레아」, 영어 KOREA(약자:KOR)
2. 선수단기 : 흰색바탕에 하늘색 한반도 지도
3. 선수단가 : 1920년대 아리랑
4. 선수선발
 - 선발경기를 통하여 선발하며, 어느 한측에서만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측에서 출전하도록 함.
 - 선수선발의 구체적 형식·방법, 경기용기구, 경기규칙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위원회에 서협의를
5. 선수훈련
 - 공동훈련과 종합훈련으로 구분하여 진행함.
 - 공동훈련 단계에서 종목별 책임감독은 훈련이 진행되는 측에서 맡음.
 - 공동훈련과 종합훈련은 남과 북의 기존시설을 이용하며 필요에 따라 제3의 장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6. 선수단 구성
 - 단장 : 남북공동단장제
 - 임원 : 선수가 많은 쪽에서 감독, 적은 쪽에서 코치를 선임하되 본부임원구성은 남북간 균형보장
 - 최종 선수단 구성시기 : 참가선수 엔트리 마감일(1990. 6.22) 이전 완료
7. 경비 : 남북공동부담, 남북왕래와 관련한 비용은 초청측 부담

8. 신변안전보장 : 관계당국의 신변안전보장각서 교환

9. 공동추진기구

○ 본합의서 채택 후 15일내에 사업에 착수

○ 남북 각기 10명 내외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며 산하 집행기구로 공동사무국을 판문점에 설치

10. 기타 : 기타 관련사항은 공동위원회와 공동사무국에서 협의, 집행

쌍방은 먼저 선수단 호칭의 우리말 표기 문제와 관련한 토의를 벌였으며 북한측이 처음에 「코리아」 표기를 고집하였으나 결국 영어발음상 「코리아」가 정확하다는 우리측 주장에 동의해옴으로써 우리말 표기는 「코리아」로 쌍방 합의되었으며 중국어 표기에서도 「고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상호 의견일치를 보았다.

다만 중국어 표기를 상호 협의하여 북경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단일안으로 제시하는 문제는 다음 제5차 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최대쟁점이 되어온 정치적 성격의 상징문제는 견해차가 모두 해소되었으며 체육 본질문제만 남게 되었다.

선수단장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효율적인 팀관리를 위해서나 국제적 관례를 감안할 때 선수가 많은 쪽에서 단장, 선수가 적은 쪽에서 부단장을 선임토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임을 강조했으나 북한측은 계속 공동단장제를 주장,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공동사무국 설치장소 문제에서도 우리측의 「서울·평양」 교환설치에 대해 북한측은 판문점 설치를 주장하였다.

선수선발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측이 지난 3차 회담에서 「선수구성에 있어서 가능한 남북간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선수선발전의 형식·방법·시기 등은 공동추진기구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며 선수선발의 구체적 토의자체를 회피하였다.

북한측은 실질문제 토의과정에서 상호의견이 접근되었거나 비슷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합의 사항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우선 단일팀 구성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해 남북이 상호 합의했다는 사실만을 얻어 내기에 급급하였으며,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선수선발문제 등 기술적인 세부문제는 공동추진기구에 넘겨야 한다는 모호한 주장으로 일관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선수선발문제가 남북체육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단일팀 구성의 가장 핵심적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참가선수 엔트리 마감일(1990. 6. 22)까지 선수단을 구성하기 위한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이나 공동추진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회담에서 선수선발방법 등 중요한 기본적 내용들에 대한 쌍방의 구체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제4차 회담에서 북한측이 합의서 초안을 제시하는 등 외형상으로 단일팀 구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과시하는 듯 하면서도 실질협의를 기피하는 양면적 자세를 보인 것은 우선 기본적 사항에 대한 대충적인 합의만을 유도하여 12월 12일로 예정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총회에 즈음하여 남북이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단일팀을 구성·참가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공포하고 이를 정치

적 선전에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쌍방은 제5차 회담을 1989년 11월 24일에 갖기로 합의하였다.

나. 제5차 회담

제5차 남북체육회담은 1989년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공개로 진행되었다.

먼저 북한측은 첫 발언을 통해 남북 쌍방이 「단일팀의 구성은 가능한 남북간에 균형을 보장한다」는 선수선발 원칙에 합의했다고 강변하면서 합동훈련에 참가하는 남북선수들을 혼합하여 경기 종목별 선발전을 통해 단일팀 선수를 선발하자고 종래 주장을 되풀이 하였으며 선수선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시기·장소·회수·심판배정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우리측의 장충식 수석대표는 첫 발언에서 지난 4차 회담때까지의 토의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하여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우리측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본회담의 타결시기, 공동추진기구 발족, 선수 합동훈련 실시, 선수선발, 선수단 구성, 강화훈련 기간 등 단일팀 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회담은 늦어도 1990년 1월말까지는 타결되어야 단일팀 출전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북한측에 확고히 인식시켰다.

우리측은 아울러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한 10개 항목에 대한 대체토의가 이루어진 토대위에서 나머지 사항들의 조속한 이견 조정을 위해 쌍방대표중 각기 3명의 대표가 참가하는 실무대표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쌍방은 그동안 정치적인 쟁점이 되었던 단기, 단가를 비롯하여 선수단 호칭에서의 우리말 및 영문 표기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제5차 회담에서는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시할 선수단의 중국어 표기문제와 함께 단일팀 구성에 기본적 관건이 되는 선수선발에 대한 체육기술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측은 지난 4차 회담에서 단일팀 호칭의 중국어 표기문제를 5차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한바에 따라 「가리아」 또는 「가레아」 중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은 중국어 표기는 북경조직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남북체육회담에서 논의할 성질이 못된다며 구체적 안을 제시치 않고 토의마저 회피하였다.

우리측은 선수선발전과 관련하여 합동훈련 마지막 단계에서 훈련에 참가한 남북선수들간에 공개선발전을 서울·평양 등 남북의 지역에서 번갈아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제의하고 이러한 공개선발전을 갖는 것은 남북체육교류의 차원에서도 바람직 할 뿐만 아니라 「심리체력」과 「잠재체력」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단일팀 구성의 취지에 따른 민족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숨어서 선발전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동포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공개리에 선발전을 하는 것은 민족의 단합과 화해를 저해하고 남북대결을 조장한다」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선발전의 장소 및 회수문제는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거듭 주장하였다.

5차 회담에서 쌍방은 본 회담의 효율적인 진전을 위해 비공개 실무대표접촉을 갖자는데 합의했을 뿐 공개 선수선발전에 대한 북한측의 완강한 반대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실질토의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았다.

북한측이 이와 같이 선발전의 공개를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단일팀 구성단계에서부터 그들의 기량열세가 판명되어 단일팀 구성에서 「남북간 균형을 보장」하려는 기본구도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공개선발전 자체가 북한의 개방 및 남북교류의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선수선발 문제와 남북체육교류를 연계시키려 하지 않는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측은 회담일자를 정하는 문제에서도 실무대표접촉의 내용과 그 결과에 따라 차기 회담일자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소모적인 논전을 유발하였으며, 결국 쌍방은 실무대표접촉을 1989년 12월 1일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본 회담은 1989년 12월 22일 관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각각 갖기로 합의하였다.

다. 제1차 실무대표 접촉

남북체육회담 제1차 실무대표접촉은 지난 5차 본회담에서 쌍방이 합의한데 따라 본회담 대표 중 각기 3명이 참가한 가운데 1989년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쌍방대표는 다음과 같다.

우 리 측	북 한 측
임태순(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	장 응(조선올림픽위원회서기장)
조영승(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	김세진(조선올림픽위원회위원)
박수창(대한올림픽위원회위원)	허혁필(조선올림픽위원회위원)

우리측은 제5차 회담까지의 쌍방 주장을 토대로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쌍방 제안 비교표를 북한측에 제시하면서 상호 기초발언을 생략하고 바로 실무토의에 들어갈 것을 북한측에 제의했으며 북한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10개항에 대한 실질토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접촉에서는 기본 10개항 중 4항 선수선발까지 구체적 토의가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선수단 호칭의 중국어 표기문제와 관련하여 「可里亞」 또는 「可禮亞」로 표기토록 북경조직위원회에 제시하자고 거듭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은 이미 선수단 호칭은 완전히 타결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단기·단가문제와 함께 쌍방 합의사항으로 기정사실화하려 하였다.

또한 우리측이 선수선발문제가 단일팀 구성·출전의 본질문제인 점을 내세워 본회담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여 합의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한데 반해, 북한측은 선발전을 서울·평양에서 번갈아 실시하는 문제와 사이클·조정·카누·요트의 단체경기의 선수선발 및 팀웍이 요구되는 구기종목의 선수선발에 대해 동의하였을 뿐 나머지 세부내용은 공동위원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측은 선수단 경비, 신변안전보장 등 체육외적 절차문제에 대해 세부적 검토 없이 우리측 안에 무조건 동의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 본질문제라고 할 수 있는 선수선발전의 공개, 선수단 구성, 선수단장, 공동추진기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이견 조정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쌍방은 제2차 실무대표 접촉을 1989년 12월 6일 다시 열기로 합의하였다.

제1차 실무대표접촉시 쌍방 주요쟁점 비교

구분	우리측	북한측
선수단 호칭 (중국어 표기)	「가리아」 또는 「가례아」로 표기	중국어 표기 합의는 불필요
선발전 방법	합동훈련 마지막 단계 에서 남북선수간에 공개적으로 실시	공동위원회에서 협의 결정 ※남북선수간의 공개적 선발전 반대
채점종목 선발 방법	세부종목별 출전선수 2명이상의 경우 남북 각기 적어도 1명씩은 포함	전 종목에 확대적용
선수단장	단 장:선수가 많은 측 부단장:선수 수가 적은 측	공동단장제
본부임원	쌍방 선수비율에 따라 구성	남북간 균형보장
공동사무국 설치장소	서울·평양 ※적정수의 인원을 상대측 지역 공동사무국에 파견 상주	관문점

라. 제2차 실무대표 접촉

남북체육회담 제2차 실무대표접촉은 1989년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50분까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쌍방은 제1차 실무대표접촉에 이어 이날 선수훈련 및 선수단 구성 문제에 관해 집중 논의하였다. 선수훈련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우리측의 안대로 합동훈련과 강화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자는데 동의하였으나 상호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우리측은 합동·강화훈련으로 그리고 북한측은 공동·종합훈련으로 쌍방 각기 편리한대로 사용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합동훈련」과 「공동훈련」의 개념문제에 있어서 우리측은 합동훈련 개념에 훈련 마지막 단계에서 남북선수간에 선발전을 공개리에 갖는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한 반면, 북한측은 훈련과 선발전은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용어해석과 관련 쌍방 이견이 노정되었다.

선수단 단장 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선발된 선수수가 많은 쪽에서 단장을 맡고, 부단장은 선수의 수가 적은 쪽에서 맡는 것이 올림픽 현장규정이나 동·서독의 단일팀 구성선례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단일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 데에도 적합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공동단장제를 계속 고집하였다. 이는 남북의 경기기량면에서 우리측이 객관적으로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선수가 많은 우리쪽에서 단장을 단독으로 맡게되는 상황을 미리 막자는데 그 의도가 있다 하겠다.

또한 우리측이 선수단 호칭의 중국어 표기문제와 공개선발전 문제에 대해 북한측의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다시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은 1차 실무대표접촉시와 같은 회피적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다만 합동훈련 참가선수 및 임원수, 훈련실시방법, 훈련시기, 편의제공 등에 대해서만 우리측 안에 동의해 왔다.

회담의 진행과 관련하여 특이한 것은 우리측이 그동안 쌍방이 제기한 모든 것을 정리하여 확인·검토해 가자는데 반해 북한측은 기본적으로 우리안에 대한 항목별 동의여부 의사만 표시할 뿐 그들 스스로의 총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서, 우리측은 차기 접촉시 북한측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쌍방은 제3차 실무대표접촉을 1989년 12월 15일에 갖기로 합의하였다.

마. 제3차 실무대표 접촉

남북체육회담 제3차 실무대표접촉은 1989년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47분까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었다.

쌍방은 이날 실무대표접촉에서 단일팀 구성에 관한 10개항 중 아직 구체적으로 토의되지 못한 선수단 구성, 선수단 경비, 선수단의 신변안전보장, 공동추진기구 문제 등에 대해 검토를 속개하였다.

우리측은 먼저 지난 회담에서 쌍방의 의견이 대립되었던 선수선발전 공개문제에 대해 북한측이 동의해 올 것과 선수단호칭의 중국어 표기 문제와 관련한 북한측 안을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북한측은 공개 선수선발전 실시문제와 관련하여 비공개 입장을 계속 고수하다가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최종 토의과정에서 우리측의 공개주장에 동의하여 왔다.

한편 선수단의 중국어 표기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로 표기하지 않고 「코리아」라는 발음대로 표기할 것을 남북이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북경대회조직위원회에 알리면 된다고 하면서 끝내 구체적인 중국어 표기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선수단 구성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측은 「가능한한 남북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구성한다」는 원칙 아래 선수단 구성 시한, 본부임원 구성, 감독·코치 구성에 대한 우리측 안에 동의하였으나, 선수단장은 공동단장제로 해야한다고 고집하였다.

또한 우리측이 체점종목의 경우에 세부종목별 출전선수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상대측 선수 1명을 포함시키자고 한데 대해 북한측은 전 종목에 걸쳐 남북에서 각기 1명씩 포함토록 하자고 계속 주장하였다.

단일팀 공동추진기구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해 서울·평양 등 남북을 왕래하며 합동훈련·선발전·강화훈련 등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동 사무국을 서울·평양에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동위원회 및 공동사무국 구성·운영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는 쌍방 의견일치 사항에 따라 차기회담에서 쌍방 각기 방안을 제시하여 토의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처음에는 공동사무국을 판문점에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다가 「하나로 구성되되 서울과 평양에서 일정기간씩 번갈아가며 사업하도록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우리측 의견대로 제6차 본회담에서 공동위원회 및 공동사무국 구성운영에 관한 세칙과 함께 다시 논의기로 하였다.

제3차 실무대표접촉에서 북한측은 그동안 쌍방간에 주요쟁점으로 남아있던 공개 선수선발전에 동의한 것을 비롯하여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한 기본 10개항 중 선수단 단장 및 공동추진기구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우리측 안을 사실상 동의하는 적극성을 과시하고 협의서 채택을 유도하였다.

이같은 북한측의 태도는 12월 22일 개최예정인 제6차 본회담에서 단일팀 구성·운영에 관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세부사항은 공동추진기구로 넘김으로써 일단 내외에 단일팀 구성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에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북한측이 일단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면 동 기구가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의 대화창구를 맡게 된다고 언급한 사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쌍방은 제6차 본회담에서 그동안 세 차례 열린 실무대표접촉의 결과를 상정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 제6차 회담

제6차 남북체육회담은 쌍방 각기 5명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1989년 1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우리측 장충식 수석대표는 첫 발언을 통해 그동안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 문제 협의를 위한 5차례의 본회담과 세 차례의 실무접촉에서 이룩한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아직까지 타결을 보지 못한 사항을 여섯가지로 집약해 제시하면서 쌍방이 최선을 다해 협의·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단일팀 구성·참가문제와 관련한 6개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선수단 호칭문제에서의 중국어 표기 문제
2. 채점종목의 세부종목별 참가선수가 2명 이상일 경우 진팀에서 적어도 1명 포함시키는 문제
3. 선수단 단장을 단일단장제로 할 것인가 공동단장제로 할 것인가의 문제
4. 공동사무국의 설치장소 문제
5.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별도규정 문제
6.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한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보장 문제
 - 합의사항의 용어정의
 -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한 일정 준수
 - 체육외적 문제와의 불연계
 - 합의사항 불이행시의 조치
 - 쌍방 당국의 보증각서 교환

우리측은 먼저 상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밝히면서 채점종목의 세부종목별 참가 선수 문제에 대해 북한측의 안을 전면 수용하고 이를 삭제키로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우리측은 3차 실무대표접촉에서 쌍방이 필요성을 인정한 공동추진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별도의 규정과 쌍방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보장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첫 발언을 통해 선수단장, 공동사무국 설치장소 문제에 대해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면서도 그동안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선수단 호칭의 중국어 표기를 「高利亞」 또는 「考里亞」로 할 것을 제안하고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칙 초안을 제시하였다.

쌍방 토의과정에서 북한측은 우리측 안대로 공동사무국 설치장소는 서울·평양으로 하고 선수

단 호칭의 중국어표기는 「可禮亞」로 하는데 동의하는 한편, 선수단장 문제에 관해서는 「순번제 공동단장제→단장이 결정권을 갖고 명예단장을 협의대상으로 하는 명예단장제→손기정 선생을 단장으로 하는 특징인 단장제」 등으로 수정제의를 거듭하다가 결국 우리측의 선수구성 비율에 따른 단일단장제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남북간에는 단일팀 구성을 위한 10개 기본사항에 관한한 전반적인 의견일치가 이루어지는 큰 진전을 이룩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의 별도규정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측은 그들의 초안을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남북 단일팀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 방안」에 대해 아무런 검토도 없이 무조건 수락하는 비정상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우리측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보장에 대한 신뢰성을 내외적으로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단일팀 구성·참가 관련 일정준수, 체육외적 문제와의 불연계, 합의사항 불이행시의 조치문제 등에 합의하고 쌍방 당국이 이를 보장하자고 제의한데 대해 북한측은 이에 원칙적인 동의를 하면서 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10개항 및 공동추진기구 운영방안에 쌍방이 합의했다는 사실을 발표하는데 대한 우리측의 동의와 확인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의 보장문제에 대한 구체적 토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고 공동위원회 및 공동사무국 구성·운영세칙에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10개 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에서 성사를 목전에 두고 북한측이 돌연 혁명가극 공연을 주장함으로써 회담을 결렬시켰던 사례를 들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보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강조했다.

제6차 회담에서 북한측이 우리측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특히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방안」에 대한 아무런 검토와 토의도 하지 않고 바로 동의해온 것은 북한측의 단일팀 성사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깊게 해주는 일로서, 어떻게 하든 금년 중에 단일팀 구성·참가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발표하여 이를 다른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 보자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쌍방은 제7차 본회담을 1990년 1월 18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합의사항 이행보장에 대한 토의와 합의서 문안조정을 위해 제4차 실무대표접촉을 1990년 1월 10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갖기로 하였다.

사. 제4차 실무대표 접촉

남북체육회담 제4차 실무대표접촉은 남북 각기 3명의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1990년 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27분까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지난 6차 본회담에서 합의사항 이행보장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쌍방간에 의견이 일치하였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와 관련한 부칙 10개항을 담은 기본합의서안과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친선교환경기 및 시설답사반 교환, 용어해석, 북경대회조직위원회 및 아시아 올림픽평의회에의 서한 전달문제 등에 관한 4개 부속합의서안을 북한측에 제시하고 남북단일팀 구성에 관한 합의서 문안조정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측이 제시한 기본합의서안의 부칙에는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하여 상대측의 내정, 법률제도, 군사훈련 등 체육외적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되며, 사업추진의 일정을 준수하고, 쌍방 당국의 보장각서 교환을 통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실효를 보장하는 동시에 제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일체의 합의를 무효화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우리측이 제시한 사업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추진일정	추진내용
1990. 2. 15	공동위원회 및 공동사무국 설치완료
1990. 3.15-4. 15	합동훈련 실시
1990. 4. 20	선수선발전 시작
1990. 5. 30	선수선발전 종료
1990. 6. 15	선수단 구성 완료
1990. 6. 22	북경대회조직위원회에 참가신청서 제출

이에 반해 북한측은 제6차 본회담시 제시기로 약속한 합의사항 이행보장방안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해오지 않은 채 10개항의 기본사항 및 공동추진기구 운영세칙에 대한 문안조정만을 되풀이 주장하면서 우리측 제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검토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측이 제시한 합의서안의 전문과 합의서 발표시기(1990. 2.1) 및 쌍방 당국간의 보장각서 교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사실 남북단일팀 구성·참가는 남북간의 체육교류의 길을 트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때만이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0여년간 불신과 대결의 관계를 지속해 온 남과 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국내체육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선수들이 남북을 왕래할 수 있는 제반 현실적 여건이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측이 제시한 합의사항 이행보장 장치들은 이러한 견지에서 쌍방 합의에도 불구하고 단일팀 구성·참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면 이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자는데 참뜻이 있다.

따라서 북한측이 진정으로 단일팀 성사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우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예컨대 남북간에 선수훈련 및 선발전이 실시될 경우 참관단·기자단을 포함 연인원 3,000명을 넘는 인원이 남북을 왕래하게 될 것을 감안한다면, 남녀 탁구나 배구 등 친선경기 개최는 사전분위기를 조성하고 단일팀 구성의지를 실증시켜 준다는 점에서도 오히려 필요한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의제밖의 문제」라느니 「인

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려는 불순한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느니 비난하면서 합의사항 이행보장 방안에 대해 거부·기피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쌍방은 제7차 본회담 전에 실무대표접촉을 한번 더 갖기로 함에 따라 제5차 실무대표접촉을 1990년 1월 15일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아. 제5차 실무대표 접촉

남북체육회담 제5차 실무대표접촉은 1990년 1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2시 50분까지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이날 접촉에서 쌍방은 단일팀 구성·참가 의지여부를 놓고 회담자세 논쟁으로 일관함으로써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우리측은 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해 제4차 실무대표접촉에서 제의했던 합의사항 이행보장방안에 대한 대체토의를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합의서 문안정리에 들어갈 것을 북한측에 계속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합의사항 이행보장방안과 관련한 우리측 제의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 10개항의 기본사항 합의서와 공동추진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쌍방 올림픽위원회와 당국이 보장하는 담보각서를 교환하는 조건 아래 실무접촉을 종결시키고 1월 18일 제7차 본회담에서 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자는 입장만을 되풀이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미리 준비해 온 종결발언문을 통해 우리측 제의를 철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단일팀 구성이 안되면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회담결렬에 대비한 책임전가성 발언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5차 실무대표접촉을 종결시켰다.

우리측이 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10개항의 기본합의서와 함께 합의사항 이행보장 방안을 제시한 것은 단일팀 구성·참가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사회 개방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과 함께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보다 확고히 보장하려는 충정에서라고 하겠다.

용어해석에 관한 합의서의 채택요구는 합의서에 사용된 용어가 애매모호하여 쌍방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해석상 견해 차이가 노정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

친선교환경기 및 시설답사반 교환 또한 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쌍방의 실천의지를 내외에 확인토록 하자는 것이다.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키로 합의한 사실과 어느 일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 각기 개별팀으로 참가한다는 사실을 서한으로 통보할 것을 제의한 것은 이미 남북이 합의서안에서 선수단 호칭을 「가례아」로 표기토록 북경조직위원회에 제의할 것에 의견일치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보다 확실히 다짐하고 대외적 기능수행 창구를 분명히 해두자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날 5차 실무대표접촉에서 지난 6차 본회담시 합의사항 이행보장 방안에 대한 토의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 당국의 보장각서외에는 아무런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우리측 제안에 대해 토의마저 거부하고 무조건 전면 철회를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제넘은 처사」나 「피탄을 전제로 한 제안」이니 하면서 상호존중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비난성 발언을 일삼았다.

이와 같은 북한측의 태도는 그들이 당초 남북단일팀 구성에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한국의 개별팀 참가를 저지해 보려는 데 그 진정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참고로 과거 북한측이 남북체육회담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79년 평양세계탁구선수권 대회를 앞둔 남북탁구회담에서 국제탁구연맹의 회원국인 우리의 개

별팀 참가보장을 북한측이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끝내 평양대회 참가를 저지시켰던 사례

· 1984년 LA올림픽대회를 불과 몇 개월 남겨놓고 돌연 단일팀 참가를 위한 체육회담을 제의해 놓고도 소련의 불참결정에 동조하여 일방적으로 불참선언한 사례

· 1988서울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동주최를 주장하다가 결국 불참선언한 사례 등

쌍방은 다음 실무대표접촉 개최에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제6차 본회담에서 합의한데 따라 1990년 1월 18일 제7차 본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자. 제7차 회담

제7차 남북체육회담은 1990년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5분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첫 발언을 통해 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희망하면서 북한측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하여 합의사항 이행보장장치 10개항중 친선체육경기 및 시설답사반 교환, 상대측 지역에서의 자기측 수송수단 이용, 체육외적 문제와의 불연계 등 3개항을 삭제하는 대폭적인 양보조치를 취한 새로운 합의서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용어해석,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한 추진일정준수, 북경대회조직위원회 및 OCA에 보내는 서한 등 합의서 이행 보장장치는 공동위원회에서 토론할 내용이라고 고집하면서 10개항 합의서(안)에 대한 문안조정을 해서 이날 회담에서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한 합의서를 교환하자고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단일팀 구성·참가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쌍방간에 이해상 쟁점으로 비화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그 뜻과 범위를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북경대회조직위원회 및 OCA에의 서한통보와 추진일정 준수문제 또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합의사항 이행보장방안에 대해서는 끝내 토의를 거부하고 회담을 결렬상황으로 몰아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려는 입장에서 회담을 운영하려 하였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우리측이 북한측의 요구를 수용한 새로운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신축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회담에 임한데 비해, 북한측은 우리측의 절충안 제시를 예상치 못한듯 합의사항 이행보장 장치의 철회주장으로 일관하다가 회담을 서둘러 종결시키려 기도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의 회담종결태도와 관련하여 다음 실무대표접촉에는 우리측의 새로운 합의서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쌍방의 제6차 실무대표접촉을 1990년 1월 22일에 제8차 본회담을 1990년 1월 29일 각각 개최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측이 제7차 남북체육회담에서 제시한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및 3개 부속 합의서안은 다음과 같다.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안)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1989년 3월 9일 제1차 회담을 가진 이래 ()차례의 본회담과 ()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가졌다.

쌍방은 민족화합과 스포츠정신에 입각하여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참가함으로써 남북체육인들의 단합된 모습과 우수한 기량을 내외에 떨치고 체육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여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1. 선수단 호칭

가. 우리말로 「코리아」로, 영어로는 「KOREA」(약자: KOR)로 하며 중국어로는 영어발음대로

표기하되 「고려」로는 표기하지 않는다.

나. 중국어로는 「가례아」로 표기하도록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의한다.

2. 선수단 단기

가. 흰색바탕에 하늘색 우리 나라 지도를 그려넣는 것으로 한다.

나. 지도에는 한반도와 제주도를 상징적으로 그려넣고 독도, 마라도, 마안도 등 기타 섬들은 생략하기로 한다.

3. 선수단 단가

192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 부르던 「아리랑」으로 한다.

4. 선수선발

가.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은 선발전을 통하여 선발한다.

나. 선발전은 합동훈련기간 마지막 단계에서 쌍방이 합의하는 일정한 장소·시간·심판 및 경기 규칙에 따라 남북선수간에 공개적으로 실시한다.

다. 선발전은 각 종목별로 서울·평양 등 남북의 지역에서 번갈아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선발전은 각 종목별로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기록종목

(가) 기록종목은 육상, 경영, 역도, 양궁, 사격, 사이클, 조정, 카누, 요트, 골프 등 10개 종목으로 한다.

(나) 기록종목은 선발전의 기록을 위주로 하여 선발하되, 합동훈련 기간중의 평가기록도 고려한다.

(다) 사이클, 조정, 카누, 요트의 단체경기에 있어서는 팀웍이 크게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발전에서 승리한 팀을 선발한다.

(2) 채점종목

(가) 채점종목은 체조, 다이빙, 우슈 등 3개 종목으로 한다.

(나) 채점종목은 선발전의 점수를 위주로 하여 선발하되, 합동훈련 기간중의 평가점수도 고려한

다.

(3) 투기종목

(가) 투기종목은 복싱, 유도, 레슬링, 펜싱, 카바디 등 5개 종목으로 한다.

(나) 복싱, 유도, 레슬링의 경우에는 선발전을 실시하여 우수한 선수를 위주로 하여 선발하되, 합동훈련 기간중의 평가내용과 국제대회의 전적도 고려한다.

(다) 펜싱의 경우에는 검별로 리그전 형식의 선발전을 실시하여 승률순으로 선발한다.

(라) 카바디의 경우에는 구기종목 중 축구, 농구 등의 예에 따른다.

(4) 구기종목

(가) 구기종목은 축구, 농구, 배구, 탁구, 수구, 핸드볼, 소프트볼, 하키, 세팍타크로, 테니스 배드민턴, 연식정구, 야구 등 13개 종목으로 한다.

(나) 축구, 농구, 배구, 수구, 핸드볼, 소프트볼, 하키, 세팍타크로, 야구의 경우에는 팀웍이 크게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선발전에서 먼저 2승을 거둔 팀을 위주로 하여 선발하되, 진팀의 우수선수도 일부 포함되도록 한다.

(다)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연식정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리그전 형식의 선발전을 실시하여 승률순으로 선발한다.

마. 어느 일방에 특정종목의 선수가 없거나 적합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측에서 선발한다.

바. 선수선발의 구체적 방법, 선발전 시기, 경기용 기구, 경기규칙, 심판선정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5. 선수훈련

가. 훈련은 합동훈련과 강화훈련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나. 합동훈련에 참가할 선수 및 임원은 각기 결정하며 그 인원수는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정하게 될 경기참가 정원수 정도로 하되, 종목별 특성에 따라 협의·조정할 수 있다.

다. 합동훈련은 쌍방 감독 및 코치가 합의하여 실시하되, 상대방의 고유한 훈련방법을 존중한다.

- 라. 합동훈련 기간중 참가선수는 교체할 수 있다.
- 마. 합동훈련은 「단일팀 공동위원회」가 발족된 후 1개월 이내에 시작한다.
- 바. 강화훈련은 선수단이 구성된 때로부터 대회참가시까지 실시한다.
- 사. 합동훈련 및 강화훈련은 종목별로 남북을 상호 왕래하면서 실시하되, 필요할 때에는 제3의 장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아. 훈련과 관련한 모든 편의는 훈련장소를 제공하는 측에서 보장한다.
- 자. 훈련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단일팀 공동추진기구」에서 협의·결정한다.

6. 선수단 구성

- 가. 제11회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단의 구성은 예비신청 마감일인 1990년 6월 22일전으로 끝낸다.
- 나. 선수 및 임원 구성은 OCA헌장, 해당 국제 및 아시아 경기연맹규칙과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 다. 단장은 선발된 선수의 수가 많은 측에서 맡고, 부단장은 선수의 수가 적은 측에서 맡는다.
- 라. 경기임원은 종목별로 선발된 선수의 수가 많은 측이 감독을, 적은 측이 코치를 맡는다.
- 마. 본부임원은 쌍방의 선수비율에 따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바. 대회에 참가할 선수단은 가능한 한 균형을 현저하게 잃지 않도록 구성한다.

7. 선수단 경비

- 가. 선수단 참가에 따른 경비는 선수 및 임원의 구성비율에 따라 남북이 공동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남북왕래를 통한 선발전 및 훈련 등에 따르는 경비는 초청측에서 부담한다.
- 다. 외국 전지훈련 및 외국선수단 초청경기에 따르는 경비는 남북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선수단 및 관계인원들의 신변안전보장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그 관계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은 남과 북의 관계당국이 「신변안전보장각서」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장한다.

9. 단일팀 공동추진기구

가. 쌍방은 단일팀 구성 및 참가문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단일팀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한다.

나. 공동위원회는 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15일 이내에 구성한다.

다. 공동위원회는 쌍방 올림픽위원회 및 경기단체 대표로서 각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남북 각기 1명씩의 공동위원장을 둔다.

라. 공동위원회 회의는 매월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1회 이상 개최한다.

마. 공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아타세」선정에 관한 사항

(4) 대회개최 기간중 경기진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열리는 각종 회의참가 및 대회동반심판 선정에 관한 사항

(5) 선수단 구성·참가와 관련된 선수 및 관계인원의 남북왕래와 관련한 사항

(6) 선수단 단복 및 참가에 따른 장비에 관한 사항

(7) 기타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따른 제반사항

바. 공동위원회는 선수단 구성이 완료되고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선수단 참가와 관련한 동대회 조직위원회와의 각종 연락 등 대외적 기능을 수행한다.

사. 공동위원회 아래에 공동사무국을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공동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가) 공동위원회의 결정사항 집행

(나) 공동위원회의 회의소집, 운영, 기록 등과 관련한 사항

(다)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된 인원의 남북왕래에 따른 지원 및 연락사항

(라) 기타 공동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반 행정사항

(2) 공동사무국은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며 각기 1명씩의 공동사무 국장을 둔다.

(3) 쌍방은 적정수의 인원을 공동사무국에 각각 파견·상주시킨다.

(4) 공동사무국간에는 직통전화를 가설·운용한다.

아. 공동위원회 및 공동사무국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10. 기타

단일팀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다.

부 칙

1. 본 합의서 9항 아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코리아선수단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부속합의서 1)
2. 본 합의서의 10개항 내용의 용어해석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부속합의서 2)
3. 쌍방은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할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실과 단일팀 참가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개별참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쌍방 NOC위원장 공동명의로 서한을 본합의서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발송한다. (부속합의서 3)
4. 쌍방은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추진일정을 준수한다.
 - 가. 공동위원회 및 공동사무국은 1990년 2월 15일까지 설치 완료한다.
 - 나. 남북왕래 합동훈련은 1990년 3월 15일 이전에 시작하여 1990년 4월 15일 이전에 종료한다.
 - 다. 선수선발전은 1990년 4월 20일에 시작하여 1990년 5월 30일 이전에 종료한다.
 - 라. 선수단은 1990년 6월 15일 이전에 구성 완료한다.
 - 마. 참가신청서는 1990년 6월 22일 이전에 제출한다.
5. 쌍방은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실효를 보장하는 조치로서 쌍방 당국의 보장각서 문본을 합의서 서명과 동시에 교환하며 이를 쌍방 당국이 각기 발표한다.
6. 이상과 같은 제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한 일체의 합의는 무효가 된다.
7. 본 합의서는 1990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속합의서1>

코리아 선수단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쌍방은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코리아선수단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제9항 「단일팀 공동추진기구」 규정에 의거 「코리아선수단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 및 「코리아선수단 공동사무국」(이하 「공동사무국」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공동위원회

가. 기능

(1)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가) 선수선발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① 종목별 훈련 참가인원수(선수, 감독 및 코치)에 관한 사항
- ② 종목별 선수훈련(합동훈련 및 강화훈련) 및 선수선발전의 일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③ 종목별 선수선발전의 구체적 방법, 경기용 기구, 경기 규칙 및 심판선정에 관한 사항
- ④ 선수훈련 및 선발전 때의 수송, 숙식, 의료, 통신 등 제반 편의사항
- ⑤ 선수훈련 및 선발전 때의 행정, 의료 및 기술요원 등 지원인원에 관한 사항
- ⑥ 선수훈련 및 선발전 때의 참관단 및 기자단 교환에 관한 사항
- ⑦ 선수훈련 및 선발전 때의 선수단 및 관계자의 활동보장에 관한 사항

(나) 선수단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① 선수단장, 부단장, 종목별 선수 및 임원(감독, 코치) 선정에 관한 사항
- ② 행정요원(총무, 섭외, 공보 등), 의료요원(의사, 간호사, 안마사 등), 기술요원(보우트맨, 펜싱 정비공, 총기 정비공, 자전거 기능공, 수송요원, 요리사, 피아니스트 등) 선정에 관한 사항
- ③ 참가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
- ④ 참가신청서 제출 후 선수단의 문제 발생시 해결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 ⑤ 선수단 결단식 및 해단식의 시기·장소 및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 ⑥ 선수단 출발 및 귀환과 관련된 수송 및 경로 등에 관한 사항

(다) 「아타세」 선정에 관한 사항

(라) 대회 개최 기간중 경기진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열리는 각종 회의참가 및 대회동반심판

선정에 관한 사항

(마) 선수단 구성·참가와 관련된 선수 및 관계인원의 남북 왕래와 관련된 사항

(바) 선수단 단복 및 참가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사) 기타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따른 제반 사항

(2) 공동위원회는 단일팀 선수단 구성이 완료되고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선수단 참가와 관련한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의 각종 연락 등 대외적 기능을 수행한다.

(3) 공동위원회는 대외적 기능과 관련하여 쌍방 올림픽위원회가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국제체육기구 및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와 갖는 접촉 또는 연락 등의 고유한 권한에 관여할 수 없다.

나. 구 성

(1) 공동위원회는 쌍방 각기 공동위원장 1명, 간사위원 1명,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2) 공동위원장은 쌍방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급으로 하며, 간사위원을 포함한 위원은 쌍방올림픽위원회 위원 및 경기단체 대표로 한다.

(3)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명단을 본 합의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은 사정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5) 공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기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쌍방 간사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6) 공동위원회 산하에 기록종목, 체점종목, 투기종목, 구기종목별로 선수선발 및 훈련문제를 담당하는 전문위원회를 둔다.

(가)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고 위원은 쌍방이 당해 분야 전문가를 각기 선정한다.

(7)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행정 및 연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서울·평양에 공동사무국을 설치한다.

다. 운영

- (1) 공동위원회는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합의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성, 업무를 시작하며 대회종료 후 쌍방간에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 (2) 공동위원회 회의는 서울·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하며, 첫 회의는 평양에서, 차기 회의는 첫 회의 개최후 15일 이내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 (3) 공동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2회 이상 가지며 어느 일방이 요청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4) 회의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하며, 합의방식은 남북 쌍방 합의제로 한다.
- (5) 쌍방은 합의에 따라 관계 전문가와 공동사무국 인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 (6) 공동위원회 개최에 따른 제반 편의(수송, 숙박, 의료, 통신 등)는 회의 주최측에서 제공한다.
- (7) 쌍방 합의내용은 각기 2통씩 문서로 작성하며,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한 문서를 1통씩 교환한다.
- (8) 회의결과의 보도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며 쌍방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내용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한다.

라. 쌍방은 공동위원회 회의 참가에 따른 30명 내외의 수행원과 50명 내외의 기자단을 대동하며 회의기간중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마. 공동위원회는 단일팀 구성·참가문제의 협의·해결과 그 실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대방측의 내정, 법률제도, 군사훈련 등 일체의 체육외적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바. 공동위원회는 선수훈련(합동훈련 및 강화훈련)과 선발전 등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한 체육 분야에서의 남북간 인적왕래와 연락을 위해 통행·통신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쌍방 당국이 보장하는 각서를 교환한다.

2. 공동사무국

가. 기능

공동사무국은 다음의 사항을 집행한다.

- (1) 공동위원회의 결정사항

- (2) 공동위원회의 회의소집·운영·기록 등과 관련한 사항
- (3)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된 인원의 남북왕래 및 체류에 따른 제반지원 및 연락사항
- (4) 기타 공동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반 행정사항

나. 구 성

- (1) 공동사무국은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며 사무실은 상호 편리한 장소에 둔다.
- (2) 공동사무국은 쌍방 각기 국장 1명, 부국장 2명 및 관계인원 40명으로 구성하며, 쌍방은 그 중에서 상대측 공동사무국에 부국장 1명(단장)과 연락인원 20명을 파견·상주시킨다.
- (3) 쌍방은 상대측 공동사무국에 상주할 연락인원의 명단을 본 합의서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
- (4) 쌍방은 사정에 따라 연락인원을 교체할 수 있다.
- (5) 공동사무국장은 공동위원회 위원중 쌍방 간사위원이 겸임토록 한다.

다. 운 영

- (1) 공동사무국은 공동위원회의 발족과 동시에 업무를 시작하며 공동위원회가 해체될 때까지 존속한다.
- (2) 공동위원회의 운영 및 선수선발·훈련·기타 행정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전화시설 치되어 있는 남북직통전화 회선과는 별도로 직통전화 10회선을 공동사무국간에 설치·운용한다.

라. 쌍방은 공동사무국에 근무하는 상대측 연락인원에 대하여 교통·숙식·통신·의료·환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며 그 인원의 지위에 관하여는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중 외교관의 지위를 준용한다.

부 칙

- 1. 공동위원회는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하여 본 합의서에 명시된 기능이외의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할 수 없다.
- 2. 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하여 본 합의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부속합의서 2>

10개항 내용의 용어해석에 관한 합의서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에 관한 합의서 10개항 내용의 용어해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제1항 "나" 목의 "제의한다"함은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측이 쌍방이 합의한 단일팀 호칭 중국어 표기를 채택·사용하도록 공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말한다.
2. 제4항 "나" 목의 "선발전은 합동훈련기간 마지막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실시한다"함은 합동훈련이 종료된 후에 자기측 관중과 상대측 참관단이 경기를 자유롭게 관람하고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에서 열리는 경기를 라디오 및 TV로 중계하며 상대측의 라디오 및 TV중계를 보장하는 등 경기관람과 취재 및 보도가 자유로운 가운데 선발전이 열리는 것을 말하며, 선발전 때 남북을 왕래하는 인원의 규모는 선수·임원의 경우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정원수 정도로 하고, 지원인원 및 기자단은 각각 100명 내외, 참관단은 500명에서 2,000명 규모로 한다.
3. 제4항 "다" 목의 "서울·평양 등 남북의 지역"이라 함은 서울과 평양이외의 다른 도시도 포함됨을 말한다.
4. 제4항 "라" 목중 (1) 기록종목 (나)의 "합동훈련기간중의 평가기록도 고려한다.", (2) 체점종목 (나)의 "합동훈련기간중의 평가점수도 고려한다" 및 (3) 투기종목 (나)의 "합동훈련 기간중의 평가내용도 고려하다" 함은 합동훈련 기간중에는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던 선수가 선발전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에 쌍방 감독·코치간의 합의로 동 선수를 포함시킬 수 있음을 말한다.
5. 제4항 "라" 목중 (3) 투기종목 (나)의 "국제대회"라 함은 1988년 올림픽경기대회와 1988년·1989년에 열린 아시아 및 세계선수권대회를 말한다.
6. 제4항 "라" 목중 (4) 구기종목 (나)의 "일부"라 함은 쌍방의 경기력을 고려하여 종목별 참가 정원의 최소 2할 내지 최대 4할 범위내에서 합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7. 제5항 "다" 목중 "상대방의 고유한 훈련방법을 존중한다"함은 기술적 사항은 물론, 복장 착용 및 훈련장비 사용에 대하여는 각기 편의에 따름을 말한다.
8. 제5항 "사" 목중 "합동훈련 및 강화훈련은 종목별로 남북을 상호 왕래하면서 실시한다"함은 일방지역에서 15일간씩 양측 지역을 번갈아가며 실시함을 말하며, 이 경우 남북을 왕래하는 선수 및 임원은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참가 정원수 정도로 하고, 지원인원 및 기자단은 각각 50명 내외로 한다.

9. 제6항 "다" 목의 단장은 선수단을 지휘·감독하고 총감독 임명 등 선수단을 관리함에 있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10. 제6항 "바" 목의 "가능한 한 균형을 현저하게 잃지 않도록 구성한다"함은 단일팀 선수단에서 어느 일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7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을 말한다.
11. 제9항 "나" 목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라 함은 쌍방 합의내용의 효력발생일 이후를 말한다.
12. 제9항 "라" 목의 "번갈아 1회 이상 개최한다"함은 공동위원회 회의를 서울과 평양에서 윤번제로 개최하되 각기 지역에서 월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말한다.
13. 기타 합의서 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남북 쌍방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공동위원회의 협의·결정에 따른다.

<부속합의서 3>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및 아시아 올림픽평의회에 보낼 서한에 관한 합의서

쌍방은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하여 대회조직위원회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서한>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귀하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단일팀을 구성·참가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남북체육인 간에 ()차례의 본회담과 ()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가진 결과 1990년 월 일 단일팀 구성·참가에 원칙적인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쌍방 올림픽위원회는 선수훈련과 선발전 개최 및 선수단 구성 등 단일팀 참가에 따르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쌍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단일팀 구성·참가가 어렵게 될 경우에 쌍방 올림픽위원회는 OCA 회원 자격으로 개별 참가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 엔트리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귀 조직위원회와의 연락·접촉 등 쌍방 올림픽위원회의 고유한 대외적 기능은 그대로 존속하게 되며, 동 엔트리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는 코리아선수단 공동위원회가 귀 조직위원회와의 연락·접촉 등의 기능을 맡게 될 것입니다.

남북단일팀의 호칭과 관련하여 쌍방 올림픽위원회는 영어로는 KOREA(약자:KOR)로 하며 중국어로는 영어발음대로 표기하되 「고려」로는 표기하지 않으며, 중국어로는 가례아로 표기하도록 합의하였는바, 귀 위원회가 위의 표기를 채택·사용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쌍방 올림픽위원회는 이 기회를 빌어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합니다.

1990년 월 일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종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유순

<합의서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장 귀하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단일팀을 구성·참가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남북체육인 간에 ()차례의 본회담과 () 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가진 결과 1990년 월 일 단일팀 구성·참가에 원칙적인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또한 단일팀 호칭은 영어로 KOREA(약자:KOR)로 표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쌍방 올림픽위원회는 선수훈련과 선발전 개최 및 선수단 구성 등 단일팀 참가에 따르는 제반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쌍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단일팀 구성·참가가 어렵게 될 경우에 쌍방 올림픽위원회는OCA회원 자격으로 개별 참가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평의회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0년 월 일

대한민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종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유순

차. 제6차 실무대표접촉

남북체육회담 제6차 실무대표접촉은 1990년 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북한측은 비공개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첫 발언을 통해 「남측이 유일팀 구성의지가 없다」, 「유일팀 구성이 못되는 책임이 남측에 있다」, 「배신행위이다」는 등 격렬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측에 회담결렬의 책임을 전가시키기에 급급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측의 합의사항 이행보장방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접촉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의 전면철회를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측 태도에 대해 우리측은 단일팀 구성·참가 추진일정 합의, OCA 및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서한발송 등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보장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본회담의 합의사항임을 강조하고, 이를 토의·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단일팀 구성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공박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토의과정에서 합의사항 이행의 실천의지가 반영된다면 합의서 부칙조항이 아닌 별도의 합의각서 등 내용과 형식면에서 구애받지 않겠다는 진진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북한측은 이마저 거부하고 종전의 입장에서 한치의 양보의사도 보이지 않음으로써 제6차 실무대표접촉 역시 아무런 소득없이 종결되었다.

또한 우리측이 1월 25일 다시한번 실무대표접촉을 갖자고 제의한데 대해서도 합의사항 이행보장 방안이 철회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만날 필요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러한 북한측의 강경한 자세는 남북단일팀 구성을 정치선전의 소재로 이용하려던 목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남북체육회담에 나온 북한측의 의도가 남북단일팀 구성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측의 북경아시아경기대회 개별참가를 저지하는데 있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쌍방은 제7차 본회담시 합의한 바대로 제8차 본회담을 1990년 1월 29일 갖기로 하겠다.

카. 제8차 회담

제8차 남북체육회담은 1990년 1월 29일 오전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관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공개리에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첫발언을 통해 그동안 북한측의 부당한 태도로 인해 회담이 공전만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우리측이 제시하고 있는 합의사항 이행보장 방안의 내용과 취지가 명문화된다면 형식면에서 구애받지 않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북한측의 성의있는 대화자세를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체육회담 북측대표단이 1월 24일에 이른바 「남북회담 북측대표단들의 연합성명」에 가담하여 체육외적 문제를 거론하고 우리측을 중상·비방한데 대해 북한측 언행의 진실성을 공박하고, 남북간의 체육교류 실현을 위한 보장장치 마련을 외면하면서도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운운하는 처사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합의사항 이행보장 장치가 「단일팀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난관을 조성하기 위한 제동장치」라는 등 회담결렬에 대비한 책임전가 발언으로 일관함으로써 남북체육회담을 사실상 결렬상황으로 몰아가려고 하였다.

특히 북경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에 서한을 보내는 문제와 관련하여 「합의사항 불이행시는 절대로 개별팀으로 못간다는 것이 보장장치」라고 언급함으로써 남북체육회담에 임한 그들의 의도가 우리측의 개별참가를 저지하려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노정시켰다.

북한측은 이날 회담에서 이미 단일팀 구성·참가의 실패를 상정하고 그 책임전가를 위한 명분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시종일관했으며, 김형진 단장은 회담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측은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면서 회담이 결렬상태에 와 있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북한측은 또한 차기 회담일자와 관련해서도 우리측이 시일의 촉박성을 감안 2월 7일을 제시하자 종전과는 달리 더 늦추어 잡으려고 해 단일팀 구성·참가문제 토의에 더 이상 관심이 없음을 시사해 주었다.

쌍방은 결국 제9차 본회담을 1990년 2월 7일에 개최하는 데는 합의하였다.

타. 제9차 회담

제9차 남북체육회담은 1990년 2월 7일 오전 10시부터 12시 15분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 신축된 「평화의 집」에서 공개리에 진행되었다.

북한측은 회담벽두부터 선발언을 통해 우리측이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파탄 상태로 이끌었다고 강변하면서 ①제11회 아시아경기대회에 절대로 「별개팀」으로 가지 않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단일팀으로 출전한다는데 쌍방이 합의하고 내외에 선포할 것, ②회담지연 책임을 시인하고 합의사항 이행보장 방안을 전면 철회할 것, ③우리측 책임 있는 체육인사의 북경대회 개별팀 참가 발언을 취소할 것 등 이른바 3개항의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회담의 전제조건화 함으로써 남북체육회담의 결렬을 유도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의 이같은 강탈적 요구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는 북한측이 1979년의 평양 세계탁구대회와 1984년 LA올림픽을 앞두고 단일팀 구성을 위해 열었던 남북체육회담에서 우리측의 개별팀 참가를 저지·봉쇄하려 했던 선례를 되풀이하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공박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북한측이 진정으로 단일팀 구성·참가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이른바 3개원칙을 취소하고 합의사항 이행보장 문제의 토의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실질 문제 토의에 들어갈 것을 중용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회담이 결렬상태까지 오게된 것은 남한 당국의 분열책동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이른바 3개항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더 이상 회담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회담결렬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북한측의 불성실하고 비스포츠적인 부당한 대화태도로 말미암아 온 겨레의 기대와 희망 속에 진행되어 왔던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은 그동안 9차례의 본회담과 6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끝으로 사실상 결렬되고 말았다.

그동안 회담진행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북한측은 처음부터 남북체육회담을 통해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데 뜻이 있었다기 보다는 외형상의 합의서만 채택하여 이를 대내외에 정치선전의 소재로 이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측의 합의사항 이행보장 장치 등의 문제제기로 그들의 의도대로는 될 수 없게 되자, 남북체육회담의 지속을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결렬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합의사항 이행보장장치 마련문제는 제6차 본회담에서의 쌍방 합의사항이며 단일팀 실현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측이 합의사항 이행보장 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철회를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회담마저 결렬시킨 것은, 우리측의 개별팀 참가를 저지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조선은 하나다」라는 그들의 선전논리를 강화하려 했던 당초의 기본구도에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것은 북한측이 최근 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물결, 소련·동구권의 개혁·개방화 등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수용태세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고 남북대화가 성사될 경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남북간의 대규모 교류·협력과 사회개방을 감당할 수 없음에 따라 「콘크리트 장벽」이라는 허구적 선전논리를 내걸고 모든 대화의 진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남북체육회담의 성사가 곧바로 공동사무국의 상호교환 설치와 남북체육인 간의 대폭적인 교류로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측이 단일팀 구성에 필수적 요건인 합의사항 이행보장 문제를

트집잡아 회담을 결렬시킨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하겠다.

우리측은 북한측의 불순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진행의 전과정을 통해 남북단일팀 성사를 위해 적극적인 의사와 포용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사항의 이행보장을 통해 합의서 서명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과거 남북간의 합의가 무실화되고 실행되지 못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 기울였다.

남북체육회담이 비록 북한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결렬되었지만 선수단 호칭, 단기, 단가 등 정치적 문제를 포함한 기본 10개항에 의견의 일치를 봄으로써 앞으로 남북간 체육교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측은 우리 민족의 단합된 모습과 우수한 기량을 내외에 과시하고 체육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여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제경기대회에의 남북단일팀 참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과. 남북체육회담 결렬이후 관련 동향

김종렬 대한체육회장은 1990년 2월 8일 성명발표를 통해 북경아시아 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결렬된데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결렬의 책임은 남북간의 체육교류를 회피하고 체육회담을 정치선전 차원에서 이용하려 한 북한측에게 전적으로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측이 지금까지의 부당한 태도를 버리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체육교류에 성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대한체육회장의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성명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작년 3월 이후 근 1년간 온 겨레의 기대와 희망 속에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9차례의 본회담과 6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남북단일팀 구성·참가와 관련한 10개항의 기본사항과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는 등 체육회담 사상 유례없는 진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측은 남북단일팀 구성의 결실을 앞둔 어제 9차 회담에서 쌍방이 어떠한 경우에도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개별팀으로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합의·선포해야 한다는 등 3개항의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워 우리측이 이를 수용치 않으면 더 이상 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며 남북체육회담을 끝내 결렬시키고 말았습니다.

북한측은 우리측이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고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충정에서 제시한 합의사항 이행보장 방안에 대해 토의조차 거부하는가 하면 이를 무조건 전면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완강한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남북 쌍방이 단일팀 구성·참가에 합의를 이룩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에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실천의지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입니다.

더구나 우리 체육인들은 북한측이 순수한 남북체육회담을 정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남북관계를 악화시켜 왔던 과거의 사례들을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측은 지난 1979년 평양세계탁구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단일팀을 구성하자며 남북탁구회담을 제의해 놓고는 이를 구실로 우리팀의 참가를 저지시켰는가 하면, 1984년 LA올림픽대회 단일팀 참가를 위한 남북체육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프라하에서 공산주의 나라들의 불참선언에 서명하고도 회담석상에서는 단일팀 출전을 앞세워 우리측이 개별팀으로 참가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북한측이 어떠한 경우에도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개별팀으로는 참가하지 않을 것을 내외에 선언하는 것을 모든 문제에 앞서 동의하라고 요구한 것도 애당초 북한측이 단일팀 구성에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대한민국의 개별팀 참가를 막아보자는데 그 진의가 있었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북한측의 그같은 주장은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를 이유로 북경아시아경기대회를 공동으로 「보이콧」 하자는 것과 다름없으며 개최국인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국제적 관례를 저버리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측은 이번야말로 남북단일팀을 꼭 성사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단합된 모습과 우수

한 기량을 내외에 과시하며 체육분야에서의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에 기여하는데 우리 체육인들이 앞장서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번 회담에 임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선수단이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함과 아울러 과거 여러 차례의 남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결실을 맺지 못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우리측은 단일팀 구성실현을 보다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합의사항 이행보장 방안에 대해 토의조차 회피하는 북한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끝내 회담이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치 못하게 된 현실을 우리는 실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남북체육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측은 「남북회담 북측대표단 연합성명」에 가담하여 이른바 콘크리트장벽 제거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실현’ 등 체육외적 문제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남북단일팀 구성과정에서 체육인들의 남북왕래 등 대규모 체육교류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측의 그같은 처사는 합의사항 실천의지를 더욱 의심케 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측이 회담에서 단일팀 구성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데에만 급급할 뿐 합의사항 이행을 보장하는 데는 부정적 태도로 일관한 것도 단일팀 구성을 위한 실천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를 위한 체육회담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결렬된 책임은 남북간의 체육교류를 회피하고 체육회담을 정치선전 차원에서 이용하려 한 북한측에게 전적으로 돌아간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측이 과거의 선례를 되풀이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버리고 우리 체육인들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북체육교류에 성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측 대한체육회장의 성명발표에 대해 북한측은 2월 12일 남북체육회담 북측대표단 김형진단장 명의의 대남전통문을 통해 회담결렬의 책임이 우리측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른바 3개월칙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북한측의 적반하장격 태도에 대해 우리측 장충식 수석대표는 2월 14일 북한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북한측이 부당한 요구조건을 고집하는 등 회담을 정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체육회담이 파탄되게 된 사실을 지적하고 단일팀 추진일정에 여유가 없는 점을 들어 늦어도 2월 20일까지 합의사항 이행보장방안에 대해 동의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에 대한 회신으로 보내온 2월 19일자 전화통지문에서 이른바 3개월칙을 고수하는 부정적 입장으로 일관함으로써 온 거래의 기대와 성원에도 불구하고 북경아시아경기대회에의 남북단일팀 참가는 끝내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다.

Ⅲ. 남북관계 주요동향

1. 남북대화의 중단

가. 북한측의 일방적 회담연기

북한측은 1990년 2월 8일 이른바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북측 대표단 명의의 연합성명 발표를 통해 우리측의 연례적인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구실로 진행중에 있는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연기시킴으로써 남북대화는 또 다시 중단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남북회담 북측대표단 연합성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은 최근 우리가 내놓은 새로운 평화통일방안과 그 실현을 위한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며 결속단계에 있는 모든 대화들을 일시에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엄중한 대화파괴행위임.
-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행위이며 대화를 파탄시키고 통일을 방해하는 반민족적 행위임.
-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과 남북대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으며,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위협이 있는 속에서는 대화를 할래야 할 수도 없고 했댔자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음.
- 남북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북측 대표단들은 이제부터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진행되는 전기간 판문점 회담장소에 나가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성명함.
- 여러 갈래의 남북대화들이 중단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함께 남한 당국에 있음.

북한측이 이와 같이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측의 방어적·공개적인 군사훈련을 시비하면서 남북간 합의사항까지 파기하고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킨 것은 과거에도 여러번 되풀이 해온 구태로서, 북한측은 1989년초에도 팀스피리트 훈련과 밀입북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이유로 남북간에 진행되어 오던 각종 회담을 장기간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우리측은 북한측의 이러한 부당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민족화합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그 결과로 1989년 9월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을 필두로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남북간에는 1989년 9월 이래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한 대화가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4개분야에 총 28회의 회담이 열렸으며,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과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의 경우 쌍방이 상호존중과 타협의 자세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단계에까지 와있다고 하겠다.

사실 제7차 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을 3월 7일, 제11차 국회회담 준비접촉을 2월 22일에 각각 개최

기로 한 것은 남북간의 명백한 합의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이와같이 합의된 회담날짜까지 임의로 파기하고 회담외적인 문제를 대화중단의 구실로 들고나온 것은 대화 상대방에 대한 초보적 예의마저 무시한 처사로서, 북한측이 남북대화를 정치선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한편 북한측으로서는 최근 소련 및 동구 공산권의 개혁·개방에 따른 급격한 국제환경 변화의 파장이 그들 체제유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성사될 경우 필연적으로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사회개방이라는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측은 현재로서는 남북대화를 더 이상 진전시킬 입장이 아니라는 판단아래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성사단계에 있는 회담을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내부에 최근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편승하여 팀스피리트 훈련이 『한반도 긴장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왜곡 선전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 및 팀스피리트 훈련중단 여론을 대내외에 확산·고조시켜 보려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우리측은 북한측의 이러한 반대화적 자세에 대하여 2월 9일 국토통일원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측이 남북대화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나오기는커녕 합의된 회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본말을 전도시키는 무례한 처사로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측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여 남북대화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국토통일원 대변인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토통일원 대변인 성명

북한측은 어제 남북회담 북측대표단 연합회의를 열어 현재 남북간에 진행중인 모든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연합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북한측이 『콘크리트장벽 철거』라는 기만적 구호를 내걸고 각종 남북회담에 난관을 조성하면서 급기야 지난 7일에는 남북체육회담의 결렬을 선언한데 이어, 우리의 방어적·공개적 군사훈련을 구실로 또다시 대화를 중단시키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자행한데 대해 놀라움과 함께 실망을 금할 수 없음.

더구나 남북간에 현재 여러갈래의 대화가 거의 타결단계에 와있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측이 대화를 기피하고 합의된 회담날짜마저 임의로 파기하려는 태도를 보인데 대해 남북대화의 진전과 결실을 바라는 온겨레와 더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임.

40여년간 남과 북이 대결과 불신의 관계를 지속해온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개선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인정과 존중의 정신에서 성실한 대화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구실로 대화를 전면 중단시킨 것은 그들이 아직까지도 남북대화를 투쟁적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것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음.

팀스피리트 훈련은 과거 남북대화가 진행중인 기간에도 여러 차례 실시되어 왔으며, 북한측에 대해 훈련계획을 사전통보하고 참관초청까지 해오고 있음.

북한측이 진실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를 원한다면 대규모 군대를 전진배치하고 지속적인 무력증강을 피하는 등 우리를 위협하는 도발적 자세부터 버려야 마땅하며, 동훈련이 필요치 않은 상황을 스스로 조성하는데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임.

북한측이 남북대화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나오기는커녕 합의된 회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본말을 전도시키는 무례한 처사로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임.

북한측은 대화의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부문제를 간섭하는 등 남북대화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릇된 태도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임.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남북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북한측이 하루속히 대화부정적 자세에서 벗어나 예정된 남북대화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나. 우리측의 남북대화 재개촉구

우리측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채문식 수석대표는 북한측의 이른바 남북회담 북측대표단 연합회의의 일방적인 남북대화 연기성명 발표로 말미암아 중단상태에 있는 제11차 준비접촉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대북전통문을 2월 21일 북한측 전금철 단장에게 보냈다.

전통문에서 채문식 수석대표는 2월 22일 갖기로 쌍방이 이미 합의한 남북국회회담 제11차 준비접촉이 북한측의 부당한 태도로 열리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남북국회회담의 성사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제11차 준비접촉에 북한측이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채문식 수석대표의 대북전통문 내용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는 귀측 대표단이 오는 2월 22일 (목) 갖기로 합의한 남북국회회담 제11차 준비접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귀측도 인정하는 바와같이 준비접촉은 본회담의 형식과 일부 의제문제를 조금만 더 절충하면 완전 타결될 단계에 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지난 제10차 접촉에서 회담외적 문제만을 집중 거론하면서 회담진전을 가로막았으며 이번에는 또다시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예정된 제11차 준비접촉을 중단시킴으로써 남북국회회담의 성사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음.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훈련이 공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방어 목적의 평화유지훈련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며 회담중단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 기간중에 여러 회담들이 열렸던 사실이 이를 실증해 주고 있음.

귀측이 부당한 이유를 내세워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준비접촉을 끝내 중단시킨다면 애당초 남북국회회담의 성사에는 뜻이 없었다는 내외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나는 귀측이 팀스피리트 훈련문제를 회담과 결부시키는 부당한 태도를 시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제11차 준비접촉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함.

이와함께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송한호 수석대표도 3월 6일 북한측 백남준 단장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남북대화를 중단시킴으로써 남북고위급회담 제7차 예비회담이 열리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최근 발견된 북한측의 남침용 땅굴에 대해 이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는 물론 온 세계의 평화애호인들에게 경악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강력히 통박하였다.

우리측은 또한 북한측이 남북 대화에 고의적 난관을 조성하고 민족간에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이와같은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남북간의 현안문제와 민족의 장래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로 돌아와 제7차 예비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다.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송한호 수석대표의 대북전통문 내용요지는 다음과 같다.

남북 쌍방은 제7차 예비회담을 3월 7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귀측은 이른바 『남북회담 북측대표단 연합성명』을 통해 대화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제7차 예비회담은 쌍방이 합의한 예정된 날짜에 개최되지 못하게 되었음.

오늘날 남북간에는 책임있는 고위당국자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으며 어떤 구실이나 이유도 회담을 기피하는 명분으로 될 수는 없는 것임.

더욱이 최근에는 휴전선 지하를 관통하는 귀측의 기습남침용 땅굴이 또다시 발견됨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는 물론 온 세계의 평화애호인들에게 커다란 놀라움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음.

귀측이 콘크리트 장벽철거라는 허구적 주장과 한미합동 군사훈련중지 등을 내세워 진행중인 남

북대화를 중단시키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지닐 수 없으며 귀측 스스로가 남북간의 진정한 대화와 화해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오늘날 세계적 추세는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민족간에 이처럼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행위는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는 일임.

나는 귀측이 하루빨리 남북간의 현안문제와 민족의 장래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로 전환하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내에 남북고위급회담 제7차 예비회담의 개최에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함.

북한측은 우리측의 이와같은 성의있는 대화재개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3월 9일자 남북고위급 예비회담 북한측 단장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측이 땅굴설을 들고나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등 상투적인 대남 모략선전으로 일관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말았다.

2. 『남북 당국·정당 협상회의』 관련동향

가. 김일성 신년사 발표

북한측은 1990년 1월 1일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통일을 위한 결정적인 구국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있는 콘크리트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앞으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믿고 투쟁해 나갈으로써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야 한다"면서 세계적인 개방과 화해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폐쇄정책을 고수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을 어둡게 하였다.

1990년도 김일성 신년사 중 관련 부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주의 제도야말로 가장 인민적인 제도이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남김없이 발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것을 절실히 체험하였음.
-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은 오직 당의 올바른 영도밑에 인민대중이 책임과 역할을 다할 때 높이가 발양될 수 있음.
- 우리는 당을 더욱 강화하고 당의 영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나가야 함.
- 통일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구국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 남북간의 자유내왕 실현과 전면개방을 주장하며 무엇보다도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쌓아 놓은 콘크리트 장벽부터 허물어야 함.
- 남북의 노동자·농민·청년학생들과 정치인·경제인·문화인·종교인을 비롯한 각계 각층 인민들이 제한없이 접촉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이러한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남과 북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함.
- 제국주의가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역사의 법칙으로서, 사회주의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전취물임.
- 인민대중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에로 나가야 한다는 근본 원칙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함.

○ 우리는 그 어떠한 복잡한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어도 변함없이 자주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평화와 사회주의 동방초소를 지켜나갈 것임.

이상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일성은 전체분량의 1/3이상을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당을 중심으로한 대내결속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할애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소련 및 동구 공산제국의 급격한 변화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한편 김일성 일인지배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남북간의 자유내왕과 전면개방을 내걸고 콘크리트 장벽철거 운운한 것도 개방·개혁이라는 대외 압력에 대응함과 아울러 우리측이 그동안 북한의 개방과 북한주민의 자유·인권보장을 꾸준히 촉구해온데 대한 허세적 정치공세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특히 대전차 방어용 군사시설물을 두고 이것이 베를린 장벽처럼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개방을 막고 있는 장벽이나 되는 양 왜곡선전에 나선 것은 한반도 긴장과 대결구조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이를 남북간의 자유내왕과 전면개방을 거부하는 구실로 삼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제의는 형식면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수용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기존의 남북연석회의를 되풀이 주장한 것으로서, 남북정상회담을 기피한다는 비난을 모면키 위한 위장제안일 뿐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이 김일성 신년사에 따라 대내 사상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남북 대화를 콘크리트 장벽철거 등을 앞세운 정치선전 공세의 장으로 이용하면서 당분간 수구적이고 경직된 자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 단기적 한계성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북한의 『남북 당국·정당 협상회의』 제의

(1) 북한 정부·정당대표 제1차 연합회의 편지

북한측은 1990년 1월 9일 이른바 『정부·정당대표 연합회의』를 개최하고 우리측 당국·정당 수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는 한편 이를 1월 13일 북한 정무원 총리 명의의 편지와 동봉하여 우리측 대통령, 국무총리 및 3야당(평민·민주·공화당) 총재에게 각각 보내왔다.

당초 북한측은 편지전달 과정의 극화를 통해 대남선전·선동의 소재로 삼겠다는 의도하에 2명의 연락원을 서울에 보내 수신인에게 직접 편지를 전달하겠다고 1월 12일 쌍방실무자 접촉을 갖자고 하였으나, 우리측이 그동안의 관례에 벗어난 것임을 지적 이를 거부함에 따라 종전대로 판문점을 통해 편지를 전달받았다.

북한측의 『연합회의』가 채택했다는 대남편지 내용요지는 다음과 같다.

-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남북 사이의 자유로운 내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구국대책을 천명했으며 남북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 소집을 제의했음.
- 통일의 문을 여는 첫 조치로서 우선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쌓아놓은 콘크리트 장벽부터 제거되어야 함.
- 자유내왕·전면개방은 남북당국 사이에 다룰 행정상의 문제이기 전에 쌍방의 책임있는 정치인들의 단안에 의해 실현되어야 할 정치문제임.
- 남북 당국·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 소집을 위해 1990년 2월 초순 판문점에서 남북 각기 당국 및 정당대표 5명이 참가하는 예비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

이상에서 보는 바와같이 북한측의 이 편지는 결국 김일성 신년사에서 제시된 내용을 당과 정부 차원에서 그대로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측은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소집을 주장한 북한측의 김일성 신년사와 관련하여 1월 10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전제조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남북간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환영을 표시하는 한편, 통일문제 해결의 책임과 권능을 가진 남북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열어 이와같은 주요 현안문제를 협의·해결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각종 단체대표들의 김일성 신년사 지지담화 및 군중동원 행사를 통해 집중 선전공세를 전개하는가 하면 이와같은 『연합회의』 편지를 보내온 것은 4당체제 아래에 있는 우리 국내의 정국혼란과 통일문제를 둘러싼 국론분열을 야기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또한 북한측이 정권수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끈질기게 주장해온 『남북정치협상회의』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마치 새로운 제의나 되는 듯이 용어표현만 약간 달리하여 제의해온 것은, 우리측의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대한 형식적 수용인상을 대내외에 부각

시키는 동시에 소련과 동구제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개혁·개방의 물결에 대처하여 그들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연합회의』의 편지가 밝히고 있듯이 『협상회의』를 운운하면서도 이 회의가 열리게 되면 군사분계선 남쪽지역의 콘크리트 장벽제거를 해결해야 할 『첫 조치』로 주장한데서도 드러나고 있다 하겠다.

우리측은 이 같은 북한측의 『연합회의』 편지를 접수한 당일 국토통일원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측의 제의는 이른바 남북정치협상회의 방식의 재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상적인 대화통로를 무시한 채 정당간의 회담을 고집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공박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현재 진행중인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을 조속히 타결하여 빠른 시일안에 남북고위급회담을 본궤도에 올려 놓는데 성의를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우리측 강영훈 국무총리는 2월 1일 북한 정무원 총리에게 보내는 회신형식의 대북서한 전달을 통해 우리측의 기본입장을 밝혔다.

강영훈 국무총리는 동 서한에서 북한측이 주장하고 있는 『협상회의』와 허구적인 『콘크리트 장벽』 철거의 비현실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남북간의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와 사회개방을 위해서는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간에 통행·통신·통상을 보장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에 관한 상호 합의와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와같은 남북간 현안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적 대화통로인 기존 대화에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 함은 물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강영훈 국무총리의 대북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정부가 『7·7 선언』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에서 이미 밝힌 바 있는 남북자유왕래와 사회개방 문제에 대해 귀측이 관심을 표명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귀측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방식으로 비현실적인 『협상회의』를 다시 제기하였고 특히 우리측에는 있지도 않는 이른바 콘크리트장벽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의 장애가 마치 우리측에 있는 듯이 주장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이해하기가 어려움.

지금 남북간에 편지 한통, 전화 한통화 주고받지 못하며 이산가족의 고향방문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간에 최소한 동포들의 자유로운 통행·통신 그리고 경제교류와 협력을 보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함.

남과 북은 긴장완화를 위해 군사적 신뢰구축 등 실질적 조치도 아울러 취해 나가야 하며, 올해 『타임스피리트』 훈련규모를 축소하여 실시키로 한 우리측 입장에 귀측도 상응하는 조치가 있기를 기대함.

귀측이 제기한 『협상회의』는 본질상 귀측이 종래 주장해온 정치협상회의나 남북연석회의와 다를바 없음.

쌍방 당국과 정당이 해야할 일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각기의 고유한 권능과 책임도외시 하면서 무원칙하게 하나의 협상마당에서 혼합시키려는 것은 남북간의 제반문제를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자세로 보기 어려움.

귀측이 진심으로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바란다면 기존 대화에 성실해야 함은 물론,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하루속히 호응해나와야 하리라고 생각함.

(2) 북한 정부·정당대표 제2차 연합회의 편지

우리측이 강영훈 국무총리의 대북서한을 통해 북한측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남북대화에 성실한 태도로 임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또다시 2월 15일 판문점을 통해 그들의 제2차 정부·정당대표 연합회의 편지를 우리측 노태우 대통령(민주자유당 최고위원), 강영훈 국무총리, 김대중 평민당총재에게 보내왔다.

북한측은 2차 편지에서 우리측의 강영훈 국무총리가 대북서한을 통해 제의한 『통행·통신·통상』협정 및 남북 경제교류 문제에 대해 『콘크리트장벽 철거』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워 이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상회의』 개최를 위한 이른바 5개항의 당면대책이라는 것을 우리측이 수락하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측의 2월 14일자 제2차 대남편지의 내용요지는 다음과 같다.

- 남한에서의 정계개편에 따라 새로 출현하는 정당들도 응당 『협상회의』 당사자로서의 권리가 부여되어야 함.
- 남북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마련을 위해 다섯가지 당면대책을 제시함.

첫째, 자유내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하기 위해 콘크리트장벽 철거 용의를 지체없이 표명해야 함.

둘째, 『협상회의』 테두리 안에서 쌍방 최고위급 상봉을 별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셋째, 필요시 귀측 당국 및 정당대표들과 개별적·집체적 접촉을 할 것임.

넷째, 앞으로 창당될 어떤 정당에도 협상의 문을 개방함.

다섯째, 팀스피리트 90 합동군사훈련을 조속한 시일내 중지해야 함.

북한측이 1월 9일자 대남편지 보다 경직된 자세로 콘크리트장벽문제 등 이른바 5개항의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은 대외적인 개혁·개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자유왕래와 개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면서 북한의 폐쇄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편지에서 북한측이 『협상회의의 테두리 안에서 쌍방 최고위급의 상봉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쌍방 정상간의 단독접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협상회의의 개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간 우리측이 제의해온 남북정상회담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앞으로 출현할 정당들에 대해서도 『협상회의』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하면서 정당대표들과 언제 어디에서나 만나겠다고 한것은 우리사회의 일부 반체제인사들을 겨냥하여 『협상회의』에 대한 그들의 호응을 불러 일으키고 통일전선차원의 비정상적인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측은 이같은 북한측의 제2차 대남편지와 관련하여 3월 3일 강영훈 국무총리 명의의 대북서한을 보내 북한측이 또다시 허구적인 콘크리트장벽 문제를 비롯한 이른바 5개 당면대책을 들고나오는데 대해 유감과 우려를 강력히 표시하고, 남북관계의 현안문제와 장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상회의』와 같은 위장선전을 일삼고 진행중인 회담을 중단시키는 구태의연한 작태를 버리고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등 기존대화 재개에 성실히 호응하라고 촉구하였다.

강영훈 국무총리의 2차 대북서한 내용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난 2월 1일자 본인의 편지에서 우리측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현실을 외면한채 귀측 『연합회의』 편지를 전달해 온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더구나 귀측이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말하면서도 허구적인 콘크리트장벽과 비현실적인 『협상회의』를 거둬 들고 나왔는가 하면, 우리측의 자위적 군사훈련에 대해서까지 부당하게 시비해 나선데 대하여 실망을 금할 길이 없음.

귀측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남북관계를 하루속히 정상화하여 평화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이 필수적 과제임.

따라서 우리측은 그동안 기회 있을때마다 이에 대한 귀측의 호응을 촉구해 왔으며, 7·7선언 이후 그 실현을 위한 제반조치를 꾸준히 강구해 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아직까지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실천하기 위한 상호 신뢰회복에 아무런 관심과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음.

귀측이 새삼스럽게 콘크리트 장벽이라는 허구적 선전논리를 내걸고 내외의 여론을 오도하려는 것은 남북간의 실질적 대화와 교류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하고 있음.

귀측이 진정으로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바란다면 응당 그 해결의 권능과 책임을 가진 쌍방 당국간의 회담을 하루속히 성사시켜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 함.

특히 남북간의 현안문제와 장래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쌍방당국 최고책임자간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귀측이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을 표명하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남북관계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협상회의』를 조건으로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우리측이 누차 밝혀 왔듯이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에는 아무런 전제조건이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될 것임.

우리측은 올해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축소하여 실시할 것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귀측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한 것임.

그러나 귀측은 이에 상응하는 긍정적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진행중인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구태를 되풀이 하는가 하면 최근 전군과 준군사조직에 대해 전투동원 준비명령을 하달했음.

귀측이 긴장을 완화하는 대신 대결을 조장하고 화해를 추구하는 대신 불신을 심화시키는 부당한 태도를 더이상 지속하지 말아야 하며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을 비롯한 기존대화에 성실히 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바임.

(3) 북한 정부·정당대표 협의회 편지(제3차)

우리측이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협상회의」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대결과 불신을 조장하는

부당한 태도를 더이상 되풀이 하지 말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3월 23일 앞서의 편지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또다시 보내왔다.

이번에는 북한 정부·정당대표 협의회를 발신명으로 하면서 우리측 대통령(검 민주자유당 최고위원)과 국무총리 앞으로 보내는 편지와 김대중 평민당총재 앞으로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일부 달리하였다.

북한측은 이 편지에서 남북한 통행·통신협정의 체결과 남북정상회담개최에 대한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이른바 「콘크리트 장벽」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남북 당국·정당 대표들을 포함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엉뚱한 제의를 해왔다.

특히 김대중 평민당총재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통일문제 해결에서 합법적 야당을 배제하려는 불순한 주장이라며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에 하루속히 응해 나오라고 촉구하기까지 했다.

북한측이 세번째로 보내온 3월 22일자 편지의 내용요지는 다음과 같다.

<당국 및 민주자유당 수뇌들에게 보내는 편지>

- 「콘크리트 장벽」을 그냥 두고 통행·통신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은 당국의 통제와 감시 밑에서 극히 부분적이고 협소한 범위의 교류나 하자는 것임.
- 「최고책임자회담」또한 「협상회의」 제의를 반대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며, 남과 북의 최고위급이 만날 수 있는 무대까지 열어놓고 있는 「협상회의」 제안을 신중히 대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임.
- 「땅굴문제」를 들고나와 남북관계를 극도로 첨예화시키고 있는 사실을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같은 서툰 모략극을 꾸며내지 말아야 함.
- 「콘크리트 장벽」의 존재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조건에서 남과 북의 당국·정당 대표들을 망라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 현지에서 공동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의함.

-공동조사 일시: 1990. 3. 30, 10:00

-공동조사단 구성: 당국·정당 대표 10여명 및 군사 전문가·기자 등을 포함한 100여명(북한측)

-조사방법: 북한측 헬리콥터로 서부에서 동부로 이동조사

-실무접촉: <일시>1990. 3. 28, 10:00

-----<장소>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

-----<대표>쌍방 당국·정당 파견 실무자 3명 정도

<김대중 평민당총재에게 보내는 편지>

- 통행·통신협정 체결이나 「최고당국자회담」은 대화와 통일문제 해결에서 합법적 야당까지 배제하고 분열정책을 계속 추구하려는 극히 불순한 주장임.
- 통일문제는 사상과 제도이전의 문제이며 남북당국과 정당들은 다같이 회피할 수 없는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음.
- 남북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가 하루 빨리 실현되도록 응분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기대함.

※ 「콘크리트 장벽」 공동조사 내용은 전자의 편지내용과 동일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소련의 타스통신을 포함한 내외신기자들에 의해 공개확인된 대전차 장애물을 두고 북한측이 집요하게 정치선전의 소재로 삼는 한편 이번에 공동조사단까지 구성하자고 제의해온 것은 남침용 제4땅굴의 발견으로 인한 그들의 공색한 입장을 모면하고 내외로부터 가중되고 있는 개방·개혁의 압력을 완화해 보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북한측이 명목상으로만 공동조사를 표방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그들의 인원만으로 일방적 조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위축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남북최고당국자간의 만남에 대해 그 필요성을 시사해 오던 북한측이 이를 분열정책의 소산으로 몰면서 우리측 야당총재에게 「협상회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별도로 촉구한 사실은 매우 주목된다.

그것은 최근 우리측의 정계개편을 겨냥하여 통일문제를 둘러싼 우리 정부와 야당간의 이간을 통해 정국혼란을 조장해 보려는 또하나의 불순한 기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북한측이 쌍방 당국간의 정상적인 대화통로는 외면한채 당국과 정당의 대표들을 적당히 혼합하는 협상의 장을 마련하려 하면서 「콘크리트 장벽」에 대한 내외적 관심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당분간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기피하고 남북정상회담의 거부명분을 축적해 나가려는 책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북한측 제의에 대해 강영훈 국무총리는 4월 7일 대북서한을 보내 북한측이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주장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못박고, 하루속히 남북고위급회담을 성사시켜 동포들의 자유로운 통행·통신을 보장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조치들을 함께 강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측의 대전차 방어용 군사시설물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거 남북왕래회담이나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등의 남북교류가 이로 인해 장애를 받은 일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국제적 조류에 맞추어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우리측의 노력과 성의에 대해 북한측도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강영훈 국무총리의 대북서한 내용요지는 다음과 같다.

여러차례에 걸쳐 내외신 기자들에 의해 공개확인된 우리측의 대전차방어용 군사시설물까지도 귀측이 조사해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사리에 맞지 않음.

귀측이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주장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이룩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대전차 구조물은 과거와 같은 동족상잔을 방지하기 위한 평화보장의 시설물로서, 공격형 군사력을 전방에 집중배치하고 있는 귀측이 이를 철거하라는 것은 우리측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과거 남북왕래회담이나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등 남북간의 교류가 이 군사시설물로 해서 장애를 받은 일은 결코 없었음.

귀측이 진정으로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사회개방을 바란다면 남북고위급회담을 하루빨리 성사시켜 동포들의 자유로운 통행·통신을 보장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조치들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함.

아울러 귀측이 제4 남침용 땅굴 발견과 관련하여 이를 시인·사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우리측의 모략극이라고 둘러대며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는데 대해서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음.

한반도만이 아직도 냉전의 울타리속에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명명백백한 사실마저 은폐하거나 왜곡해 보겠다는 귀측의 온당치 못한 태도로부터 비롯된 것임.

새로운 국제적 조류에 맞추어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우리측의 노력과 성의에 대해 귀측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귀하가 변명과 책임전가로 시일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남북고위급회담을 열어 쌍방 총리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를 보일것을 기대함.

다. 북한의 「콘크리트 장벽 참관단」 초청 제의

북한측은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이후인 2월 19일 그들의 노동당 외곽 선전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명의로 우리측 이흥구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전통문을 보내 이른바 『콘크리트 장벽』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남북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로 참관단을 구성할 것을 제의하고 이를 위해 2월 26일 우리측의 대학생과 농민들을 각각 100명 정도씩 관문점을 거쳐 북한측에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콘크리트 장벽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필름, 녹화테이프, 사진자료 등을 2월 22일 관문점에서 우리측에 넘겨주겠다고 주장했다.

북한측의 이와같은 제의는 소련 외상 세바르드나제의 관련 발언 등을 통해 콘크리트 장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자 이에 고무되어 우리측 지역에 남북간 자유왕래를 가로막는 분단장벽이 실존하고 있는 것처럼 내외 여론을 기만하려는 선전술책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시기적으로 틱스피리트 훈련 등의 계기를 겨냥, 우리측 지역의 대전차 방어용 군사시설물을 정치적 차원의 『분단장벽』으로 기정사실화 함으로써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을 주요대상으로 반정부·반미투쟁을 선동해 보려는데 그 저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소련 및 동구권 공산국가들의 개혁·개방추세가 북한에 대한 압력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사회개방이 안되는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켜 그들 체제를 유지·보존하려는 이중적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주민의 여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봉쇄하고 있는 북한이 자유왕래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일 뿐만 아니라 공격형 군사력을 집중 전진배치시켜 놓고 우리의 군사시설물을 철거하라며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도발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측은 이와 같은 북한측의 허구적 선전책동에 대해 2월 21일 국토통일원 대변인 성명을 발표, 내외신 기자들의 현장 확인을 통해 북한측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외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대남적화혁명이라는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남북간의 자유왕래를 막는 진정한 장애는 북한측의 비타협적이고 적대적인 자세로부터 비롯된 정치적 장벽에 있다고 공박했다.

또한 북한측이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상호개방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면 내외의 기대를 우롱하는 정치선전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측의 노력에 성실하게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국토통일원 대변인의 성명요지는 다음과 같다.

북한측은 금년초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콘크리트 장벽을 운운한 이래 마치 우리측에 베를린 장벽과 같은 남북간 자유왕래를 막는 무슨 장애물이라도 있는 양 대내외에 정치선전공세를 펴왔는가 하면 이 문제를 진행중인 남북간의 각종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이용해 왔음.

이미 우리측은 내외신 기자들의 현장확인을 통해 북한측이 주장하는 콘크리트 장벽은 없으며 다만 6·25 때와 같은 유사시에 북한측 전차의 기습남침공격을 저지시키기 위한 대전차 장애시설물만이 있다는 것을 내외에 알린 바 있음.

북한측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개방·개혁을 거부하면서도 탱크가 자유왕래할 수 있는 길을 열라고 강탈적 요구를 해온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7천만 겨레의 염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처사임.

자유왕래와 개방으로 말한다면 우리측이 한결같이 견지해 온 입장으로서, 북한측이 이에 호응만 해온다면 남북간의 자유왕래는 언제든지 실현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까지 단 몇백명 이산가족의 자유왕래마저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임.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상호개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당국자회담을 조속히 성사시킴으로써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길을 트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며, 북한 스스로 폐쇄체제를 개방하는데부터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임.

남북간 자유왕래의 기초가 되는 북한사회 내부의 자유왕래마저 원천 봉쇄되고 있는 조건에서 북한측이 자유왕래 운운하고 있음은 가당치도 않은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새삼스럽게 콘크리트 장벽이라는 가공적 문제를 들고 나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직도 대남적화혁명이라는 환상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임.

남과 북이 자유왕래를 실현하는데 있어 진정한 장애는 공격형 군사력을 전진배치하고 기습남침용 땅굴을 파는가 하면 남북간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북한측의 비타협적이고 적대적인 자세로부터 비롯된 정치적 장벽일 뿐임.

우리는 북한측이 지금이라도 내외의 기대를 우롱하는 정치선전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측의 노력에 성실하게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함.

3. 북한 「IPU 총회 남북단일 대표단」 참가 제의

북한측은 1990년 1월 17일 국제의회연맹(IPU) 북한의회그룹 위원장 양형섭 명의로 우리측 IPU 한국의원단 김재순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와 제84차 IPU 총회의 평양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남북한이 단일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할 것을 제의해왔다.

또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각기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로 남북의원단 회담을 갖자고 하였다.

동 편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IPU 제84차 총회를 평양에서 개최할 용의가 있으며 남과 북이 단일대표단을 구성·참가하겠다는 희망을 IPU 총서기에게 표시하였음.
- 남북체육회담을 통해 단일팀 참가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본 조건에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문제도 능히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남북이 단일대표단을 구성·참가하게 된다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공동의 노력을 온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임.
-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남북의회그룹회담을 제의하며 4월 IPU 제83차 총회 전에 합의보기를 희망함.
- 쌍방 각기 의회그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로 구성하여 2월 7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좋겠음.

북한측이 남북간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마저 교착·지연 전술로 일관함으로써 남북국회의원간의 교류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IPU 총회의 단일대표단 구성·참가를 제의해 온데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하겠다.

현재까지 분단국이 IPU 총회를 비롯한 국제회의에 단일대표단을 구성·참가한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국회가 각기 별개의 주권기관이며 이념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정치적 집회인 IPU 총회에서 남북한이 공동입장을 취할 아무런 기본토대가 마련되지 못한 점을 외면한 채 무조건 단일대표단으로 참가하자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이러한 제의를 해온 것은 동구권 개혁 및 우리의 북방정책 추진의 성과로 인한 외교적 고립과 국제사회의 개방압력을 모면하는 동시에 그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하나의 조선」이라는 논리를 합리화, 우리측의 유엔가입 노력 등에 제동을 걸어 보려는 의도에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북단일대표단 구성이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고 이를 구실로 우리 대표단의 평양총회 참가를 저지하기 위한 단서를 확보해두려는 측면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측이 편지에서 단일대표단 구성의 의미에 대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IPU 제84차 총회가 평양에서 열릴 경우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콘크리트 장벽 제거」 등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 정치선전 책략에 단일대표단 구성을 이용할 가능성도 크다 하겠다.

이와 같은 북한측 제의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회는 1월 18일 국회의장단, 여야 원내총무, 국회 통일특위 위원장, IPU 한국대표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당적으로 협의한 결과 김재순 IPU 한국의원단 회장에게 앞으로의 대책을 일임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김재순 국회의장은 1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측의 IPU 총회 유치노력을 지원·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한편, 남북단일대표단 구성·참가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관례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며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별도의 남북국회회담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또한 북한측에 대해 남북대화를 정치선전 차원에서 이용하려 할 것이 아니라 남북국회의원들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 진행중에 있는 남북국회회담을 성사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재순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명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측이 제84차 IPU 총회를 평양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킴으로써 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볼때 이에 반대할 이유가 없음.

북한측이 희망한다면 이미 IPU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북한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

IPU 총회에 남북단일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IPU 규약 (제3조, 제11조)에 어긋나고 또 IPU 역사상 전례가 없는 비현실적인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IPU는 정치기구이자 정치집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단일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민감한 정치현안들에 관하여 단일화된 공동입장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해야 함.

특히 1988년 8월 본인의 제의로 시작된 국회회담이 2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지금까지 본회의를 성립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다른 갈래의 국회회담을 거론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지금의 시점은 남북 쌍방이 현재 진행중인 남북한 국회회담을 성사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때이며 IPU 총회 단일대표단 구성을 위한 별도의 남북회담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4. 북한의 제4남침용 땅굴발견 관련 동향

국방부는 3월 3일 이상훈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측이 남침을 위해 판 또 하나의 새로운 땅굴을 동부지역 군사분계선 이남인 강원도 양구군 동북방 26km 지점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이번 새로이 발견된 제4땅굴은 북한측이 휴전선 전지역에 굴설하여 놓은 20여개의 땅굴 가운데 하나로서 그 규모는 높이 2m 폭 2m의 아취형으로 지난 1970년대 발견된 3개의 땅굴과 유사하며 지하 145m의 심도로 군사분계선 남방 1,052m 지점까지 파내려와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방부장관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북한측이 땅굴을 휴전선 이남지역까지 침투하여 굴설한 행위에 대해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명백한 침략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북한측이 대남적화야욕을 당장 포기하고 지금까지 굴설한 남침용 땅굴을 전부 공개하는 동시에 이를 자발적으로 폐쇄조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로써 휴전선 서부의 제1땅굴(1974. 11. 15 발견), 제3땅굴(1978. 10. 17 발견) 및 중부의 제2땅굴(1975. 3. 19 발견)에 이어 북한측이 전전선에 걸쳐 남침용 땅굴을 굴설해 두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북한측이 남침용 땅굴을 굴설한 배경은 김일성이 1971년 9월 25일 하나의 갱도는 10개의 핵폭탄보다 효과적이며 요새화된 현 전선을 극복하는 최적의 수단이라는 이른바 『9. 25 전투명령』을 하달한데서 찾을 수 있다.

북한측이 이와 같이 전전선에 걸쳐 남침땅굴을 판 것은 개전초 경보병 및 특수부대를 대량으로 은밀히 침투시켜 우리측 전방 주력부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선제기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후방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제2전선을 형성하여 전국토를 동시에 전장화시킬 수 있다는 단기 속진속결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이 발표한 담화요지는 다음과 같다.

- 북한측이 남침을 위해 굴설한 새로운 땅굴이 동부지역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발견되었음.
- 북한측은 1970년대 초부터 휴전선 일대에 남침용 땅굴 굴설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현재 그 수는 20여개로 추정되는 바 금번 땅굴은 지난 1970년대에 발견된 3개 땅굴에 이어 4번째로 발견된 것임.
- 북한이 전전선에 20여개의 남침용 땅굴을 굴설하고 있는 것은 개전초 은밀하게 대규모 병력을 침투시켜 전·후방을 동시에 전장화하려는 적화통일 야욕에서 나온 것임.
- 북한측이 남침용 땅굴을 휴전선 이남지역까지 침투하여 굴설한 행위는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명백한 침략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음.
- 북한측은 한반도의 공산화 책략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굴착한 남침용 땅굴을 전부 공개하고 자발적으로 폐쇄조치해야 함.
- 북한측은 이른바 『콘크리트 장벽 철거』와 팀 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것이 아니라 군사모험주의적 대남적화 야욕을 버리고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성의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함.

한편 국토통일원 대변인은 3월 5일 제4땅굴 발견과 관련한 성명 발표를 통해 『제4땅굴은 북한측이 아직도 대남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서, 남침용 땅굴과 남북대화를 양립시키려는 북한의 불순한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하는 동시에 더 이상 세계적인 개방과 개혁의 조류를 역행하지 말고 중단된 남북대화에 즉각 호응하여 나올 것을 다시 촉구하였다.

또한 콘크리트 장벽이라는 허구적 선전논리와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을 구실로 삼아 진행중인 모든 남북대화를 중단시킨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3월 6일 그들의 인민무력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땅굴을 파지도 않았으며 이는 남한 당국이 전쟁정책과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날조한 모략』이라고 발뺌하면서 오히려 우리측의 땅굴발견 사실 발표를 매도하기 위한 비방선전에 급급하였다.

더구나 착암기 굴착방향과 침묵, 전깃줄 등 모든 객관적 증거가 북한측이 파내려온 것임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침용 땅굴이라고 강변하기까지 하였다.

엄연한 사실조차도 부인·은폐하려는 이같은 북한측 태도는 대남 폭력혁명 기도의 실체폭로로 인한 내외로부터의 비난을 모면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대결의식을 고취하여 그들 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역이용해 보려는데 그 의도가 있다고 하겠다.

<부록> 남북대화 관련 주요동향일지(1989.1.1-1990.4.7)

1989. 1. 1 김일성,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
 -----1. 12 정원식 문교부장관, 남북학생교류 추진을 위한 민간협의 기구 발족 담화발표
 -----1. 24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 대북서한
 ----- --○ 남북적십자회담 재개 촉구(4,346명의 이산가족찾기 의뢰인 명부 동봉)
 -----1. 30 북한, 4당 총재 및 김수환추기경·문익환목사·백기완씨에게 남북정치협상회의 호응촉구 편지
 -----2. 8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1차 예비회담
 -----2. 8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남북국회회담 제8차 준비접촉 연기 성명
 -----2. 9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채문식 수석대표, 회담재개 촉구 성명
 -----2. 15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손성필, 남북적십자회담 재개거부 대남서한
 -----3. 2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
 -----3. 9 제11회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 위한 제1차 남북체육회담
 -----3. 13 정용석 남북대학생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 남북대학생 교류회담 제의
 -----3. 28 제2차 남북체육회담
 -----3. 29 이홍구 국토통일원장관,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문제 해결촉구 성명
 -----3. 31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설치
 -----4. 11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북측대표단장 백남준, 제3차 예비회담을 4. 26로 연기통보
 -----4. 17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북측대표단장 백남준, 제3차 예비회담을 7. 12로 재연기 통보
 -----4. 17 남북체육회담 북측대표단장 김형진, 제3차 남북체육회담을 7. 18로 연기통보
 -----4. 24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 남북 직통전화의 정치적 이용 불용 통보
 -----5. 26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채문식 수석대표, 회담재개 촉구 대북서한
 -----5. 31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손성필, 제2차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을 위한 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제의 대남서한
 -----6. 12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제의 대북서한
 -----6. 20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북측대표단장 전금철, 제8차 준비접촉 6. 28 재개제의 대남서한
 -----6. 22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손성필, 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재개제의 대남서한
 -----7. 6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채문식 수석대표, 제8차 준비접촉 연기 통보
 -----7. 7 최병렬 문화공보부장관, 7. 7 선언 1주년 맞아 남북 관계개선 노력 지속적 추진 성명
 -----7. 10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송한호 수석대표, 북측의 대화자세 시정 촉구 통보
 -----7. 12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 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제의 대북서한
 -----7. 15 남북체육회담 장충식 수석대표, 북측의 대화자세 시정촉구 통보
 -----7. 18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북측대표단, 제8차 준비접촉 8월 중순 재개제의 성명
 -----7. 20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북측 대표단, 제3차 예비회담 8월말 재개제의 성명
 -----7. 23 남북체육회담 북측대표단, 제3차 회담 8. 10 재개제의 성명
 -----8. 9 남북체육회담 장충식수석대표, 「남북단일팀」 문제 협의를 위한 분위기 조성 촉구 성명
 -----8. 11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 남북적십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 촉구 담화

- 8. 15 노태우 대통령, 제4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 통일방안의 기본구상 제시
- 8. 25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북측대표단장 전금철, 제8차 준비접촉 9월 중순 재개 제의
- 8. 26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손성필,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9. 9 개최 제의
- 9. 1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북측대표단장 백남준, 제3차 예비회담 9. 18 재개 제의
- 9. 1 남북체육회담 북측대표단장 김형진, 제3차 회담 9. 13 재개 제의
- 9. 5 김상협 대한적십자사 총재,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대표단 파견 통보
 - 9. 27. 10:00, 판문점 중감위 회의실, 대표 3명
- 9. 11 노태우 대통령, 제147회 정기국회 연설에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천명
- 9. 12 남북체육회담 장충식 수석대표, 제3차 회담 10. 20 재개 제의
- 9. 16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예비회담 송한호 수석대표, 제3차 예비회담 10. 12 개최 제의
- 9. 18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채문식 수석대표, 제8차 준비접촉 10. 25 개최 제의
- 9. 27 제1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 10. 3 북한, 남한 당국과 정당·단체들에 보내는 대남 공개서한에서 「민족통일협상회의」 소집 제의
- 10. 6 제2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 10. 8 노태우 대통령, 미국의회 양원합동회의 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촉구
- 10. 12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3차 예비회담
- 10. 13 북한 불교도들의 한강연등대법회 초청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불교도간의 실무접촉, 북한측 거부로 무산
- 10. 16 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 10. 20 제3차 남북체육회담
- 10. 25 남북국회회담 제8차 준비접촉
- 11. 8 제4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 11. 13 제5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 11. 15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4차 예비회담
- 11. 16 제4차 남북체육회담
- 11. 21 제6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 11. 24 제5차 남북체육회담
- 11. 27 제7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 11. 29 남북국회회담 제9차 준비접촉
- 12. 1 남북체육회담 제1차 실무대표접촉
- 12. 4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수석대표 개별접촉
- 12. 6 남북체육회담 제2차 실무대표접촉
- 12. 7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송영대 수석대표, 예술공연내용 변경 및 제11차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 촉구 대북전통
- 12. 7 김상엽 대한적십자사 총재, 방문단 교환 및 제11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촉구 담화
- 12. 11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북측대표단장 박영수, 예술공연내용 변경 거부 대남 전통
- 12. 14 북한 민족통일협상회의 북측준비위원장 정준기, <민족통일협상회의> 예비회담 개최 제의 대남 공개서한
- 12. 15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송영대 수석대표, 예술공연내용 변경 재촉구 대북 전통
- 12. 15 남북체육회담 제3차 실무대표접촉

- 12. 20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5차 예비회담
- 12. 21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북측대표단장 박영수, 예술공연내용 변경 거부 대남전통
- 12. 22 제6차 남북체육회담
- 12. 29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 송영대 수석대표, 예술공연내용 변경시 실무대표접촉 재개 표명 대북전통
- 1990 1. 1 김일성, 신년사에서 남북당국·정당 수뇌들이 협상회의 소집 제의
- 1. 9 북한정무원 총리 연형묵, 대남서한 직접전달 위한 연락관 서울과견 협의 실무접촉 제의
- 1. 10 노태우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촉구
- 1. 10 남북체육회담 제4차 실무대표접촉
- 1. 13 북한 정부·정당 대표들의 연합회의, 남북 당국·정당 수뇌급 협상회의 예비접촉 개최 제의 대남서한
- 1. 15 남북체육회담 제5차 실무대표접촉
- 1. 17 남북의원단 회장 양형섭, IPU총회 단일대표단 구성·참가 제의
- 1. 18 제7차 남북체육회담
- 1. 19 김재순 국회의장, IPU총회 단일대표단 구성 불필요 및 남북국회회담 성사노력 촉구 성명
- 1. 22 남북체육회담 제6차 실무대표접촉
- 1. 23 남북회담 북측대표단, 당국·정당수뇌 협상회의 호응촉구 및 <콘크리트 장벽> 철거 주장 연합 성명
- 1. 24 남북국회회담 제10차 준비접촉
- 1. 29 제8차 남북체육회담
- 1. 31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6차 예비회담
- 2. 1 강영훈 국무총리, 대북서한을 통해 남북 당국·정당수뇌급 협상회의의 비현실성 지적 및 남북정상회담 개최 호응 촉구
- 2. 7 제9차 남북체육회담
- 2. 8 김종열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남북체육회담에 대한 북측의 성의 촉구 성명
- 2. 9 국토통일원 대변인, 북측의 성실한 대화자세 촉구 성명
- 2. 12 남북체육회담 북측대표단장 김형진, <3개 전제조건> 수락 촉구 대남 전통
- 2. 14 남북체육회담 장충식수석대표, <3개조건>철회 및 이행보장 방안에 동의 촉구 대북전통
- 2. 15 북한 정부·정당대표 연합회의, 남북 당국·정당수뇌급 협상회의 개최촉구 대남서한
- 2. 10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시기국장 안병수, <콘크리트장벽> 참관단 초청제의 대남전통
- 2. 21 국토통일원 대변인, <콘크리트 장벽> 관련 정치선전 행위 중지촉구 성명
- 2. 21 남북체육회담 북측대표단, 회담결렬에 대한 책임전가 성명
- 3. 3 강명훈 국무총리, 대북서한을 통해 위장선전 책략 중지 및 기존대화 재개 촉구
- 3. 3 국방부, 북한의 제4남침용 땅굴발견 발표
- 3. 6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송한호 수석대표, 북한측의 제4남침용 땅굴에 대한 유감표시 및 남북고위급회담 제7차 예비회담 개최 촉구 대북전통
- 3. 9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북측대표단장 백남준, 제4남침용 땅굴 책임회피 대남전통
- 3. 22 북한 정부·정당대표 범의회, 남북 당국·정당수뇌 협상회의 호응촉구 및 <콘크리트 장벽> 공동조사 위한 실무접촉제의 대남서한
- 3. 28 김상업 대한적십자사 총재, 한필성씨 노모 상봉 협조요청 대북서한(한필성씨 편지동봉)

----4. 7 강영훈 국무총리, <콘크리트 장벽> 공동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의 조속개최를 촉구하는 대북서한 발송

남북대화 제50호

(1990. 4. ~ 1990. 8)

< 목 차 >

I. 7. 20 「민족대교류 선언」 과 관련 동향	3
1. 「민족대교류」 를 위한 대통령 특별 발표	3
2. 3부장관 합동 기자회견	8
3. 방북신청자 명단 접수	10
4. 특정단체 소속인원들의 방북허용	13
5. 북한의 「구속자 위문단」 과견제의	16
II. 『범민족대회』 와 관련 동향	18
1. 『범민족대회』 문제의 제기배경	18
2. 통일원장관의 「범민족대회」 수용 용의 표명	19
3. 북한의 제2차 예비회의 불참	21
4. 「범민족 대회」 제3차 예비회의 관련사항	24
5. 8.15 『범민족대회』 의 개최	26
<부록>	28
1. 관련주요문건	28
2. 관련 주요동향 일지(1990.7.20-1990.8.18)	45

I. 7. 20 「민족대교류 선언」과 관련 동향

1. 「민족대교류」를 위한 대통령 특별 발표

가. 7. 20 「민족대교류 선언」의 내용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7월 20일 특별발표를 통해 8월 13일부터 8월 17일 사이의 5일간을 『민족대교류』의 기간으로 선포하고 동 기간중 남북의 동포들이 관문점을 통해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로이 왕래하도록 하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노대통령은 남쪽을 방문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고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숙식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북한도 전 지역을 개방하는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번 민족교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추석·설날·한식 등 민족명절을 전후로 교류를 정례화 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동시에, 만일 북한측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호교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북한동포에 대한 우리사회의 전면개방을 일방적으로 실천할 것임을 천명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이와같은 『민족대교류 선언』은 분단 45주년을 앞두고 어떻게든지 남북왕래와 교류를 실현시키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획기적 제의로서 특별발표의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민족대교류를 위한 대통령 특별발표>

친애하는 7,000만 동포 여러분,

나는 세계가 냉전체제의 대결을 종식하고 새로운 화해의 질서를 이루는 큰 변혁 속에 평화적인 통일을 하루라도 빨리 실현하기 위해 남북 민족의 교류를 위한 우리의 결정을 밝히려 합니다.

나는 1988년 7월 7일 특별선언을 통해 남북이 한민족으로서 대결관계를 지양하고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나는 그해 10월 18일 UN 총회 연설을 통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을 가르는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자유로운 교류를 실현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지난 2년 사이 세계는 지난 시대의 질서를 그 바탕으로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개방과 화해의 조류는 동서세계를 가르는 장막을 걷고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협력하는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베를린과 동서독일의 장벽을 무너뜨려 독일은 통일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 분단의 단절과 냉전의 대결을 종식시킬 때입니다.

한반도만이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체제로 인해 분단된 땅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남북 동포가 서로 왕래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의 자존에 비추어서도 더이상 지속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1990년대 안에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21세기를 우리겨레의 영광된 세기로 맞아야 합니다.

남북의 화해와 민족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을 남과 북이 이제는 과감히 실천해야 합니다.

나는 해방 45주년을 맞는 올해 8월 15일을 전후한 5일간을 <민족대교류의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8월 13일부터 닷새동안 판문점을 통로로 열어놓고 북한 동포들을 제한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원하는 남쪽의 어느 지역도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원하는 사람 누구라도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쪽을 방문하는 모든 동포들에게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숙식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기간중 우리 국민 누구라도 제한없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쪽을 찾아오는 모든 북한 동포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할 것이며, 이에 상응한 북한측의 조치를 기대합니다.

나는 북한이 판문점 북측 지역 뿐 아니라 북한의 어느 곳이라도 자유로이 가볼 수 있도록 전지역을 개방하고 북한방문을 원하는 남쪽동포들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한없이 받아들여기를 바랍니다.

올 광복절의 민족교류를 성공적으로 이루면 우리는 추석, 설날, 한식 등 민족명절을 전후로 교류를 정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남북의 거래가 언제나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동포들간의 왕래와 교류는 통일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도 지난 1월 1일 남북한 사회의 완전개방과 자유왕래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올 광복절에 민족의 교류와 남북한의 전면개방을 실현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북한측이 아무 조건을 붙이지 말고 광복절 민족대교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측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호교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북한동포에 대한 우리사회의 전면 개방을 일방적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외국인이 판문점을 통하여 남북한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도록 이를 허용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밝힌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준비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내외동포 여러분,

남과 북은 이념적 정치적 차원을 떠나 민족통합에 진실로 노력해야 합니다.

통일된 나라, 7천만이 하나가 된 우리겨레가 펼쳐 21세기가 얼마나 눈부시고 위대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민족의 소망을 이루는데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7. 20 『민족대교류 선언』의 배경 및 의의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한 역사적 결단

1990년 8월 15일은 우리민족이 해방된지 45주년이 되는 날이자 조국이 분단된지 45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남북간에는 아직까지도 사람의 왕래는 커녕 편지한장 주고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다.

세계는 제2차대전 이래 계속되어 온 동서 냉전체제로부터 벗어나 개방과 개혁의 새로운 질서를 이루어 나가고 있고 특히 우리와 같은 분단국인 동·서독이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만 아직도 단절과 냉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21세기를 우리겨레의 영광된 세기로 맞아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로 이러한 불행한 상황을 하루 속히 타파하고 남북간에 교류와 개방을 통해 화해와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해 『7. 20선언』을 천명하게 된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미 7. 7 특별선언과 제43차 유엔총회 연설, 그리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을 통해 남북이 한민족으로서 대결관계를 지양하고 서로 협력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선언 또한 그같은 일련의 정책기조 위에서 그동안 민족간에 쌓여 온 긴장과 불신을 씻고 민족적 유대와 동질성을 회복·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가능한 일이라도 하나씩 과감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역사적 결단에서 출발된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의 실천의지

6공화국 정부는 출범이후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한 실천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그동안 북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유럽 6개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를 맺고 한·소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성과를 이루게 된 것도 궁극적으로는 남북간의 개방과 화해를 앞당기려는 신념에서였다.

그러나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트지 않고서는 민족간의 화해와 통일을 개척해 나갈 수 없다.

남북간의 자유로운 인적왕래와 교류야말로 서로간에 신뢰와 이해를 증진하고 민족간에 끊어졌던 맥을 다시 잇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통일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필수적 과정인 것이다.

『7. 20 선언』은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제한된 기간동안이나마 남북동포들의 왕래를 실현시킴으로써 분단극복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개방을 위한 초석을 놓으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선언에서 인적교류의 범위를 민족성원 전체로 확대하고 상호방문지역도 어느 지역이라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하였으며, 우리측만이라도 먼저 일방적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도 바로 그러한 정신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족대교류』는 이번 8. 15를 전후하여 한번만으로 끝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추진되고 확대·발전되어야만 할 명제이다.

이산가족의 고통과 불행 해소

분단 45년간 누구보다도 뼈아픈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온 사람은 1천만 이산가족들이다. 이산가족들은 지금까지도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가운데 생전에 혈육을 상봉하고 고향을 방문코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안고 있으며, 대부분 연로한 이들은 이제 피맺힌 한을 안은채 하나 둘씩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이들에게 잃었던 혈육을 되찾게 해주고 자유로운 고향방문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인도적 견지에서 보아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하겠다.

『7. 20선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같은 이산가족의 고통과 불행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동시에 이를 남북간의 인적왕래와 교류의 계기로 삼으려는 충정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7월 14일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그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비되고 우리의 통일정책이 그러한 법제도의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점도 『7. 20선언』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 국내외 주요반응

7. 20 특별발표는 내외로부터 분단극복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 받았다.

국내 언론들은 남북한 사이의 다각적인 교류, 그 중에서도 남북한 동포간의 접촉과 왕래야말로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북한측이 이미 남북의 자유왕래와 판문점 북측지역의 개방을 제의한 이상 이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외국 언론들도 "이번 제안은 북방외교의 성과, 경제적 우위감 등 자신과 여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외부로부터 개방압력을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 거역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발표후 8시간만에 사실상 이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다.

강영훈 국무총리는 특별발표후 즉각 북한 정무원 연형묵 총리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8월 13일부터 17일 사이의 『민족대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절차 협의를 위해 쌍방 당국간의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실무대표는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3명으로 하고 7월 30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희망했다.

북한측은 이러한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당일 오후 4시 방송을 통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발표하고 『콘크리트 장벽』철거, 국가보안법 철폐 및 구속자 석방, 범민족대회 개최 보장 등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였으며,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은 당국·정당 수뇌협상회의에서 해결될 문제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북한측이 이같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반응을 보인 것은 『7. 20 선언』에 대한 내외의 지지와 공감대가 파급되고 확산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임버릇처럼 내세워 온 북한측이 이를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가자는데 대해 엉뚱한 전제조건을 들고 나온 것은 우리측 제의를 전면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찾는 것과 함께 『범민족대회』의 강행을 통해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 식대로 살자'며 사상교양과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될지도 모를 남북간의 인적왕래와 사회개방을 추진해 나갈 진정한 뜻이 없으며, 또한 이를 위한 준비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측은 이어 7월 23일 당국과 각 정당들의 위임에 의해서라며 연형묵 총리의 명의로 우리측 노태우 대통령, 강영훈 국무총리, 김대중 평민당총재, 이기택 민주당 총재 앞으로 각각 편지를 보내왔다.

북한측은 동 편지에서 20일 『조평통』의 성명내용을 되풀이 하면서 자유왕래와 전면개방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남북 당국·정당 수뇌협상회의를 제의하고 이를 위해 7월 27일 4명의 대표들이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해왔다.

이것은 북한측이 우리측의 민족대교류 제의를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정치협상회의나 연석회의 방식의 제의를 들고 나와 대내외의 관심을 딴곳으로 돌리면서 시간을 벌자는 의도로 평가할 수 있다.

2. 3부장관 합동 기자회견

우리측은 북한측이 전제조건을 내걸어 『민족대교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23일 통일원, 법무부, 국방부 3부 장관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측의 전제조건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등 『7. 20 선언』의 구체적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통일원장관은 북한이 말하는 전제조건은 결코 남북교류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 없음을 전제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교류를 성사시키려는 일념에서 북한의 주장과 관련된 문제들을 갖고 협의하겠다는 적극적 입장을 밝혔다.

통일원장관은 우선 『범민족대회』와 관련하여, ① 북한 대표와 해외 동포들의 7월 26일 『범민족대회』 예비회의 참가를 허용 ② 8월 15일 이전에 우리측 인사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 ③ 8월 15일 『범민족대회』에 우리측 참가를 허용 ④ 『범민족대회』 참가자들의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의 조국통일 촉진대행진 환영 및 우리측 인사들의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의 행진 허용 등 『범민족대회』 개최에 대한 수용 용의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아울러 범민족대회는 그 명칭과 성격에 맞게 특정단체나 인사들만이 아닌 각계 각층의 민족성원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하여 상호 신뢰와 이해를 증진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도움이 되는 순수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한편 법무부장관은 북한측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및 구속자 석방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위협하는 외부 침략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방어적 안보 형사법임을 밝히면서, 북한측이 대남 적화노선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동법의 어느 조항도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남북의 법무 당국자들이 만나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구속자 문제와 함께 북한의 안전관계형사법과 사상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밝히고 7월 27일 오전 10시 쌍방 각기 3명이 참가하는 남북법무당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내외언론이 확인한 우리의 대전차방어용 군사시설물을 두고 남북간의 자유왕래를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우기는 북한측 주장의 부당성을 공박하고, 그러나 『민족대교류』의 실현을 위해 북한측의 공동조사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형평의 원칙에 따라 땅굴 등 우리도 북한 지역을 자유로이 조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7월 27일 오전 10시 쌍방 각기 3명이 참가하는 남북군사당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강영훈 국무총리는 7월 24일 북한 연형묵 총리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러한 우리측의 제의가 북한측이 제기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7월 27일의 남북군사당국자 실무접촉과 법무당국자 실무접촉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개방문제는 당국·정당 수뇌협상회의가 아닌 책임있는 쌍방 당국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7월 30일의 『민족대교류』 실현절차 협의를 위한 쌍방 당국간 실무접촉에 동의해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재촉하였다.

이같은 우리측 제의에 대해 북한측은 7월 2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먼저 법무당국자 실무접촉에 대해서는, 북한에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이 없고 체포·투옥된 통일애국 인사도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군사당국자 실무접촉에 대해서도 『콘크리트 장벽』은 남쪽에만 있기 때문에 남측이 스스로 허물면 되고 북측 지역에는 조사하고 확인

할 아무것도 없다면서 거부했다.

그러나 『콘크리트 장벽』 문제는 당국·정당 수뇌협상회의에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면서 7월 27일의 실무접촉에 나올 것을 주장했다.

또한 『범민족대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각계 각층이 참석해야 한다고 한데 대해 이미 대회참가 대상들의 자격을 심의·확정했다면서 동 대회에 참가하려면 통일을 주장하다 체포·투옥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방북신청자 명단 접수

우리측은 7월 20일 『민족대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문제 협의를 위해 7월 30일 판문점에서 쌍방 당국간의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한 이래 7월 24일, 25일, 26일에도 계속 북한측에 전화 통지문을 보내 호응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우리의 거듭된 제의에 아무런 성의 있는 대답을 보내오지 않았으며 결국 예정된 7월 30일에도 북한측 대표는 판문점에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영훈 국무총리는 7월 30일 다시 한번 대북전통문을 발송하고 『민족대교류』는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서 북한측은 하루속히 절차문제 협의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임을 거듭 촉구하였다.

또한 『민족대교류』가 8월 13일부터 시작된다는 시간적 촉박성을 감안, 늦어도 그 6일 전까지는 최소한의 조치와 준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8월 7일까지 북한측의 긍정적 회답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통일원장관은 8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8월 13일부터 17일 사이의 『민족대교류』기간중 북한 방문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조건없이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해 줄 것을 북한측에 요청하면서, 북한측이 대상자를 선별할 경우에도 그들에 대해 방문증을 발급함으로써 남북왕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 방문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8월 4일부터 8일 사이에 방북신청을 받기로 하고 그 절차는 대폭 간소화하여 간단한 신청수속만으로 가능토록 조치하였다.

정부의 이같은 적극적인 입장은 어떻게든지 『민족대교류』를 성사시킴으로써 남북왕래와 교류의 물꼬를 트고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앞당기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실 『민족대교류』는 이산가족들에게 재회의 기쁨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분단 45년만에 우리 동포들이 서로 만나 얼싸안고 해후의 감격을 나눔으로써 상호 이해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데 참뜻이 있으며, 따라서 방북희망자라면 그 기간동안 누구나 북한을 방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민족대교류』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 북한측이 신변안전과 무사귀환만 보장해 준다면 우리 국민 그 누구라도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이다.

8월 4일부터 시작된 방북신청 과정은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애환이 묻어나는 현장 바로 그것이었다.

그 뜨거운 불벌터위 속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이른 새벽부터 접수창구에 장사진을 이루었으며 나이 많은 이산가족에서 젊은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열렬한 참여 속에 국민적 기대를 모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헤어진 혈육과 두고온 고향을 그리는 이산가족의 소망이 얼마나 애절하며, 우리 국민들의 분단극복의 의지가 얼마나 간절한가를 내외에 확인시켜 주었다고 하겠다.

접수 최종일인 8월 8일 강영훈 국무총리는 북한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접수되는 방북신청자들의 명단을 전달하기 위해 8월 9일 오후 3시와 8월 10일 오후 3시 두 차례에 걸쳐 우리측 연락관 2명을 판문점에 내보내겠다고 통보하였다.

또한 우리측 인원들의 명단전달과 함께 북한측도 우리측 지역의 방문을 희망하는 인원들의 명단을 우리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8월 8일까지 최종 집계된 방북신청자는 총 61,355명 (남 : 44,544명, 여: 16,811명)으로서 연령별,

방문목적별, 지역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507	4,526	6,585	8,683	14,865	26,189

<목적별>

가족상봉	친지방문	관 광	문화·종교	기 타
37,408	5,365	13,271	1,993	3,318

<지역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22,539	3,606	1,803	4,574	1,076	1,19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11,549	3,317	1,524	2,189	1,821	1,274
경북	경남	제주	총 계		
2,177	2,275	441	61,355		

우리측은 방북신청자 명단을 8월 9일 전달하려 하였으나 북한측은 예정된 시간을 얼마 앞두고 연형묵총리 명의로 보내온 전화통지문을 통해 『민족대교류』 기간중 방문자의 명단 교환을 위한 연락관 접촉제의를 거부하였다.

특히 북한측은 이른바 『임수경 위문단』이 임수경양과 문익환목사, 문규현 신부 등 구속자를 직접 면회할 수 있도록 하고 『범민족대회』에 『전민련』, 『전대협』 대표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공식허락하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한다면 방문자명단 교환제의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남북간의 어떤 교류도 원치 않고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우리측이 이미 방북희망자에 대한 선별초청까지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새롭게 전제 조건화하여 명단 교환 자체를 회피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특정대상의 초청까지도 사실상 그들의 진의가 아님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8월 9일 강영훈 국무총리 명의로 대북전통문을 보내 방북신청자 명단 교환 자체마저 거부한데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8월 10일 오후 3시 방북희망자 명단 전체를 전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연락관을 파견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또한 방문신청 인원의 70%가 이산가족들임을 밝히고 이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남북 쌍방 당국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번에는 우리측 국무총리의 전화통지문은 외면한 채 격에도 맞지 않게 『조평통』 서기국장인 안병수가 8월 10일 통일원장관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와 구속자 직접 면회 허용, 『전민련』, 『전대협』 대표들의 『범민족대회』 참가 공식허용, 국가보안법 철폐 등 8월 9일자 연형묵 총리의 전화통지문에서 제시한 3가지 전제조건을 그대로 되풀이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이 명백한 접수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측에 통보한대로 방북신청자 명단을 갖고 판문점에 나갔으나 북한측 연락관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북한측은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끝내 불응함으로써 방북 신청자는 물론 온 겨레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그들이 남북간의 인적교류와 왕래하는 진정한 뜻이 없다는 것을 백

일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우리측은 국토통일원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측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내걸어 명단교환마저 거부한 것은 남북간의 인적왕래와 교류를 막고 우리의 『민족대교류』 제의를 무산시키려는 불순한 저의에서 나온 것으로서 온 거래의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공박하였다.

그러나 『민족대교류』 제의는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현시켜 나간다면 머지않아 남북한 동포 누구나 자유로이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4. 특정단체 소속인들의 방북허용

북한측은 우리측의 방문자 명단교환 제의를 거부하는 태도와는 달리 8월 10일 방송을 통해 돌연 우리측 특정단체의 방북을 초청하면서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각각 제의해 왔다.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는 방송통지문을 통해 범민족대회와 관련한 학술토론회·문화행사·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의 대행진을 공동 개최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민련』 관련자와 8월 11일 오후 3시 실무접촉을 갖자고 했다.

또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측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회』가 제의한 8.15 평양 통일 염원 대동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월 11일 오전 9시 실무접촉을 갖자고 했다.

『천주교인협회』 위원장도 담화를 통해 우리측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방북실현과 관련한 실무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월 11일 오전 11시 실무접촉을 갖자고 했다.

이같은 북한측의 다발적인 대화공세는 남북교류가 실현되지 못하게 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통일문제를 둘러싼 우리 내부의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켜 보려는 통일전선 차원의 술책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먼저 북한측이 초청하겠다는 『전민련』과 정의구현사제단 및 『서총련』에 소속된 사람들 다수가 우리측이 8월 4일부터 8일까지 접수한 방북신청자 명단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북한측은 우리가 전달하는 명단을 받고 그중에서 이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신변안전 보장을 해준다면 그것으로 이들의 방북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남북지역 왕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남북당국이 편의 제공과 신변안전만 보장하면 대교류가 이루어지는 터에 그전에 해당 단체들간에 별도의 실무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측이 초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왕래에 필요한 것은 새삼스러운 실무접촉이 아니라 쌍방당국간의 명단과 신변안전 보장각서의 상호교환 뿐이다.

한편 북한측은 이 실무접촉의 목적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 『천주교인협회』 위원장 명의의 담화에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방북하면 『콘트리트 장벽』을 허물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미군을 철거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투쟁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하고 있다.

우리측은 8월 10일 국토통일원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북한측이 제의한 3개의 실무접촉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북한측이 선별적으로나마 『민족대교류』기간중 우리측 인원들의 방북을 수락한 것을 환영하면서, 남북왕래를 희망하는 인원들의 명단과 신변안전 보장각서를 교환하기 위해 쌍방 연락관 접촉을 8월 11일 11시 관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8월 11일 우리측의 제의를 거절했음은 물론 그들이 지정했던 시각에도 실무접촉을 갖자던 북측 인원이 한사람도 나오지 않아 그들의 제의가 구두선이었음을 입증했다.

다만 『조평통』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이른바 『구속자 위문단』을 받아들일 의사를 명백히 하고 우리측 민간단체들의 자주적인 활동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면 신변안전보장각서를 교환하기 위한 당국실무자 접촉에 나갈 것이라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신변안전보장 문제는 당국의 책무임을 시인했다.

한편 민중당(가칭),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민련』 등 우리측의 특정단체들 역시 자기를 방북희망자 명단을 별도로 북한측에 통보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측은 이같은 해당단체들의 의사와 북한측의 요구까지 고려한 바탕위에서 어떻게 하나 7.20 특별발표의 정신을 살려 온겨레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비록 제한된 인원이라

도 남북왕래를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게 되었다.

8월 12일 통일원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측이 선별적으로 초청의사를 밝혀놓고 있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전민련』 등 단체에 소속된 인원들 중 이미 방북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민족대교류』 기간중 북한지역 방문을 실현시키겠다는 전향적인 정부방침을 발표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명단과 취재기자 명단을 북한측에 전달하고 북한측으로부터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접수하기 위해 8월 13일 오후 3시 관문점에서 쌍방 당국간 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 북한측에 제의했다.

또한 우리측은 8월 13일 오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화통지문을 북한측에 공식으로 전달했다.

우리측은 8월 13일 방북희망 신청자 명단중에서 북한측이 초청한 민중당(가칭) 30명,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33명, 『전민련』 관련자 176명 등과 이들을 동행 취재할 기자들의 명단을 전달하기 위해 연락관을 관문점에 파견하였으나 북한측은 이마저 거부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북한측은 『조평통』 서기국장 안병수의 담화를 비롯해 각 단체별 담화를 그들 방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당국간의 명단교환은 필요없고 해당되는 단체들간에 실무접촉이나 갖자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남북왕래나 교류에 있어서는 명단과 신변안전보장 각서의 교환은 책임있는 당국간에 이루어져 온 것이 그간의 관례이며, 또 그것은 최소한의 행정실무절차이다.

북한측이 누가 보아도 응당한 이같은 사실마저 부인한 것은 그들이 초청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방북까지도 가로막은 것과 다름없으며, 이는 '초청' 그 자체가 허구적 선전용어였음을 말해준다.

누구를 오라고 해놓고도 명단도 받지않고 신변안전보장 각서도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측이 당초부터 우리측 인사들의 그 어떤 방북도 원치 않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북한측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우리측은 8월 14일 국토통일원 대변인 성명을 통해 그 허구성과 부당성을 강력히 비난하고, 북한측이 『민족대교류』의 참뜻을 인식하여 지금이라도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소망과 온 겨레의 기대에 부응해 나올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민족대교류』 기간내 상호 교환 방문의 실현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7.20 특별발표에 의한 8월 13일부터 17일까지의 『민족대교류』 제의는 이 같은 북한의 거부적 태도로 인해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북한은 김일성의 신년사 등을 통해 겉으로는 남북사회의 전면개방과 자유왕래 문제를 계속 주장해 왔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남북인적왕래와 교류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번 『민족대교류』가 실현되지 못했다고는 하나 『7.20 선언』은 남북관계가 공존공영 단계로 진입하는 도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남북간의 교류와 왕래야말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정부가 8월 4일부터 8일까지 방북희망자 신청을 받은 것도 이러한 남북교류를 트기위해 당연히 해야되고 거쳐야 될 과정을 밟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측이 방북신청자 명단은 커녕 그들이 초청한 인사의 명단마저도 접수치 않음으로써 이번 민족대교류는 무위로 돌아갔지만,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상호신뢰와 이해증진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민족적 요구와 개방과 화해로 치닫는 세계사적 조류를 북한측은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방북신청접수는 북한측이 남북교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층 앞당겨 놓는 촉매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

우리정부는 앞으로도 추석, 설날, 한식 등 민족명절을 기하여 7.20 특별발표 정신에 의한 민족대 교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힌 만큼 이번 방북신청은 머지 않아 남북간에 왕래의 길을 트고 화해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5. 북한의 「구속자 위문단」 파견제의

북한측은 『민족대교류』를 위한 쌍방 당국간 실무접촉을 거부한 이튿날인 8월 1일, 이른바 『임수경 석방투쟁 조선위원회』 위원장인 여연구 명의로 8월 2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남북관계의 현실과 관행으로 보아 서신을 주고받는 상대와 명의는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내용과 격에 맞아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측이 일개 임의단체를 내세워 우리의 국가원수에게 편지를 전달하겠다는 것은 남북간에 편지와 전통문을 주고받는 일조차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태도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김상협 총재는 북한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남북간에 불필요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정치적 논쟁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 편지를 교환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동 편지를 접수치 않을 것임을 통보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8월 2일 동 편지의 내용을 방송으로 공개하고 구속자인 임수경 양을 비롯 문익환 목사, 문규현 신부와 그 가족들을 위문하기 위해 『위문단』을 구성, 8월 14일부터 4박 5일간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겠다고 주장했다.

『위문단』은 여연구를 비롯해 『석방투쟁위원회』 위원과 『조선학생위원회』 위원 및 청년학생과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하며 적당한 수의 취재기자단이 동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8월 4일 정무원 총리 연형묵이 보내온 전화통지문에서도 당국·정당 수뇌협상회의 주장 등과 함께 이 『위문단』의 방문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8월 6일 북한측의 비상식적인 태도와 결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족대교류』기간중 우리측 지역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한데 대해 7.20 특별발표 정신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환영하며 신변안전과 편의제공까지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다만 방문기간에 대해서는 8월 17일까지가 『민족대교류』기간이라는 점을 감안, 이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재소자의 직접면회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7.20 특별발표에서 북한동포들이 우리측 지역에 올 경우 어느 지역도 자유로이 방문하고 누구와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동포들이 우리측의 체제와 질서를 존중하는 토대위에서의 방문을 허용하려는 것이지 군사기밀지역 방문이나 상식에 벗어나는 특정인의 면담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자유로운 방문이란 우리 사회의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여행하고 사람을 만나는 범위의 것이지 상대방의 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상대방의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행위까지 포함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또한 『민족대교류』는 남북의 동포들이 분단의 고통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상호신뢰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본취지가 있는 만큼 우리의 실정법을 위반한 재소자를 면회하겠다는 것은 『민족대교류』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측은 그들 일행이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여 재소자들의 가족이나 변호인을 만나는 것은 무방하되 재소자 면회요구는 스스로 철회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8월 6일 또다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내는 전화통지문이라는 것을 통해 구속자 직접면회를 고집하면서 『위문단』이 8월 14일 오전 9시 관문점에 나오겠다고 방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또한 8월 7일에도 정무원 총리 연형묵 명의로 전화통지문을 보내와 『위문단』을 우리측 지역에 보내겠다고 알리면서, 우리 당국이 이들 『위문단』일행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제공을 보장

해 줄 것을 기대하고 "공식절차대로 신변안전보장조치를 속히 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우리측 강영훈 국무총리는 8월 8일 전화통지문을 보내 방문일자를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로 해줄 것과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재소자 면회 주장은 스스로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민족대교류』 기간중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는 인원들에 대해 필요한 편의제공과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임을 통보했다.

북한측이 8월 9일자 연형묵 명의의 전화통지문에서 명단교환의 전제조건으로 재소자 직접면회를 내세운데 대해서도 우리측은 강영훈 국무총리의 동일자 답신에서 『위문단』이 재소자들의 가족이나 변호인까지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한 포용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 이후 우리측은 수차에 걸쳐 북한측이 『위문단』을 비롯하여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측은 끝내 이를 거부하면서 8월 14일 이른바 『구속자 위문단』 40여명을 판문점에 내려보내 구호와 노래 등 정치선전을 벌였다.

우리측은 이날도 판문점 직통전화를 통해 신변안전보장각서 등 그들 『위문단』 일행의 왕래에 따른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알리고 쌍방 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세삼스럽게 『임수경 후원단체』 대표들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이마저 거부하고 말았다.

우리 당국에 대해 신변안전보장을 요청한 북한측이 그에 따른 연락관 접촉등 실질적 조치를 회피한 채 임의단체 인원들의 안내를 받겠다고 고집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이것은 결국 북한측이 우리측 인사들의 방북은 물론 그들 주민의 우리측 지역 방문까지도 실현할 뜻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II. 『범민족대회』와 관련 동향

1. 『범민족대회』문제의 제기배경

『범민족대회』문제는 사실 1988년 8월 1일 우리측 일부 재야단체 인사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의 개최를 발기한데서 비롯되었으나 당시 올림픽을 앞두고 국민들의 외면과 무관심을 낳았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1988년 12월 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새삼스럽게 이를 지지하고 나섰으며, 1989년 초에는 다른 남북간의 대화를 모두 중단시켜 놓은 상황에서도 『전민련』만을 굳이 대화의 상대로 선택해 실무회담을 갖자고 부추기기 시작했다.

북한측은 범민족대회 제의서한에서 “범민족대회 소집구상은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포괄적 평화방안제의 등 북한측의 노력과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성격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즉 북한측은 범민족대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반체제운동을 고무하여 국론분열을 기도하는 한편 그들의 통일전선전략을 구사해 나갈 발판을 마련해 보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범민족대회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 사회내 여러단체중의 하나일 뿐인 『전민련』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든지, 민간단체의 모임이라면서도 그들은 당국이 주축이 되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북한측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심의 위원장인 윤기복이며 범민족대회를 제의하고 추진해 온 기구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인 것이다.

이번 8.15를 전후한 범민족대회도 사실은 1989년 7월 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인 허담이 제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측에서는 『전민련』 관계자들이, 북한측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간부들이, 해외동포 사회에서는 일부 반정부 단체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이를 추진해 왔으며, 1990년 6월 2일~3일에는 서베를린에서 북한측과 해외동포 대표들이 모여 제1차 예비회의를 가졌다.

이 1차 예비회의에서 본 대회의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등 11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는 바, 대회참가 대상에 대해서는 남과 북, 해외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지지하며 조국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는 정당·단체 대표들과 개별적 인사들로 할 것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2차 예비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같이 범민족대회는 그 기본 성격으로 보나 그 추진주체로 보나 남북관계 개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편향된 정치행사임을 알 수 있다.

『전민련』측이 간행배포한 『범민족대회 자료집』에서도 8.15 범민족대회의 성격을 “대중들의 열망을 바탕으로 미국과 노정권의 영구분단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한 것과 같이 범민족대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내부의 반미·반정부 투쟁선동을 목적으로 한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일 뿐이다.

2. 통일원장관의 「범민족대회」 수용 용의 표명

7.20 『민족대교류 선언』에 대해 북한측이 범민족대회의 개최보장 등 전제조건을 붙여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측은 7월 23일 3부 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의 통일원장관 발표를 통해 『민족대교류』의 차원에서 범민족대회의 개최를 허용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즉 범민족대회가 특정단체나 특정인사들만이 아닌 각계 각층의 민족성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상호신뢰와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도움이 되는 순수한 입장에서의 모임이라면 대회개최를 허용할 것이며, 7월 26일 서울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는 제2차 예비회의에 북한대표들과 해외동포 대표들의 참가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편 7월 23일 『북측준비위원장』 윤기복은 7월 24일 오후 3시 『전민련』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김상협 총재는 남북간의 모든 연락업무는 쌍방 적십자사가 담당·수행해 온 관례에 따라 적십자 연락관을 내보내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돌연 전달예정시각 40분을 앞두고 『전민련』대표가 편지접수를 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온 데 이어 오후 3시 판문점에 나간 우리 연락관에게 편지전달을 거부했다.

남과 북은 그 동안 쌍방 합의에 따라 남북간의 모든 연락관계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신임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쌍방 적십자 연락관이 담당해 왔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인사나 기관에 이를 전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편지전달을 거부한 것은 범민족대회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려는 것과 함께 범민족대회에 대한 우리측의 전향적 조치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측은 제2차 예비회의에 5명의 대표를 파견하겠다는 내용의 동 편지를 결국 방송으로 공개했다.

통일원장관의 범민족대회와 관련한 발표에 대해 『전민련』측은 7월 24일 통일원을 방문하여 각계 각층의 참여 등 범민족대회를 개방할 것에 합의했다.

또한 7월 25일 58개 사회단체 대표들이 범민족대회 참가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전민련』측과 범민족대회 참가문제를 협의하였다.

이 자리에서도 『전민련』측은 범민족대회에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문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7월 26일의 제2차 예비회의는 시간적 촉박성을 감안, 『전민련』대표만 참가하고 제3차 평양 예비회의부터는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북한측은 7월 25일 『북측준비위원장』 윤기복 명의로 강영훈 국무총리에게 편지를 보내와 예비회의에 참가할 5명의 실무대표들에 대해 편의제공과 신변안전 보장을 요청해 왔다.

또한 윤기복은 별도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대표단과 동행할 기자 10명에 대해서도 신변안전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측 강영훈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즉각 북한 연행목총리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들에 대해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으며, 신변안전보장 문제는 책임있는 쌍방 당국간의 협의에 의해 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 참가자들의 판문점 통과와 안내 등에 따른 실무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연락관 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측은 7월 26일 오전 7시 30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연락관 2명을 내보낼 것임을 통보했다.

우리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북한측 연형묵 총리도 이를 수락하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왔다. 한편 『북측준비위원장』 윤기복은 『전민련』에도 전화통지문을 보내와 예비회의에 참가할 『북측준비위원회』 대표단 5명의 명단을 밝혔으며 7월 26일 오전 9시에 『전민련』 대표들이 관문점에 나와 마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3. 북한의 제2차 예비회의 불참

가. 7월 26일의 판문점 동향

7월 26일은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제8차 예비회담이 열리는 뜻깊은 날이었다.

남북은 이날 1년반 동안 계속되어온 동 예비회담을 마무리하고 합의서에 최종 서명을 함으로써 고위급회담의 개최를 성사시키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는 감격을 나누었다.

그러나 범민족대회 서울 예비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북한대표단은 끝내 우리측 지역에 오기를 거부함으로써 온 겨레에 또 한번의 실망을 안겨주었다.

북한측이 이날 연락관 접촉이 시작되기도 전인 오전 6시 30분 방송을 통해 "남조선 관제·어용 단체들의 범민족대회 참가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북측준비위원회』성명을 낸 것은 그 전주곡이었다고 할 수 있다.

7월 26일 오전 7시 30분 남북 쌍방 각기 2명의 연락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실무접촉에서 다음과 같은 8개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측 대표단의 판문점 통과는 곧 실현될 것 같이 보였다.

<8개항 합의사항>

- 북측 참가자의 활동은 우리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 편의제공 및 신변안전보장에 관한 일체사항은 우리측 정부대표와 협의한다.
- 숙소·회담장소는 인터콘티넨탈 호텔로 한다.
- 북측의 참가자는 우리측 정부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며 여기에는 우리측 안내관 1명씩이 동승한다.
- 북측 대표단과 기자일행의 사진이 첨부된 명단을 판문점 통과시 우리측에 전달한다.
-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남북직통전화 6회선을 설치 제공한다.
- 체류기간중 판문점을 통한 행낭 운반을 보장한다.
- 북측 참가자의 서울 체류일정은 북측과 『전민련』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예비회의 참가자들의 판문점 통과시간을 예정된 9시에서 12시로 연기시킨 북한측은 2차 연락관 접촉에서부터 돌연 합의사항을 번복하는 등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북한측은 이미 그들 스스로가 우리 당국에 신변안전보장 등을 요청해 왔고 이를 기초로 쌍방 합의하에 연락관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1차 접촉에서도 과거의 관례대로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는 원칙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국의 안내를 배제하고 『전민련』측의 안내에

만 따르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숙소문제도 『전민련』 측과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부대표의 차량동승도 거부했다.

숙소는 신변안전보장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우리측은 신변안전보장에 적합하고 남북한간의 직통전화 등 통신지원이 용이한 조건을 고려하여 『인터콘티넨탈』 호텔로 정한 것이며, 북한측 또한 우리측 인원의 방북시 그들 당국이 숙소를 정해 준 것은 하나의 관례이다.

우리측은 이같이 사리에 맞지도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북한측에 대해 제1차 연락관 접촉시의 합의를향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연락관 접촉에 응해 나올 것을 계속 촉구했다.

『전민련』 측 또한 오후 3시경 『예비회의와 관련한 차량·장소 등 문제에 대해 우리 당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북한측으로서는 더 이상 거부할 명분마저 없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우리측이 오후 4시경 연락관 접촉재개를 요망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려하자 "『전민련』이 안내를 하는가? 또 『전민련』이 정한 숙소에 들어가는 것인가?"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더 이상의 연락관 접촉을 거부했다.

북한측은 곧이어 판문점 직통전화마저 끊어버린 채 판문점에서 철수해 버리고 말았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오후 7시 통일원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정부의 포용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거부로 범민족대회 2차 예비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북한측이 다른 조건을 내걸지 말고 제1차 연락관 접촉시의 쌍방 합의를향을 준수한다면 우리의 문은 언제든 열려있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날 오후 10시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대표단 명의의 성명을 내고 우리 당국의 안내를 받겠다고 합의한 바 없다고 둘러대면서 예비회의 참가가 무산된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했다.

심지어 우리측이 『전민련』 대표 3명으로 하여금 판문점에까지 나가 북한측 참가자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민련』 대표들을 못들어오게 차단하였다고 허위선전까지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7월 27일 오전 9시 판문점에 다시나가 『전민련』의 안내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7월 27일 오전 7시 국토통일원 대변인이 논평을 발표, 26일에 있었던 연락관 접촉의 경위와 진상을 밝히고 북한측이 진정으로 범민족대회를 성사시킬 의사가 있다면 합의사항까지도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시정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나. 7월 27일의 판문점 동향

7월 27일에도 남북쌍방 간에는 판문점 직통전화를 통해 접촉이 이루어졌다.

우리측은 북한측이 제1차 연락관 접촉에서 합의된 사항을 조건없이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북한측 인원들의 판문점 통과시각을 협의하자고 했으나, 북한측은 26일에 취했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연락관 접촉만을 주장했다.

그러다가 북한측은 11시 30분경 안내문제와 관련하여 판문점과 서울, 서울과 판문점 사이는 당국이 안내하고 숙소와 회담장 등에서의 안내는 『전민련』 측이 맡는다는 일견 절충안인 것처럼 보이는 제안을 해왔다.

그러나 북한측의 이 제의는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국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서, 한편으로는 우리 당국에 대해 신변

안전보장을 요청하고도 한편으로는 신변안전보장을 거부하는 모순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측은 이날 관문점에 차량을 대기시키는 등 북한측 대표단을 맞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지만 결국 그들은 합의사항 이행을 끝내 거부하고 오후 2시 30분경 관문점에서 철수하고 말았다.

우리측은 범민족대회 제2차 예비회의에의 북한측 참가가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국토통일원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측이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관문점을 정치선전장화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남북간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8.15 범민족대회가 민족대교류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렇게 볼 때 북한측의 범민족대회 제2차 예비회의 불참은 북한측의 주장과 같이 결코 우리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남북간의 인적왕래는 방문을 희망하는 측이 상대방 당국에 방문예정자의 명단을 통지하여 이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제공, 무사귀환의 약속을 요청하고 상대방 당국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실현되어 온 것이 관례이다.

또 이러한 왕래절차는 남북이 40여년간 불신과 적대의 특수한 상호관계를 계속해 온 것을 감안할 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당국으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요구이다.

북한측이 그동안 남북간에 정착되어 온 이같은 관례와 순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까지 굳이 『전민련』의 안내를 고집한 것은 우리 사회 내부의 혼란과 갈등을 조장해 보려는 당초의 정치적 목적이 실현이 어렵게 되자 그들의 불참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구실을 찾은 데 불과하다고 하겠다.

4. 「범민족 대회」 제3차 예비회의 관련사항

북한측은 『전민련』과 해외교포 대표간에 제3차 예비회의를 8월 6일 평양에서 개최기로 7월 27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밤늦게 방송을 통해 7월 30일에 개최하자고 공개 제의해 왔다.

『전민련』과 해외교포 대표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평양 예비회의를 8월 6일 그대로 개최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전민련』의 방북이 어려울 경우 해외교포 대표단에 전권을 위임하여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7월 30일 『북측준비위원회』가 『전민련』앞으로 보낸 방송통지문을 통해 평양 예비회의를 8월 6일 개최하자는 데 동의하면서, 그러나 "남한 당국이 새삼스럽게 각계각층론을 들고 나와 평양 예비회의에 끼어들려는데 대하여 절대로 묵인할 수 없다"고 하는가 하면, "이 대회에 참가할 대표들은 이미 북과 남, 해외의 추진위원들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고 함으로써 범민족대회의 개방을 정면 거부했다.

또한 7월 31일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우리측 58개 사회단체들의 범민족대회 참가를 허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북한측의 태도는 지난 1차 예비회의시 스스로 합의 공포한 대회 참가자격 규정을 뒤엎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평통』이 7월 5일자 성명을 통해 "북과 남 사이의 접촉과 내왕에는 사상과 이념, 정견을 달리하는 정당·단체·각계 각층 인민들이 차별없이 다같이 동등하게 참가해야 한다"고 한 원칙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변화는 처음에 각계 각층 참여원칙에 합의했던 『전민련』측도 마찬가지였다.

『전민련』측은 58개 단체대표로 구성된 범민족대회 참가단체협의회 6인 실행위원과 7월 30일에 만나기로 했으나 이를 피하였으며 또다시 7월 31일에 만나기로 한 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다.

그러나 『전민련』측은 7월 31일 통일원을 방문하여 그들 대표만으로 제3차 예비회의 참가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범민족대회에의 각계 각층 참여개방 운운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참가단체협의회 6인 실행위원은 8월 2일과 4일에도 『전민련』측과 3차 예비회의 참가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전민련』측이 대표단 참가 배제 입장을 끝내 굽히지 않음으로써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전민련』측은 8월 4일 추진본부 실무대표단 12명의 방북을 신청했으며 정부는 당초 합의 사항인 각계 각층 참가원칙에 따라 이를 불허했다.

한편 북한측은 8월 1일 윤기복 명의로 우리측 강영훈 국무총리 앞으로 보내온 전화통지문에서 『전민련』대표들이 예비회의 참가를 위해 북한에 오면 그들 당국이 신변안전을 책임지고 보장할 것이라며 8월 6일 아침 8시에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넘겨주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와 같이 북한측이 『전민련』대표만의 참여주장을 고집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측은 8월 2일 통일원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8월 6일 평양 3차 예비회의는 각계각층의 대표가 함께 참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 것과 함께 범민족대회의 판문점 개최에 대해서도 각계 각층이 참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특히 판문점은 대단히 민감한 지역인 만큼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상징적인 장소 및 남북 왕래의 통로로서 이용되어야 하며 결코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선전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8월 4일에는 강영훈 국무총리가 북한 연형묵 총리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8.15 범민족대회

가 명실공히 민족화합 차원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대표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하여 준비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민련』뿐만 아니라 3차 예비회의에 참가를 희망하는 우리측 모든 단체의 인사들과 취재기자에 대해서도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겠다는 명백한 태도표시를 하라고 촉구했다.

범민족대회 개최장소와 관련하여 『전민련』측은 8월 4일 정부가 판문점대회를 허용치 않는다면 장소를 서울과 평양으로 옮겨 8월 14일~15일은 서울, 8월 16일~17일은 평양에서 각각 개최하자고 했으나, 다음날 북한측은 『북측준비위원회』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판문점개최는 1·2차 예비회의의 합의사항이라며 이를 일축해 버렸다.

이와 같이 우리측은 『민족대교류 선언』의 정신에 따라 제3차 예비회의에 『전민련』을 포함한 각계각층 대표를 참가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대회의 성격변질과 남북간의 인적왕래를 우려한 북한측의 태도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못했다.

북한측은 범민족대회가 특정단체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민족성원이 참여하는 대회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거부하고 이의 협의과정에서도 우리 정부당국을 철저히 배제하려는 의도를 노출, 범민족대회를 통일전선 차원에서만 추진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제3차 예비회의는 8월 6일과 7일 북한측과 해외교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려 범민족대회의 진행일정 등을 확정지었다.

5. 8.15 『범민족대회』의 개최

북한측은 8월 10일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 윤기복 명의의 방송통지문을 통해 범민족대회와 관련하여 서울·평양에서 개최될 행사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의 대행진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민련』 관계자와 8월 11일 오후3시 관문점에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이 제의는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와 『천주교인협회』 등 일련의 선전차원의 제의와 연계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우리측의 방북신청자 명단접수 요구에 대한 반응의 일환이다.

우리측은 8월 12일 통일원장관의 성명을 통해 북한측이 선별적으로 초청의사를 밝혀놓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인원들의 북한방문이라도 실현시키기로 하고 북한측이 이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8월 13일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조치로 인해 북한측이 줄곧 주장해온 『전민련』만의 범민족대회 참가실현이 사실상 가능해짐으로써 북한측이 이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나 명분도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민족대교류』 기간중 특정단체 인원의 방북을 허용한 이 같은 포용적 조치에 대해 북한측은 여전히 실무접촉 주장만으로 일관하였으며, 쌍방 연락관 접촉을 거부하고 말았다.

『조평통』 서기국장 안병수는 이 같은 우리측의 특정단체 인원의 방북허용 조치에도 불구하고 8월 13일 방송을 통해 민중당(가칭), 『서총련』, 『전민련』,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4개 단체의 방북을 보장하고 『남측추진본부』 대표들의 범민족대회 참가허용 입장을 밝히라고 생떼를 쓰기도 해 북한측이 우리측 인사 그 누구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군사정전위원회 북한측 수석대표인 최의웅은 8월 13일 담화를 발표하고 "범민족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장애를 주는 인원들의 우리측 지역 출입을 통제하며 그들에 대한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범민족대회 대표임을 증명하는 규정명찰을 패용한 것을 확인한 후 출입을 허가할 것"을 밝혀 8월 15일부터 관문점 북측지역을 전면개방 하겠다고 한 그들의 7월 5일자 선언을 사실상 철회하고 말았다.

북한측은 8월 15일 정오경 방송을 통해 『조국통일촉진행진대』 대변인 담화를 발표, 오후 2시 우리 당국이 행진대에 대한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넘겨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우리측은 이미 7월 23일 3부 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범민족대회와 관련하여 통일대행진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고, 또 북한측 인원들이 우리측 지역을 방문할 경우 모든 편의제공과 신변안전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오후 2시경 북한측이 관문점 직통전화를 통해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언제 줄 수 있는지 물어왔을 때 우리측은 즉각 전달하겠다고 통보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전화접촉에서 북한측은 우리 당국에게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요구하던 태도를 표변하여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전민련』이 주는가?", "『전민련』 대표가 안내를 하는가?"는 등 동문서답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우리측은 신변안전보장각서 전달 등 『행진대』를 맞아들일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거듭 북한측에 알렸으나 북한측은 이를 외면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사실상 『행진대』를 우리측에 보낼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그들 방송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면서 우리측이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넘겨주지 않아 『행진대』가 남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허위선전했다.

이날 관문점 북측지역에는 대부분 해외동포들로 구성된 인원들이 들어와 범민족대회를 개최했으며, 오후 3시경부터 5시 20분까지 약 500명 정도가 노래와 춤을 추고 구호를 외치는 등 정치선전

행사로 일관했다.

북한측은 이들의 남행을 저지하기 위한 듯 경비 및 보안요원들이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북측을 향해 이중삼중으로 진을 치고 이들 『행진대』의 접근을 막았다.

이와 같이 북한측이 이 범민족대회 『행진대』의 길마져 차단함으로써, 8.15를 전후한 민족대교류는 끝내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다.

<부록>

1. 관련주요문건

1. 3부 장관 합동기자회견 발표문(1990.7.23)

가. 국토통일원장관 기자회견 발표문

나. 국방부장관 기자회견 발표문

다. 법무부장관 기자회견 발표문

2. 『범민족대회』 2차 예비회의 관련 강영훈 국무총리의 연형묵정무원 총리 앞 대북전화통지문 (1990.7.25)

3. 『범민족대회』 2차 예비회의 관련 국토통일원장관 기자회견 발표문(1990.7.26)

4. 『범민족대회』 2차 예비회의 관련 국토통일원 대변인 논평(1990.7.27, 07:00)

5. 『범민족대회』 2차 예비회의 관련 국토통일원 대변인 논평(1990.7.27, 18:00)

6. 『민족대교류』 실무접촉 관련 강영훈 국무총리의 연형묵 정무원 총리 앞 대북전화통지문 (1990.7.30)

7. 7.20 특별발표 관련 국토통일원장관 기자회견 발표문(1990.8.2)

8. 『범민족대회』 3차 예비회의 관련 강영훈 국무총리의 연형묵 정무원 총리 앞 대북전화통지문 (1990.8.4)

9. 『구속자 위문단』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1990.8.6)

10. 방북신청자명단 전달 관련 강영훈 국무총리의 연형묵 정무원 총리 앞 대북전화통지문 (1990.8.8)

11. 북한의 명단접수 거부 관련 국토통일원 대변인 논평(1990.8.10)

12. 선별방문 허용 관련 국토통일원 대변인 성명(1990.8.10)

13. 특정단체인원 방북허용 관련 국토통일원장관 성명(1990.8.12)

14. 북한의 명단접수 거부 관련 국토통일원 대변인 성명(1990.8.14)

1. 3부 장관 합동기자회견 발표문(1990.7.23)

가. 국토통일원장관 기자회견 발표문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지난 20일, 올해 8월 15일을 전후한 5일간을 『민족대교류의 기간』으로 선포하는 내용의 특별발표를 하였습니다.

정부는 같은날 오전 11시 강영훈 국무총리 명의로 북한 정무원총리 연형묵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을 통해 『민족대교류』 실현 절차협의를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접촉을 오는 7월 30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남북간 교류는 서로간에 신뢰와 이해를 증진하고 민족간의 끊어졌던 맥을 다시 잇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통일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

더우기 1천만 남북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남북간 교류는 그 어떠한 명분과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나이 많은 이산가족들이 오랜 세월, 그리운 혈육과 만날 날만을 에타게 기다리면서 몸부림 치다가 피맺힌 한을 풀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오늘의 비극적인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이산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은 이제 여기서 끝나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는 8월 13일부터 닷새동안 남북간에 민족대교류를 실시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추석·설날·한식 등 민족명절을 전후로 교류를 정례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의 동포가 언제나 자유왕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자고 제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없는 민족의 대교류를 북한측에 제의했으며, 이와 같은 우리측의 포용적인 제의를 북한측이 받아들여기를 진심으로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른바 『콘크리트장벽』 철거, 국가보안법 철폐, 구속자 석방, 『8.15범민족대회』 개최 등을 남북왕래의 전제조건화 함으로써 사실상 이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남북간에는 비록 제한된 숫자이긴 하지만 회담관계로 쌍방의 대표, 수행원, 기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오고갔으며 지난 1985년에는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이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면서 가족과 친척을 상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북한측이 주장하는 전제조건이 남북교류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측이 끝내 전제조건을 앞세워 교류를 회피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교류를 성사시키려는 일념에서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북한측과 만나 협의할 것입니다.

소위 『범민족대회』에 관해서는 오는 7월 26일의 『범민족대회』 예비회담 참가를 위해 북한대표들과 해외동포들이 우리측 지역 방문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것입니다.

또 이 대회와 관련하여 오는 8월 15일 이전에 우리측 인사들의 북한방문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8월 15일,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범민족대회』에 우리측 참가도 허용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판문점 이외의 더 편리한 장소를 제공할 용의도 있음을 아울러 밝힙니다.

또한 우리는 『범민족대회』 참가자들이 조국통일촉진 대행진을 위해 백두산을 출발, 판문점을 거쳐 한라산까지 가는 것을 환영하며 아울러 우리측 인사들이 한라산을 출발하여 판문점을 거쳐 백두산까지 가는 것도 허용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당국이 우리측 인사들의 입북과 행진을 조건없이 받아들이고 이들에 대한 무사귀환과 편의제공을 보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 대행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숙박, 교통, 의료, 통신 등 모든 편의를 적극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범민족대회』가 그 명칭과 성격에 맞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민족화합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대회에 특정단체나 특정인사들만이 아닌 각계각층의 민족성원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하여 남북 상호간 비방하거나 자극하지 말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증진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도움이 되는 순수한 입장에서의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당국은 민족대교류를 실현시키기 위한 이상과 같은 우리의 진지한 노력을 이해하고 지금이라도 우리측 제의에 호응하여 오는 7월 30일의 실무접촉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뜻깊은 광복 제45주년을 기해 남북한 동포 누구나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만나 이산의 고통을 털고 불신의 벽을 넘어 민족화합과 통일의 터전을 다지고 나아가 남북간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의 길로 확대·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7.20 특별발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들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이를 꾸준히 실천에 옮겨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두는 바입니다.

나. 국방부장관 기자회견 발표문

(인사말씀)

○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실상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우리가 전방지역에 방어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대전차장애물을 인원차단 콘크리트 장벽이라고 주장하면서, 각종 남북 대화와 연계시켜 오다가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제의하신 "남북민족대교류"에 대해서까지 전제조건으로 있지도 않은 장벽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뒤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인원차단용 콘크리트 장벽은 없다는 것이 내외에 명백히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공히 설치해 놓은 대전차 장애물이 인원의 자유왕래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님이 분명하지만, 금번 우리 대통령께서 제의한 "남북민족대교류"는 기필코 실현되어야 한다는 온 국민의 흥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북한측이 주장한 콘크리트 장벽 공동조사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이기로 함으로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측주장)

○ 북한은 금년 1월 1일 김일성 신년사에서 군사분계선 남쪽에 설치한 콘크리트 장벽을 허물어 인원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이 가능토록 해야 하며 북측에는 경계선을 표시하는 철조망만 있을 뿐 아무런 장벽도 없다고 주장한 후부터 군사정전 회담과 대남 통지문 및 성명서 등을 통해 우리측 지역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공동조사와 철거를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실상)

- 그러나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 휴전선상에는 베르린과 같은 도시도 없고 휴전협정상 상호 인원의 자유출입이 금지된 폭 4Km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어 있어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원왕래를 차단하기 위한 장벽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전차를 앞세우고 기습남침을 자행하였을 때 당시 전차 한대도 보유하지 않았던 우리로서는 3일 만에 서울을 점령당해야만 하였습니다.
- 또한 1962년부터는 북한이 소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여 군사력증강 및 전쟁준비를 강화하면서 특히 전차와 장갑차를 현저하게 증강시켜 기습공격과 전격전 위협을 증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1970년대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전차를 증강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으나 순수한 방어목적이어야 한다는 국가정책에 따라 대전차 장애물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대전차 장애물조차도 중부 및 서부전선의 기갑부대 접근로에 국한해서 구축하였을 뿐,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휴전선 전체를 가로질러 설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필요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전 휴전선을 가로질러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였겠습니까?
- 우리가 설치한 대전차 장애물 지역은 총 휴전선 250Km(155마일) 중에서 30여Km에 불과하며, 반면에 북한은 우리의 2배가 넘는 70여Km의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 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계 철조망도 우리는 2중으로 설치하였으나 북한은 고압전기철조망을 포함, 5~6중으로 설치하여 북한의 주민과 장병들의 귀순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대전차 장애물이나 철조망을 우리보다 많이 설치해놓은 북한이 우리측에만 콘크리트 장벽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또한 그동안 우리는 동경주재 소련 언론인을 비롯하여 내외신기자들로 하여금 전선지역을 방문, 실상을 직접 확인토록 함으로써 북한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원 차단을 목적으로한 콘크리트 장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 그동안 휴전선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수많은 북한 장병들이 우리측 대전차 장애물에 아무런 장애없이 남쪽으로 귀순해온 점을 보더라도 이는 입증되고 있으며 지난 7월 19일 소련관영 모스크바 방송도 북한이 주장하는 콘크리트 장벽은 대전차 장애물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경과 및 조치)

- 그동안 북한측은 지난 2월 19일과 3월 22일에 각각 국토통일원장관과 우리 대통령에게 공동조사단을 구성, 우리측 장벽만을 조사하자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 우리측은 이에 대한 지난 2월 21일과 4월 7일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사항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 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기타 지역과 관련된 사항은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논의하고자 제의하였으나 북한측은 일방적으로 우리측 장벽만을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하여 왔습니다.

(대북제의)

-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 대통령께서 제의한 "남북민족대교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민족적 염원에 따라 북측의 공동조사 제의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동조사는 북측이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 어느 곳이든지 와서 조사하는 대신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북한지역을 자유로이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북측은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한에서 굴설했다고 주장하는 땅굴까지도 확대, 공개적으로 조사할 것을 제의합니다.
- 이를 위해 상호 군사요원 3명으로 구성된 실무접촉을 1990년 7월 27일 10:00시에 판문점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면서, 7천만 민족이 염원하는 "남북민족대교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북한측의 성의있는 호응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 법무부장관 기자회견 발표문

법무부장관입니다.

북한이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대교류"제의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국가보안법 철폐와 밀입북 관련 구속자 석방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왕래는 남북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양쪽의 어떤 법·제도나 구속자 문제가 교류에 장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실현함에 있어 상대측의 법·제도나 구속자 석방을 문제삼았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북한은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위협하는 외부침략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방어적 안보형사법일 뿐이며 결코 북한을 포함한 그 누구를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 전복을 기도하지 않고 대남적화 노선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국가보안법의 어느 조항도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북한측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의 하나로 이미 국가보안법의 개정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남북간 인적 왕래나 물적 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북교류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또 북한은 밀입북과 관련하여 구속된 소위 "민주인사"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순수한 교류목적에서 방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 것은 국민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 내부의 법·제도와 사법조치를 교류의 전제조건으로 문제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법·제도나 사상범의 강제수용 등 인권상황을 문제삼은 적이 없습니다만, 이제 북한의 안전관련법제는 어떠하며 또 사상범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최고규범인 노동당규약이나 헌법은 한반도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나아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공산주의 혁명과업 수행을 위하여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형법에 반혁명죄 규정을 두고 가혹하리만큼 엄격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북한 형법은 바로 이와 같은 혁명과업의 집행을 위한 무기 구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형법은 단순히 공산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보안법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의 공산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이른바 "조선민족해방투쟁"에 반대하는 반혁명 적대분자를 적발, 분쇄하기 위한 공격적인 형벌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원썩"라고 하면서 "원썩"의 편으로 넘어가는 경우 사형에 처할 뿐 아니라 전 재산까지 몰수하고 있습니다.

또 명백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행위와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유추해석을 정면 허용함으로써 근대 형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혁명범죄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불고지죄를 처벌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시효적용마저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안전관계형사법은 무시무시한 것입니다만 이들은 그 내용이 밖으로 알려질까 봐 비밀에 붙이고 공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에는 약 15만 2천명이 정치적인 이유로 강제노동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이들 수용소는 회령, 강성, 은성, 사리원, 영변, 용강 등 12개 지역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자중에는 전 총리 이근모, 전 부총리 홍성룡, 김경련, 전 국가보위부장 김병하, 전 부수장 김창봉, 박금철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마치 전제조건이 이루어지면 남북자유왕래를 받아들일 것처럼 말하지만 북한주민들에게는 군단위 이상의 여행조차 제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법·제도나 구속자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주장한다면 그러한 주장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여행제한과 혹독한 안전관계형사법을 철폐하고 무차별적 체포·구금으로 수용되어 있는 수많은 사상범들을 먼저 석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의 교류에 있어서 어떠한 전제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민족이 화합하고 서로 한 핏줄임을 확인하자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한 민족으로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정 교류를 할 의지와 성의가 있느냐가 문제이지 양쪽의 내부분제인 법·제도 등이 장애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고 남북교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면 남북의 법무당국자들이 만나서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북의 법무당국자들이 만난다면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구속자 문제와 아울러 북한의 안전관계형사법과 사상범 문제를 협의하는 등 남북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어떤 법적·제도적 개선문제도

전향적으로 제한없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제 등에 관한 자료를 교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 법무당국자회담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 회담의 준비를 위해 남북의 실무자 각 3명이 7월 27일 10시에 통일각이나 평화의 집 중 북한측이 원하는 장소에서 만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 「범민족대회」 2차 예비회의 관련 강영훈 국무총리의 연형묵 정무원 총리앞 대북전화통지문 (1990.7.25)

나는 오늘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보내온 7월 24일자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7월 26일 서울에서 있을 예정인 범민족대회 준비를 위한 제2차 예비회의에 파견하는 5명의 실무대표들이 임무수행후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과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귀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20일의 민족대교류 제의의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7월 23일 3부장관의 기자회견을 갖고 귀측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제기한 자유왕래의 전제조건들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를 쌍방의 해당국간에 협의·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8.15 범민족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귀측 실무대표들이 예비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에 대한 우리 정부당국의 공식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귀측 실무대표들이 임무수행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임을 거듭 약속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누누히 강조해 온 바와 같이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이에 따른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책임있는 쌍방 당국간의 협의에 의하여 그 실현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간에 이러한 절차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기측 당국을 통해 상대측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며, 이것은 그동안 남북간의 관행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나는 귀측 인원 15명이 우리측 지역으로 넘어오는데 따른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7월 26일 오전 7시 30분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우리측 연락관 2명을 내보낼 것입니다.

쌍방 연락관 접촉에서 우리측 지역으로 넘어오는 귀측 인원의 사진이 첨부된 명단을 우리측에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번 범민족대회에는 특정단체나 특정인사들만이 아닌 각계 각층의 민족성원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하여야 하며 남북상호간 비방하거나 자극하지 말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증진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나는 귀하가 이같은 우리측의 입장과 방침을 귀측 해당준비위원회에 정확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나는 「8.15 범민족대회」의 원만한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귀측이 7월 30일의 민족대교류 실무절차 협의를 위한 쌍방 당국간 실무접촉에 동의해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3. 「범민족대회」 2차 예비회의 관련 국토통일위원장 기자회견 발표문(1990.7.26)

노태우대통령은 지난 7월20일, 올해 8.15를 전후한 5일간을 「민족대교류의 기간」으로 선포하는 통일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의 특별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날 오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콘크리트장벽 철거, 국가보안법 철폐, 구속자 석방, 8.15 범민족대회 개최 등을 남북왕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우리의 민족대교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성사시키려는 일념으로 정부는 지난 7월 23일 3부장관의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측이 제기한 전제조건들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를 쌍방 해당 당국간에 협의·해결하겠다는 포용적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7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법무당국 실무접촉과 남북군사당국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더욱이 8.15 범민족대회 개최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이 민족대교류의 차원에서 실현되어 상호신뢰와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를 허용하고 7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예비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어제 오전 10시 범민족대회 북측위원장 윤기복 명의로 강영훈 국무총리에게 보내온 편지에서 제2차 예비회담에 참가하는 자기측 대표들의 편의보장 및 신변안전보장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어제 오후 강영훈 국무총리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연형묵 북한 정무원총리 앞으로 보내 북한측 대표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제공을 확약하고 북한측 인원들의 판문점 통과에 따른 실무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늘 오전 7시 30분 쌍방 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측 범민족대회 임시추진본부의 영접요원 3명과 「전민련」 대표 3명을 판문점에 보내 북한측 대표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허용조치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민족대교류의 정신에 입각, 범민족대회의 성사를 도와주려는 정부의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오늘 오전 6시 30분 「범민족대회 북측 준비위원회」 성명을 통해 "남조선당국자들이 관세 반통일단체들을 신성한 대회에 끼워 넣으려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난하면서 구속자 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범민족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진행된 연락관 접촉에서 북한측은 과거의 관례대로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는 원칙에 동의하고 숙소, 차량, 통신보장 등과 관련하여 우리측의 안내에 따르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오전 9시로 예정된 그들 대표들의 판문점통과 시간을 12시경으로 연기시켜 놓고 그 이후 진행된 연락관 접촉에서부터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신변안전과 편의제공을 보장하기로 쌍방간에 합의되어 있는 사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보장책임이 없는 「전민련」의 안내에 따르겠다는 억지주장을 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신변안전보장에 기본이 되는 숙소문제까지도 「전민련」 측과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연락관 접촉마저 거부한 북한측에 대해 오늘 오후 4시 08분경 우리측이 연락관 접촉재개를 요망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전민련」이 안내를 하는가? 또 「전민련」이 정한 숙소에 들어간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자기측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 한 연락관 접촉이 불필요하다면서 전화통지문 접수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오늘 예정된 범민족대회 제2차 예비회담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측 대표들의 숙소를 「인터콘티넨탈」 호텔로 제의한 것은 그들 대표들의 신변안전보장에 적합하고 남북한간의 직통전화 등 통신지원이 용이하며 기자들의 취재활동이 용이한 조건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측이 이것을 거부한 것은 지금까지 남북간의 좋은 관행으로 되어온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는 기본적인 합의정신을 무시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측의 이같은 태도에 미루어 북한측이 진정으로 범민족대회를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내의 많은 단체들이 8.15 범민족대회의 참가를 희망하고 있고 이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측이 다른 조건을 내걸지 말고 오전 7시 30분에 있었던 쌍방합의에 응해오기를 바라며 언제든지 우리의 문을 열어 놓고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오늘은 1년반이나 끌어온 남북고위급 예비회담이 합의각서를 교환함으로써 본 회담 개최의 길을 열어 놓은 뜻깊은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고위급회담도 열리고 민족대교류가 실현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4. 「범민족대회」 2차 예비회의 관련 국토통일원 대변인 논평(1990.7.27, 07 : 00)

남북간에는 그동안 인적왕래에 따른 신변안전보장과 편의제공 문제 등은 책임있는 당국이 협의·해결해 왔으며,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그 실효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또한 왕래 인원들은 상호인정과 존중의 원칙 아래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는 것을 관행으로 삼아왔다.

북한측이 25일 우리 정부당국에 대해 범민족대회 준비를 위한 제2차 예비회의에 참가하는 자기측 인원 15명의 편의보장 및 신변안전보장을 요청해 온 것이라든가 우리측이 북한측 인원의 관문점 통과 및 우리측 지역에서의 활동에 따른 제반 실무질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6일 오전 7시 30분 쌍방 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한데 대해 북한측이 호응해 나온 것도 그들 스스로가 이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26일 「범민족대회 북측 준비위원회」 대표단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당국이 민족대교류의 차원에서 범민족대회 개최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과 부여된 책무를 다하겠다는 호의를 부당한 간섭이니 범민족대회를 파탄시키려는 책동이니 하면서 매도해 나갔다.

어제 7시 30분에 있었던 연락관 접촉에서 북한측은 과거의 관례대로 우리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는 원칙에 동의하였으며 숙소·차량·통신보장 등에 관한 우리측 제의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숙소와 회의장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 연락관간에 다음과 같이 대화를 주고 받았다.

우리측 연락관은 숙소와 회의장을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마련했다고 북측 연락관에게 알려 주었으며 이에 대해 북측 연락관은 숙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회의장에 대해서 회의장은 「전민련」측과 합의한 것이냐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 연락관은 당국이 신변안전과 편의제공 보장 차원에서 숙소와 회의장을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마련했다는 사실을 「전민련」측에 통보해 주었다고 답변했으며, 북측 연락관은 그러면 호텔 몇 층에 회의장이 있느냐고 다시 문의하였다.

이에 우리측 연락관은 호텔 2층에 있다고 답변했고 북측 연락관은 알겠다고 동의의 표시를 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7월 26일의 성명에서 우리측이 북측과의 연락관 접촉 때에는 「전민련」과 합의하여 숙소를 선정하였다고 오그랑수를 쓰고 「전민련」에는 숙소를 북측 연락관과 합의하여 정하였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고 비방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북한측은 우리측이 편의제공 및 신변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정부대표와 협의해 달라고 한 데 대해서도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그 이후 진행된 연락관 접촉에서부터 태도를 바꾸어 「전민련」의 안내만 받겠다는 억지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26일자 성명에서는 우리당국의 안내를 받겠다고 합의한 일이 없다고 강변하였다.

심지어 「전민련」대표 3명이 판문점에까지 나가 북측 참가자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측이 배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민련」대표들을 한사람도 판문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였다는 거짓말까지 늘어놓았다.

북한측이 진정으로 범민족대회를 성사시킬 의사가 있다면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5. 「범민족대회」 2차 예비회의 관련 국토통일원 대변인 논평(1990.7.27, 18 : 00)

정부는 지난 7월23일 3부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민족대교류의 차원에서 8.15 범민족대회 개최를 실현함으로써 상호신뢰와 이해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을 바라는 동시에 7월 26일 제2차 예비회의에 대해서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간에는 어제 쌍방 연락관간에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북한측 참가자들의 판문점 통과 및 우리측 지역에서의 활동에 따른 제반 실무절차문제를 협의하였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진행된 제1차 연락관 접촉에서 북한측은 과거의 관례대로 우리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는 원칙에 동의하였으며 숙소·차량·통신보장 등에 관한 우리측 제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의제공 및 신변안전 보장문제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우리 정부대표와 협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그 이후 진행된 연락관 접촉에서부터 태도를 바꾸어 이와 같은 합의사항을 번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북한측은 신변안전과 편의제공을 우리 정부당국이 보장하기로 쌍방간에 합의되어 있는 사실을 외면하고 「전민련」의 안내만 따르겠다는 억지주장을 하는가 하면 숙소문제까지도 「전민련」측과 합의해야 한다고 했으며 정부대표의 차량동승을 거부해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번 예비회의에 북측대표들의 참가를 성사시키기 위해 성의와 인내를 다하였으나, 북한측은 오후 4시경 더 이상의 연락관 접촉마저 거부한채 직통전화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북한측의 태도는 인적왕래 문제와 관련하여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는 기존의 좋은 관례를 무시한 처사로서, 우리는 과연 북한측이 진정으로 범민족대회를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측이 종래의 관행을 무시한채 지난 23일 「전민련」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측 연락관에게 넘겨줄 것을 거부한 것이라든지 제1차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구속자 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한 범민족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측참가자들의 신변안전보장과 편의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정부당국이며, 북한측이 당초 우리 정부당국에 북측 대표들의 신변안전보장을 요청해 온 것이나 어제 쌍방 연락관 접촉에 호응해 온 사실은 북한측도 이를 인정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에 신변안전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국의 안내를 배제하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측이 그같은 부당한 태도를 시정하고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존중하는 토대위에서 연락관 접촉의 재개에 호응해 나올 것을 기대하였으며, 금일에도 판문점에 차량을 대기시키고 숙소와 회의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북측 대표들이 서울에 올 것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어제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대표단』 성명을 내고 우리당국의 안내를 받겠다는 합의를 한 바 없다고 강변하는가하면 오히려 우리측의 호의를 왜곡·비방하면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측은 오늘 대표단이 또다시 판문점에 나와 그들의 입장변화에 대한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채 연락관 접촉만을 우리측에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어제 제1차 연락관 접촉에서 합의된 사항을 조건없이 지키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면 북한측 인원들의 판문점 통과시각을 협의하기 위한 연락관 접촉을 가질 수 있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여전히 어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11시 30분경 안내문제와 관련하여 판문점과 서울, 서울과 판문점 사이는 당국이 안내하고 숙소와 회담장 등에서의 안내는 『전민련』 측이 담당한다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북한측이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는 원칙을 받아들인 입장변화가 아니라 여전히 당국을 배제하겠다는 논리라고 할 것입니다.

북한측이 진정으로 예비회의에 참가할 의사가 있다면 아무런 조건없이 어제의 합의사항을 받아들이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칙문제를 제기한 것은 방문목적마저 의심케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이 북한측의 기본입장이 불변인 상황에서 쌍방 연락관이 만난다면 불필요한 논쟁만 유발하고 상호불신만 더욱 조장된다는 관점에서 북한측이 어제의 합의사항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힐 것을 누차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끝내 합의사항 이행을 거부하고 연락관 접촉만을 주장하다가 14시 30분경 북측 대표단장 전금철이 성명을 발표한 후 판문점에서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북한측이 아무런 태도변화 없이 오늘 또다시 판문점을 정치 선전장화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남북간의 합의사항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8·15 범민족대회가 민족대교류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고 부여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10. 방북신청자 명단 전달관련 강영훈 국무총리의 연행목 정무원 총리 앞 대북전화통지문
(1990. 8. 8)

우리가 『민족대교류』를 제의한 것은 이산가족을 비롯한 남북의 동포들이 분단 45년 만에 상봉의 기쁨을 나누고 그동안의 고통과 불행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데 참뜻이 있습니다.

『민족대교류』를 통해 남북 동포들간에 상호신뢰와 이해가 증진되고 민족적 유대가 이어진다면 7천만 온겨레의 소망인 평화와 평화통일은 한층 앞당겨질 것입니다.

나는 귀측도 남북간의 자유왕래를 제의해 놓고 있는 만큼 『민족대교류』를 실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쌍방 당국간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민족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동포들간의 자유왕래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으며 이제는 쌍방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과감히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측은 8월 4일자 귀하에게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족대교류』기간중 귀측 지역 방문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8월 4일부터 8일까지 방북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는 접수되는 방북 신청자들의 명단을 귀측에 전달하기 위하여 8월 9일 오후 3시와 8월 10일 오후 3시 두차례에 걸쳐 각각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 우리측 연락관 2명을 내 보낼 것입니다.

나는 우리측 인원들의 명단을 귀측에 전달하는 것과 함께 귀측도 우리측 지역의 방문을 희망하는 귀측인원들의 명단을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민족대교류』기간중에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는 귀측 인원들에 대해서 필요한 편의제공과 무사귀환 및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귀측도 귀측지역을 방문하는 우리측 인원들에 대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나는 귀하의 8월 7일자 전화통지문에서 『민족대교류』기간중인 8월 14일에 귀측의 인원을 우리측 지역에 보내겠다고 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민족대교류』기간이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이므로 귀측인원의 방문기간은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3박 4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민족대교류』가 민족의 화해와 통합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남북을 왕래하는 모든 인원들은 최소한 상대방의 안내와 질서를 존중하는 입장에 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는 귀측인원들이 우리측 지역에 와서 실정법을 위반한 재소자를 면회하겠다는 것은 『민족대교류』의 기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같은 주장은 스스로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측은 그들이 재소자들의 가족이나 변호인을 만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남북 쌍방간의 편지나 전화통지문은 남북관계의 현실과 관행에 따라 상호준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내용과 격에 맞게 오고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긍정적인 회답을 기대합니다.

11. 북한의 명단접수 거부관련 국토통일원 대변인 논평(1990. 8. 10)

우리 정부는 8월 13일부터 8월 17일 사이의 『민족대교류』를 기필코 실천에 옮겨 나가겠다는 충정에서 지난 8월 4일부터 8일까지 북한방문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방북신청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61,355명에 달하는 많은 인원이 민족대교류 기간중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신청함으로써 이산가족들의 혈육상봉과 남북왕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이 소중한 방북 희망자들의 명단을 8월 9일과 10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관문점을 통해 북한측에 전달하기 위해 북한측 연행묵총리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측은 우리측의 이같은 제의와 노력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방북신청자는 물론 온겨레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북한측은 8월 9일자 전화통지문에서 ① 이른바 『임수경 위문단』의 직접 면회를 허용할 것 ② 전민련·전대협 대표들의 범민족대회 참가를 공식적으로 허락할 것 ③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 등 세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요구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우리측의 방문자명단 교환제의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이 8월 9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8월 10일 전체 명단을 전달할 것을 밝히면서 명단 교환을 재촉하였으나 북한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병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또다시 전제조건만을 되풀이 하였을 뿐 명백한 접수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측은 이미 북한측에 통보한대로 방북 신청자 명단을 전달키 위해 8월 10일 오후 3시 연락관이 관문점에 나갔으나 이를 접수할 북한측 연락관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 북한측이 남북간의 인적교류와 왕래에 진정한 뜻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7.20 제의는 남북의 이산가족을 비롯한 모든 동포들이 오는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분단 45년만에 처음으로 상호 왕래하면서 상봉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를 계기로 남북의 화해와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자는데 근본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제의해 놓고 있는만큼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를 실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민족대교류를 실현시키려는 일념에서 그동안 온갖 성의와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정부는 북한측이 왕래의 전제조건으로 제기한 『콘크리트장벽』 철거를 비롯한 국가보안법 철폐, 구속자 석방 문제와 함께 북한측이 굴설 또는 설치한 땅굴, 대전차 장애물, 철조망과 북한의 안전관계 형사법 및 사상법등 제반문제들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측과 협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범민족대회』 개최문제에 관해서도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함으로써 민족 화합과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대회가 그러한 입장과 취지에 부합되게 추진되다면 이를 지원하겠다는 포용적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북한측이 제기한 이른바 『임수경 위문단』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실정법을 위반한 재소자를 면회하겠다는 것은 민족적 화해와 통합에 기여하려는 7.20 제의의 기본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현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재소자의 면회는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상대측의 체제와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그 가족이나 변호인들을 만나는 것은 무방하며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모름지기 남북간의 화해와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인적 교류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그 의도와 목적이 순수해야 합니다.

북한측이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외면하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새로이 덧붙이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간의 인적 왕래와 교류를 막고 우리의 7.20 『민족대교류』 제의

를 무산시키려는 불순한 저의에서 나온 것으로서 온 거래의 규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번 방북신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소망을 풀어주는 일은 이제 그 누구도 더 이상 뒤로 늦출 수 없으며, 지금이야말로 남북의 당국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과감하게 뒷받침해 나갈 때입니다.

우리의 『민족대교류』 제의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석·설날 등 민족명절을 전후로 지속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것이며,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열매를 맺음으로써 머지않아 남북한 동포 누구나 자유로이 오갈 수 있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북한측이 온 거래의 염원에 부응하여 이번 민족대교류 기간에 상호 교환방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한 태도로 호응해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12. 선별방문 허용 관련 국토통일원 대변인 성명(1990. 8. 10)

북한측은 금일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천주교인협회』 위원장의 담화와 『범민족대회 북측 준비위원회』의 방송통지문을 통해 8월 11일 9시와 11시 그리고 오후 3시에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우리측 해당단체와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해 왔다.

북한측은 이들 실무접촉에서 범민족대회와 관련하여 서울·평양에서 개최될 행사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의 대행진 문제 등을 협의하고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회』가 제의한 8.15평양 통일염원 대동제문제를 협의하며 우리측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방북제외와 관련한 실무문제를 각각 협의하자고 하였다.

특히 북한 천주교인협회위원장 명의의 담화에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북한을 방문하면 그들과 마주앉아 콘크리트 장벽을 허물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공동투쟁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가 8월 13일부터 17일 기간중에 남북 지역을 왕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 남북 당국이 편의제공과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이를 허용토록 한다는 『민족대교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북한측이 이들 단체들과 별도의 실무접촉을 갖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북한지역을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으며 8월 9일과 10일 2차례에 걸쳐 이들 명단을 북측에 전달하려 하였으나 북측이 부당한 전제조건들을 앞세워 이를 거부함으로써 실현되지 못했다. 우리측이 접수한 방북신청자 명단 속에는 『진민련』과 정의구현사제단에 소속된 인원들과 『서총련』에 소속된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두는 바이다.

우리는 『민족대교류 선언』 및 그 관련 후속조치들을 통해 이미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북측 인원들에 대해 편의제공과 신변안전보장을 약속한 바 있고, 또 북측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측 인원들의 신청을 받아놓고 있는 만큼 언제라도 명단교환과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전달할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는 북측이 선별적으로나마 민족대교류 기간중 우리측 인원들의 방북을 수락한 것을 환영하면서, 우리측 지역을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북측 인원들과 북측지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측 인원들의 명단을 교환하고 그들의 신변안전보장 각서를 교환하기 위해 쌍방 당국간에 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

연락관 접촉은 8월 11일 오전 11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갖는 것이 좋을 것이

다.

우리는 2명의 연락관을 내보낼 것이며, 북측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

13. 특정단체인원 방북허용 관련 국토통일원장관 성명(1990. 8. 12)

노태우 대통령은 7.20 특별발표를 통해 8월 13일부터 17일 사이의 5일간을 『민족대교류』 기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동안 남북의 동포들이 관문점을 통해 아무런 제한없이 왕래하도록 하자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2일 북한측이 이 기간동안에 방북을 희망하는 우리측 인원에 대해 아무런 조건없이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비록 북한측이 대상을 선별하여 수락할 경우라도 이들의 북한방문을 허용할 것임을 밝혔던 것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적극적인 입장은 『민족대교류』를 어떻게든지 성사시킴으로써 남북왕래와 교류의 물꼬를 트고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앞당겨 보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북한방문 신청을 받았으며, 그 결과 접수된 총인원은 61,355명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헤어진 혈육과 두고온 고향을 찾으려는 이산가족들의 소망이 얼마나 애절하며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측은 이 소중한 방북희망자들의 명단을 8월 9일과 10일, 그리고 11일 세차례에 걸쳐 각각 관문점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북한측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측은 이해할 수 없는 조건들을 내걸며 명단접수 조차도 거부함으로써 방북신청자는 물론 온겨레에게 카다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측은 책임있는 공식경로가 아닌 평양방송을 통해 우리측의 특정한 인사나 단체에 대해서는 방문을 초청하고 그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측이 접수한 방북신청자 명단 속에는 북한측이 초청하는 대상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와 같이 북한측이 『민족대교류』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하나 7.20 특별발표의 정신을 살려 온겨레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비록 제한된 인원이기는 하지만 남북왕래를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정부는 현재 북한측이 선별적으로 초청의사를 밝혀놓고 있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전민련』 등 단체에 소속된 인원들중 이미 방북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8월 13일부터 17일사이의 『민족대교류』 기간중 북한지역 방문을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나는 이들의 명단과 방북신청을 한 취재기자 전원의 명단을 북한측에 전달하고 북한측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각서를 접수하기 위해 쌍방 당국간에 연락관접촉을 가질 것을 북한측에 제의합니다.

우리는 동 연락관접촉을 8월 13일 오후 3시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갖기를 희망하며 2명의 연락관을 내보내고자 합니다.

북한측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우리측 지역 방문을 희망하는 북한측 인원들의 명단을 함께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14. 북한의 명단접수 거부 관련 국토통일원 대변인 성명(1990. 8. 14)

정부는 이미 8월 12일자 국토통일원장관 성명을 통해 어떻게든지 『민족대교류』를 성사시켜 남북왕래와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비록 제한된 인원이라는 하지만 북한측이 선별적으로 초청의사를 밝혀놓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나마 북한지역 방문을 실현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이들의 명단을 전달하고 북한측으로부터 신변안전 보장각서를 접수하기 위해 8월 13일 오후 3시 판문점에서 쌍방 당국간에 연락관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민족대교류 기간중 북한방문을 희망하는 신청자 명단 중에서 북한측이 초청한 민중당 30명,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33명, 『진민련』 관련자 176명 등과 이들을 동행 취재할 기자들의 명단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제 오후 판문점에 나갔으나 북한측의 연락관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북한측은 우리측 국무총리가 보낸 전화통지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안병수 서기국장의 담화를 비롯해 각 단체별 담화를 방송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당국간의 명단교환은 필요없고 해당되는 단체들간에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이나 갖자고 주장했다.

남북왕래와 교류문제에 관해서는 책임있는 쌍방 당국간에 그간 신변안전보장문제 등을 협의해 온 것이 관례이며, 남북관계의 현실로 보아서도 그것은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응당한 절차문제이다.

도대체 당국간의 명단교환조차 거부하는 북한측이 누구를 오라는 것이며, 누가 누구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단체들 간의 실무접촉이란 것도 일단 명단을 받고 우리측에 신변안전보장 각서만 전해주면 방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얼마든지 실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누가 보아도 불필요한 해당 단체간의 실무접촉을 앞세우면서 사실상 그들이 초청한 인사들의 방북마저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이미 편의제공과 신변안전이 보장된다면 누구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북한 방문을 허용할 것을 밝힌 바 있는 만큼 북한측이 방북희망 인사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각서를 넘겨준다면 남북왕래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

또한 정부가 특정단체 인사의 방북만이라도 실현시키려는 전진적 입장을 보인 것은, 북한측이 우리측 방북신청자 61,355명의 명단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진민련』 등 단체인사들이 자기들의 방북희망자 명단을 별도로 북한측에 전달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북한측의 요구까지도 고려한 데 따른 것이었다.

우리는 북한측이 남북왕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실무접촉이란 것을 내걸어 우리측 인사들의 그 어떤 방북도 가로막아 보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함으로써 끝내 『민족대교류』를 무산시키려는 기도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한다.

북한측이 선별적이거나 초청의사를 밝힌 인사마저도 방북을 거부한 행위는 그들의 '초청' 자체가 거짓이요 허구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것은 북한측이 처음부터 남북간의 인적교류와 왕래에는 아무런 뜻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화합과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아직도 통일전선 전략에 매달려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북한측이 『민족대교류』의 참뜻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소망과 온 겨레의 기대에 부응해 나오기를 바라며, 8월 17일까지로 되어있는 이번 『민족대교류』 기간에 상호 교환방문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관련 주요동향 일지(1990.7.20-1990.8.18)

7. 20 노태우 대통령, 특별발표를 통해 「민족대교류」 선언
· 1990. 8.13-8.17 사이를 「민족대교류의 기간」으로 선포
7. 20 강영훈 국무총리, 「8.15 민족대교류」 실현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대북전통문)
· 7. 30, 10 : 00,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각기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한 3명의 대표
7. 20 북한 「조평통」, 「민족대교류」 특별발표 관련 성명(방송)
· 「콘크리트 장벽」 철거, 국가보안법 철폐 및 구속자 석방, 「범민족대회」 보장 등 전제조건 제시
7. 23 3부 장관(통일·법무·국방) 합동기자회견
· 「범민족대회」가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순수한 모임일 경우 수용
· 「남북법무당국자 실무접촉」 제의(7. 27, 판문점 평화의 집 또는 통일각)
· 「남북군사당국자실무접촉」 제의(7. 27,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7. 23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 「남북당국 및 정당대표 실무접촉」 제의(대남서한)
· 수신자(4명) : 노태우 대통령, 강영훈 국무총리, 김대중 평민당총재, 이기택 민주당 총재
7. 23 윤기복 「범민족대회 북측 준비위」 위원장, 「범민족대회 제2차 예비회의」 관련 대남전통문(수신: 「전민련」)
· 서한을 「전민련」에 직접 전달 예고(7. 24, 15 : 00)
· 「전민련」 신임장 지참한 인원파견 요구
7. 24 강영훈 국무총리, 3부 장관 기자회견 관련 대북전통문
· 「남북군사 및 법무당국자 실무접촉」과 「민족대교류」 실현을 위한 실무접촉에 동의 요구
7. 24 북한 「조평통」 대변인, 3부 장관 기자회견 관련 성명(방송)
· 「법무당국자 실무접촉」 및 「군사당국자 실무접촉」 거부
7. 24 김상협 한적총재, 「범민족대회 북측 준비위」 전통문(7. 23) 관련 대북전통문
· 남북간 모든 연락업무는 쌍방 적십자가 담당·수행해 왔던 것이 관례임.
· 「전민련」 앞으로 오는 편지를 접수키 위해 적십자 연락관을 파견(7. 24, 15 : 00)
7. 24 윤기복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위원장, 「제2차 예비회의」 관련 대남전통문
· 강영훈 총리 앞 서한전달 예고
7. 24 북측, 남측 적십자연락관에게 편지전달 거부(15 : 00, 중감위회의실)

- 7. 24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전민련」에 보내는 편지 공개(방송)
 - 「제2차 예비회의」에 5명의 북측대표를 파견
- 7. 24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제2차 예비회의」참가 북측대표명단 발표(방송)
 - 전금철, 손종철, 조상호, 김동국, 강지영
- 7. 24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노태우 대통령 특별발표 및 3부 장관 기자회견 비난(방송)
- 7. 25 윤기복이 강영훈 총리 앞으로 보내온 편지 접수
 - 「2차 예비회의」에 참가할 북측 대표단의 편의제공, 신변안전 보장 요청
- 7. 25 강영훈 국무총리, 「범민족대회 제2차 예비회의」관련 대북전통문
 - 북측대표단에 대한 편의제공, 신변안전보장 확약
 - 절차문제 협의 위한 실무접촉 제의(7. 26, 07 : 30, 중감위회의실)
- 7. 26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우리측 58개 단체의 「범민족대회」참가 거부성명(방송, 06 :30)
- 7. 26 남북고위급회담 제8차 예비회담(통일각)
 - 고위급회담 개최 합의서 서명·교환
- 7. 26 강영훈 국무총리, 「민족대교류」실현을 위한 실무접촉(7. 30) 개최 호응 촉구 대북전통문
- 7. 26 북한대표단, 「범민족대회 제2차 예비회의」참가 관련 관문점 통과거부
- 7. 26 홍성철 국토통일원장관, 「범민족대회 제2차 예비회의」북측대표단 불참 관련 기자회견
- 7. 26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대표단, 관문점 통과 무산 관련 성명
 - 7. 27, 9시에 「전민련」의 안내요구
- 7. 27 국토통일원 대변인,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대표단 성명 관련 논평
- 7. 27 「전민련」, 「해외동포 대표단」합의문 발표
 - 「제3차 예비회의」, 8월 6일 평양에서 개최
- 7. 27 국토통일원 대변인, 「범민족대회 제2차 예비회의」북측대표단 불참 관련 논평
- 7. 27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제3차 예비회의」관련 「전민련」앞 편지 발송(방송)
 - 「제3차 예비회의」, 7. 30-31 평양개최 제의
- 7. 30 강영훈 국무총리, 대북전통문
 - 「민족대교류」실현 위한 절차협이에 호응촉구(8월 7일까지 회답요구)

- 7. 30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제3차 평양예비회의」 관련 「전민련」에 통지문(방송)
 - 「전민련」의 「제3차 예비회의」 8월 6일 개최제의에 동의
 - 「전민련」 외의 단체 참가는 불가

- 7. 31 북한 노동신문, 남측 58개 단체 「범민족대회」 참가 불허 주장

- 8. 1 윤기복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위원장, 강영훈 총리 앞 대남전통문
 - 「전민련」 대표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함

- 8. 1 북적, 여연구 「임수경 석방투쟁위」 위원장의 노태우 대통령 앞 서한 전달 예고 관련 대남전통문

- 8. 2 홍성철 국토통일원장관, 「7.20 대통령 특별발표」 관련 기자회견
 - 「범민족대회」에는 각계각층이 참여해야 함
 - 「민족대교류」 기간중의 방북희망자 신청 접수 발표(8. 4-8. 8)

- 8. 2 한적, 여연구 「임수경 석방투쟁위」 위원장 명의 서한접수 거부(대북전통문)

- 8. 2 여연구 「임수경 석방투쟁위」 위원장이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발표(방송)
 - 8. 14-8. 18 방문기간중 구속자 직접면회

- 8. 4 강영훈 국무총리, 「범민족대회 제3차 예비회의」 관련 대북전통문
 - 「제3차 예비회의」 참가를 희망하는 우리측의 모든 단체인사·취재기자에 신변안전과 무사 귀환 보장 요구

- 8. 4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 「당국·정당 수뇌 협상회의」 실무접촉 호응 촉구(대남전통문)

- 8. 6 국토통일원, 북한의 「위문단」 파견제의 관련 정부입장 발표
 - 「위문단」 방문은 허용하지만 재소자 직접면회는 불허

- 8. 6 「범민족대회 제3차 평양예비회의」, 「전민련」 대표 불참리에 개최

- 8. 6 여연구 「임수경 석방투쟁위」 위원장,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내는 전화통지문 공개(방송)
 - 「위문단」이 8월 14일 오전 9시에 관문점에 나갈 것임

- 8. 7 강영훈 국무총리, 남북고위급회담 위한 통신·항공 실무자 접촉제의(대북전통문)
 - 8. 8, 10 : 00, 통신·항공 실무자 각 3명씩 파견

- 8. 7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 「위문단」 방문 관련 신변안전보장조치 요청(대남전통문)

- 8. 7 연형목 북한 정무원 총리, 제1차 고위급회담 위한 실무접촉 관련 대남전통문
 - 쌍방 책임연락관 명단 교환 후 다른 날짜를 정하여 접촉 희망
 - 북측 책임연락관 최봉춘 임명

- 8. 7 「범민족대회 제3차 평양예비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 「범민족대회」는 당초 계획대로 8월 15일 판문점에서 거행
 - 대회장소·의제·참가자격 등은 「제1·2차 예비회의」에서 합의한대로 최종 확정

- 8. 8 강영훈 국무총리, 접수된 「민족대교류」기간 중 방북신청자 명단 전달 대북전통문
 - 8. 9, 15 : 00와 8. 10, 15 : 00 두 차례 중감위원회의실에 연락관 파견
 - 「위문단」방문을 환영, 방문기간은 8. 14-17로 조정 요구

- 8. 8 강영훈 국무총리, 남북고위급회담 책임연락관 통보 및 통신·항공관계자 실무접촉제의 (대북전통문)
 - 김용환 책임연락관 임명 통보
 - 실무접촉, 8. 10, 10 : 00 중감위원회의실

- 8. 9 연형목 북한 정무원 총리, 「민족대교류」기간중 방북신청희망자 명단접수 거부(대남전통문)

- 8. 9 강영훈 국무총리, 「민족대교류」기간 중 방문자 명단교환 재촉구(대북전통문)
 - 8. 10, 15 : 00 중감위원회의실에서 연락관 파견

- 8. 9 북한 「조평통」위원장 허담, 민중당(가칭) 고문 백기완의 평양방문 수락 담화

- 8. 9 북한, 「위문단」구성 발표(방송)
 - 단장 여연구 등 30명과 취재기자 20명

- 8. 9 최봉춘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책임연락관, 항공·통신 실무자 접촉 연기 통보(대남전통문)
 - 8월 15일 이후 적합한 날짜 통지 예정

- 8. 10 윤기복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위원장, 학술토론회·문화행사·백두-한라 대행진 공동개최를 위한 「전민련」과의 실무접촉 제의(방송)
 - 8. 11, 14 : 00 중감위원회의실

- 8. 10 북한 「조평통」서기국장 안병수, 「민족대교류」기간 중 방문자 명단교환 관련 국토통일위원장관에게 대남전통문
 - 재소자 면회허용, 국가보안법 철폐, 「전민련」의 범민족대회 참가 공식 허락 등 주장

- 8. 10 북한 「학생위원회」위원장, 「서총련」과 실무접촉 제의(방송)

- 8. 11, 09 : 00 중감위원회의실
- 8. 10 북한 「천주교인 협회」 위원장,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과의 실무접촉 제의(방송)
 - 8. 11, 11 : 00 중감위원회의실
- 8. 10 국토통일원 대변인, 북측의 방북신청자 명단 접수거부 관련 논평
- 8. 10 국토통일원 대변인, 북측이 선별적으로 수락하는 방북 신청자의 명단과 신변안전보장 각서 교환을 위해 당국간 연락관 접촉제의
 - 8. 11, 11 : 00 중감위원회의실
- 8. 11 북한 「조평통」 대변인, 국토통일원 대변인의 쌍방 당국간 연락관 접촉 제의 거부성명 (방송)
- 8. 12 홍성철 통일원장관, 「민족대교류」 기간 중 특정단체 소속인원들의 방북 허용 성명
 - 이들의 명단전달과 신변안전보장각서 접수 위한 쌍방 당국간 연락관 접촉제의
 - 8. 13, 15 : 00 중감위원회의실
- 8. 13 강영훈 국무총리, 국토통일원장관의 「민족대교류」 기간 중 특정단체인원 방북허용 성명 관련 대북전통문
- 8. 13 최의웅 군정위 북측 수석위원 담화(방송)
 - 판문점 북측지역 개방선언을 사실상 철회
- 8. 13 「범민족대회 북측준비위」 대변인, 국토통일원장관 성명 관련 담화
 - 남측추진본부 대표들과 직접 만날 것을 희망(8. 14, 14 : 00)
- 8. 13 북한 「조평통」 서기국장 안병수, 국토통일원장관 성명 관련 담화(방송)
 - 남측 당국은 민간단체들의 접촉과 왕래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함.
- 8. 13 북한 「사민당」 대변인, 백기완과 민중당(가칭)대표 방북 관련 실무접촉 제의(방송)
 - 8. 14, 16 : 00 중감위원회의실
- 8. 13 북한 「조선학생위」 대변인, 「서충련」 과의 실무접촉 제의(방송)
 - 8. 14, 16 : 00 중감위원회의실
- 8. 13 북한 「천주교인 협회」 대변인, 「정의구현사제단」 과의 실무접촉 제의(방송)
 - 8. 14, 11 : 00 중감위원회의실
- 8. 14 국토통일원 대변인, 북한측의 방북자 명단 접수거부 사실에 대해 규탄 성명

- 8. 14 북한 「위문단」일행, 우리측 지역 방문거부
 - 판문점에서 정치선전 행사 진행

- 8. 14 북한 4개 단체 실무접촉 대표, 남측 4개 단체 실무대표와의 접촉무산 관련 연합성명(방송)

- 8. 15 북한 「백두-한라 행진대」 대변인, 「행진대」 판문점 통과 관련 담화(방송)
 - 남한당국의 신변안전보장각서를 8. 15, 14 : 00 중감위회의실에서 넘겨 주기 바람.

- 8. 15 북한, 「백두-한라 행진대」에 대한 신변안전보장각서 접수거부
 - 「전민련」의 신변안전보장각서 전달 및 안내요구

- 8. 15 북한,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범민족대회」 관련 정치선전 행사 진행